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정활동 100대 정책과제

2010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실
BUSAN METROPOLITAN COUNCI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정활동 100대 정책과제

2010. 6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실

목 차

지 역 경 제

1. 지역경제 현황 평가 및 경제정책 보완 방향	3
2. 일자리 창출 사업 평가 및 중장기 고용정책 필요성 제기	5
3. 지식서비스 일자리 창출 대책과 인적자원 관리 강화	7
4.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사업의 정책적 검토	9
5. 섬유·패션 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유통단지 개발 방안	11
6.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및 연계 사업 강화 방안	13
7. 전략산업 육성 관련 운영체계 및 정책지원 개선	15
8. 산업단지 정책의 효과 제고를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강화	17
9. 협동화단지 조성 사업의 정책적 가치 및 활용도 제고 필요	19
10. 초광역경제권 공동사업 등 경제협력 확대 강화 방안	21

복 지 여 성

1.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빈곤층지원 사각지대 27만 추정	27
2. 출산장려정책, 가족친화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30
3. 안정적인 노인장기요양보호체계 구축과 서비스 질 제고	33
4.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유치와 고령친화산업 발전기반구축	35
5. 전자바우처제도에 기반한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질향상	38
6.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심뇌혈관 및 만성질환관리 강화	41
7.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43
8. 여성 취업지원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확대	46
9. 미래를 선도할 아동청소년의 역량강화	49
10. 다문화 및 탈북 가족 지원환경	52

환 경

1. 낙동강 개발에 따른 퇴적토 및 준설토 처리시 수질오염 문제	57
2. 부산 도심지역 소음 현황과 저감	59
3. 친환경 녹색성장에 일조하는 하수재이용 현황 및 활성화	62
4. 부산 도심 대기오염현황과 저감 추진정책	64

5. 생활 폐기물처리 실태 및 재활용 활성화(연료화사업등)	66
6. 하수슬러지 처리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68
7. 도심하천 관리실태와 활성화	70
8. 친환경 녹색정책과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72
9. 생태공원(을숙도, 삼락공원등)과 연계한 생태관광자원화 수립	74
10. 낙동강 물문제 현황과 효율적인 대체 수자원개발	77

건 설 방 재

1. 주요 도로 및 철도 인프라 건설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81
2. 지진방재 안전도시 부산건설 방안	85
3. 한일 해저터널 건설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88
4. 낙동강 살리기 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90
5. 사면방재의 실태와 안전관리 대책 강화	93
6. 자전거 도로 개발을 통한 자전거 활성화 방안	96
7. WHO 공인인증 국제안전도시 건설 추진방안	98
8.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효율적 추진방향	101
9. 남·북항 대교 영도 연결도로 건설 추진현황 및 합리적 방안	104
10. 수영강 하류 인도교 휴먼브릿지 설치사업 효율적 추진방안	107
11. 동북아 제2허브공항 건설 방안	109

건 축

1. 도심재생과 지역어메니티를 고려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115
2.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117
3. 도시경관의 전략적 관리와 도시마케팅, 장소 마케팅	120
4. 도심 건축물 높이와 해안 스카이라인의 합리적 재조정	123
5. 건축문화정책 및 랜드마크를 통한 도시의 위상 제고	126
6. 저탄소 녹색성장의 작은 실천, 옥상녹화와 계단실 사용	129
7. 지역특구와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연계 및 운용	133
8. 옹벽/방음벽, 교량 디자인 개선을 통한 시설물 가치 향상	137
9. 도심 문화공간의 축, 도시철도의 지속적 환경개선	139
10. 소방안전 사각지대의 해소 및 안전대책 강화	142
11. 주택가 골목길 회복 및 부설주차장 활용도 제고	144
12. 문화재(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의 문화경쟁력 제고	147

해 양 향 만

1. 부산시의 해양·항만정책 수립 한계성 극복	153
2. 해양·항만행정 기관과의 협력 강화	156
3. 해양도시에 걸맞은 해양산업 육성	158
4. 부산국제해운거래소의 특화 전략 수립	160
5. 센트럴베이사업의 효과 극대화	162
6. 신항관할권 분쟁 해결	164
7. 북극항로 개설을 활용한 부산항 입지 강화	166
8. 어항정비와 마리나개발의 해양관광 자원화	168
9. 여수엑스포 연계 부산관광 홍보 방안	170
10. 해양레포츠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172

도 시 계 획

1. 창조적 미래전략으로서 2030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 점검	177
2.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그린부산 사업 추진의 내실화	180
3.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진단	183
4. 워터프론트 개발·관리지침과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186
5. 세계적인 명품공원으로서 시민공원의 조성	188
6.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효율적 추진	191
7. 천만평 국제산업물류도시의 조성	193
8. 공적 공간(public space)의 활용대책	196
9. 시가화구역내 노후 공업지역의 정비	198
10.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지침 마련	200
11. 실현가능한 도시균형발전 대책의 추진	202
12. 낙동강 살리기와 연계한 도시정비계획의 효율적 추진	205
13. 보행환경개선과 도시녹지(가로수 조성관리) 허와 실	207

교 육

1. 교육자치 정착 및 내실화 도모	213
2. 세계화 시대의 부산교육 발전 전략 모색	215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교육 부문의 대응책 모색	217
4. 지역간 교육불균형 문제 해소	219

5.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 강화	221
6. 학력 신장 및 학력격차 완화	223
7. 경쟁력 있는 전문계고 육성	225
8.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체제 구축	227
9. 녹색성장교육 및 해양교육 활성화	229
10. 초·중등 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	231
11. 영어교육 내실화 및 원어민교사의 질 확보	233
12. 방과후학교 운영의 효율성 제고	235
1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내실화 도모	237
14. 다문화가정 자녀 및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239
15. 학교급식 질 개선 및 안전한 식생활 관리	241
16. 학교 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	243
17.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 활동 지원	245
18.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운영 지원	247

재 정

1. 부산시 지방재정의 집행실태와 합리성 제고	251
2. 부산시 세입의 합리적 징수체계 수립	253
3. 부산시 이월예산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	256
4. 부산시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259
5. 부산시 지방채의 운영실태와 관리 개선	262
6. 부산시 지방공기업의 경영실태와 개선	267
7. 부산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입증대	271
8. 부산시 예산전용 실태와 예산의 효율성 제고	275
9. 부산시 재정자립도와 세출구조의 재조정	279
10. 부산시 시금고 운영의 합리성 제고	283
11. 부산시 지방교육재정의 운영실태와 효율성 제고	287
12. 부산시 민간투자사업과 투자사업관리 개선	292
13. 부산시 민간이전재정의 운영실태와 체계적 관리	295
14. 산시 자체감사의 효과적인 전략체계 구축	299
15. 부산시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강화	303
16. 부산시 교육청의 무상급식 재정투자 타당성 강화	307

지 역 경 제

1. 지역경제 현황 평가 및 경제정책 보완 방향	3
2. 일자리 창출 사업 평가 및 중장기 고용정책 필요성 제기	5
3. 지식서비스 일자리 창출 대책과 인적자원 관리 강화	7
4.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사업의 정책적 검토	9
5. 섬유·패션 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유통단지 개발 방안	11
6.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및 연계 사업 강화 방안	13
7. 전략산업 육성 관련 운영체계 및 정책지원 개선	15
8. 산업단지 정책의 효과 제고를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강화	17
9. 협동화단지 조성 사업의 정책적 가치 및 활용도 제고 필요	19
10. 초광역경제권 공동사업 등 경제협력 확대 강화 방안	21

1 지역경제 현황 평가 및 경제정책 보완 방향

실·국	관련사업 등
경제진흥본부	

1. 개요

□ 대내외 환경 변화

- 무역자유화 심화, 국제자본이동 증대 등 다양한 형태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가간은 물론 국내의 지역·계층간 격차, 수도권 경제력 집중 확대
- 21세기 정보통신기술의 급진전으로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도 지역·계층간 불균등성장 초래
 - 지식, 정보 등 비물적 재화 위주로 경제가 소프트화되고 있으며, 수확체증의 법칙에 따르는 지식창출로 인해 시장 선점의 중요성이 높아짐
- 급속히 하락한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사회구조 변화로 다양한 문제 발생
 -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서비스 비용, 공적연금 지출, 국민의료비와 같은 부양비용을 가중시키는 등 경제·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 초래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보육·양육 수요증대 등
 - 비정규직, 영세사업체 근로자 등 사회안전망의 소외 부문 대책 필요
- 시민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수준도 높아지고 있으나 정책적 대응은 지체
 - 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은 제2도시 위상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실정
 - 부산지역 동·서 등 역내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요구 증대

2. 문제점

□ 사회경제적 변화에 미흡한 대응으로 부산 지역경제는 저성장 양극화 진행

- ‘80년대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부산경제의 저성장 고착
 - 경영관리 연구개발 등 구상기능의 수도권 집중과 분공장, 하청생산 등 실행기능의 울산, 창원 등 산업도시 위주로 지방화 진행
- 정보화 진행과정에서 지식기반산업이 될 새로운 산업 또한 수도권 집중
 -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이행 등 최근의 변화에 미흡한 대응으로 수도권 집중, 공간적 불균등 성장 재현

- 산업, 업종 및 기업간 양극화가 고용 및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는 한편, 노동시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확대
 - －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기업형 사업서비스업과 생계형 서비스업간 격차 확대
- 경제양극화는 지식정보화, 중국의 부상 등 경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으나, 성장-분배, 산업간, 수출-내수, 산출-고용간의 연결고리가 약화된 데에도 기인
 - － 경제성장률 하락과 지니계수 상승
 - － 생산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 모두 하락

□ 구조적 성장동력 약화로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투자부진, 노동공급 둔화 등으로 생산요소의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기술 축적과 인적자원개발이 지체되어 생산성 향상이 부진한데 원인
 - － 설비투자증가율,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증가율 둔화
 - － 기술축적과 인적자원개발 지체로 인한 낮은 노동생산성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국가 시책을 적극 활용하고 동남경제권의 중추도시로 발전하는 길이 부산의 제2의 도약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첩경임

- 광역경제권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비롯한 국책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 경제와의 연결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데 노력
- 동남권 제조기반을 지원하고 역내 경제연관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 등 구상기능과 사업서비스 등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에 공격적 투자 필요

□ 성장-분배, 청년-고령 일자리창출, 산업정책-사회안전망확충 등 상충하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다차원적 정책 수립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위한 공청회, 설명회 추진

- 기업의 기능적 분화와 노동의 계층적 분화에 대응하고 부산의 구심력을 회복하기 위해 ‘신산업지구’ 조성을 기본전략으로 공간적 집적과 기능적 분화를 촉진하여 기업의 외부효과,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도모
- 살기 좋고 특색 있는 소지역 중심의 공간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주권(구·군)별 인프라 확충 및 일자리, 소비·여가, 생산성 등 성장 관리 필요

2 일자리 창출 사업 평가 및 중장기 고용정책 필요성 제기

실·국	관련사업 등
경제진흥본부	

1. 개요

□ 사업목적

- 지속적 일자리 창출과 내실 있는 취업지원으로 실업난 해소
- 눈높이 맞춤형훈련을 통한 직업능력 배양 및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
-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저소득층 안정적 일자리 제공
- 협력적 노사관계 및 산업평화 정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내용

- 지역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의 조화를 바탕으로 신규일자리 창출 (11,700개)
 - － 산업단지, 신항 배후지 등 기업유치, 컨택센터 유치 : 5,500개
 - － 복지·문화시설, 병원, 자치구·군 등 : 6,200개
- 실업해소를 위한 공공 일자리 사업
 - － 사회적일자리사업 36,100명:자활근로(6,000),희망근로(8,300),노인층(11,880) 등
 - －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1,250명, 50개 기업)
 - － 공공근로사업 주민숙원사업 중심 연 4회 단계별 추진 (4,500명)
 - － 행정인턴(연520명), 취업연수생(연260명) 각 5개월
- 취업정보센터, 일일취업안내소 운영 및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개최
- 수요자 중심 직업능력 배양 및 취업지원 강화
 - － 실직가장 뉴-스타트 /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형훈련
 - － 해외인턴 취업지원, 해외취업 시장개척단 지원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단체 등 발굴·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부산형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 노사협력을 통한 고용안정,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 마련

□ 사업예산 (21,158백만 원)

○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형훈련	1,500	○ 행정인턴십 사업	2,078
○ 해외인턴 취업지원	2,426	○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1,300
○ 공공근로사업	9,000	○ 일반운영비 등 기타	4,854

2. 문제점

□ 최근 연구결과는 ‘고용 없는 성장/회복’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어 정부의 대책과 함께 부산지역도 대비 필요(SERI경제포커스 #271 등)

- ‘고용 없는 회복’, 소득감소로 인한 소비위축, 내수기업의 투자부진 예상

※ 제조업과 서비스업, 성장을 주도해 온 수출의 취업유발계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고용창출 능력 약화(한국은행 2009,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지표의 경기 회복세 실현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의 개선은 미흡한 상황, 더구나 일자리 창출이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역작용 우려

- ‘일자리 나누기’ 도입으로 경기하강기 고용조정 압력을 가동률, 노동시간, 임금 조정으로 흡수한 결과 향후 경기회복기에 고용개선 폭 제한

※ 구직단념자, 실망실업자 규모는 확대(20대 실업률 관련 기사, 매경 '10.5.20)

※ 최근 취업자 감소(최대) △19.1만 명('09.1/4), 외환위기 당시 △151.4만 명('98.3/4)

※ 최근 높은 주당 평균근로시간 증가율과 낮은 일자리 창출 폭 증가율 시현

- 최근 경제위기로 발생한 실업자의 상당수가 도·소매, 음식숙박 등 자영업이 아닌 공공부문으로 흡수되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회복 지연될 전망

－ 재정투입이 감소될 경우 상당 규모의 실업과 일자리 창출 폭 축소 전망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중장기 고용정책 수립, 일자리 창출 목표/사업의 연간계획 및 성과관리 철저 당부

- 부산시의 비전과 지속가능한 성장, 중장기 발전계획, 인구전망 대비 적정 일자리 규모를 고용정책목표로 설정, 고용율, 창출 폭, 달성율 관리 필요

□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의 기술혁신·지식주도형 전환, 경제선진화 정책의 지역 맞춤 정책 추진과 긴밀히 연계하여 ‘일자리 생태계’를 유지·강화토록 중용

※ 삼성경제연구소(2009.6), 일자리 생태계와 정책 방향

3 지식서비스 일자리 창출 대책과 인적자원 관리 강화

실·국	관련사업 등
경제진흥본부	

1. 현황

- 고용 없는 성장, 제조업 취업자 비중 감소, 서비스산업의 고용흡수 미흡 추세 지속
 - 최근 내수위축과 고용사정 악화로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도 축소
- 산업구조 선진화와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확대 절실
 - 단기적 고용창출보다는 유망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도록 산업구조 선진화에 주력
 - 고용 비중이 낮은 지식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여지 높은 것으로 판단
 - ※ 사업서비스업의 대졸자 이상 취업 비율은 전산업 평균의 1.6배
- 고용환경 악화와 저성장의 결과 산업구조별 고용 침체와 선별적 정책 추진 중
 - 정부는 청년층에게 선호도가 높고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분야에 2014년까지 약 8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
 - 콘텐츠-미디어, 사회서비스, 관광-레저, 교육-R&D, 보건-의료 분야를 고용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5대 산업분야로 지정하였음

〈 정부의 지식서비스 일자리 창출 대책의 주요 내용 〉

- ① 주요 업종별 발전전략 수립·시행
 - * S/W·디자인·지식정보보안, 엔지니어링 등
- ②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한 지식서비스 수요 창출
 - * 지역산업과 서비스 동반발전을 위한 지식서비스 바우처 도입
 - * 특허, 표준, 우정서비스 등 공공부문의 아웃소싱 확대('12년까지 3천여명)
- ③ 새로운 서비스 혁신 모델 개발
 - * 지식서비스모델 개발 지원, 프랜차이즈 창업가이드라인 제공 등
- ④ 서비스 맞춤형 인력공급('12년까지 4만8천명)
 - * 디자인(디지털 디자이너), S/W(융합 S/W), 엔지니어링(글로벌인력)
- ⑤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 *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지식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
 - * 제조업 지원시책의 서비스업 확대

2. 문제점

-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수요-공급 불일치와 상당 수준의 청년실업 지속
- 지역 경제발전 및 산업육성 정책에 따른 명확한 산업구조별 고용 계획 필요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감소 추세에 있는 고용자수와 단기적인 일자리 대책에 대한 대안적 성격
 - 산업구조변화 및 산업성장의 결정요인을 고려한 고용변화 파악이 필요함
 - ※ 성장잠재력 둔화요인 파악 및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 없는 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가속화 시킬 것임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일자리 중심의 신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사업별 일자리 창출 효과 평가/보고
 - 전략산업 선정 및 육성, 신성장동력 발굴 등에 고용영향평가 시스템 도입
 - 산업/업종별 인력수급실태 조사, 세부업종·연령별 수급정보 분석 DB 구축, 맞춤형 산·학·협동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부문별 인적자원관리 강화
-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 유망업종의 수출상품화를 통해 지식서비스 시장의 외연 확대
 - 지식서비스 수요창출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
 - ※ 제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제고하는 쿠폰제컨설팅, 지식서비스 바우처사업(전략산업 제조기업의 지식서비스 구매비용 지원) 등 실적점검 및 활성화
- 공공기관의 수요증가를 활용, 아웃소싱을 확대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
 - 지식서비스 아웃소싱을 통해 기업경쟁력이 제고된 사례를 발굴·보급하고, 국내외 아웃소싱 성공사례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홍보
-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급 일자리 창출 사업 점검
 - ‘프랜차이즈 우수아이디어 공모전’(경제진흥원) 사업추진시 외식업 위주인 프랜차이즈를 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 소자본 창업 및 고용 창출 유도

4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사업의 정책적 검토

실·국	관련사업 등
경제진흥본부	

1. 현황

□ 사업목적

- 시설 및 경영개선, 공동상품권 유통으로 전통시장 활력 도모
-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보호기반 구축

□ 사업내용

-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
 - － 주차장 설치, 건물/도로 개보수 등: 167억 원(국비 100, 시비 58, 상인 9)
 - － 전기시설, 화장실 정비 등 영세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지원 : 6억원
 - － 시장과 상점가를 권역으로 지정, 상권 활성화사업 공동 추진
- 전통시장 경영 개선
 - －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경영혁신 및 품질·서비스 향상 : 4억 원
 - － 설, 추석, 연말연시 특화사업 지원으로 11개 특화전문시장 육성
 - － 국제시장 등 92개 전통시장 전국상품권 통합 판매
- 유통업 상생협력사업
 - － 대형유통기업 지역사회 기여도 조사, 소상공인 교육 지원
 - － 유통업 상생협력 우수 점포 시상 및 사례집 발간, SSM 사업조정 추진

2. 문제점

□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정책 딜레마

- 도소매·음식숙박업 구조조정 진행 중, 지속적인 취업자 감소
 - － 투자부진 및 영세한 사업규모 등으로 1인당 실질부가가치 OECD 중 최하위 수준(OECD 평균의 38%)

- 업체당 종사자 수는 2명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
- 매출액 규모도 0.9~6억 원으로 통신과 금융업의 5~16%수준에 불과
 - ※ 아시아 금융위기의 경우처럼 제조업 등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경우 일부가 영세 자영업자 취업 증가로 흡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고용흡수 나타나지 않음
- 지역소상인 보호를 위한 대형소매점(SSM) 진입규제 등은 이 분야의 기업화와 대형화를 제약할 가능성
 - ※ 일본의 경우 SSM 규제완화는 단기적으로 중소 소매점의 상권을 위협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동 업종의 기업화, 고용확대,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노진영, 일본의 대형 소매점(SSM) 관련 정책변화 및 평가, 2009)

참고자료: SERI(2009), 한국 서비스업 고용의 특징과 개선방안
- 대형마트 모방식 재건축·재개발 결과 전통시장 고유의 모습 상실, 쇠퇴 초래
 - 상업기반시설 위주의 부분적 시설개선만으로는 경쟁력 강화에 한계
 - ※참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정책 재검토

- 사회안전망 확충과 도심재생의 관점에서 ‘지역커뮤니티 재생 사업’과
-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유통산업 재구조화 촉진 사업’으로 구분 필요

□ 전통시장 특유의 사회문화적 기능 회복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강구

- 지역 정서/전통,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 문화요소 발굴, 관광기능 확대
- 도심재생 전략에서 전통시장별 맞춤형 문화전략 도출·추진
- 지역커뮤니티 재생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의 연계 활성화 도모

□ 구조조정 진행으로 이탈되는 인력들의 자활사업 지원 등 사업전환 촉진

- 과당 경쟁-저조한 경영성과-영세성 고리 타파를 위한 재구조화 정책 촉구
- 대형업체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를 위한 상생협력 모델 개발

5 섬유·패션 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유통단지 개발 방안

실·국	관련사업 등
경제진흥본부	

1. 개요

□ 사업목적

- 전시회, 패션쇼 등을 통한 섬유패션산업 성장 도시로의 품 조성
- 해양레포츠웨어 관련 디자인 개발을 통한 특화사업 육성 지원

□ 사업내용

- 부산 국제 신발·섬유패션 전시회 개최 (8.6억 원)
- Pret-a-Porte 부산 패션쇼 개최 (6.3억 원)
- 해양 레포츠웨어 디자인 개발 ('10년 10억 원, (국비 8, 시비 2))
 - 사업기간 : '09. 6월 ~ '12. 6월, 추진기관 :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내용 : 해양레포츠 관련제품 디자인개발, 클러스터 구축 등
- 한(韓)패션 브랜드 개발 ('10년 1.2억 원 (국비 1, 시비 0.2))
 - 사업기간 : '07. 1월 ~ '10. 6월, 추진기관 :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내용 : 디자인개발, 네트워크 구축, 인력양성, 마케팅 등
- 2010 대학패션 페스티벌 개최 (0.9억 원)
 - 부산지역 12개 대학 패션디자인 전공 대학생 졸업작품 패션쇼
- 아파트형 봉제공장 건립
 - 기존건물 임대 또는 매입, 리모델링 후 봉제업체 제공
 - 타당성 분석(상반기), 계획수립(하반기) 건립추진('11~)

2. 문제점

- 지역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제외하면 지역 기업 주도의 연구개발 활동 및 지원 사업은 전무
- 사업이 전시회/패션쇼에 치중하고 있어, 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 사업 필요
 - 최근 준비 중인 아파트형 봉제공장 건립과 같은 인프라 구축사업은 바람직하나
 - 대학 주도의 인력양성, 네트워킹, 클러스터 구축 성과는 제한적일 것,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지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섬유·패션 협동화 단지를 조성할 필요
 - 산학연계로 섬유소재, 패션디자인 연구개발 전문 인력 및 기업 육성
 - 아파트형 봉제공장 건립사업으로 제조 기업 집적
 - 남대문 시장 등 사례를 분석하여 소재-제품-디자인이 집적된 섬유·패션 전문유통단지 연계 개발
- 노후 공업지역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섬유·소재·패션 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추진 촉구
- 디자인센터, 소재개발 관련 센터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수요 발굴 및 기능 제공을 통해 영세 제조기업의 구상기능 보완토록 하고 추진실적을 점검

6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및 연계 사업 강화 방안

실·국	관련사업 등
경제진흥본부	

1. 개요

□ 사업목적

-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선도 산업 및 특화분야의 유망상품 개발로 광역 경제권별 고부가가치 창출 기반 구축

□ 사업내용

-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진흥사업 ('09~'11)
 - 총사업비 : 282억 ▷'10년 : 100억원
 - 사업내용 :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기기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
 - 추진상황 :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등 19개 과제지원(R&D 14개)
- 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허브구축사업 ('09~'11)
 - 총사업비 : 280억 ▷'10년 : 96억원
 - 사업내용 : 수송 기계용 안전편의 융합부품소재 기반 구축
 - 추진상황 : 대양전기공업(주) 등 20개 과제지원(R&D 17, 비R&D 3)
- 그린카 오토벨트 구축사업 ('09~'11)
 - 총사업비 : 379억 ▷'10년 : 130억원
 - 사업내용 : 고효율 경향 및 전장제품 개발
 - 추진상황 : 1차년도 19개 과제지원(R&D 17, 비R&D 2)
-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 ('09~'11)
 - 총사업비 : 338억 ▷'10년 : 116억원
 - 사업내용 : 해양플랜트 기자재 글로벌 기업육성 및 세계시장 개척
 - 추진상황 : 1차년도 12개 과제지원(R&D 7, 비R&D 5)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 (사업비: 405억 원, 국비247,시비121,민자37)
- 전략산업 선도기업 관리 : 10대 전략산업별 선도기업 1,013개 업체

《광역권역별 선도산업 육성사업 추진》

- 광역권별 신성장 선도산업에 지원역량 집중 (총9,000억원/3년)
 - ▷ 충청권(의약바이오, NEW IT) ▷ 호남권(신재생에너지, 친환경부품)
 - ▷ 강원권(의료료융합, 의료관광) ▷ 동남권(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 ▷ 대경권(IT융합, 그린에너지) ▷ 제주권(물사업, 관광레저)
 - ▷ 수도권(지식정보산업)

2. 문제점

- 동남광역권 신성장 선도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관련 사업들이 있음에도 종합적 정책관리 미흡
 - 국책 사업의 경우 국가경제발전 전략적 중요성과 규모를 고려할 때 사업 자체로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 이와 연계한 다양한 지역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추가적인 파급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부산은 울산, 경남의 선도산업 육성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 관리하여, 중추도시로서 기획관리, 연구개발, 연계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주도할 필요
 - 각 지자체 사업의 목적과 전략, 추진성과, 향후계획 등을 모니터링하여 공유하고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 조화를 주도
- 동남권 선도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 중견기업 육성 필요
 - 정부에서 검토 추진계획 중인 ‘한국형 히든 챔피언’ 300개 기업을 발굴·육성 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부산의 대응을 촉구하고 업계 및 관계와 협력
 - 선도기업지원 사업 종료와 중견기업 육성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

7 전략산업 육성 관련 운영체계 및 정책지원 개선

실·국	관련사업 등
경제진흥본부	

1. 개요

□ 사업목적

-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에 의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이를 위한 산업별 산·학·연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전략산업별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함

□ 사업내용

[표] 2010년 전략산업별 중점추진사업

구분 산업별	중점 추진분야	'10 중점 추진사업
핵심전략산업	해양산업	-부산국제해운거래소 설립, 해운 비즈니스 클러스터 구축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 -수산식품 가공산업 산학관 연구지원센터 건립 등
	기계부품 소재산업	-국제모터쇼 개최, 마리나산업단지 조성, -스마트 전자부품기술지원센터 구축, -첨단선박전자장비 국제공인인증시험기반구축 등
	관광컨벤션 산업	-해외크루즈 유치 마케팅 강화, -주요 관광지 공연 및 이벤트 행사지원, -슬로시티 협력도시 지원, 백스코시설 확충 등
	영상·IT 산업	-부산영상센터 건립, 부산국제 영화제 개최 -차세대물류IT기술연구사업단지원 -부산 IT 융합부품연구소 운영지원 등
미래전략산업	금융산업	-부산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 추진 -파생상품 R&D 센터 건립 -부산금융중심지육성 마스터 플랜수립 시행 등
	고령친화 산업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유치, 부산 실버엑스포 개최 -다양한 전시 체험 서비스관 확충 운영 등
	의료산업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사업 추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FAU 대학원 및 연구소 유치 등
	생활소재 산업	-신발부품소재 첨단기술개발, 해외마케팅 지원, -우리브랜드 명품화사업, 건강 및 기능성신발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디자인 산업	-거리특화디자인 개선,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프레타 포르테 부산 패션쇼 -해양 레포츠크웨어 디자인개발 등
	그린에너지 산업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전용보일러 건립 -부산신항 배후지 물류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등

2. 문제점

□ 전략산업별 실무자 워킹그룹의 운영체제 검토 필요

- 관계공무원,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20인 내외의 워킹그룹이 정책 목표 달성에 적합한지 검토 후 내실 있는 운영 필요

□ 광역권 선도산업 육성정책 관련 국책사업 및 연계사업, 전략산업 육성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정책 연계 미흡으로 인한 정책효과 부진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추진체계와 운영에 있어 정책 조화와 정책이행 효율성 및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정책목표와 정책대상, 정책수단을 구체화하여 공유

- 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제조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혁신방안을 수렴하고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종합하는 단계적 운영 검토
- 기업과 업종별 단지에 정책 효과가 직결되도록 사업 간 연계성 종합검토 필요
- 업종별 클러스터 지원정책을 개발 강화토록 촉구

□ 전략산업 선도기업을 선정·지원하는 정책의 당위성은 협력기업 지원과 같은 선도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근거하므로 엄격한 선정기준 적용 등 개선 필요

- 지역경제의 침체와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협력기업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이라는 면도 있으나 사적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곤란
- 선도기업 지원정책의 후속 보완 사업으로서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활용한 전략산업별 중견기업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사업방향 및 내용에 관한 업계 및 관계의 의견 수렴

8 산업단지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강화

실·국	관련사업 등
경제진흥본부	

1. 개요

□ 사업목적

- 실수요자·민간개발 확대로 산업용지 적기공급 및 조성원가 인하 유도
- 산업단지 조성 지원체제 구축으로 처리기간 최대한 단축
-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산업단지 기능 제고
- 노후 공업지역 재정비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 사업내용

- 산업단지 조성 지속 추진 (<별첨> 산업단지조성현황 참고)
- 특례법에 의한 실수요자 개발방식의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추진
 - － 산업단지 개발기간 단축으로 기업의 용지난 해소 및 생산활동 지원
 - ※ 거화산단 : 강서구 지사동, (주)거화특수강 - 철강파이프, 강판제조 등
 - 산양산단 : 사하구 다대동, (주)산양 / 기장대우산단 : 장안읍 오리, 대우버스(주)
- 산업용지 적기공급 지원체제 운영
 - －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및 시 조례에 의한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 지원체제 운영
 -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도시계획/산업입지/교통/환경 분야 담당공무원 30명
 - 입지타당성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조정·지원,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절차 이행
 -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전문가, 관련 위원회 추천위원, 공무원 등 30명
 - 산업단지계획 심의(도시계획/교통재해·에너지·산지위원회 일괄), 관계기관 의견조정
 - － 사전 타당성 검토 단계부터 행정지원으로 산업단지 개발기간 단축
 - ※ 간소화: 2단계(개발계획, 실시계획)→1단계(계획승인), 기간단축: 3-4년→6개월내
 - － 산단개발을 위한 투자의향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시 수시 운영
-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강화
 - －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 － 산업단지 관리실태 점검 등 행정지도 실시

- ※ 산단 유관기관 간담회 정례화 : 시, 산업단지공단, 해당 구군, 경제자유구역청 등
 - 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상의 지원·공통 기업 애로사항 등 협의 및 해결
- ※ 산업단지 위탁관리 운영지원
 - 입주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관리기관 행·재정적 지원으로 산업단지 효율적 관리
- ※ 관리기관 지도점검을 통한 입주업체 지원 강화
 - 공장 및 건축물 등록, 입주 및 변경계약 처리, 공장설립대장 관리, 입주기업 지원 등
- 산업단지 기반시설·방재시설 확충으로 산단 기능 제고 및 입주기업 지원
 - 장안산단 진입도로: '08-'11년, 공정60%('09.12), 445억원(전액국비)
 - 녹산산단 해안방재시설: '06-'11년, 공정59%('09.12), 363억원(시비 73)
- 노후 공업지역 재정비를 위해 사상공업지역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시범추진
- 사상공업지역 재정비 개발계획 기본구상수립 용역
 - 복합산업단지 전환 및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 등
 - ※ 국토해양부에서 노후 산업단지(공업지역 포함) 재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사상공업 지역을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전국 4개소)
- 공업지역 내 노후 기반시설 정비·보강 등 기업환경개선사업
 - 공업지역 내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성 제고
 - ※ 위치 : 4개 지역(사상·금사공업지역, 신평장림·녹산산단), 사업비: 15억원(시비)
 - 사업내용 : 구거, 도로, 하수시설, 표지판 정비 등 (사업기간 '10.1-'10.12)

2. 문제점

- 단계별 산업용지 공급 규모는 큰 변화가 없는 한 차질 없어 보이나 분양가격, 보상, 입주기업 유치 등 해결 과제 상존
- 산학연관 지역혁신체제 구축기동을 위한 정책적 고려 없이 관리운영에 치중
 - 산업단지내 집적한 입주기업들의 규모/범위의 경제효과 등을 창출할 네트워킹 강화 사업을 보강해야 함
 - ※ 기업 연구개발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 등을 동일공간내 집적시켜 새로운 산학 융합 모델 창출 필요(지경부, 산학융합단지 추진)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협동화단지 및 산업단지별 업종별 협회 혹은 운영조직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 기능과 고용지원기능을 결합한 클러스터 발전 체계 강화 유도

9 협동화단지 조성 사업의 정책적 가치 및 활용도 제고 필요

실·국	관련사업 등
경제진흥본부	

1. 개요

□ 사업목적

- 동종 업종의 민간기업 요청과 참여로 산업용지 개발 공급
- 실수요자·민간개발 방식으로 산업용지 적기공급 및 조성원가 인하 효과

□ 사업내용

- 기계공업협동화단지 조성 (강서구 화전산단내)
 - 부지 62.8만㎡, 98업체 참여 (총사업비 : 3,350억 원, 민자)
 - 부지 조성공사 완료('09.12월), 개별기업 년차별 입주('09년~11년)
 - ▷ 연도별 공사착공 기업 수 : '09년 13개, '10년 71개, '11년 14개
 - 기계공업협동화단지 지원시설건립('10~'11, 시비 20, 민자 103억 원)
 - ▷ 협동화시설: 물류창고, 공동식당, 마케팅시설, 교육시설 등
- 부산기장자동차부품단지 조성 (기장군 장안산단내)
 - 부지 54.6만㎡, 23업체 참여 (총사업비 : 1,629억 원, 민자)
 - 토지보상, 단지분양(24필지, '08.11) 준공검사('10.6), 년차별 입주
 - ▷ 연도별 공사착공 기업 수 : 23개 업체('09년 3개, '10년 20개)
 - 부산기장자동차부품단지 공동시설 구축지원 (시비 10, 민자20억 원)
 - ▷ 협동화시설: 마케팅시설, 교육실, 회의실, 공동식당 등
- 조선기자재 협동화단지 조성 (미음산단 내)
 - 부지 59.9만㎡, 120업체 (총사업비 : 5,310억 원, 민자)
 - 토지보상, 단지분양(65필지, '09.12), 공사착공('09.2), 조성완료('12.12)
 - ▷ 연도별 공사착공 기업 수 : '12년 20개, '13년 60개, '14년 40개

- 기계부품소재산업 지역특화센터 운영지원('09~'12, '10사업비: 30억 원)
 - 지원목적 : 기업지원 업무 활성화, 센터 자립운영 도모
 - 대 상 :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 MEMS/NANO부품생산센터, 해양레저장비개발센터, 선박용전자장비시험인증센터, 차세대열교환기센터
 - 사업내용 : 기 구축 장비 및 인력을 활용한 기업지원
 - ▷ 센터 운영 자립화를 고려한 운영지원금 단계별 축소 지원
 - 사업협약(1월), 자립화 보고회(6월), 사업비 정산검사(12월)

2. 문제점

- 산업단지 개발공급 측면의 이점을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고, 협동화단지 조성을 통한 관련 기업의 집적과 이를 통한 네트워크 효과, 혁신 효과 등에 관심 없음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산업단지 개발 및 기업유치 전략의 핵심 요소로서 협동화단지를 적극 지원하여 유연적 전문화/장인생산 체제가 구축된 '신산업지구'로 육성
 - 신산업지구는 장인적 전통으로 전문화를 유지하며 상호 긴밀한 협업 관계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통해 지역경제성장의 주역으로 등장
 - 네트워킹, 혁신 활동을 장려하고 유연적 기술인력 양성, 사업서비스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성장 메커니즘 작동 여부를 중심으로 관리 필요
 - 구상기능과 실행기능의 기능적 분화, 지원산업 발전 가능성, 숙련노동력 존재, 새로운 아이디어 발생·확산 잠재력 증대가 핵심 메커니즘
 - 입지 주변 기업과의 사업기회 확보가능성이 중요한 기업입지 요인이므로 가능하다면 협동화 단지 인근 산업용지의 여유 있는 개발이 바람직
- 인근 지역의 정주 환경 조성
 - 주거지역, 문화·소비·여가 활동을 위한 정주권 개발
 - 구인·구직, 물류·교통 등 도시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적 고려

10 초광역경제권 공동사업 등 경제협력 확대 강화 방안

실·국	관련사업 등
경제진흥본부	

1. 개요

□ 사업목적

- 부산·후쿠오카 공동협력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모색
- 부·울·경 경제관계관 워크숍 개최를 통한 광역경제협력체제 구축

□ 사업내용

- 추진경과 및 주요 사업
 - － 부산·후쿠오카 경제협력협의회 창립총회('08.10)
 - － 공동협력사업 합의('09.8) : 23개 사업 64개 과제 추진
 - 1차('10~'13) : 경제협력사무소 상호 설치 등 단기과제 55개
 - 2차('14~) : 수산시장 간 거래 실현 등 중기과제 9개

《2010년 중점추진사업》

- ◆ 공항항만에서의 전자머니 판매환불
- ◆ 무역상담회 개최 및 각종 전시회 상호 참가 지원
- ◆ 산업별, 기관별 교류 활성화 추진
- ◆ 중소기업 CEO포럼 구성 및 교류
- ◆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투자지원회 활동 지원

- 부산·후쿠오카시 기업유치 협력체제 구축(투자유치단)
 - － 일본 우수 부품소재기업 부산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양 도시 간 지역 기업 벤치마킹, 투자세미나 개최 등의 협력 사업 추진
 - ※ 부산투자지원회 설립('09.8), 양 도시 합동실무회의 개최('09.11), 투자지원 업무제휴협정 체결('09.12)
 - ※ 후쿠오카 및 북큐슈지역 마케팅 추진('10.4) : 그린에너지, 태양광, 2차전지, 부품소재 등 주요 기간산업의 투자의향기업 확보 노력

2. 문제점

- 동아시아 역내 FTA 확산, 금융협력(CMI 다자화) 증대 등 통합기반 진전 중임을 감안할 때, 양 시의 경제협력은 내실 있는 사업들의 조기 추진이 요구됨
 - 일본의 산업 및 기업문화, 경제·사회·문화 정책 경험 등의 교류 부진
 -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융합형 신산업 발굴, 산·학·연 혁신체계, 숙련형 고령노동 활용을 비롯한 고용·산업·보육·여성·복지 정책경험의 교류 및 전략적 활용 소홀/계획미비
 - 저출산·고령화 진전, 신성장동력발굴/일자리창출 미흡, 경제위기 극복시기, 중국·아세안 경쟁심화 등은 협력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속화 요구
 - ※ ‘아세안 현장’(08년말 발표)을 통해 2015년까지 EU수준의 공동체 목표 설정
- 외국기업 유치에 소극적인 일본은 우리의 외국인전용단지 조성, 인센티브 제공, 투자IR 등 외국기업 유치활동에 냉담한 반응
 - 일본 큐슈시나 정부는 기업의 한국(부산) 진출을 위해 협력하기 곤란한 입장이며, 기업 추천 및 정보 제공 이상의 협력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중산·서민층의 일자리 창출과 후생 증대를 위한 경제협력 방안/사업 마련 촉구
 - 부산-후쿠오카, 동남경제권-북큐슈의 지역 특성과 선도산업 지원정책 등 정부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제협력효과 제고방안 마련 요청
 - 일본의 경험 공유,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국제산업물류단지내 부품 소재·물류 관련 전용단지지정 효과 등 학술·정책 교류사업 지원 및 참여
 - 예) 대외·국내·지역 정책 간 유기적 연계와 지역사회의 적응력 제고 -부산, 후쿠오카-
- 투자유치·해외진출 등과 관련 대외/대정부 교섭력 강화를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확대·역할강화, 정보관리체제와 ‘컨트롤 타워’ 기능 점검
 - 해외 인적네트워크 확대, 대외역량 축적을 위해 연구소·학계의 인사교류, 국제대학원 졸업생 등의 국제기구 근무지원 사업 확대 필요성 제기

【 별첨 】 산업단지조성현황

■ 조성완료 산업단지 : 8개소 1,761만㎡ (산업시설용지 : 976만㎡)

- 녹산(697만㎡), 신평·장림(282만㎡), 정관농공(26만㎡), 신호(312만㎡)
센텀시티(118만㎡), 과학(197만㎡), 기룡1(8만㎡), 정관(121만㎡)

■ 승인 및 공사 중 산업단지 : 7개소 908만㎡ (산업시설용지 : 481만㎡)

[동부산권 : 293만㎡]

- 장안산단('04~'10) : 132만㎡(77만㎡), 공사 공정 96%, 사업완료('10.12)
- 기룡2산단('07~'10) : 5만㎡(3만㎡), 공사 공정 96%, 사업완료('10.12)
- 명례산단('07~'13) : 156만㎡(89만㎡), 착공('10.2), 사업완료('13.12)

[서부산권 : 615만㎡]

- 화전지구('03~'10) : 245만㎡(142만㎡), 공사완료('09.12), 사업완료('10.12)
- 미음지구('08~'11) : 360만㎡(166만㎡), 공사 공정 14%, 사업완료('11.12)
- 거화산단('09~'11) : 5만㎡(2만㎡), 공사착공('10.1), 사업완료('11.6)
- 산양산단('09~'12) : 5만㎡(2만㎡), 공사착공('10.6), 사업완료('12.6)

■ 절차이행 중 산업단지 : 8개소 1,053만㎡

[동부산권 : 372만㎡]

- 석대산단('07~'12) : 23만㎡, 실시계획 승인('10.3), 착공('10.3)
- 가장대우산단('09~'12) : 34만㎡, 산업단지계획 승인('10.3), 착공('10.12)
- 일광산단('07~'13) : 65만㎡, 산업단지계획 승인('10.10), 착공('11.6)
- 오리산단('08~'14) : 250만㎡, 산업단지계획 승인('10.10), 착공('11.6)

[서부산권 : 681만㎡]

- 생곡지구('09~'12) : 55만㎡, 실시계획 승인('10.3), 착공('10.6)
- 명동지구('09~'15) : 50만㎡, 실시계획 승인('11.5), 착공('11.9)
- 강서보고산단('09~'11) : 10만㎡, 산업단지계획 승인('10.6), 착공('11.1)
-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09~'14) : 566만㎡, 산업단지계획 승인('10.2), 착공('10.9)

자료 : 부산시 경제산업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2010.1.25

복 지 여 성

1.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빈곤층지원 사각지대 27만 추정	27
2. 출산장려정책, 가족친화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30
3. 안정적인 노인장기요양보호체계 구축과 서비스 질 제고	33
4.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유치와 고령친화산업 발전기반구축	35
5. 전자바우처제도에 기반한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질향상	38
6.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심뇌혈관 및 만성질환관리 강화	41
7.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43
8. 여성 취업지원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확대	46
9. 미래를 선도할 아동청소년의 역량강화	49
10. 다문화 및 탈북 가족 지원환경	52

1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빈곤층 지원 사각지대 27만 추정

실·국	관련사업 등
복지건강국	

1. 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수급자 및 사각지대 빈곤층의 생활안정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2000)이후 수급자 30,42%(2010) 증가
- '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09년 3월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 추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긴급복지수급자 확대 추진
- 최저생활보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 차상위계층, 노숙인, 쪽방생활자 등 사회안전망 누락 사각지대 늘고 있어, 이들의 생활과 자활 지원을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조, 제 43조

□ 사업내용

- 2000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 명문화
- 급여내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 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월동대책비(자체사업), 교육장려금(자체사업)

[표] 부산광역시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 천원)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수급자수	54,324	115,192	103,047	114,936	134,983	138,327	150,242
주민등록인구	3,842,834	3,812,392	3,747,369	3,684,153	3,635,389	3,596,063	3,535,620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	1.41	3.02	2.75	3.12	3.71	3.85	4.25

* 출처: 통계청 KOSIS와 각년도 세입·세출사업명세서 참조

* 예산은 하단의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예산을 합산하였음

□ 사업예산

[표]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10			2009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계	360,655,171	37,946,980	398,602,151	359,203,249	34,924,835	394,128,084
생계급여	280,053,624	22,483,615	302,537,239	256,048,748	21,000,836	277,049,584
주거급여	55,304,590	4,359,387	59,663,977	68,978,415	5,530,536	74,508,951
교육급여	14,047,994	1,133,572	15,181,566	13,417,735	1,093,574	14,511,309
해산, 장제급여	1,351,797	107,162	1,458,959	1,219,948	98,818	1,318,766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1,068,602	133,576	1,202,178	183,448	22,933	206,381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3,274,564	409,321	3,683,885	1,829,086	228,636	206,381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50,000	50,000		200,000	200,000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8,877,809	716,218	9,594,027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6,033,800	6,033,800		5,987,600	5,987,600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지원	5,606,000 (분권교부세)	3,297,047	8,903,047	8,648,060 (분권교부세)	7,000	8,655,060
저소득주민 지원업무추진		36,000	36,000		38,684	38,684

*출처 : 2010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보사환경위원회), 부산광역시, pp.293-294. 2009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보사환경위원회), 부산광역시, pp.247-250

2. 문제점

□ 광범위한 사각지대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2010년 150,242명(일반수급+시설수급)이고, 2008년 138,327명으로 시인구대비 3.85%에 이르고 있으나 최저생계비이하이면서도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빈곤층, 차상위계층등 광범함
- 최저생활보장지원 사각지대 부산시인구 7.55%인 271,502명(2008)로 추정
 - －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경상소득기준, 2008)은 11.4% 공식집계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 빈곤통계

□ 수급자 분포의 지역적 편중

- ‘08년 수급자(123,005명)의 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부산의 북구의 경우, 15,948명으로 부산 수급자의 12.97%, 사하구의 경우, 14,674명으로 11.93% 분포하고 있음

□ 근로저하, 소득하향신고, 탈빈곤 미흡

- 현재 가구기준 최저생계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보충급여방식.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이나, 현실적으로 자활을 위한 소득활동에 걸림돌 역할.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사각지대 완화,

- 국민기초보장제도는 최종적인 사회안전망, 누락 빈곤층에 대한 보호 확대 수급자 관리강화 등을 통한 재정 효과성 관리

□ 부분급여 확대에 대한 중앙정부 건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관련 서비스 전부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도 받을 수 없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탈수급 과정에서 의료, 교육 등 부분적인 지원을 한시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수급자의 부담 경감 필요함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지원등의 부분 급여 확대 (중앙 정부 건의)

□ 수급자층의 지역적 편중을 고려한 프로그램 및 자활 기반 모색

- 최근 새로이 이슈화된 빈곤층의 지역적 편중에 대응하여 부산시(6월초)는 저소득층밀집지역에 “좋은마을 네트워크”를 구성,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 하고 지원체계 구축과 프로그램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하였음
- 좋은 마을네트워크 구성시 지역단위에 기반한 소규모 자활사업 활성화 모색

□ 부산의 빈곤과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data 구축

- 수급자 및 특히 차상위층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구축
- 다양한 빈곤을 관련 분석자료 축적으로 정책 효과 평가 근거 구축

2 출산장려정책 가족친화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실·국	관련사업 등
여성정책실	

1. 개요

□ 사업목적

- 임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진작과 조성으로 저출산문제 극복

□ 사업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 사업내용

- 초저출산극복 ‘원년’ 선포
 - － 2010년 이후 출생한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전액지원, 초,중·고 무상 교육, 대학입학 첫 등록금 지원
 - － 장려기금 조성 ▸1,000억원 목표(매년 100억원씩 10년간)
- 「다자녀가정 우대제」 활성화
-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 영유아 보육·교육비 : 소득하위 70%이하 지원
 - －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 월10만원 → 보육료 전액
 - － 공립보육시설 지속 확충 : ‘06년 114개소 → ’12년 228개소
 - － 민간보육시설 공보육지원 확대 : 18개소 → 25개소 내외
 - － 유치원 종일제 확대 지원 : 개소당 월30만원 → 월50만원
-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 둘째이후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둘째 20만원, 셋째이후 120만원
 - － 출산장려 언론 홍보 ,손자녀사랑 운동전개
 - － 다자녀모범가정 및 출산친화기업 선발·시상 「다자녀가정의 날」 운영
 - －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 27개 기관·단체 참여

-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학교 역할 강화
 - 방과후 학교 내실화, 초등보육프로그램 운영 : 350실(아침43실, 오후 256실, 저녁 51)
 - 사이버 가정학습 내실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학교교육 강화

□ 사업예산

- 부산시 저출산분야 :
 - 2010사업예산 총 4085억원임.
 - 중앙정부 공통사업 60과제 3,659억, 자체사업 141과제, 426억 소요.
 - 자체사업은 금년부터 출산장려기금조성 100억 일반회계에서 조성

[표] 부산광역시 저출산분야 사업예산

(단위 : 억, %)

부 문 별	'09년	'10년	증감	'10년 과제수
공통 사업	2,938	3,659	721 (24,5)	60
자체 사업	229	426	197 (86,0)	141
계	3,167	4085	918 (28,9)	

* 출처 : 2010 부산시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 p.25

2. 문제점

□ 인구정책 중심의 출산장려책

- 공통사업 중 교육과 보육관련 지원예산 18과제 3,054억 6백만원으로 총액 3,659억원(60과제) 중 83.5%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 보육 분야중심의 출산장려정책
- 자체사업으로 교육, 보육분야 예산이 29개사업 200억129십만원(29개사업)으로 총액 426억(141개 사업)중 46.9%가 소요되고 있음.
- 일본에서도 2006년 보육인프라 구축, 출산지원등 인구정책중심의 출산장려책이 효과가 미흡함을 인식하여 사회전반에 걸친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전환한 바있음.

□ 부서 연합 테스크포스 역할 미비

- 「인구대책위원회」 실질적 기능 미진 : '07년 정책기획관실소속으로 32개 기관·단체 32명으로 「인구대책위원회」 구성하였으나, 이후 활동 전무.
- 조직 연계등 운영상의 효과를 위해 소속은 정책기획관실에 둔다하더라도 실질적인 저출산 정책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정책관실 전담조직이 중심이 되어야 실질적인 기능 수행 가능할 것임.

□ 저출산 관련 사업에 대한 효과성 및 평가 체제 미비

- 2010년부터 100억씩 조성되는 저출산기금등 장기적으로는 향후 확대될 저출산사업의 재정투여 대비 효과성, 욕구대비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필요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출산장려정책의 궤도 전환

- 출생아의 보육과 교육 지원에 집중하는 인구정책 중심에서, 교육, 노동, 문화, 도시인프라 등 종합적 영역에서 가족친화, 출산친화적 부산 조성
- 최근 부산시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입한 유연근로제와 같은 출산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

□ 기능이 미흡한 「인구대책위원회」, 움직이는 『출산 및 가족친화 부산조성위원회』로 전환

- 「인구대책위원회」 명칭, 가칭 『출산 제고 및 가족친화 부산조성위원회』로 전환
- 출산 및 가족 친화 사회조성을 부서연합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선도하고, 조정해 나갈 테스크포스 기능 강화
- 정책기획관실 소속, 핵심조정역할은 저출산대책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한 정책연계로 정책실행력을 고려한 확대조직 구성과 운영

□ 사업 효율성 및 효과성 평가를 구성

- 2010년부터 100억씩 조성되는 저출산기금등 장기적으로는 향후 확대될 저출산사업의 재정투여 대비 효과성, 욕구대비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를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출산장려지원책 다각화

- 출산이후, 보육, 교육환경 지원 중심으로는 출산율 개선효과 미비하여 일본도 2007년 전반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방향 전환함
- 연령별 대응 다각화, 생애단계별 저출산 원인에 대응한 다각화 필요함. 즉 학령기 아동에 대한 출산친화교육에서부터 청년기 대응,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노년층에 대한 출산의 현대적 중요성과 의미에 대한 노인교육등 연령별 다각화 추진

3 안정적인 노인장기요양보호체계 구축과 서비스 질 제고

실·국	관련사업 등
복지건강국	

1. 개요

□ 사업목적

- 지역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활성화 및 안정적 서비스 기반 제공
- 2010년까지 적정수준의 인프라구축을 목표로 시설확충 추진
 - 중장기적 수요에 기반한 시설별 공급 충족을 점진 필요

□ 사업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조, 2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업내용

[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급여 대상	보편적 제도 65세이상 65세 미만자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서비스 선택	대상노인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재원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부담
급여	시설 급여 재가 급여(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특별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추계

[표] 기준 등급별 요양인정자 추계

(단위 : 명)

	요양인정자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외 자
2009	18,069	3,829	3,988	7,045	3,209
2010	18,765	3,976	4,141	7,316	3,332
2015	23,449	4,969	5,175	9,143	4,164
2020	29,196	6,187	6,444	11,384	5,186

*이재정(2009),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의 수요·공급현황분석, 부산복지개발원, p.111

2. 문제점

□ 향후 시설 충족률 및 부족분 증가

- 부산복지개발원(2009)는 노인요양시설이 향후 요양인정자 추계에 기반할 때, 현재의 시설 병상수로는 2015년 등급별 요양인정자 60% 이용시에도 19.8% 부족하며, 2022년에는 35.6%가 부족하다고 예측하고 있음.

[표] 1,2등급판정자 노인요양시설 이용시 부족율 추계

	시설공급 (병상수)	수요(명)		부족분(%)		부족분(명)	
		60%	80%	60%	80%	60%	80%
2010	3,588	3,578	4,771	+ 0.3	- 39.8	10	- 1183
2015	3,588	4,472	5,962	- 19.8	- 51.9	- 884	- 2374
2020	3,588	5,568	7,424	- 35.6	- 61.5	-1980	- 3836

*이재정(2009), 조인장기요양보호시설의 수요-공급현황분석, 부산복지개발원, p.114

□ 노인요양기관의 서비스 품질 개선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전국 1,194개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대상 평가, 시설 규모별 상위 10%인 119개 우수기관 명단 공표.
- 부산의 경우 우수기관에 단지 3개소만 선정되었음 : 경기(50), 서울(20), 강원(9), 전남(6), 전북(6):

3. 정책 방향과 의회의 역할

□ 통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 향후 노인요양시설 부족분에 대한 대응시, 장기요양보험 인정기관인 노인요양시설, 건강보험 인정기관인 노인요양병원 간의 통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의 정비로 요양관련 민간인프라 연계 방안 모색

□ 재가노인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

- 재가노인서비스 제공자 교육 강화, 공급서비스 다양화등 제공서비스 품질향상으로 노인요양 시설 입소상태에 이르는 기간 연장방안 강구.

□ 민간재가시설 설치, 관리, 교육등에 대한 조례 제정등을 통한 관리기능 강화.

4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유치와 고령친화산업 발전기반구축

실·국	관련사업 등
복지건강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인관련 연구, 정책개발, 교육, 연수 삶의 질 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문제 해소 및 풍요로운 장수사회 추진
 - － 협력적 연구기능 기반 강화
 - － 높은 부산의 고령화율을 성장동력 기반화 전화 계기
 - － 고령친화산업 발전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기여
- 다양한 영역의 고령친화산업 선도도시 추진.
- 중입자 가속기설치에 기반한 동북아메디컬컴플렉스, 시니어 콤플렉스 등 동부산권 의료, 생명 R&D 클러스터에 기반한 지역개발 촉진

□ 사업내용

- 부산시는 국립노화종합연구원을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일원, 부지면적 165,000㎡(약 5만평)규모로 총사업비 1,632억원(설계·공사 853억, 장비구입 277억, 부지매입 : 지자체 부담 502억)으로 유치를 추진해오고 있음

□ 추진 경과

- ‘04년 전국 최초로 부산이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설립 필요성 인식, 설립을 정부건의
- ‘06년 T/F팀 구성, 12월 BDI 국립노화종합연구원 기본구상 수립
- ‘09. 4 설립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입법안 국회상정 (한나라 수영구 유재중의원 발의)

[표]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

	김효석 의원 외 10 명	유재중 의원 외 11명
법 안 명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 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소관 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연구원 설립형태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상의 특정연구기관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 설립
부처 논리	○ 노화관련 임상연구 ○ 사회경제적 연구, 노인정책은 복지부 소관 ○ 노화관련 기초, 원천기술 연구촉진법이므로, 교과부 총괄, 복지부, 지경부 역할 분담	○ 노화기전, 유전학 등 기초연구 및 임상연구와 사회경제적 연구등 노인정책을 포괄하는 것

김유석(2009), 노화연구 활성화를 위한 시니어 콤플렉스 조성방안, 고령화시대 노화연구와 의료산업발전전략 심포지엄 자료집. 부산광역시, 기장군. p.76

- 부산시는 핵과학 특화단지 안에 있는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일원 10만m²를 후보지로 결정
- 광주 전남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주축으로, 연구원 광주설립을 염두에 둔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안이 국회 계류 중
- 보건복지부 실무부서는 바이오 전문국가산업단지이고, 식약청, 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본부등 보건의료 분야 6개시책기관 청사이전이 진행중인 충북 청원의 오송생명과학단지도 후보지로 무게를 두고 있음

□ 사업예산

[표] 국립노화연구원 유치 예산

(단위 : 천원)

	2010	2009
국립노화연구원 유치 업무추진비	1,000	1,000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유치위원회 운영 및 세미나 개최	10,000	10,000
계	11,000	11,000

2.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실버산업의 새로운 모델 구축으로 고령사회 선도적 대응

- 노인의료, 휴양형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구원 유치와 중입자가속기 운영 예정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연계된 노인의료와 주변관광, 노인주거등을 연계한 노인의료와 휴양형의 의료관광의 국제적 경쟁력 점검.
- 해외환자유치특화지자체 보건복지부 5곳 선정, 서면메디컬센터15억, 성형을 중심으로 한 부산의 서면메디컬, 기장을 중심으로 한 노인메디컬과 요양의 해외환자유치특화 현실성 점검
 - 경기도 가평, 청심국제병원 일본 등 의료보험과 연계기반 구축으로 일본인 임산부등 연 2만 유치
 - 동부산관광단지 개발과 연계시 시너지 효과 확대

□ 국립노화연구소 유치를 계기 고령화대응 콤플렉스 구성

-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기장군의 경우,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시니어타운, 시니어랜드, 시니어플라자를 묶는 시니어컴플렉스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음.
- 시는 최근 고령친화산업단지도 연계 추진
 - 장안면 오리 일반산업단지내 고령친화특화단지 10만평 구성, 오리민간투자자산단(주)과 고령친화산업단지추진단 (사) 05.19 협약 체결

□ 소규모 주도집단 중심의 진행에서 지역사회 통합적, 시민적 공감대 확대를 위한 의회의 역할 모색

- 선거 이후 국립노화연구원 진행 급물살 탈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함
- 시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의회의 역할 발굴

5 전자바우처제도에 기반한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질향상

실·국	관련사업 등
복지건강국	

1. 개요

□ 사회서비스사업 배경

- 새로운 사회적 위험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양극화의 심화·확산은 상대적 취약계층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서비스 수요 가속화, 취약계층 보호 외에 근로빈곤층 등 신빈곤층의 인적자본 형성을 통한 예방적 복지 필요
 -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능동적 복지의 구현
 -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표] 산업별 취업계수

(단위: 10억원당 명)

	사회복지서비스업	서비스업	전산업	제조업
취업계수	27.6	20.5	16.9	12.1

* 취업계수 : 산출액 10억원당 소요되는 취업자수

출처 : 201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p.4

□ 사회서비스 개념

- 집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개인과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국가 혹은 지역서비스
-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

□ 전자바우처 제도의 개념

-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제도
- 바우처방식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다변화로 비영리기관간 경쟁과 함께, 참여가 제한되어 왔던 영리기관들의 참여로 영리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의 경쟁을 통한 효율화와 서비스 질 향상 추구

□ 사업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43개 사업
 - 지역선택형 2(복지부)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건강관리프로그램,
 - 지역개발형 23(시6, 구군 17), 청년사업단 18(시6, 구군 12)
- 지원대상: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4인가구 기준: 3911천원)

□ 사업예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단위 : 천원)

	2010			2009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개발형)	(광역) 1,504,000	(광역) 644,571	2,148,571	(광역) 927,654	(광역) 397,567	1,325,221
	(기초) 2,258,000	(기초) 483,857	2,741,857	(기초) 1,391,480	(기초) 298,175	1,689,65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선택형)	5,644,000	2,418,857	8,062,857	2,775,623	1,189,552	3,965,175
사업운영지원		80,000	80,000		0	
계	9,408,010	3,627,285	13,033,285	5,096,766	1,885,294	6,980,051

출처 : 2010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보사환경위원회 소관), p.303.

2. 문제점

□ 협애했던 지역개발형 서비스 공급원

- 지역개발형 아동건강관리프로그램의 경우, 서비스제공처 3곳(연대산학협력단, 엑스포웰, 스메츠)뿐이며, 모두 서울소재 기업들임
- 지역개발형 서비스 공급이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있지 못함

□ 지역선택형 서비스 공급기관 편중

- 단선적 서비스 공급기관 (지역선택형)
 - － 현재 주류를 이루는 참여기관은 종합복지관임
 - － 서비스 공급기관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기관간 경쟁, 프로그램 다양화 증진 요구됨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서비스 대상 집단 다양화

- 지역개발형사업 2개 사업 다양화에 대한 중앙 부처에 대한 제안이 필요함.
현재 아동인지능력향상은 아동학습지와 서울의 건강관리3개 기업참여, 재부기업의 진입가능성도 모색해 볼 필요있음..
- 지역사회서비스 클라이언트 집단의 다양화
 - － 종합사회복지관 클라이언트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수행기관의 다각화, 노숙인, 일용직 근로자, 성매매피해여성 등 서비스 대상 다각화, 서비스 종류 다각화가 필요함

□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의 다양화

- － 다양한 클라이언트 집단의 욕구에 따른 제공 서비스의 다양화
- － 프로그램다양화는 사회서비스 공급자 집단을 다양화로 이어져 취업가능집단도 다양화될 수 있음

6.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심뇌혈관 및 만성질환관리 강화

실·국	관련사업 등
복지건강국	

1. 개요

□ 사업목적

- 심뇌혈관 및 만성질환에 대한 일상적, 예방적 관리체계 강화
 - － 부산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율 7대도시에서 가장 높음
 - － 당뇨병, 호흡기, 순환기 계통 질환의 사망률도 동일
 - － 의료적 대응 체계 구축과 함께 보건소를 중심으로한 예방적 관리, 일상적 관리 체계 강화

[표] 7대 도시 각 질환별 조사망율 (2008)

	호흡기계통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	당뇨병
전국	0.32	1.12	0.21
서울특별시	0.18	0.85	0.15
부산광역시	0.31	1.44	0.26
대구광역시	0.26	1.11	0.23
인천광역시	0.24	1.02	0.22
광주광역시	0.30	0.90	0.19
대전광역시	0.29	0.94	0.14
울산광역시	0.26	0.89	0.16

출처: 통계청, KOSIS, 사망원인별 사망자수(2010, 05, 19)를 기반으로 작성함

*조사망율: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

□ 사업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 39조 제41조, 보건복지부 만성질환관리사업지침

□ 사업 내용 및 예산

[표] 심뇌혈관, 만성질환 관련 사업 및 예산

(단위: 천원)

		2010	2009	2008	2007
계		3,937,094	3,598,755	2,882,200	2,628,000
지역심뇌혈관응급진료체계 구축		547,825	—	—	—
급원클리닉 운영		2,020,400	2347,400	2,734,200	2,480,000
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		386,913	310,176		
지역특화건강 행태사업	직 접	61100	49180		
	지 원	699,672	700,815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운영(직접)	45,184	45,184	—	—
	국제당뇨병학회 개최지원	30,000	—	—	—
	만성질환관리사업(민간위탁)	98,000	98,000	100,000	100,000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지원)	48,000	48,000	48,000	48,000

출처: 2010.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pp.384-406, 사업명세서

2. 문제점

□ 금연클리닉 대상집단별 대응 필요

- 금연클리닉운영은 심혈관질환 및 만성병관리사업 예산(2010) 39억3천의 51.3%를 쓰는 큰 사업임.
 - 재정투자 대비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내용의 효율성 제고
 - 남성흡연율의 경우 2005년 대비 2007년 까지 남성흡연율 52%에서 42%(KOSIS, 흡연율 전국통계)로 하락하였으나, 여성, 중고등생등의 흡연율은 상승하고 있음 .

□ 고혈압, 당뇨병관리 보건소의 실질적 역할 수행 난조

- 고혈압, 당뇨병의 부산지역 유병율은 7대도시 중 가장 높으나, 치료율은 고혈압 4위, 당뇨병 6위로 치료율은 7대도시 대비 낮아, 보건소의 역할 중요. 지역거점으로서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예산은 4천8백만원, 관련 예산의 1.2%, 실질적 역할수행 어려울 것임..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금연클리닉 운영시 대상집단별 금연프로그램과 금연예방 서비스 강화
- 대상별 복지기관, 경로당, 보건소등이 연계한 고혈압, 만성질환프로그램관리 및 진행으로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

7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실·국	관련 사업 등
복지건강국, 교통국	

1. 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등 교통약자의 이동권보장과 대중교통이용에 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필요
- 장애인, 노약자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 사업근거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복지법 제 9조

□ 사업 내용

-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로서는 저상버스와 복지 단체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무료셔틀 버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두리탈’로 명명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STS, special transport system)이 있음.
- 저상버스
 - 2006년, 2007년 7대가 도입되었으며, 2009년에는 25대로 도입대수가 증가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교통국 사업계획 상으로는 하반기에 60대 도입예정임.

[표] 부산시 저상버스 도입현황

(단위 : 년대)

	2006	2007	2008	2009	2010
도입 대수	7	7	5	25	30
운행 대수	15	22	27	52	82

출 처 : 부산광역시(2009).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산광역시의회(2010).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 사업명세서

[표] 주요도시 저상버스 도입현황

(단위 : 대, %)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04	60	35	3	2	4	2	12	2
2005	162	67	5	5	20	10	14	3
2006	364	194	7	10	20	10	8	10
2007	304	108	7	20	30	10	8	7
지역별도입대수	890	404	22	37	74	32	42	22
비율	100	45.4	2.5	4.1	8.3	3.6	4.7	2.5

출처 : 국토해양부, 2008.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p.34참조

○ 장애인콜택시(두리발)

-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된 승합차 형태의 차량임
- 도입 현황 : 부산시의 장애인 콜택시 도입목표는 100대이며, 현재 운영 대수는 80대이고, 2010년 20대가 도입되면 총 100대가 운행됨

[표] ‘두리발’ 운행대수 및 연도별 수송실적

(단위 : 대, 건)

	운 행 대 수	수 송 실 적	비 고
2006년	10대	4,591건 (8,185명)	‘06.10월 운행 개시
2007년	30대	52,132건 (63,183명)	‘07.4월 20대 증차
2008년	60대	94,463건(172,670명)	‘08.4월 30대 증차
2009년	80대	165,910건(643,939명)	‘09년4월20대 증차
2010년	100대	진행 중	‘10년4월 20대 증차

출처 : 복지건강국 내부자료

○ 장애인 무료셔틀 버스

- 부산시의 장애인무료셔틀버스로 3대(카운티 2대, 대우 cng버스 1대)가 요일별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차량

- 부산시는 장애인 특별운송을 위해 각 장애인단체에 위탁운영의 형태로 6대의 특별운송차량이 운행되고 있고, 이 차량들은 예약에 의해 무료로 운영되고 있음
- 휠체어 탑재장비가 장착 안된 차량: 부산시는 장애인 특별운송을 위해 시각장애인협회 부산지부 위탁운영을 통해 9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음

2. 문제점

- 부산시의 저조한 저상버스 도입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상의 부산시 연차별 도입대수는 ‘07년 22대 ’08년 5대 ‘09년 150대, 2010년 230대 ’12년 253대로 1차 계획년도가 끝나는 ‘11년도까지 총 657대의 저상버스를 도입 계획임
 - ‘10년 계획대비 13%의 도입예정이어서 1차계획 년도의 사업성과달성이 상당히 불투명함.
- 급증하는 수요대비, 부족한 “두리발”
 - 2006년 도입이후 증차 속도에 비해, 수요급가 급증하고 있어, 콜센터와의 접속의 어려움이나,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 호소가 많음
 - 중증 장애인 수(약2만명) 대비, 차량 부족으로 예약이 어렵다는 민원이 많으나, 재정부담으로 일시 증차를 못하고 매년 증차하고 있음
- 분산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관리
 - 부산시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콜택시 “두리발”을 운영하는 부산법인 택시운송사업조합과 그 외에 5개의 단체가 몇 대씩 위탁운영하고 있어, 콜센터 및 운영의 합리성 제고할 필요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저상버스 도입 확대
- 다원화된 관리·운영 체계의 통합
 - 현재 위탁운영 단체별로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타시도의 경우, 교통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운영 혹은 시가 지원하는 법인을 통한 운영
 - 콜센터의 통합운영을 통한 효율성 증진
- 수요자 분석을 통한 재정부담 최소화한 욕구 대응
- 현재 휠체어사용 지체장애가 아닌 경우, 울산처럼 일반 콜 연계 등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확충방안 모색

8 여성 취업지원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확대

실·국	관련사업 등
여성가족정책관실	

1. 개요

□ 사업목적

- 여성의 능력 개발 및 경제적 지위 향상, 저출산, 고령화 대응한 양질의 노동력 창출의 사회적 요구에 대응

□ 사업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33조,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13조 1항, 부산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 8조

□ 사업내용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부산진, 동래, 해운대, 사상 총 4개소)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 사업 수행
 - 139개과정 2624명이수, 취업알선 7441명 ('09.9.30)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회관, 동래, 해운대, 부산진, 사상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동행면접, 주부인턴, 취업후 사후관리지원
- 마이크로크레딧
 - 기술과 경험.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 및 담보문제로 창업에 애로가 있는 여성에게 기술과 자금지원
 - 10명 개인당 1000-3000만원(연리 2% 1년거치 4년 상환), 무담보, 무보증

□ 사업예산

	2010	2009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852,000 (사상센터포함)	632,00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1,264,400	330,000
여성창업지원센터	127,000	127,000
마이크로크레딧	250,000	250,000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 활성화사업	17,000	41,000
계	2,512,410	1,382,009

2. 문제점

□ 낮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부산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과 7대도시 대비 낮음

[표] 부산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부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09	49.2	45.7	49.8	47.6	49.4	47.9	47.4	46.2
2008	50.0	46.8	51.0	47.4	48.4	48.0	47.8	46.7
증감	-0.8	-1.1	-1.2	0.2	1.0	-0.1	-0.4	-1.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09), 부산여성가족개발원('10. 05.27)
http://www.bwf.re.kr/04_info/02_01.asp?id=policy_db2&mode=view&b_idx=13

[표] 각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호주	OECD평균
54.7	63.9	70.2	77.3	69.9	61.3

여성부 홈페이지

- 특히 부산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더 낮음

□ 여성고용 불안정과 하향화 재취업

- 상당수 여성이 가사, 육아부담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M커브현상이 지속되며, 재취업시 근로조건 하향화 현상
 - 여성근로자 비정규직의 비율이 매우 높음.
 - 중소기업분야의 경우 ‘여성의 구직난과 기업의 구인난’이라는 미스매칭 현상 존재

- 여성고용효과가 높은 사회적 서비스영역 일자리 부족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여성지원기관들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 문화강좌 중심 여성회관의 기능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편
- 전문성이 부족한 여성인력개발 프로그램의 취업지원기능 강화

□ 부서 사업간 연계 강화를 통한 효과성 증진

- 여성인력개발은 주로 여성부 소관 사업이지만,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창업지원 연계,
- 사회적 기업육성으로의 발전 등 타 상위부처의 소관 사업이라할 지라도, 지역단위에서는 정책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능동적인 연계가 필요함.
 - － 사회복지서비스영역은 여성이 유리한 대표적 직종이며, 생산액 10억당 고용효과를 나타내는 취업계수 또한 제조업(12.1), 서비스업(20.5), 전산업(16.9)보다 훨씬 높은 27.6

9 미래를 선도할 아동청소년의 역량강화

실·국	관련 사업 등
여성가족정책관실	

1. 개요

□ 현황

- 부산시 아동청소년 비율(2009 기준)은 0-18세는 685천명으로 전체인구의 19.7%이고, 9-24세는 725천명으로 전체인구의 20.9%를 차지함.
- 2000년 대비 0-18세의 도시내 인구비율은 6.2%, 9-24세는 5.1% 감소하였음.

[표] 부산시 아동·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단위 : 천명, %)

	0-18세		9-24세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2009	685	19.7	725	20.9
2005	789	22.0	839	23.4
2000	966	25.9	969	26.0

□ 사업근거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 사업내용

- 청소년역량강화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청소년참여위원회 17명, 수련시설운영위 200명
 - 청소년주간(5.24-30), 청소년 지역토론회,
 -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5. 27-30)개최

-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
 - － 청소년문화존(7개존) 운영과 청소년동아리 지원(128개)
 - － 건전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 지원:
- 국제교류 활성화
 - － 한러교류:부산청소년 교류단 7명 하바로프스크시 방문
 - － 한중교류: 상해청소년 교류단 30명 방문,
 - － AG연합캠프: 6개국청소년 48명 부산개최

□ 사업예산

	2010	2009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436,870	438,120
청소년참여위원회	11,500	11,500
청소년의 달 행사	8,250	7,600
청소년지역토론회	10,000	－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300,000	－
문화존,	62,000	131,600
	166,500	172,800
동아리지원	96,000	114,000
청소년국제교류	132,150	117,334
계	1,215,290	994,963

2. 문제점

□ 제한된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의 활동영역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중심이 봉사활동지원과 동아리활동에 중심을 두어져, 청소년의 직업적 비전을 키워갈 수 있는 정보와 체험활동지원에 대한 프로그램과 역할 부족
- 부산시 15세 이상 학생은 교육받는 목적을 좋은 직업찾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취미활동 뿐아니라 직업적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음¹⁾.

1) 부산여성가족개발원(2009).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p.26

□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시정 자치활동 참여공간 부족

- 청소년의 참여위원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설치비율 저조

[표] 청소년 참여, 운영위원회 현황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2007	2008	2007	2008
부산	2	2	13	13
서울	4	3	40	40
대구	2	2	8	8
인천	9	10	10	11
광주	2	2	6	6
대전	1	1	11	10
울산	5	6	6	6

□ 청소년층의 문화 향유 부족

- 부산의 15-24세 청소년의 지난 1년 부모와의 문화예술 관람 및 여행경험 조사에서 영화, 스포츠관람 비율 타시도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공연, 전시장, 여행의 경험 공유는 낮고, 전혀 경험없다는 응답 73.6%으로 7대도시중 가장 높음.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직업적 비전을 키워갈 수 있는 프로그램과 체험활동 강화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활동폭 확대) 청소년박람회의 롤모델 강연회, 직업 현장 탐방 등 직업 현장 연계한 직업적 비전을 키워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강화
- 부산시의 국제적, 대형행사 개최시 지역의 청소년 위원회등 지역 청소년 인재들의 참여와 체험의 공간을 확보, 지역청소년 비전 교육 공간 활용

□ 청소년층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확대

- 영화와 스포츠에서 공연, 전시회, 여행등으로 문화적 체험과 문화적 자본을 축적해 갈 수 있는 각 분야의 가능한 지원체계 강화
- 시산하 각 문화회관별로 관리되는 청소년 정기회원권의 전체 문화회관 통용 모색. 바우처 형태의 지원으로 정기권의 지원내용확대 모색

10 다문화 및 탈북 가족 지원

실·국	관련사업 등
여성가족정책관실	

1. 개요

□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적 조기 적응, 안정적인 정착지원

□ 사업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12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5조 15조 2 등

□ 다문화가족현황

[표] 부산시 다문화 주민 현황

(단위 : 명)

총계			국제결혼이주자			혼인귀화자			국제결혼가정자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1,779	2759	9020	5597	524	5073	1929	69	1860	4253	2166	2087

출처 : 200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안전부('09.05.30),
부산시 다문화행복스케치 홈페이지 <http://multi.busan.go.kr/> 재인용

□ 사업내용

- 지원기반확충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확대 운영 (5개소 --> 10년 7개소), 홈페이지 운영, 국제결혼중개업체관리, 배우자 교육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09, 688가정에서 '10년 736가정으로 확대 운영, 고국방문 25가정 75명, 대학생 멘토링 25명,
- 경제적 자립역량강화: 취업박람회, 취업정보 제공 및 외국인노동자상담 지원
- 북한이탈주민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신설하고, 지역민과의 교류, 화합강화, 자립, 자활기반 조성, 세대당 2명 지역생활적응 도우미 지원
 - －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합동 결혼식 50쌍 지원

□ 사업 예산

[표] 다문화 및 탈북 가족 지원 사업과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2010	2009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기능보강	152,370	63,309
가정폭력예방 국제결혼정보프로그램 운영	27,600	22,000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계)	1,063,360	140,000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운영	327,000	
방문 교육	640,740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52,800	
다문화가족 아동 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42,820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04,200	101,348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45,000	25,000
이주노동자 상담지원 사업	5,000	
계	2,562,900	353,666

출처 : 2010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주요업무계획 자료 참조하여 작성함

2.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양성평등적 가정상에 기반한 한국적응 프로그램

- 베트남, 중국, 조선족 이주민의 경우 사회주의권문화로 오히려 평등한 가족 문화에 익숙하며, 이주 여성들의 학력도 높은 편
- 상대적으로 한국 내에서의 결혼이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문제에 봉착해 있을 수 있는 내국인 결혼상대자의 새로운 사회적 적응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조해야 함

□ 다문화가족의 빈곤예방 정책 강화

- 취업지원 긴급. 부산의 결혼이주여성 52%가 절대빈곤층(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06: 66), 안정적 가족형성을 위한 지원과 함께, 이들이 괜찮은 일자리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향후 사회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함

- 다문화가족 내국인 가족을 위한 언어지도사
- 2세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방문 지도교사
- 2세들의 학습발달, 신체 정서적 발달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2세 지원을 각 구군 별로 넓게 포진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모색을 통한 인적 역량 강화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강화

□ 지역사회참여 강화

-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봉사활동, 지역사회 자치활동 프로그램 확충. 이주 여성들이 서비스 수혜자로서의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연습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공간 확대.

환 경

1. 낙동강 개발에 따른 퇴적토 및 준설토 처리시 수질오염 문제	57
2. 부산 도심지역 소음 현황과 저감	59
3. 친환경 녹색성장에 일조하는 하수재이용 현황 및 활성화	62
4. 부산 도심 대기오염현황과 저감 추진정책	64
5. 생활 폐기물처리 실태 및 재활용 활성화(연료화사업등)	66
6. 하수슬러지 처리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68
7. 도심하천 관리실태와 활성화	70
8. 친환경 녹색정책과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72
9. 생태공원(을숙도, 삼락공원등)과 연계한 생태관광자원화 수립	74
10. 낙동강 물문제 현황과 효율적인 대체 수자원개발	77

1 낙동강 개발에 따른 퇴적토 및 준설토 처리시 수질오염 문제

실·국	관련사업 등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방재관	

1. 개요

□ 사업목적

- 대체 상수원 확보로 돌발적인 오염사고에 대처하고 수질개선 효과를 집중 분석 검토하고 이에 따른 추진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낙동강 수질 보존 등을 평가 · 검토가 필요함

□ 사업근거

- 4대강 사업관련

□ 사업내용

- 준설 및 하도정비 : 낙동강 본류,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의 퇴적물 준설을 통한 하천 수로단면의 확보로 통수능력을 개선하여 하천 오염도 저감사업, 원활한 하천통수에 의한 홍수피해 예방사업, 불규칙한 하도정비를 통한 하천의 원활한 흐름과 선박의 안전한 이동통로 확보사업임

2. 문제점

□ 하도 준설시 오탁방지시설 및 야적장 관리 부실우려

- 경북 안동시 영가대교 인근 반변천에서 최하류인 부산 삼락, 염막 둔치에 이르는 낙동강 수계 250여 km에 대한 현장 취재 결과, 수계 내 8개 보공사 현장 가장 위쪽인 상주보에서 맨아래 함안보에 이르기까지 오탁방지막과 침사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흙탕물이 실새 없이 아래로 흐르고 있음
- 중금속이 함유된 오토토가 발견됨에 따른 낙동강 하류에 있는 부산은 수질오염 및 생태계 파괴 현상이 우려됨으로 낙동강 사업의 최대 피해자가 부산 시민들이 될 것이란 우려가 대두됨

- 일부 지역에서 오염된 흙인 오폐수로 수질악화와 관련해 갈수록 논란이 있고 상류구간에서 채취한 퇴적토를 분석한 결과 카드뮴과 비소, 니켈 등 중금속이 미국 해양대기관리청(NOAA)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수질오염 우려를 더욱 증폭시킴
- 하도 오염된 준설토 야적장의 보유와 이와 관련된 관리 및 유지비용에 적극적 관심 필요함
 - 홍수기시 야적장 관리의 심각한 문제 발생 우려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민·관이 공동 참여할 수 있는 조사단 구성(전문가 참여)
 - 시민단체, 민·관(정부기관)·언론기관 등 독립된 견해를 의회가 주체가 되는 역할 필요
-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실제 공사 진행사항 수시 업무보고 및 점검
- 퇴적물 야적장 임대경비 및 관리상 문제점이 없는 적정한 위치인지 점검필요
- 보설치로 인한 유속흐름의 장애로 인한 조류발생 증가로 부영양화 될 소지 여부확인

2 부산 도심지역 소음 현황과 저감

실·국	관련사업 등
환경국	

1. 개요

□ 사업목적

- 부산지역의 주택가와 도로변 소음조사 결과 전국 광역시도 중 최고의 소음 발생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산시의 현황과 행·재정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방안 마련 강구가 필요함

□ 사업근거

- 대기환경기준법 생활상 소음기준(일반지역, 도로변 지역)

□ 사업내용

- 09년 3월 19일 언론(중앙일보)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부산시 주거지역의 소음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환경기준을 초과된다고 보도되었는데 환경국에서는 주거지역의 정기적인 소음측정과 실태 파악과 대책필요

주요 광역시 소음 측정망 운영현황 ('06~'08)

〈낮시간대: 06:00~22:00〉											〈밤시간대: 22:00~06:00〉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기준	조사시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기준	조사시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일반지역	전용주거	40	'06	47	50	47	49	49	46	49	일반지역	전용주거	50	'06	53	56	54	55	56	53	54
			'07	47	50	48	49	49	46	47				'07	53	54	55	55	53	53	54
			'08	47	51	49	50	47	46	49				'08	53	54	55	54	53	53	54
	일반주거	45	'06	50	53	48	48	46	46	50		일반주거	55	'06	54	58	56	54	52	54	55
			'07	49	52	48	49	46	46	49				'07	54	56	56	55	51	55	54
			'08	49	52	49	49	44	47	49				'08	54	57	56	56	51	55	53
	상업	55	'06	56	55	50	51	48	52	54		상업	65	'06	61	62	57	58	58	57	61
			'07	57	55	52	52	49	52	56				'07	61	61	59	59	58	56	60
			'08	58	53	52	53	51	54	57				'08	60	60	60	59	57	59	61
	공업	65	'06	-	58	55	51	53	57	61		공업	70	'06	-	65	62	58	61	61	65
			'07	-	57	57	53	57	55	60				'07	-	63	64	60	64	61	64
			'08	-	56	56	53	55	56	62				'08	-	65	63	60	63	60	65
도로변지역	주거	55	'06	66	63	62	64	60	56	59	도로변지역	주거	65	'06	69	68	68	68	65	62	63
			'07	65	63	63	64	60	56	59				'07	69	68	68	68	66	62	63
			'08	65	63	64	63	59	56	60				'08	68	68	69	67	63	63	64
	상업	60	'06	67	68	65	65	61	59	61		상업	70	'06	70	71	69	70	68	64	67
			'07	67	68	65	66	64	59	63				'07	71	70	70	70	68	64	67
			'08	67	68	66	66	60	59	64				'08	70	71	70	71	65	64	68
	공업	70	'06	-	69	63	68	67	59	66		공업	75	'06	-	74	69	73	71	65	70
			'07	-	70	63	68	67	58	66				'07	-	73	70	72	71	65	69
			'08	-	68	64	68	64	58	65				'08	-	71	70	72	69	66	69

※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 현황

전국 측정망 : 33개도시 301개지역 1,486개 지점

우리시 측정망 현황 : 17개지역 85개지점

전국망 : 10개지역 50개지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운영)

지역망 : 7개지역 35개지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

▷전국망과 지역망의 측정치를 산술평균하여 대표소음도로 평가(우리시 17개지역 85개지점)

자료 : 행정사무감사자료(09년도)

□ 사업예산

- 명확하게 배정된 소음 및 진동 방지시설 저감에 관한 예산이 없음

2. 문제점

□ 공사장 시설 소음대책 사후관리 부재

- 공사장인 경우 공사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와 저소음형 건설기계의 선정, 가설방음판넬 설치, 적절한 작업시간대 및 작업공정의 설정이 미비하고, 운영상으로 도로변으로 수립대를 조성이 되지 않아 문제점 야기

□ 주기적인 소음단속과 단속인력 부족

-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소음발생과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인력부족 및 소음발생이 적은 자동차 보급(하이브리드 차 등) 저조

□ 주거지 인근 방음저감 시설 미비

- 교통소음이 높은 지역에 대한 최근 3년간 방음벽 설치나 소음 저감을 위한 녹지대 등 소음 완충지대 설치 사례 저조.(부산은 도로시설이 타 도시에 비해 열악하여 도로변 주변 소음도가 높음)
- 소음·진동 민원 발생건수에 비해 시설 설치 부족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소음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또는 소음발생에 따른 부산시 소음저감 계획 지도(맵)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민원발생 분석 필요함
- 장기적인 소음 발생지역 방음대책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
- 민원 발생건수에 대한 시설 보강 및 설치 유무 체크 필요
- 방음벽 설치시 도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친환경 소재 적용 연구개발 유도 및 권장 필요

3 친환경 녹색성장에 일조하는 하수재이용 현황 및 활성화

실·국	관련사업 등
환경국	

1. 개요

□ 사업목적

- 중앙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에 발맞추어 가고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정책을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하수 재이용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이산화탄소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 향상에 기여함
- 부산시 소재 하수 재이용수 활용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성 있음
-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환경부 평가 결과, 부생자원의 순환이용부분이 매우 낮아 매년 순위가 떨어지고 있음
-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은 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공단의 설립목적에도 일치하는 만큼 방류수 재이용계획의 수립·시행이 필요함

□ 사업근거

- 방류수 재이용 확대 종합대책 수립·시행('08. 1.16, '09.1.9)
- 연간 재이용 계획(목표) 수립 : 환경부 평가 성적 향상 도모

□ 사업내용

[표] 하수처리수 재이용 실적(2009.9월)

구분	하수처리량 (천m ³)	처리수 재이용량(천m ³)			재이용비율(%)			비고
		계	장내용수	장외용수	계	장내	장외	
합계	360,750	24,496	19,421	5,075	6.79	5.38	1.41	
수영	117,421	3,946	3,802	144	3.36	3.23	0.12	
강변	101,009	6,706	6,569	137	6.64	6.50	0.14	
남부	85,500	769	756	13	0.90	0.88	0.02	
해운대	10,287	1,022	1,022	—	9.93	9.93	—	
녹산	14,725	1,019	746	273	6.92	5.07	1.85	
서부	1,963	226	226	—	11.51	11.51	—	
중앙	23,693	5,891	5,891	—	24.86	24.86	—	재이용수사용
기장	5,000	4,692	184	4,508	93.84	3.68	90.16	
정관	1,152	225	225	—	19.53	19.53	—	

-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중수도 공급(중앙) 170톤/일, 외부 급수차량 공급확대 (전체) 비산먼지 방지용, 도로청소용수, 해운대사업소 사여과지 세척수 유량계 설치, 수영사업소 장외용수 무상공급 (주)경동레미콘 117톤/일, 강변사업소 생태연못 및 습지수로 설치 1,440톤/일, 녹산사업소 경관용 벽천설치 1,000톤/일

□ 사업예산

- 명확하게 잡힌 예산이 없음

2. 문제점

□ 2008년도 방류수 재이용 확대 실적 매우 저조함 : 6.3%

- 방류수 이용율(%) 합계: 6.3%, 장내 5.1%, 장외 1.2%
- 처리장은 지리적으로 방류구가 저지대 해역에 위치하여 고지대 이송시설 및 부가적인 재정예산 확보에 어려움
- 공익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재이용 수질권고기준 만족을 위한 재처리시설 보완 미비
- 하천유지용수 및 공업용수 등 확대 적용시 주변여건 애로(조경용수 이용 부족)
- 행안부 평가는 최우수인데 환경부 평가에서는 최하점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市 용역중인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연도별 사업소 하천유지용수 활용 방안 명시에 대한 추진사항 상시 점검
- 압송관로를 이용한 하천유지용수 확대 계획수립시행 적극 유도 필요
- 처리수 정제를 위한 막분리공법 적용방안 지속적인 강구(수영) 촉구
- 재이용수(처리수)의 안전성등 대시민 홍보 강화
 - 처리수질 개선으로 다양한 수요처의 지속적인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확인
- 하수재이용수 이용시설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 하수재이용수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예산배정 촉구

4 부산 도심 대기오염현황과 저감 추진정책

실·국	관련사업 등
환경국	

1. 개요

□ 사업목적

- 부산은 타 도시에 비해 노후 공업단지(사상, 장림 등)와 컨테이너 운반 차량의 도심 도로를 많이 통과함으로써 경유차량의 매연과 미세먼지 비산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및 기타 유해물질의 노출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상 유해성을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 개발과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
-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대형 경유자동차를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해야 함
 - － 천연가스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도심 대기질 개선 및 시민건강 보호

□ 사업근거

- 2010년도 사업명세서 관련(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대기환경보전법

□ 사업내용

《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 항목 》

-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도심 대기질 개선 및 시민건강보호(대형경유자동차를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 유도)
-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통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저감으로 부산시 오존오염도 저감 기여 등 대기환경개선에 이바지 함
- 먼지저감 대책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저녹스버너 보급 총 654대 보급)은 중소기업장의 보일러(0.3톤이상)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저녹스 버너 보급으로 대기환경개선 및 중소기업장 재정적 어려움 해소
 - － 배출 질소산화물(NOx)의 저감능력 확보로 연료저감(3%)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 발생
-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강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

□ 사업예산

[표]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2010)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	예산액 : 178억5천7백만원
- 편안한 생활환경 여건 마련 - 대기환경 개선사업 (먼지저감대책,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추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 대기환경변화 대응기반 구축(종합환경 관리망 구축, 대기측정망 보강, 탄소제로 기후 홍보관 건립,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등)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제도 및 단속,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 등) - 기업의 환경역량 제고(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강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 등)	

2. 문제점

□ 환경국의 다른 사업에 비해 소극적인 예산배정으로 타도시 보다 대기환경정책 열악함(특히 서울시의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까지 정부예산 1조9271억원이 투입되는 저감사업을 시행함)

- 부산은 해안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과 컨테이너 수송차량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관리가 소홀함
 - 특히 항만을 중심으로 오존발생과 오염물질 발생 및 빈도수가 많음
- 물청소차량 및 청소용 진공흡입 차량 보유량 부족함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및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에 대한 적극적 예산 배정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조에 부응하고 친환경 도시이미지 제고

□ 기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관리대책 필요

- 부산은 해양 항만도시로써 정박하고 있는 선박관리 부실

□ 컨테이너 수송차량의 도심 통과시 오염물질저감 방안 촉구와 도심 정체구간 개선유도(대형경유차량 미세먼지 발생저감대책 필요)

□ 미세먼지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량 확대보급과 살수용수 차량구입 예산증액

5 생활 폐기물처리 실태 및 재활용 활성화(연료화사업등)

실·국	관련사업 등
환경국	

1. 개요

□ 사업목적

- 부산시의 생활폐기물 발생에 대한 저감 대책과 향후 연료화 사업에 대한 추진상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환경정책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분석·평가가 필요함.

□ 사업근거

-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등

□ 사업내용

- 정관환경자원사업소는 2006년 10월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 정관산업단지 내 1만3천406㎡ 부지에 소각 50톤/일, 건조 50톤/일, 음식물 자원화 20톤/일 등 120톤/일 규모로 건립
-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활용사업은 자원재활용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으로 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 성장 전략과도 부응
- 재활용가능자원의 자원재활용 촉진 및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자원재활용 촉진 및 수거 활성화

□ 사업예산

[표] 주요 사업예산현황

항 목	예 산 액
폐기물 자원화 - 자원 재활용 기반 구축(재활용품 수집 장려) - 쓰레기줄이기 및 도시청결	예산안 : 7억8천3백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 생곡(차기)매립장 조성 - 친환경적 매립장 관리 운영 - 친환경적 소각장 관리 운영(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 등) - 행정운영경비	예산안 : 277억4천7백만원

2. 문제점

□ 소각물량 부족과 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 낭비

- 정관쓰레기소각장 주민들의 입주 지연 등에 따른 소각물량 부족으로 수년간 가동 중단될 처지임
- 특히 정부의 쓰레기 처리 정책이 소각에서 자원화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지지구나 산업단지 내 소각시설 설치 의무화’를 명기하고 있는 법률이 개정돼 불필요한 시설 설치와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정관소각장 가동은 용량의 70%(35톤가량)는 돼야 하는데 현재 분양과 기반시설 지연 등에 따라 정관신도시 내 주민 입주는 전무한 상태임
- 산업단지 내 128개 업체 중 입주업체도 49개 불과해 폐기물 발생량이 하루 5.5톤 그치고 있음
- 향후 가동시까지 2~3년이상 소요 ⇒ 이 때문에 시설을 늘리면서 연간 3억 5천만원가량의 유지관리 비용만 쏟아 부어야 하는 형편임
- 정관소각장은 가동에 들어간다 해도 대규모 시설보다 처리비용이 큰 소규모여서 처리시설 필요성 자체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음
- 특히 해운대소각장이 400톤/일 규모에 실제 처리량이 332톤이고, 명지소각장(400톤 규모에 340톤), 다대소각장(200톤 규모에 150톤)도 소각 능력이 남아돌고 있음.
- 2013년 생곡쓰레기매립장에 500톤/일 규모의 재생에너지발전시설(MBT-RDF) 설치가 예정돼 있는 등 쓰레기 정책이 자원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소각시설 수요는 더 줄어들 전망임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계획 수립 및 구·군별 예산배정이 균형유지 필요
- 효율적인 소각장 유지관리 및 가동을 향상을 위해 수시적인 현장점검과 업무 보고 경청
- 향후 연료화 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조화된 부자재의 수요처 점검필요
- 각 처리장별 가동유무에 따른 건물하자 보수에 따른 예산 낭비 유무 점검

6 하수슬러지 처리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실·국	관련사업 등
환경국	

1. 개요

□ 사업목적

- 2012년부터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시점에서 부산시의 정책대안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강구와 효율적인 하수슬러지 처리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 유기성오니 직매립 금지[폐기물관리법, '97.7]
 - 시설용량 10,000m³/일 이상의 하·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03.07.01)
 - － 런던협약('96의정서 발효)에 대비, 유기성오니의 해양배출기준 대폭 강화(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
 - － 2012년부터 하수오니 등의 해양투기금지 입법 추진(해수부)
 - － 그간 직매립 금지,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 등에 대비하여 지자체에서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왔으나 추진 미흡

※ 하수슬러지 발생 처리현황

- 1) 해양배출 : 77%
- 2) 소 각 : 11%
- 3) 매 립 : 11%
- 4) 재 활용 : 1%

□ 사업근거

- 폐기물 관리법적용, 2012년 해양오염방지법 해양투기금지 입법 추진

□ 사업내용

- 부산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한다는 명분으로 강서구 생곡동 부산환경자원공원 인근부지 97,330m², 처리용량 900톤/일의 생활폐기물연료화 시설과 발전용량 25MW의 발전전용보일러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착공, 2,454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3년 4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이미 상당부분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 현행 소각·매립 위주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재생에너지 회수시설로 전환

□ 사업예산

- 총사업비 :1550억원(2008.6~2012.9(5년간))

2. 문제점

□ 원발생의 주요 원인 악취와 다이옥신등 유해가스가 발생우려

- 폐기물처리 후의 부산물에 대한 처리방법, 수요처 등이 선행 확보 부족
- 시설비와 운영비 비교 분석 미비
- 부산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른 용역(예 하수슬러지처리 방안)경우 다수의 전문가 워크샵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생활폐기물 연료화 사업 관련 하여서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음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대규모시설의 적정처리 시설인지 검증 필요

- 지역 주민의견수렴과 전문가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필요

□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 확대 실시 필요

- 환경오염 방지제 제품화 유도(공청회, 토론회 개최)
- 에너지연료 제품화(하수슬러지)
- 기타용도 제품화(적조구제물질, 해저저질 개선제, 해양 인공어초, 산성 토양 개량용의 개토제 등)개발 유도
- 하수슬러지 연료화 사업을 위하여 조례재정(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7 도심하천 관리실태와 활성화

실·국	관련사업 등
환경국 건설방재관	

1. 개요

□ 사업목적

- 복개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시급히 전환하여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유도하고 악취 및 수질오염 저감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있음
- 특히 하천의 건천화 방지와 빗물 재이용활성화로 홍수 재해방재에도 일조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에 대한 추진상의 문제점을 점검해 볼 필요성 있음
 - －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욕구 증대에 따라 공공수역의 악취 관리 필요
 - － 금년도 예산 집행에 따른 민원 감소 (사하구 92건 → 33건, 약 64% 감소)

□ 사업근거

- 2010년도 사업명세서(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수질개선 사업
- 초량천 생태 자연형하천 복원

□ 사업내용

- 사하구, 사상구의 악취민원 다발지역(유수지, 하수토구, 하수구 등)
 - － 장림, 엄궁, 감전유수지 탈취제 살포(미생물제제 투입 등) 및 생태산업단지 추진관련 사업지원(2010년~2014년)
-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초량천 복개하천 복원)

□ 사업예산

- 장림유수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2010~2014년) 202억원
- 초량천 자연형 생태하천조성(300억원 추진예정)

2. 문제점

□ 민·관 관심과 행정의 이원화로 협업시스템 부족

- 하수관거 악취저감 및 생활쓰레기 수거와 하수관거 적정유속 확보 및 찌꺼기 퇴적방지 미비
- 주거 및 상업 밀집지역의 복개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유도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환경개선 유도 효과를 창출이 필요한데도 실질적인 환경정책개발 부재
- 이에 대한 민·관 관심과 행정의 일원화, 적극적인 실천의지 부족함

□ 부산시 소재 소하천 관리상태 부실

- 부산시 소재 소하천 44개소 대상 오염이 심각하고 건천화되어 악취발생과 생활환경 열악함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도심 하천 현황 파악과 생활상 심각한 문제점이 많은 순위로 장기계획수립 유도
-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하여 발생원 오염저감시설 의무화 조례 검토
- 분류식 관거시설 확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민원발생 건수 수시 업무보고 등, 기존 이원화된 하천관리 기구를 일원화 시킬 필요성 있음

8 친환경 녹색정책과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실·국	관련사업 등
환경국	

1. 개요

□ 사업목적

- 이산화탄소 저감 방안에 대한 민·관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실천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타시도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부산시의 정책을 비교 점검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정책대안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 － 온실가스 절감효과 거양 및 환경도시 이미지 제고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공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잉여 에너지를 자원화 또는 재이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 등의 환경개선과 지역 생태관광 도시를 조성함

□ 사업근거

- 2010년도 사업명세서 첨부서류관련(온실가스 저감 추진) - 환경부와 부산시 자발적 협약(시장공약 사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근거

□ 사업내용

- 종합환경관리망 구축, 온실가스 저감 추진, 대기측정망 보강, 탄소제로 기후 홍보관 건립,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탄소제로 운동시설 설치
-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급함

□ 사업예산

- 대기환경변화 대응기반 구축 36억5천만원
- 사업비 1,600백만원 예산액 320백만원(시비) 1,120백만원(국비), 자부담 160백만원

2. 문제점

□ 생활상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참여 유도 및 인식제고가 부족함

- 아직까지 온실가스 미감축 기관이 많이 산재하여 있고 적극적인 실적의지와 사업대상 기관에 대한 진단 및 온실가스 감축 시설개선이 미비함
-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시민참여 부족함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홍보교육과 실천 매뉴얼 미비함
 -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따른 활성화 부족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일상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참여 유도 및 인식제고가 필요함

- 현재 온실가스 미감축 기관이 많이 산재하여 있고 적극적인 실적의지와 사업대상 기관에 대한 진단 및 온실가스 감축 시설개선 필요함
-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시민참여 적극적 유도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홍보교육과 실천 매뉴얼 작성 필요
 -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따른 활성화 방안구상

□ 전국 타도시의 온실가스 저감 실적 비교 분석하여 적극적 실천의지 고취 필요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조력, 파력 등) 핵심부품 산업육성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해양도시 이미지 부각을 위한 해양에너지 개발에 전폭적인 예산배정 확대필요

9 생태공원을숙도, 삼락공원등과 연계한 생태관광자원화 수립

실·국	관련사업 등
환경국	

1. 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부산의 생태 자연환경 지역인 을숙도의 활용방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자연환경을 관광자원화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 국제적 철새도래지인 을숙도를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조성하여 경제가치 및 생태도시 브랜드 창출
 - － 낙동강하구 일원에 습지조성 등 다양한 서식지 제공을 통해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함으로써 친환경적 생태중심도시 조성

□ 사업근거

- 2010년도 사업명세서(주요 투자사업 설명서)관련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 및 생태계복원지 사후관리

□ 사업내용

- 낙동강하구 을숙도 하단부 인공서식지 조성 4개소
-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사업
- 낙동강하구 생태 모니터링사업
- 낙동강 철새도래지 정화 및 보호활동
- 기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아미산 전망대 건립사업과 을숙도 생태계 복원지 사후관리, 을숙도 습지 개선사업, 야생동물치료센터 계류장 확장 등

□ 사업예산

[표] 주요 예산현황

항 목	예 산 액
-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2010년~2013년)	예산안 : 140억원 중 2010년도 10억배정
- 낙동강하구 생태계 모니터링 (2009년~2011년)	2010년도 예산액 : 5천만원
- 낙동강 철새도래지 정화 및 보호활동	예산안 : 3천3백만원

2. 문제점

□ 을숙도 습지생태지역 람사르 습지 미등록

- 낙동강 생태 에코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을숙도 습지의 자연 생태지역으로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지역이지만 아직도 람사르 습지 등록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어촌계 의견 수렴 및 대책 미비

- 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유로 어촌계의 어업인이 습지등록에 따른 낙동강 하구지역 어업인들의 어업행위규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여 람사르습지 등록 지정 백지화를 강력히 반대함

□ 생태관광 자원화 활용 부족

- 낙동강 지역은 수십억원의 예산 금액이 투입되는데 비하여 내실화가 부족하고 국제적 철새도래지인 을숙도를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조성하여 경제가치 및 생태도시 브랜드 창출하는데는 너무나 성과가 없는 것 같음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주민 의견수렴의 통로역할 담당

- 일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해결되었는데 일정한 기간과 일부 주민들에게 어업권을 부여하여 해결한 사례도 있으므로 의회가 주축이 되어 견인차 역할 필요함

□ 지역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관광자원화 유도

- 을숙도 생태관련 주요시설물 건립 현황을 보면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사업비가 147억원, 야생동물치료센터가 12억원, 을숙도철새공원이 218억원이 투입된 시설을 이제는 주변 낙동강살리기 개발과 연계하여 생태환경 문화탐방로 조성 기반시설로 활용
-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알리고 지역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자원화로 유도될 수 있도록 정책 제언 필요함
 -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순천만의 경우 관광객만 해도 260만명이 찾았다고 보도되었고 그 수입금이 무려 1000억원이 넘는다고 함
 - 전세계적으로 희귀한 흑두루미가 겨울철새로 순천만 생태지역으로 돌아와 이제는 농사도 유기농으로 변화시켜 돈을 불러 들이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므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낼 필요성 있음
- 갈매길, 해변길 등 연계사업으로 포함시켜 효율적인 생태관광 자원화 인프라 구축 유도

□ 관리기관의 행정 일원화 유도화의 구심체 역할

- 낙동강하구 일원의 관리가 아직도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시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행정 일원화 등 유관기관을 통합할 수 있는 구심체 역할 필요함

□ 생태해설가 양성 교육기관 확대 실시

- 향후 낙동강살리기사업과 연계하여 을숙도 생태지역 관리와 에코센터 운영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획을 강구 할 것인가 구상 필요
- 을숙도 생태공원 기본계획을 더욱더 내실화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지역 주민들의 소득창출과 경기활성화와 녹색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자연생태 환경정책을 제언해야 함

10 낙동강 물문제 현황과 효율적인 대체 수자원개발

실·국	관련사업 등
상수도사업본부	

1. 개요

□ 사업목적

- 해수담수화 사업, 강변여과수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지속 발전 가능한 물관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선진 타 도시와 해외 사례를 조사·평가하여 바람직한 환경정책을 부산이 선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사업근거

- 상수도사업본부 대체상수원 개발관련

□ 사업내용

- 광역상수도 개발과 해수담수화 사업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과 낙동강 오염사고에 대비한 대체 상수원개발을 염두에 두고 시행하는 사업임
- 안정된 수질관리 11억8천5백만원(낙동강 수질개선, 비점오염원 관리)

※ 개발계획 : 부산·경남권 142만^m³/일

취수원 : 남강댐 107만^m³/일, 강변여과수 35만^m³/일

취수다변화

강변여과수 : 일 40만^m³, 물금취수장 주변 낙동강 고수부지 활용

해수담수화 : 일 4.5만^m³, 부산 해안지역 플랜트 설치

□ 사업예산

- 사업비 : 1조3천억원(국가사업) ▷ 사업주체 : 한국수자원공사
- 낙동강 수계수질관리 8천9백8십만원

2. 문제점

□ 상수도요금 상승의 요인 발생

- 해수담수화, 강변여과수 등 4대강 개발과 대체 상수원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체 수원지를 계획, 개발하고는 있지만 경제적인 실효성이 아직 부족함

□ 광역상수원 개발에 따른 부작용

- 일부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위천공단 재추진을 위한 낙동강 개발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남강댐 물의 부산공급을 추진하는 것이라 지적(남강댐 물의 부산 공급에 따른 방침은 대구 지역의 공단조성에 따른 제2의 위천 사태라는 오해 소지도 있음)
- 정부의 수자원 공급 추진경과에서 보면 서부경남권 주민들의 정서를 무시, 반대세력에 따른 충분한 대책방안도 마련부족
 - － 낙동강 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 식수원으로 대체상수원 개발 및 확보해야함
- 정부의 4대강 정비개발 사업 또는 물 민영화에 따른 해외 시장개척, 대운하적인 성격을 반영한 정부의 하향식 밀어 붙이기식 개발정책 우려, 낙동강 취수원을 포기하는 정책의심
- 낙동강 하천 정비사업이 대규모로 시행될 경우 하천생태계 파괴로 환경재앙 우려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광역상수도과 관련된 강변여과수 개발, 해수담수화, 낙동강정비사업 면밀한 검토와 이해관계자 간의 구심적인 역할 필요

- 향후 광역상수도 개발 문제점과 강변여과수 개발, 해수담수화 사업, 낙동강 정비사업 등은 부산시에서 충분한 용역사업(사전환경성 검토) 검토 후 충분한 각 계 전문기관의 의견수렴과 평가·분석 후 실시해야함
- 사업의 실패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지속적인 공청회와 이해관계자의 구심적인 역할이 필요함
- 광역상수원 개발은 남강댐 확보 차원 이전에 기존 낙동강 수원지 활용과 기존 정수장 가동율에 따른 “운영·유지관리 및 폐쇄 유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을 하여야 함
- 하천의 생태복원 정비가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사업으로 적정한지를 충분한 사전환경성 검토가 필요
 - －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답사와 관계기관의 업무 보고 등 면밀히 검토 요망됨

건 설 방 재

1. 주요 도로 및 철도 인프라 건설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81
2. 지진방재 안전도시 부산건설 방안	85
3. 한일 해저터널 건설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88
4. 낙동강 살리기 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90
5. 사면방재의 실태와 안전관리 대책 강화	93
6. 자전거 도로 개발을 통한 자전거 활성화 방안	96
7. WHO 공인인증 국제안전도시 건설 추진방안	98
8.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효율적 추진방향	101
9. 남·북항 대교 영도 연결도로 건설 추진현황 및 합리적 방안	104
10. 수영강 하류 인도교 휴먼브릿지 설치사업 효율적 추진방안	107
11. 동북아 제2허브공항 건설 방안	109

1 주요 도로 및 철도 인프라 건설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개발본부 건설방재관 건설본부 도시교통국 부산교통공사	도로인프라 건설 철도인프라 건설

1. 개요

□ 사업목적

- 동서남북 더 가까워진 부산, 미래를 향해 뻗어갈 도로 및 철도를 확충, 물류비용을 줄이고 교통편의를 늘리면서 동남광역권 중추도시로서의 기능과 경쟁력을 높임

□ 광역도로 사업내용

- 광역도로 지정·고시 : 1차('02.1), 2차('07.12)

【표】 광역도로 사업내용

사업명	구분	사업개요			
		연장	폭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노포~영천간 도로확장	1차사업	2.0km	4→6차로	17,000	'01~'05
김해부원~가락간 도로확장	1차사업	3.7km	2→4차로	62,204	'03~'11
장유~가락간 연결도로	1차사업	1.9km	6차로	35,067	'03~'11
화명~양산간 도로건설 (덕천~양산으로 사업명 변경)	1차사업	5.5km	4~8차로	129,755	'01~'11
	2차변경	6.8km (증1.3)	8차로	207,700 (증77,954)	'09~'13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건설 (화명대교+화명I.C)	1차사업	1.5km	4차로	146,344	'03~'11
	2차변경	2.0km (증0.5)	4차로	205,090 (증58,746)	'09~'13
구포대교~대동 수문간 도로확장	2차신규	2.9km	2→6차로	79,400	'10~'13

□ 산성터널 사업내용

- 사업구간 : 부산시 북구 화명동~금정구 장전동
- 사업규모 : L=5.538km B=4차로 ▷ 터널 4,870m, 평면도로 668m

- 사 업 비 : 2,701억원 [민자 2,587, 재정지원(보상비) 114]
- 사업기간 : 2002 ~ 2014

□ 천마터널 사업내용

- 사업구간 : 서구 암남동(남항대교)~사하구 구평동
- 사업규모 : 터널 및 접속도로 L= 3.34km, B= 4차로
- 사 업 비 : 2,878억원 [민자 1,760, 재정지원 1,118]
- 사업기간 : 2011. 07 ~ 2014. 12

□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사업내용

- 사업구간 : 사직·초읍간 도로(초읍동)~만덕사거리(만덕동)
- 사업규모 : L=5,300m, B=7.5 ~ 55m ▷ 터널 1,530m, 접속도로 3,770m
- 사 업 비 : 2,789억원 [공사2,251, 보상407, 감리등131]
- 사업기간 : 1997 ~ 2014. 12

□ 화명대교(초정~화명) 사업내용

- 사업구간 :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 부산시 북구 화명동
- 사업규모 : 연장 1.5km, 폭 20.8 ~ 27.8m(4차로)
- 사 업 비 : 1,463억원 [국고 731.5, 지방비 731.5]
- 사업기간 : 2003 ~ 2011

□ 가덕대교 접속도로 사업내용

- 사업구간 : 가덕대교 종점부~강서구 송정 I.C
- 사업규모 : 고가도로건설 L=1.50km, B=21m
- 사 업 비 : 1,700억원 [공사 1,573, 기타 127]
- 사업기간 : 2011 ~ 2016

□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사업내용

- 사업구간 : 사상구(괘법동) ~ 사하구(하단동)
- 사업규모 : L=7.2km
- 사 업 비 : 4,847억원 [국비 2,908, 시비 1,939]
- 사업기간 : 2010 ~ 2016

□ 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선) 사업내용

- 사업구간 : 사하구 신평동 ~ 다대포 일원
- 사업규모 : 연장 7.98km, 정거장 6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 업 비 : 7,201억원 [국비 4,320, 시비 2,881]

2. 문제점

□ 도로사업 관련 지방비확보 미흡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부족

- 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비확보율과 시도, 시군구별 특수시책 등이 매우 미흡하며,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관련된 사항도 재점검이 요구됨

□ 광역도로 사업의 국비 예산에 대한 시비예산 적기 확보 저조

- 광역도로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예산에 대한 시비예산 적기 확보가 저조함

□ 광역도로 2차 변경사업 지연시 연계도로 기능상실과 민원 발생

- 1차 광역도로 연결사업인 2차 변경사업(초정~화명, 덕천~양산) 지연시 연계 도로 기능상실과 행정불신 및 대규모 지역민원을 야기할 수 있음

□ 산성터널 미개통시 화명대교 및 산성터널 접속도로의 기능 상실

- 건설 중인 화명대교 및 산성터널 접속도로(화명측)가 2013년 12월이전 준공예정으로 산성터널이 개통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준공될 도로(교량)의 효용성 문제와 도로기능 상실이 우려됨

□ 가덕대교 접속도로의 2010년 국비 확보 불투명

- 부산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및 국회 등에 국비 반영 요청하였으나 국가지원 지방도 1, 2차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2010년 국비 확보가 불투명함

□ 철도의 건설방법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

- 도시철도의 구간별 지하, 지상 또는 고가 철도 건설방법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의 발생과 마찰이 우려됨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도로 정비와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관련하여 지역특성을 감안한 시책개발 촉구
 - 도로의 정비와 위험도로의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부산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확보와 집행 그리고 부산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시책개발을 촉구함
- 광역도로 사업의 국비 교부에 따른 시비 적기 확보 촉구
 - 광역도로 사업은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 국비 교부에 따른 시비 적기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광역도로 1차사업과 2차 변경사업 동시 개통 촉구
 - 광역도로 1차사업과 2차 변경사업 동시 개통 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변경 및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산성터널의 조기개통 추진 촉구
 - 산성터널 사업은 차질 없는 행정절차 이행과 제3차 공고안에 공기단축(5년→3년) 방안을 마련하여 화명동~장전동(중안로)을 연결하는 산성터널의 조기개통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함
- 가덕대교 접속도로 사업의 제3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위한 대처 촉구
 - 가덕대교 접속도로 사업이 제3차 국지도 5개년 계획(2011-2015) 수립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설득을 통해 제3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데 적극 대처를 촉구함
- 합리적인 도시철도 건설방법의 결정 촉구
 - 주민들의 의견의 수립하고 기능 및 미관을 살리며 소음방지, 용지(用地) 확보 등을 감안하여 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합리적인 도시철도의 구간별 지하, 지상 또는 고가 철도 건설방법의 결정을 촉구함

2 지진방재 안전도시 부산건설 방안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개발본부 건설방재관 소방본부	지진 및 지진해일 종합대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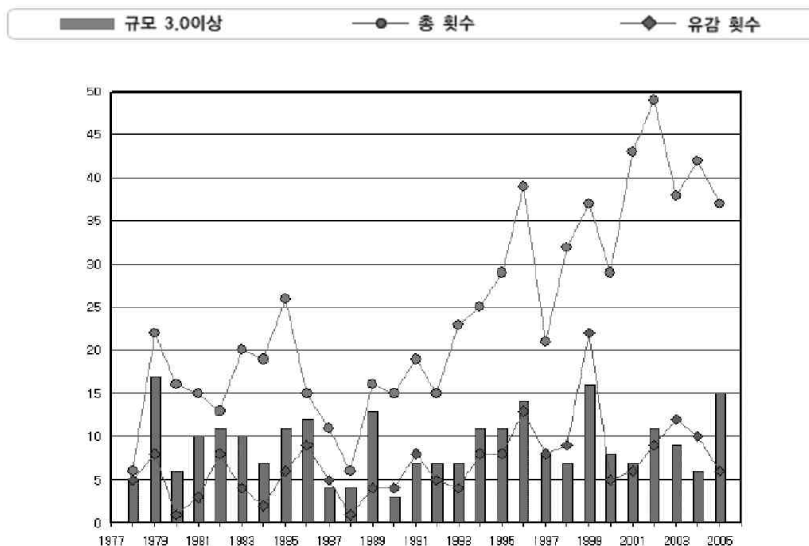
1. 개요

□ 사업목적

- 재난유형의 다양화·대형화와 함께 일본, 대만, 중국 등 주변 국가에서 대규모 지진이 빈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진들로 인명, 재산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 지진·해일에 대비 피해저감을 위한 내진보강사업의 추진, 교육·훈련, 대시민 홍보의 지속 및 예·경보 체계를 통한 신속한 초동 대응태세를 확립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종합방재대책의 추진이 필요함

□ 지진 발생 현황

- 우리나라의 연도별 지진 발생 횟수는 특히, 1992년부터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지진활동은 활성단층의 유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그림】 연도별 지진 발생 횟수

- 남한지역 중 부산과 경상도 부근의 진앙 분포는 진도 4~5 정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한 그 위치도 대부분 내륙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부산과 경상도 지역은 양산단층과 울산단층 등이 밀집되어 있어 향후 지진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2. 문제점

□ 부산지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지만 지진 대비 현황은 무방비 상태

- 부산의 동래단층과 일광단층, 양산단층, 울산단층, 경북 월성의 읍천·수림·관성단층 등이 모두 제4기 활성단층이므로,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일본에서 강진이 발생할 경우 부산까지 그 여파가 미친 적도 있어서 안심하고 있을 형편이 못되지만 부산시는 지진에 대한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음

□ 부산 대지진 시뮬레이션 결과 부산서만 2만명 사망, 건물 76% 전파

- 부산의 중심부인 서면교차로 일대에 중국 쓰촨성 대지진과 같은 규모 7.8의 강진이 올 경우, 부산지역 건물 가운데 76.1%가 전파되고 2만1000여 명이 사망하며 78만8000여 명이 부상당할 것으로 소방방재청 ‘지진재난 대응 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여 예측됨
- 부산은 건물 39만2729동 가운데 29만 8865동이 전파되고, 반파와 부분 파손까지 포함하면 전체 건물 중 99.8%가 파손됨

□ 부산 전체 건물의 3.8%만 내진설계

- 2007년 기준 부산지역의 전체 건물 39만3842동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물은 3.8%에 불과하고, 공공건물도 전체 1천442동의 13.6%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음

□ 부산의 주요 시설물 지진에 무방비 상태

- 지하철 1호선과 2, 3호선 일부 구간, 동서고가로를 비롯한 교량 50곳, 지하차도 12곳, 댐 2곳, 옹벽 115곳, 지하상가 5곳, 터널 35곳 등 상당수의 주요 시설물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음

□ 부산지역 초·중고 학교 건물 89%가 지진에 취약

- 부산지역 초등학교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33곳(11.2%)이고, 중학교는 17곳(10%), 고교는 19곳(13.8%)에 불과함
- 학교 시설물은 벽돌을 쌓아올린 조적조 건물이 많아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큰 지진이 나면 곧바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각종 법령 제·개정에 따른 지진방재 종합 대책 정비 촉구

- 2009년 3월 25일에 지진재해대책법이 시행되어서 2009년 10월 23일에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되었으나, 부산시는 아직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진방재 종합 대책의 정비가 꼭 필요함

□ 내진대책 수립 및 점검 촉구

-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른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 및 보강대책 수립이 필요함
- 내진설계 및 이에 따른 시공이 되어 있지 않은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순차적으로 내진성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재난방재 선진국들은 재난의 예방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이고 있으나, 우리는 예방보다는 재난이 발생한 후의 복구중심의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방재정책의 무게중심을 복구에서 예방으로 전환하여 선진국형 재해관리를 확립하도록 촉구함

3 한일 해저터널 건설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개발본부 건설방재관 도시재생본부 창조도시기획과	한일 해저터널 건설

1. 개요

□ 사업목적

- 한반도종단철도(TKR) 및 대륙횡단철도(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와 아시아 하이웨이망이 본격화됨
- 한미FTA 협상타결을 계기로 한일 FTA 필요성이 현실적 의제로 등장하면서 자유무역에 따른 교역기반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
- 세계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국제적인 경제공동체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지역이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므로 사업가능성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관련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한일 해저터널의 토목·지질적 검토, 국토과급효과, 경제적 타당성 등 크고 작은 많은 연구의 수반을 필요로 함

□ 사업내용

- 사업위치 : 일본 큐슈 가라쓰(唐津)~이키~쓰시마(對馬)~부산
- 사업규모 : 총연장 231km(해저 128, 육상 103), 최대수심 220m
- 사업기간 : 15~20년 정도

□ 사업예산

- 예상사업비 : 단선 101조원, 복선 201조원

2. 문제점

□ 사업내용에 대한 근거나 실질조사 주로 일본 측에서 실시

- 사업내용에 대한 근거나 실질조사는 주로 일본 측에서 이루어졌고, 국내의 수준은 이 결과를 의존하는 형태에 있음

□ 쟁점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대립

-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기술 및 비용 측면 등 쟁점항목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 국내 및 부산의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연구 및 조사 미흡

- 부산은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으므로 우리 입장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연구 조사가 필요하나, 국내 및 부산의 연구 조사는 많이 부족함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부산지역에 미치는 영향검토 등 연구를 위한 지역공동연구회 구성 추진

- 한일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논의에 있어 국가는 물론이고 부산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기술적, 사업적, 사회적 타당성을 분야별 연구를 통하여 부산시의 정책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정부차원에서 진행될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터널운용방식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철도·도로 병용터널은 터널내부 환기를 위해 18km간격으로 인공섬 축조가 필요, 특수 환기·급기·집진시스템 설치로 인한 막대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가 소요됨
- 노선전체가 직선구간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대형사고 발생 시 교통의 전면통제 등 문제점이 있는데도 일한터널연구회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 철도·도로병용 방식과 카트레인 방식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대한해협 지질구조에 대한 정밀조사 및 분석 추진

- 대한해협 통과구간은 깊은 단층이 존재하고 약 400m의 미고결층이 형성되어 있어 최대의 난공사가 되거나 활성단층 발견 등 경우에 따라 터널 시공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정밀지반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안전성 평가가 필요함

4 낙동강 살리기 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개발본부 건설방재관 건설본부	낙동강 살리기 사업 추진

1. 개요

□ 사업목적

-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홍수·가뭄 등 근원적 대책 마련과 생태환경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함
- 4대강 살리기 사업비(14조원)의 하천사업 투자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생산 유발 효과 증대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사업내용

- 사업구간 : 낙동강본류,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및 유입지천 등
- 사업규모 : 하도준설 L=32.3km, 둔치정비 5개소, 에코벨트 등
- 사업기간 : 2009. 12 ~ 2011. 12

□ 사업예산

- 사 업 비 : 8,855억원

□ 사업 추진상황

- '09. 02. : 시(市) 기본구상(안) 반영 건의(시→국토부)
- '09. 02. : 「낙동강 살리기 마스트 플랜 용역」 발주
- '09. 06. : 마스터플랜 확정 발표(국토부)
- '10. 05. : 1, 2, 3, 4, 41, 42공구 공사 중, 43공구 설계 중

2. 문제점

□ 준설토 처리 곤란으로 인한 계획 기간 내 사업준공 애로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상황 악화로 명지 신도시, 국제산업물류도시 사업시기 지연 예상 등으로 준설토 처리가 곤란하여 계획 기간 내 사업 준공에 애로가 있음

□ 설계오류 및 누락사항으로 하천환경정비 사업 착수 불가

- 설계도서 검토결과 당초 개략설계로 인한 설계오류 및 누락사항이 있어서 하천환경정비 사업 착수 불가

□ 사업착수 지연으로 기간 내 사업준공 애로

-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른 사업착수 지연으로 기간 내의 사업준공에 애로가 있음

□ 복개주차장 철거 시 주차장 부족 예상

- 하천 내 복개주차장의 철거에 따른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 발생이 예상됨

□ 오폐수 제거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불가피

- 오폐수 발생시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폐수 제거에 따른 총사업비의 증액이 불가피함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준설토 반입시기를 빠른 시일 내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

- 4대강추진본부, LH, 부산지방국토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준설토 반입 시기를 빠른 시일 내 단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함

□ 준설토 처리 방안 마련 촉구

-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및 북항 재개발사업 등으로 준설토를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함

□ 오류 및 누락사항을 설계변경사항에 포함되도록 조속한 협의 추진 촉구

- 부산시에서 수립한 을숙도생태공원 조성기본계획에 맞는 생태관광 거점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7월 완료 예정을 추진 중인 설계변경사항에 포함되도록 조속한 협의를 추진하도록 촉구함

□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기간 연기 건의

- 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기간의 연기를 국토해양부에 건의 하도록 함

□ 대체 주차장 마련 검토하고 대체 주차장 설치 관련 예산지원

- 하천 내 복개주차장의 철거에 대한 대체 주차장 마련을 검토하고 대체 주차장 설치 관련 예산을 지원함

□ 오니토 처리비 증액을 국토해양부에 요청

- 오니토 발생시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니토 처리비 증액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하도록 함

5 사면방재의 실태와 안전관리 대책 강화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개발본부 건설방재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1. 개요

□ 사업목적

- 부산은 약 70%가 산으로 형성된 산악지형이 많음
- 부산지역은 경사가 급한 산록부에도 풍화토층이 비교적 얇게 남아있어서, 암반 붕괴와 토석류 붕괴와 같은 산사태가 발생하는 자연적인 사면재해 위험성이 있음
- 산사태로 인한 위험은 주택이 밀집한 급경사 지역이고, 특히 택지의 과도한 개발로 인한 사면하부의 절개와 같은 인위적인 사면의 변형 요인이 산사태 발생의 주요 원인임
- 매년 부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이 도로나 택지개발을 위하여 식생을 제거한 곳에서 발생함
- 최근 5년간('05년~'09년) 사면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60%로 사망자 비율이 매우 높음

□ 사업내용

- 최근의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빈발하는 국지성 집중호우는 사면재해를 일으키고 있어서 직접적인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어서 사면방재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하여 강화함

2. 문제점

□ 취약지에 주거 및 생활공간 조성으로 인명피해 유발

- 사면 직하부에 인가 등이 설치되어 호우로 인한 유실 매몰되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유발함

□ 절개지 및 경사면 등의 배수처리시설 미흡

- 배수시설이 집중호우의 처리에 미흡하여 산사태의 원인을 제공하여 붕괴가 일어남

□ 사방댐이나 옹벽 등 토사방지시설 미비로 대규모 피해 확대

- 옹벽, 축대 등 배수공 틈새시공이 부실하여 배면의 배부름 현상을 유발하고 전도를 발생시킴

□ 지반특성보다는 사업주체별 사면경사도 등의 설계정수의 일률적용

- 절토 및 성토사면에 적용되는 표준경사도가 국토해양부, 주택공사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피해를 발생시킴

□ 부산지역의 급경사지의 지정, 관리 및 응급대책 문제점

- 부산지역 각 구군은 급경사지 317곳 관리해 왔으나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대부분이 관리지역인 급경사지에 미포함됨
- 재해위험지역은 경사도와 함께 지반이 암반이나 토사인지, 그 지역에서 발달하는 지형, 단층·절리 등의 불연속면의 발달상태, 풍화발달상태, 배수처리상태, 식생상태 등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나 현장성을 감안하지 않고 재해위험지역이 지정되었음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지역특성을 고려한 원인조사 실시와 사면방재 종합대책 수립 촉구

- 부산지역은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암석의 종류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고, 단층과 같은 불연속면이 자주 관찰되고 이러한 지질요소들이 사면재해에 미치는 효과가 큼
- 사면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사면재해 원인 조사와 이에 따른 방재종합대책의 수립을 촉구함

□ 사면재해 위험지역 지정 현황 파악과 주요 현장 확인

-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사면안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현장특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사면재해 위험지역의 지정이 되어야 함
- 절개지의 지형 및 지질구조 등을 고려하여 경사도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의 조성된 사면의 경우에도 순차적인 정비를 통해 위험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사면재해 위험지역의 등급별 분류 관리 방안 강구와 지속적 안전관리

- 사면재해 위험지역의 붕괴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하기 위한 점검기술 개발, 산사태 예·경보시스템 구축, 체계적인 사면관리 및 관련 대책공법 기술개발, 사면붕괴 발생에 따른 위험성과 붕괴 발생시 행동요령을 주민에게 홍보함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한 지반조사 등 자료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종 설계·시공 및 붕괴 위험 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면재해 위험지도를 작성·보급하여야 함

□ 사면 직하부 주거밀집지역의 현장 확인 후 부산시에 사면재해 대책 촉구

- 사면 직하부에 주거지가 밀집된 경우 집중호우 시 강우발생에 따른 예·경보시스템의 구축과 법률에 의한 지속적인 예찰활동 필요

□ 사면재해 예방예산 편성 촉구 및 지원

- 지금까지 우리는 예방보다는 재난이 발생한 후의 복구중심의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재난방재 선진국들은 재난의 예방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이고 있음
- 방재정책의 무게중심을 복구에서 예방으로 전환하여 사면재해 예방예산 편성 촉구하고 지원함

6 자전거 도로 개발을 통한 자전거 활성화 방안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개발본부 건설방재관 도시교통국	자전거 도로 조성

1. 개요

□ 사업목적

- 정부의 친환경 녹색 성장정책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과 연계, 부산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기 구축이 필요하며,
- 안전성, 신속성, 편리성, 경제성 등 측면에서도 자전거는 바람직한 통행 수단 이므로 자전거 도로 개발을 통한 자전거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자전거 도로 확충 L=289.13km
- 사업기간 : 2009 ~ 2013 (5개년)

□ 사업예산

- 사 업 비 : 116,050백만원

□ 사업 추진상황

- '09. 03.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용역 완료
- '09. 08.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09. 12. : 자전거도로 시설확충 10개소, 18.25km, 71억원
- '10. 02. : 사업장 선정 및 국비예산(재)배정(수영, 남, 강서)
- '10. 03. : 실시설계 용역착수

2. 문제점

- 연결 단절, 자전거 관련시설 부족,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자전거 이용 기피

-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가로수로 인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거나 좁고 비현실적인 도로, 입간판 등에 의한 장애, 자전거 도로에 버젓이 벤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 연결도로 미흡, 자전거 도로 표식이 지워진 부분, 도로가 너무 좁아 보행자나 자전거 교행이 사실상 어려움, 도로여건,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자전거 이용 기피

□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대적인 사업 투자 한계

- 지방 재정 여건상 어려움으로 인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사업 투자에 어려움이 많음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자전거 도로 개발을 통한 연결성 확보 촉구

- 부산의 자연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전거도로 확충과 자전거 통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져야하고 일정 수준의 연결망이 구축되어야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자전거 도로 단절지점에 자전거 횡단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분리를 도모하고, 지하철 등과의 환승체계 구축, 사회기반시설 조성시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의무화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 나감

□ 부산시 자전거정책 전환 촉구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 전개와 함께 자전거 이용 안내도를 다중집합 장소에 설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자전거 이용 시민이 손쉽게 부산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이용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로, 가야로 등 도심대로에는 보행과 차도가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도모하여야 함

□ 자전거 인프라 지속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 촉구

- 자전거 도로율 제고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여 자전거 인프라 지속 구축이 가능하도록 국비를 확보하여야 함

7 WHO 공인인증 국제안전도시 건설 추진방안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개발본부 건설방재관	WHO 안전도시 공인인증 사업

1. 개요

□ 사업목적

- 도시안전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 국제관광,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위상과 도시경쟁력 강화 위하여 권위 있는 국제기구로부터 공인인증 필요
-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조기 구축

□ 사업내용

- 공인기구 : WHO 안전도시 협력센터(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 아시아지역 안전도시 공인센터 :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 공인절차 : 공인 준비 보고서 제출 (준비도시 등재) ⇒ 협약서 체결 (안전도시 지원센터) ⇒ 사업수행 (공인고려 사업수행) ⇒ WHO현지실사 (손상지표 산출) ⇒ WHO안전도시공인
 - 공인이후에도 매 5년마다 재공인 절차를 추진함
- 공인기준
 - 각계 각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반 마련
 - 모든 상황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추진
 - 고위험 계층의 안전증진 프로그램 추진
 - 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추진
 -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 국내외적으로 국제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인 참여

- 사업기간 : 2002 ~ 2014

□ 사업 추진상황

- '09. 02. : WHO 안전도시 공인사업 기본계획 수립
- '09. 06.~09. : 안전도시 추진 사업설명회 개최

2. 문제점

□ WHO 안전도시 공인인증을 위한 기반 부족함

- WHO 안전도시 공인기준 충족을 위한 개인 및 사회적 기반 부족함

□ 부산시 손상실태가 타 특·광역시에 비해 높아서 안전도가 낮음

- 연도별 10만명당 손상사망률은 49.5명('00) ⇒ 51.7명('02) ⇒ 60.6명('04) ⇒ 55.8명('06) ⇒ 58.8명('08)으로 증가 추세임
- 전국 평균('08, 61.6명)보다 낮지만 타 특·광역시에 비해 높음
- 사고유형별 손상사망률('08)은 자살(27.4%), 운수사고(11.8%), 낙상(6.4%)임
- 자살사망률 전국 평균(26.0)보다 높으며 7개 특·광역시중 가장 높음
- 손상사망의 경제적 손실은 연간 1조 111억원임

□ 부산시는 아직 WHO 안전도시로 미공인

- 공인도시는 28개국 159개 도시(제주도, 서울시 송파구, 수원시, 원주시, 천안시)이나 부산시는 현재 공인 되어 있지 않음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안전도시 공인인증을 위한 빠르고 차별화된 방안 마련 촉구

- 국내외 안전도시로 공인받은 도시의 벤치마킹으로 보다 빠르고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함

□ 안전도시 부산 건설을 위한 부산시의 정책 요구

-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안전도시 부산 건설을 위한 부산시의 정책을 요구함

□ 안전도시 조례 제정

- 부산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함

□ 부산시 행정 조직 내 전담팀 구성 촉구

- 국제안전도시 프로그램의 주기적 실행, 효과의 평가, 공인 후의 5년 단위의 재공인 사업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으로 행정 조직 내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함

□ 첨단 IT기술을 이용한 U-방재시스템 구축과 방재대책 마련 촉구

-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연재난이 유형이 대형화·다양화되고, 특히, 침수, 산사태 등의 재해피해 가능성 증대되고 있으므로, 첨단 IT기술을 이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U-방재시스템 구축과 체계적인 방재대책 마련을 촉구함

8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효율적 추진방향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개발본부 건설방재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 개요

□ 사업목적

- 부산광역시 관내에 설치하여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유출로 인한 과도한 하도의 홍수부담을 경감시켜 수해예방 및 치수안전을 도모하여야 함
- 부산광역시는 저류된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하여 기상이변과 물 부족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 우수유출 저감시설은 미래의 홍수량 증가에 대하여 더 이상 통수능의 확보가 곤란한 부산광역시 관내의 주요하천에 대하여 장래 예상되는 홍수량 증가를 하도에서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함

□ 사업내용

- 부산광역시 우수저류시설 설치 지형적 여건
 - 부산시의 지형적 여건과 기후 특성을 고려할 때 중저고산지의 급경사 지역에서 유입되는 우수 유출수 유입시간이 짧아 하천의 우수 집중도가 높은 지형적 여건을 보이고 있음
 - 하천이 형성되어 있는 지형은 해안과 접하여 있는 저지대 또는 평지를 이루고 있어 하천으로 빠르게 집중된 우수량은 지체되면서 해안으로 배수가 되고 있어 우수단면이 넓게 필요한 지역임
- 배수체계 현황
 - 부산지역은 현재 합류식 배수관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수관로의 노후화와 관로 내 퇴적물이 쌓여 있어 계획설계빈도의 배수능력에 미달되고 있는 실정임
 - 기설치된 배수관로의 설계빈도는 5년에서 10년으로 이상기후현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시 우수의 배수능력 부족으로 배수관로 범람에 의한 침수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 부산시 우수저류시설 설치 기본방향

- 우수저류시설을 크게 치수목적에 위한 우수저류시설, 치수목적과 이수 목적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치수·이수 목적과 환경(수질개선)목적에 위한 우수저류시설 3가지로 분류하여 설치방향 결정
- 설치계획수립에 있어 치수와 이수목적에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목적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고 주거지역 및 하천변에서 제내지 배수불량으로 발생되던 침수피해를 저감함
- 지형 여건상 저지대이며, 하천변에 있는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합류식 배수관로임을 감안하여 치수목적의 우수저류시설을 계획하여 심각한 침수피해를 저감하도록 계획함
- 합류식 배수관로의 경우 오수가 같이 유입되어 하천수질이 악화된 상태이며, 저류수의 수질개선을 위하여서는 별도의 수질정화시설 및 처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우수저류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정화시설 및 처리계획 수립에 있어 대규모 장비계획은 배제하고, 실시계획 수립 시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후 부가하여 계획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문제점

□ 지형적 여건과 입지적 여건이 동시에 만족하는 설치지역 선정이 어려움

- 설치지역 선정에 있어 지형적 여건과 입지적 여건이 동시에 만족되는 지역을 찾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 동시에 만족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어려움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지하 및 지상 다목적이용이 가능한 지역 설정이 어려움

- 기본계획의 방침중 하나인 부지를 공공부지 및 학교시설 또는 주차장이나 공원을 이용하여 저류지를 설치하고 복합적인(지하 및 지상 다목적이용) 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적합한 지역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저류수의 다목적이용이 어려운 지역 존재

- 합류식배수관로로 인하여 저류수를 다목적이용이 어려운 지역도 있을 수 있음

□ 우수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 시공 및 관리지침 등 부재

- 우수저감시설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 시공 및 관리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저류수의 다목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관심의 지속화

- 합류식배수관로로 인해 저류수를 다목적이용이 어려운 지역도 있으므로, 저류수의 다목적 이용을 위해서 수질개선방안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다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을 갖도록 함

□ 우수저감시설의 설계, 시공 및 관리 등 시설기준의 마련 촉구

- 우수저감시설의 설계, 시공 및 관리 등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시설기준의 마련을 촉구함

□ 저류 지하공간의 다목적 이용에 대한 사항 검토

- 저류 지하공간의 다목적 이용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건기시 지하공간을 지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 내 도로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우수유출 저감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최소화

- 우수유출 저감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는 호우발생지점과 시기, 발생유출량 등을 예측하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 운영관리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연구 개발을 통한 우수한 우수저감시설의 모델 정립

- 우수저감시설들은 설치 방법이나 설치 여건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연구조사로 각 시설들에 대한 정확한 저감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토대로 개발된 모델은 계속 적용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좀 더 나은 모델로 정립하도록 함

9 남·북항 대교 영도 연결도로 건설 추진현황 및 합리적 방안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개발본부 건설방재관 건설본부	남·북항 대교 영도 연결도로 건설

1. 개요

□ 사업목적

- 2011년 부산신항 전체 개장시, 신항~북항간 유발되는 환적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심화되는 도심부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도심순환도로망 건설 시급하므로 북항대교 개통시기에 맞춰 완성되어서,
- 향후 항만화물 차량 시가지 우회해 따른 도심교통난 완화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양함

□ 사업내용

- 사업위치 : 영도구 영선동(남항대교) ~ 청학동(북항대교)
- 사업규모 : 총연장 L=2.76km, B=18.6~55m (4~6차로)
 - － 연결도로 : L=2.44km, B=18.6m
 - － 평면도로 : L=0.96km, B=20→60m
- 사업기간 : 2000 ~ 2013

□ 사업예산

- 사업비 : 3,090억원 (연결도로 2,010, 평면도로 1,080)

□ 사업 추진상황

- '93. 11.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 '07. 07. : 남·북항연결도로 실시설계용역 착수
- '08. 07. ~ '09. 07. :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구성·운영
- '09. 12. : 시물레이션 용역 발주(영도구의회)

2. 문제점

□ 고가도로 건설 반대로 영도연결도로 건설 지연

- 2013년 북항대교 개통 예정이나, 고가도로 건설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상권 쇠퇴, 재산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 반대로 영도연결도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음

□ 공사 지연시 경제적 손실 발생과 도심지 교통체증 가중

- 준공시기에 맞춰 본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북항과 신항을 연결하는 항만물동량 수송에 차질을 초래하고, 물류비용인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되며, 항만물동량의 도심지 통과 등으로 도심지 교통체증 가중 유발하게 됨

□ 북항대교 협약조건 불이행시 손실 발생

- 북항대교 협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행정 재산상 손실 발생과 행정 신뢰도 상실하게 될 수 있음

□ 쟁점사항에 대한 상호 대립으로 갈등 고조

- 부산시와 영도고가도로반대대책위원회는 영선아랫교차로 폐쇄여부, 도시계획선 확폭 여부, 평면선형, 교통기능성, 교통 안전성, 설계속도 적용기준 등 쟁점항목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으며,
- 부산시와 반대대책위원회는 일방적인 추진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상호 토론과 설득, 수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만 고조되고 있음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주민 적극 설득 및 합의 도출

- 주민, 시민단체 의견 수렴과 홍보 및 설명회개최 등으로 주민의 적극 설득을 통한 합의를 도출함

□ 주민을 위한 상징거리 조성

- 부산시는 주민대표와 지속적인 대화, 이해와 설득을 통한 상징거리를 조성함

- Street Furniture 디자인개념을 도입하여 주변여건 및 고가도로가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도로를 건설함
- 교량형식의 슬림화하고 장대 경간장으로 설계하여 건설함

□ 부산시에 주민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촉구

- 부산시가 주민 생존권과 환경권이 존중되며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과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함

□ 주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양보와 타협을 유도

- 연결도로의 기능과 안전성이 고려하며 주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양보와 타협을 유도함

10 수영강 하류 인도교 휴먼브릿지 설치사업 효율적 추진방안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개발본부 건설방재관	수영강 하류 인도교 설치사업

1. 개요

□ 사업목적

- 녹색성장사업인 부산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수영강 하류 좌수영교와 수영1호교 사이에 부산시 그린웨이에 적합한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 인도교 설치하여,
- 부산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와 APEC 나루공원의 이용 극대화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함

□ 사업내용

- 사업구간 : 수영강 하류 수영교~좌수영교(협성아파트앞~센텀공원)
- 사업규모 : 보행자 및 자전거 인도교 L=250m B=10m
- 사업기간 : 2010 ~ 2012

□ 사업예산

- 사 업 비 : 200억원 (공사비 178억, 설계비 12억, 기타 10억)

□ 사업 추진상황

- '09. 10.~11. : 인도교 설치관련 사업구상 협의 및 설치관련 국비반영을 국토해양부에 요청
- '09. 12. : 수영강 생태하천조성사업 변경건의(부산시⇒국토해양부)

2. 문제점

□ 인도교 휴먼브릿지 설치 위치선정에 따른 지역주민 상호간 의견 상이

- 인도교 설치 위치선정에 대하여 3개구에 해당되어 특정지역 설치 등 3개구 주민 다수의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음

□ 하천정비 목적 외의 사업으로 소요사업비 국비확보 애로

- 인도교 설치사업은 하천정비 목적 이외의 사업으로 국비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시비투자로는 한계가 있음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인도교 위치선정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한 합리적인 대안 수립 촉구

- 인도교 휴먼브릿지 설치 위치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주민의 의견이 제각각 일치되지 않으므로 주민의견수렴 절차인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여론을 최대한 수렴한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하도록 촉구함

□ 국비 확보하여 예산절감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중인 수영강 하류 생태하천조성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총사업비 변경 등 협의 후 국비 확보하여 부산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함
- 부산시의 녹색성장 및 그린웨이 사업과 연계하여 APEC 나루공원의 이용 극대화 등 수영구 및 해운대구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부산의 관광자원화 하도록 노력함

11 동북아 제2허브공항 건설 방안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교통국	동북아 제2허브공항 건설

1. 개요

□ 사업목적

- 김해공항2단계 확장사업 완료에도 2015년 이후 수용능력 부족이 예상
- 국제허브공항 건설은 동남권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1,500만명 남부권 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항공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 세계도시 부산 건설을 위해 동남권에 국제허브공항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함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0.6km² (4.8km×2.2km)
- 사업기간 : 2010 ~ 2020

□ 사업 추진상황

- '06. 11. :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신공항 건설 필요성 반영
- '08. 03. :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 용역계약 체결
- '08. 09. : 동남광역경제권 발전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
- '09. 12. : 2단계 용역완료(후보지별 경제성 등 기초자료)

□ 허브공항의 전제조건

- 허브공항은 장애물이 없이 안전하고, 24시간 운영가능하며, 안전하고 편리하면서도 언제든지 저비용 확장 가능한 경제적인 공항 공항이 되어야 하며

- 대규모 산업단지 등과 연계가 가능하고 항만과 인접하게 위치한 복합물류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와 동남 광역경제권의 공동 발전을 도모해야 함

□ 입지타당성 분석 ▶ 24시간 안전운항 가능한 「가덕도」 최적지

- 24시간 안전운항 가능한 편리한 공항
 - － 소음피해 없이 심야운송 가능으로 공항의 효율성 증대
- 경제적이고 확장 가능한 공항
 - － 장애물 절취 비용이 없어 공사비가 적고, 장래 항공수요 추가 발생 시 언제든지 확장 가능
- 세계적으로 복합물류수송시스템을 갖춘 곳에 신공항 건설 추세
 - － 인천공항을 보완할 남부권의 거점공항으로 항만, 철도, 물류비즈니스 등의 복합물류수송시스템 구축 필요

2. 문제점

□ 신공항 건설 입지 선정에 있어 지자체간 대립

- 신공항 건설 입지 선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 이견이 발생하여 대립되고 있음

□ 신공항 건설의 미래가 어두운 실정

- 신공항의 입지가 가덕도인가, 밀양 하남인가, 아니면 김해공항 확장안인가로 설왕설래하고 있어서 신공항 건설의 미래가 어두운 실정임

□ 정부와 수도권 관계자들은 신공항 건설 자체에 부정적이고 무관심

- 정부와 수도권 관계자들은 신공항 건설에 따른 지자체간의 갈등에 휘말리기를 싫어하며, 신공항 건설 자체에 부정적이면서 관심이 적음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부산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4개 지자체가 공감할 수 있는 해법 도출 촉구

- 부산과 경남의 입지 갈등을 해소하고, 5개 지자체가 적극 동참하여 의논하고 토의하여 공동개발 해법을 모색해 정부를 설득하는 순서로 해결해 나가야함

□ 동북아 제2허브공항 유치를 위해 보다 치밀한 윈윈(Win-Win)전략 촉구

- 부산시는 다른 지자체들과 정부를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논리와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입지 선정 후 정부 국책사업으로 진행

- 어느 한곳으로 입지가 선정되더라도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국책사업이 되어야 함

□ 부산 가덕도 해상 공항의 안전성, 확장성, 우월성 등 홍보 및 부각 촉구

- 이착륙에 안전성이 확보되고 확장가능성이 전제된 입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도록 촉구함
- 밀양 하남 후보지의 경우는 이착륙에 안전성이 결여되고 소음영향의 문제가 제기되며 산지를 절토해야 하는 문제점을 부각시키도록 함

건 축

1. 도심재생과 지역어메니티를 고려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115
2.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117
3. 도시경관의 전략적 관리와 도시마케팅, 장소 마케팅 120
4. 도심 건축물 높이와 해안 스카이라인의 합리적 재조정 123
5. 건축문화정책 및 랜드마크를 통한 도시의 위상 제고 126
6. 저탄소 녹색성장의 작은 실천, 옥상녹화와 계단실 사용 129
7. 지역특구와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연계 및 운용 133
8. 옹벽/방음벽, 교량 디자인 개선을 통한 시설물 가치 향상 137
9. 도심 문화공간의 축, 도시철도의 지속적 환경개선 139
10. 소방안전 사각지대의 해소 및 안전대책 강화 142
11. 주택가 골목길 회복 및 부설주차장 활용도 제고 144
12. 문화재(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의 문화경쟁력 제고 147

1 도심재생과 지역어메니티를 고려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재생본부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 등

1. 개요

□ 「202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수립 배경

- 기존 「201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05년) 실현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보완, 지역여건 변화 반영 및 목표연도(’10년) 도래 등으로 계획 개선 필요
- 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10년 단위 법정계획)

□ 사업내용 및 추진 현황

- 부산시 시가화 구역 199.5km²에 대하여 도시정비사업의 기본계획(안) 수립(’09.03월~’10.06월, 전체 용역비 536백만원)
- ’10.04.28~05.12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시의회 의견청취 후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예정(’10.07월 예정)

2. 문제점

□ 「2010 정비기본계획」의 시행착오 재발 방지

- 기존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①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사업(예정)지구의 지정과 저조한 진척율, ②사업지연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위생·도시미관 등 주거환경 악화, ③폐·공가 증가로 인한 지역 슬럼화 및 시민안전 위협, ④원거주민의 저조한 재정착률, ⑤조합의 내부갈등 및 경험·전문지식 부족 등에 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 경기침체 등으로 건설사들의 사업추진 지연과 주민들의 현금청산 증가에 따라 지역 슬럼화 및 재산권 침해 가속화

□ 2020 기본계획(안) 수립 과정의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부족

- 장기간 진척 없이 방치되고 있는 사업구역의 각종 사회 부작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는 전체 정비사업구역 487개소의 22%에 해당하는 125곳에 대한 대대적인 구역지정 해제 추진 中

- 구역 조정에 대한 근거 미약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 부족 등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집단 민원/쟁송 발생과 지정 해제 지역의 사후관리 문제 대두

【표】 2020 기본계획의 기존 구역 조정(폐지) 내용

구분	총계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유형유보		
	총계	해제	뉴타운	소계	해제	뉴타운	소계	해제	뉴타운	소계	해제	뉴타운	소계	해제	뉴타운	소계	해제	뉴타운
총계	125	85	40	46	32	14	28	24	4	9	4	5	16	9	7	26	16	10

자료 :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공람 공고 내용('10.04.28)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조정과 사후관리

- 시장논리에 의한 일방적인 구역 지정 해제보다는 공청회, 심포지엄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와 객관적 기준 설정으로 부작용 최소화
- 공공기관의 입지를 통한 거점 개발 유도 등 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제시 필요

□ 획일적인 사업 형태를 벗어난 유연한 사업방식 발굴

- 전면철거 및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위주의 획일적인 사업방식 외,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유형 다각화 모색(소규모 블록형 재건축 등)
-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으로서 사업협의체(전문가+학계+주민) 또는 NPO(비영리조직) 활용
- 주거 및 사회·문화적 환경개선과 함께 지역 어메니티를 추구할 수 있는 총체적 도심재생사업으로 유도

□ 정비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곳, 공적 역량 강화

-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시도되는 「마을가꾸기 사업」 등에 대한 적정 예산·인력·시스템 제공, 공공관리자제도 시범도입 등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공적 역량 최대한 발휘
- 사전사업성 검토 제도화, 실효성 있는 재개발·재건축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관련자 이수 의무화 및 조합의 전문성·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2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재생본부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등

1. 개요

□ 생활환경 양극화 해소 및 주거취약지역의 주거복지 필요

- 주변 생활환경이 열악한 고지대 및 정책이주지역, 철로변 또는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등 주거취약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거복지 향상 필요
- 공공임대주택(보금자리 주택 포함)의 공급량 확보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노력 필요

□ 사업내용 및 추진 현황

- 건축정책관 내 건축주택과, 도시정비과, 도심재생과 등에서 일반회계와 도시정비기금으로 주거복지 관련 사업들을 추진 중

[표] 건축정책관 내 일반회계 및 기금 주거복지사업('10년도 기준)

(단위 : 백만원)

	일반회계사업	도시정비기금사업	기 타
건 축 주택과	· 도시서민 밀집지역 공동 화장실 개선사업(720)	—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 맞춤형(매입,전세임대)임대사업
도 시 정비과	·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274,380) ·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1,000)	· 정책이주지/시영아파트 실태파악 관련 용역(1,000) · 정책이주지 주민 복지사업(10,000) ·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2,400) ·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및 순환용 주택 건립지원(29,839) · 고지대 Green테마파크 조성(4,000)	
	· 폐·공가 정비사업(3,000) : 일반회계 14억, 도시정비기금 16억		
도 심 재생과	· 노후 불량지역 문화공간 조성(70)		

자료 : 건축정책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10.01.26) 「예산집행상황보고」('10.02.18) 재정리

2. 문제점

□ 중장기 계획 부족으로 중복 투자와 예산 낭비 초래

- 정비구역 이외의 주거취약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미약하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나 집행계획 없이 예산이 먼저 투입되고 있음

-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각 자치단체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의 구체성, 조직, 인력 등이 부족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예산이 투입된 주거취약지역이 향후 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으로 지정될 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초래
- 정비구역을 제외한 주거복지 대상의 경우 공간적 범위와 계층이 모호하여 명확한 지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시, 형평성 문제 제기

□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단위사업에 대한 효용성 검토 필요

- 주거복지 관련 소규모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시행, 예산(혹은 비예산사업) 투입 대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지속성 여부와 예산 투입 이후 효과 검증 및 사후 관리 시스템 부재

□ 중앙정부 의존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 탈피

- 중앙에서 배정하는 공급물량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스스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공급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지역여건에 따른 수요 파악 후,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건설(8.5% 이상) 및 공공기관 매입 의무화, 순환형 임대주택 확보 등을 통한 공급방안 마련 필요
-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 건립 시 님비현상과 기존 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고립·슬럼화 가속 등 사회적 문제 대책 마련 필요

□ 지역 내 폐·공가 등에 대한 현황파악 및 대책 수립 필요

- 주거취약지역을 포함한 지역 내 폐·공가에 대한 전체 현황 파악과 정비 대책, 활용방안(리모델링 후 지역커뮤니티 시설 활용 등) 마련 필요
- 폐·공가 정비사업에 따른 건물 소유주 설득, 생활환경 주변 정화작업 등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점검 및 법률 미비점에 대한 대정부 건의 필요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체계적인 주거복지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시스템 마련

- 주거환경 취약지역의 주거수준 목표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재정투입계획 등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필요
 - － 주거복지 관련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조직, 인력 및 예산 편성 필요
 - －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부산시와 각 구·군의 구체적 업무 연계 필요
- 물리적, 경제적 지원 외에 주민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과 프로그램 제공 필요

□ 주거취약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 활성화

- 일방적인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시, 임차인들의 작업참여와 일자리 제공 기회 부여 필요
- 고지대, 정책이주지, 임대주택단지 등 도시서민 밀집지역 내에는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주민공동시설 확충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필요
- 주거취약지역 내 독거노인 중 희망자에 한해 공동생활(지원) 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농촌에서는 동절기에 마을회관 등을 활용하고 있음)

□ (공공)주택정책에 대한 부산시의 역량 강화 필요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10.01.01)에 따른 부산시와 자치단체, 사업시행자의 역할 모색 필요
-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10.06.08)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필요
 - － 지역별 수요 및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 권한을 지자체에 전면 이양
 - － 택지개발 권한과 입주자 선정 권한 이양에 따른 준비작업 필요

3 도시경관의 전략적 관리와 도시 마케팅, 장소 마케팅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재생본부	살기좋은 도시경관 조성 등

1. 개요

□ 도시의 얼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획적 경관관리 필요

- 21세기 ‘문화와 이미지 시대’에 부응하고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경관의 거시적 관리, ‘도시 마케팅’ 필요
- 일상적 생활현장 속의 생활상과 문화를 반영한 도시공간 브랜드 개발과 미시적 경관관리, ‘장소 마케팅’ 필요

※ 장소 마케팅(Place Marketing)(이진희, 장소마케팅(2003), 대왕사)

- ① 특정 장소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도록 기업과 주민, 관광객이 선호하는 이미지와 제도, 시설 등을 통하여 장소의 상품가치를 제고하는 것
- ② 장소 마케팅은 지역개발의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관광, 여가문화, 지역축제 등 일상 및 역사 문화자산과 연계될 수 있음

□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내용과 추진 현황

- 도시디자인의 진흥 및 수준 향상을 위한 디자인 시책 지침 마련을 위하여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포함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中(’09.07월 ~’10.08월, 전체 용역비 258백만원)
- 근거 :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조례 제3조(5년 단위 법정계획)

2. 문제점

□ 도시경관의 획일화·유형화로 인한 정체성 상실

- 지역 내 고층건물과 대단지 공동주택(군)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층부 디자인은 ①제도적 규제, ②상층부의 기능적(설비 수용) 구성, ③심의 및 인허가 과정의 융통성 부족, ④디자인 개발에 수반되는 재정적 부담 기피 등으로 보편적이고 획일화된 디자인 유형 남발

- 기존 판상형 공동주택 및 일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성냥갑 같은 획일적 디자인은 집단 군락을 형성하며 도시경관 저해요소로 작용
- 최근 신축되는 탑상형 공동주택의 경우, 스카이라인의 변화 없는 동일한 디자인의 반복 사용으로 도시경관의 다양성 창출 실패

□ 도시공간 브랜드 개발과 장소 마케팅을 위한 아이템 발굴 필요

- 현재 지역 내에서는 경관보존과 도시공간 브랜드화를 위하여 각종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창의적 아이템 발굴 및 체계적인 시스템은 부족한 상황임
 - 산복도로 망양로에 추진되고 있는 부산항이 보이는 전망데크 조성사업 (중구 영주동('10~'12년), 16,000백만원)
 - 자갈치시장 일원의 공공디자인 개발 시범사업('09.03~09, 160백만원)
 - 청사포 경관협정 시범마을('09~'12년, 50억원) 등
- 도시의 랜드마크적인 요소(건축물, 조형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활용을 통한 장소 마케팅 추진 및 어메니티 자원 육성 필요

□ 기존 경관 계획과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차별화 필요

-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들과 중복되지 않는 차별화된 내용과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 필요

[표] 도시경관 관련 주요 용역 내용

주 관	용 역 명		용 역 비	용역기간
도 시 경 관 기획단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258백만원	'09.07~'10.08(추진 중)
	도시경관색채 기본계획		270백만원	'08.07~'09.12 (완료)
	도시경관상세계획		270백만원	'07.12~'09.12 (완료)
	도 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도시경관 디자인가이드라인	비예산사업	'09.02월 완료 ('09.03월 1일 시행)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	부산광역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	'05.08월(완료)
	부산광역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	'04.08월(완료)
	부산광역시 도시경관보전계획		-	'98년(완료)

- 도시디자인 시책, 운용지침으로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총체적 경관관리 및 도시공간 브랜드 개발 확대 필요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개성적이고 감성적인 도시경관 연출을 위한 건축심의기준의 재정립

- 건물(상층부)의 유형화된 디자인 쏠림 현상 제고 및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서는 건축심의기준 개정과 후속작업 추진
 - 심의과정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 분석 및 보완책 마련
 - 새로운 개선(안)·보완책의 공론화 및 의견 수렴
 - 객관화된 심의기준의 적용 및 지속적인 수정·보완 작업 추진
- 경관 관련 심의제도의 형식과 절차는 간소화시키고,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전문성은 심화시킬 수 있는 기준과 방안 마련 필요
- 도시경관의 다양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높이에 따른 옥상녹화의 효과적 사용과 조형지붕의 설치 등 정책적인 권고기준 마련

□ 장소 마케팅을 위한 조망점 발굴과 도시공간 브랜드화 추진

- 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자연적, 인위적)조망점 마련과 브랜드 가능성이 있는 장소의 발굴 및 마케팅을 위한 전략적 경관관리 필요
- 야간경관조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제된 도시의 이미지 구축 및 야간관광 코스(프로그램) 발굴, 야간경관 특화지역 추진 시도 필요
- 장소 마케팅 등을 위한 스토리텔링의 개발 및 상품화 필요

□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활용과 사후 관리

- 상임위에서는 기존의 각 분야별(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환경색채, 경관 조명, 통합 C.I 등) 가이드라인을 총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종합계획으로 수립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촉구 필요
- 현재 도출되어 있는 건축(또는 도시경관) 관련 주요 지침(가이드라인) 및 각 용역의 결과에 대한 상호 상관관계, 적용 우선순위 등을 작성하여 현장 실무에 혼선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함

4 도심 건축물 높이와 해안 스카이라인의 합리적 재조정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재생본부	부산다운 건축 추진 / 도시건축환경개선 등

1. 개요

□ 도심 내 건축물 높이와 해안 스카이라인 조정 필요성

- 기존 도심 내 건축물 높이관리 제도의 한계점 노출, 국내·외 타 도시들의 건축물 높이관리 수단의 변화, 초고층 건물의 건립 및 해안가 높이관리 정책 문제점 대두
- 시역 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안가 고도제한 완화, 초고층건축 기준(안) 마련 등 도심 스카이라인 재조정 작업 추진 中

□ 사업내용 및 추진 현황

- 도심 스카이라인 조정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관리계획 및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용역 완료('08.12월) 이후 1~3단계 후속작업 추진 中

[표] 가로구역별 높이관리·해안가 고도제한 관련 용역 및 초고층 건축물(예정) 현황

구 분	사 업 내 용		용역기간	사업비
가로구역 높이관리	부산시역 건축물 높이관리계획 수립	높이관리계획 마스트플랜/세부추진계획(3단계)수립	'07.01~'08.12	311백만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1단계)	중앙로(충무R~양정R) 상업지역 10개 블록(7.96km ²)	'08.04~'09.11	264백만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2단계)	상업지역 20개소 5,771km ² (해운대 일원 등 부도심)	'09.04~'10.04	161백만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3단계)	상업지역 30개소 7,96km ² (동래, 화명동 등 부도심)	'10.04~'11.04	312백만원
해 안 가 고도제한	해안경관 관리지침	5개 해수욕장 건축물 고도 제한(60~75m)	'05년	-
	해안경관종합계획(수립 중)	광안리 해안 아파트 10개 단지 382개동 57만5,632m ²	추진 중	5억(예상)
초 고 층 건 축 물	부산롯데타운(중구)	지하6층, 지상107층(570,197m ²)	호텔,오피스,백화점 등	
	월드 비즈니스 센터(해운대구)	지하8층, 지상4872-108층(302,083m ²)	업무,판매,주거,관광휴게시설	
	해운대 관광리조트(해운대구)	지하7층, 지상100-118층(812,231m ²)	호텔,콘도,유티파크,주거	
	센터럴베이(북항재개발), 문현금융단지 내 초고층 건축물 건립 예정			-

자료 : 건축정책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재정리

- 현재 60~75m의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해안가 중 광안리 해안가 아파트 10개 단지, 382개동(8,130가구) 57만5,632m²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 위한 해안경관종합계획수립 용역 추진('10.06월 현재 용역에 관한 심사 진행)

- 최근 40~70층 규모 주거건축물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초고층 업무복합 빌딩 건립이 활발하게 추진, 100층 이상 프로젝트(부산롯데타운, 월드 비즈니스 센터, 해운대 관광리조트 등) 3개 이상 진행 中

2. 문제점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으로 인한 경관의 획일화 우려

- 전체 도시경관 관리 및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시행은 필요하지만 블록 내 스카이라인의 무변화 등 또 다른 획일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주어진 규제 안에서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로 균질한 높이의 스카이라인 형성, 오히려 경관의 획일화 초래 우려
 - 총량규제 등의 방법을 통한 적정 용적률의 구현과 이를 통한 파노라믹한 스카이라인의 형성 유도 필요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및 시행은 사실상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에 따른 민원이나 형평성 문제,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 필요
 - 관련 규제의 허용 용적률 범위 내에서 높이 증가에 따른 건폐율 축소 및 높이 감소에 따른 건폐율 증가 등 도시특성에 부합하는 융통성 있는 기준 수립 및 운용 필요

□ 해안가 고도제한 규제 완화에 따른 조망권, 공공성 상실 우려

- '05년 해안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5개 해수욕장(해운대, 광안리, 송도, 다대포, 송정) 인근 건축물 고도를 60~75m로 제한하는 「해안경관 관리 지침」 수립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하여 느슨하게 운용해 옴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투자유치)와 스카이라인 조정에 대한 명목으로 남천동 및 대연동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의 신뢰성 문제, 특혜논란과 형평성 문제, 주변지역의 조망권 상실 및 민원 유발, 경관관리의 실패 가능성 등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초고층건축물 건립에 따른 잦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특혜시비

- 지역 내 계획되고 있는 초고층건축물들은 대부분 사업성을 담보로 한 주거 위주의 한정적 기능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도시의 인프라 확충과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객관적인 설계가이드라인과 조속한 기준 설정으로 잦은 지구단위계획/설계변경에 따르는 각종 특혜의혹으로부터 탈피 필요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부산다움’이 반영된 도심과 해안가 스카이라인 재조정

- 도심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와 해안가 고도제한 완화, 초고층건축물 건립 시, 합리적인 스카이라인 조정과 공공성 확보가 주요 관건
- 기존 높이관리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한편 지역여건에 맞고 부산다움이 반영된 높이관리 및 경관관리 정책과 기준 마련 필요
- 해안가 고도제한 완화의 경우, 국내·외 우수업체를 초청해 부산의 대표적인 해안경관 창출을 위한 해안 경관관리 개념 마스터플랜 공모전의 선행 등, 해안가 주거권역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와 관리계획 수립 후 개별 영역으로 접근해가는 것이 합리적 방법

□ 시민과 사업자를 설득할 수 있는 초고층건축물 관리 지침 마련

-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부산시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조속한 지침 마련을 통하여 사업여건에 휘둘리지 않고 전체 도시관리 차원에서 시민과 사업자를 설득해 나갈 수 있어야 함
- 추진 중인 초고층건축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역 내 파급 효과와 인프라 확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여건 분석과 활성화 방안 강구

5 건축문화정책 및 랜드마크를 통한 도시의 위상 제고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재생본부 / 문화체육관광국	도시건축환경개선, 영화 영상 인프라 조성 등

1. 개요

□ 건축행정에서 새로운 건축문화정책으로의 전환 요구

- 산업화·도시화 속에서 주로 생산과 기술, 수요와 공급의 시장논리와 인·허가 위주의 규제 중심으로 다루어지던 건축행정에서 건축문화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 증가
 - － 점차 건축의 문화·예술적 측면 강조와 시대적·문화적 산물로서의 역할 부여가 많아짐에 따라 건축문화정책의 수요 증가
 - － 건축에 대한 새로운 가치의 재생산·확대 및 정책의 전환 필요

□ 「부산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 및 추진현황

- 건축기본법 제정('07.12)/시행('08.06.22) 및 국토해양부의 「건축정책기본 계획 수립」추진에 따라 시에서도 「부산 건축정책 기본계획」수립 추진
 - － 2010년도 학술용역사업 전문가 심의를 마치고, '10.06월 ~ '11.09월 까지(15개월) 사업비 270백만원으로 용역 추진 준비 中
 - － 근거 : 「건축기본법」 제12조,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제2조 (5년단위 법정계획)

□ 랜드마크 건축물 건립과 건축문화 기반 인프라 확충

- 지역(市域) 내 건축문화역사관, 부산영상센터 등 상징적이고 예술성 있는 건축 작품의 건립을 통하여 건축문화 도시로서의 위상 정립 필요
- 도시 건축문화 시민투어, 부산다운 건축상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민 참여 유도를 통한 건축문화 저변 확대 및 인프라 확충
- 일회성, 이벤트행사 성격을 벗어난 현실참여적인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운용 시도

2. 문제점

□ 건축문화정책으로의 전환 위한 기본 아젠다 재설정 필요

- 「부산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행정 시책을 반영한 최상위 계획으로서 용역 발주 시, 건축철학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지침서 제시 필요
- 기존 규제 중심의 인·허가 행정체제에서 벗어나 녹색성장과 건강, 안전, 쾌적한 공간 환경 요구에 대한 국내·외적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건축현안을 해결할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

□ 「부산 아시아건축문화역사관」 건립 추진의지 부족

- 「부산 아시아건축문화역사관」 건립('10년~'12년, 총사업비 19,800백만원)은 현재 국비 10억원의 예산 외, 시비 미확보 등 추진 실적 부진
 - － '10.06월 기본계획(안) 공모 예정이나 예산확보 계획이 없고, 역사관의 용도가 건축문화, 역사, 전시 자료 보관 등 모호하며, 세부 프로그램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 －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시 예산의 체계적인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도시건축박물관」의 추진현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 필요
 - － 역사관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근현대 건축가 위주의 박물관이 아직 국내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들의 활동과 작품 사진, 도면작업 등에 관한 프로그램 편성 등도 검토 필요

□ 「부산영상센타(두레라움)」의 사업비 미확보 및 건축물의 질적 하락 우려

- 부산영상센타 건립은 세계 최고의 영상문화 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영화·영상인프라 조성의 핵심사업으로서 추진되어야 함
 - － 중앙부처에 신청한 총사업비 1,624억원에 대한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 필요(현재 총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진행 중)
- 총사업비 확보 등을 통하여 원안대로 예술성이 있는 건축물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건물의 규모·품질 등의 질적 저하 방지 필요

[표] 부산영상센터(두레라움) 사업예산 확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9까지	2010	2011이후	비 고
합 계	162,400	52,600	42,500	67,300	-
국 비	81,200	28,100	6,500	46,600	-
시 비	81,200	24,500	36,000	20,700	2010년 예산 : 채무부담액(140억원) 별도

자료 : 건설본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국내 실시설계 및 공사 실현 과정에서 공사비 절감이나 하도급 측의 요구, 물품 사양 등의 대체를 위한 의도적 설계변경과 질적 하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산시의 전반적인 공사 감독·감시 강화 필요
- 부산영상센터 등과 같은 랜드마크적 건축물에 대한 건립과정 자체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홍보 필요(건립과정의 웹캠 공개 등)
- 향후 시설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행사 기간 외 시설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대책 마련 필요
 - 센텀시티 내 영상후반작업시설, 부산문화 콘텐츠 컴플렉스, 방송국(KNN) 시설과의 블록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영화촬영스튜디오와 동부산권의 종합촬영소 등 인근에 계획 중인 유사 시설과 적극적 연계 방안 마련 필요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건축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전반적 기반 여건의 검토

- 국토해양부의 건축정책기본계획 확정 후,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의 보완작업 및 실천전략 필요
- 지역 여건에 맞는 창의적 건축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부산건축정책기본 계획」의 성공적 수립과 건축 통계자료 축적 등 활용성 제고

□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질적 향상 도모

- 랜드마크 및 예술성 있는 건축 작품의 건립 등 하드웨어적인 여건 조성과 건축·문화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질적 향상 필요

6 저탄소 녹색성장의 작은 실천, 옥상녹화와 계단실 사용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재생본부/소방본부	건축물 옥상조경 녹화사업 /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 집중 관리

1. 개요

□ 중앙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방안 및 건물 녹화사업 추진

- 녹색성장위원회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 심의 및 국토해양부의 건축물 옥상·벽면 녹화 추진 계획 발표('09.11.5)

※ 건축물 옥상녹화의 필요성(국토해양부 녹색성장 추진계획(안) 19쪽 참조)

- ① 지상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녹지량 보완 ②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 절약
- ③ 도시경관(스카이라인) 개선 ④ 건축물의 내구성 향상 등
- ⑤ 건축물 녹화 시, 도시열섬 완화에 의해 여름철 에너지소비 저감 효과
(여름철 30°C 기준, 녹화지가 주변 콘크리트 바닥보다 평균 7°C 낮음)

- 중앙정부 차원의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및 공공건축물 녹화사업 추진계획」 용역 착수('10.06월), 건축물 녹화 마스터플랜 및 설계/시공/유지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 中(건설경제신문 '10.06.06)
- 중앙정부 차원의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부산시 차원의 하위 계획 수립 및 시행이 뒤따라야 함

□ 부산시(건축정책관)의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추진 실적

- '08년 민간건축물 2개소 1,078㎡, '09년 공공건축물 2개소 678㎡로서 신청지 31개소 14,464㎡의 12%인 1,756㎡ 옥상녹화 추진, 실적 저조함
 - 예산사업 (기존건축물) : 건축허가 승인 시 옥상조경 유도
 - 비예산사업(신축건축물) : 공사비 일부 지원, 인센티브 제공

[표] 부산시 옥상녹화 추진 현황('08~'09년)

구 분	신 청 현 황			추진현황
	합 계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08년도	31개소 14,464㎡	12개소 5,982㎡	19개소 8,482㎡	2개소 1,078㎡
'09년도	15개소 3,728㎡	3개소 525㎡	12개소 3,203㎡	2개소 678㎡

□ 친환경건축물 인증 확대 추세 반영 필요

- 저에너지 소비 건축물을 위하여 건물의 에너지 합리화, 성능 중심의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물의 활성화 방안 등이 실행되거나 예정 중임
-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그동안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적용되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하도록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개정·공포함('10.5.17)
- 부산시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친환경건축기준 마련 中

2. 문제점

□ 예산, 홍보, 인식부족으로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실적 저조, 추세에 역행

- 기존 건물의 옥상녹화를 위한 (건축정책관)예산은 매년 1억 책정('08~'10) 그린부산(Green Busan) 전체예산의 1.5%수준에 머물고 있음
 - 예산부족으로 적극적인 사업의 시행 및 확대가 어려움
 - 기존 건축물은 공사비 외, 구조안전진단비 등 건축주의 부담 가중 요인이 있어 민간 건물 옥상녹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타 시·도의 건축물 옥상녹화 관련 예산 및 지원

- ① 서울시 옥상녹화 예산 123억원('09년 기준)
 - 옥상녹화 면적 99㎡이상, 옥상조경 전체 조성비용의 50%범위까지 예산 지원
 - 유치원, 병원, 노인정 등 접근성이 높거나 시민 개방가능한 곳부터 우선 지원
 - '08년 106개소(공공기관 42곳/민간건물 64곳) 5만9285㎡, '09년 73개소(민간건물만 집계) 25,061㎡ 옥상녹화 완료
 - 옥상공원화 특화구역인 남산가시권역 내 건물은 공사비의 70%까지 지원
- ② 경기도 31억원('09년 기준)
- ③ 인천시의 경우도 옥상조경 조성 비용의 50%까지 지원하고 있음
- ④ 과천시의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 등 전체 사업비의 70%까지 제공('10년)

- 예산 부족 외,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의 홍보부족과 시민의 인식부족 때문
 - 옥상조경 대상지 신청 건수가 '08년 31개소, '09년 15개소, '10년 15개소로 점차 줄어들고 있음
 - 옥상녹화사업에 대한 충분한 인식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건축주 사정에 의해 포기하는 사례 발생도 발생

□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고비용 부담, 자발적 참여가 어려움

- 친환경건축물 건립을 위한 설계 권고사항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유도책이 뒤따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재비와 공사비 증가 등 고비용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친환경건축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계단실 이용 활성화 등 저비용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계단실 사용에 대한 소극적 인식,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 각 건축물의 비상계단을 포함한 비상구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부족과 사용 저조로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용도변경, 비상구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행위 등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까지 횡행
- 일반적으로 (비상)계단은 접근이 힘들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으로 인식, 활용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활용(흡연실 등)
- 비상구 폐쇄 등은 건물 내 계단실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소극적 설계·관리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건축물에 대한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약 추세 반영

※ EU의 「20-20정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확보 방안

- ①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1990년 대비), 1차에너지 20% 절감(2020년 BAU 전망 대비), 신재생 에너지 비중 20% 확대
- ② 건물에너지 성능지침을 통해 1019년부터 모든 신축건물의 화석에너지 제로(0) 실현

- 중앙정부의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 마련에 따른 부산시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 필요(친환경건축기준 수립과 시행 등)

□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녹화 목표수준 및 연차적 예산확보 방안 마련

- 지역 내 옥상녹화가 가능한 대상과 면적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와 함께 이에 따른 연차적 예산 확보 및 실행방안 등 정책의지 표현 필요
- 사업비의 국고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연구 추진 및 예산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민·관협력사업의 발굴 필요

- 신축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옥상녹화를 의무화하고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 계획수립 단계부터 옥상녹화를 유도하는 등 점차 민간에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실행방안 마련 필요

□ 옥상녹화 조성 시, 인센티브 발굴과 녹화사업 형태의 다양화 모색

- 세제 혜택(일본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옥상녹화 시, 보유세의 20%를 5년간 면제)을 포함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발굴
- 적극적인 행정적·기술적 지원 외, 적은 예산으로도 실행할 수 있는 ‘상자텃밭 가꾸기사업(서울)’이나 묘목 제공 등 다양한 사업방식 발굴

※ 서울시의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 (뉴스한국닷컴 '10.04.23)

- ① 옥상녹화를 적용하기 어려운 작은 옥상, 베란다, 자투리마당의 콘크리트에 직접 닿는 햇볕을 푸른 식물과 토양이 흡수함으로써 도시 열섬화를 막는 효과뿐만 아니라,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 자급자족, 노인분들이 선호하는 소일거리로도 반응이 좋음
- ② 상자텃밭은 이동성이 좋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도시녹화 방법으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도시농업(가드닝)의 유형임
- ③ 트러스터 운동뿐만 아니라 기업체의 후원을 이끌어내어 사업 확대

- 빗물관리+태양열발전기 등 옥상녹화와 여타 친환경기술 접목 시도 필요

□ 조성된 옥상녹화(공원)에 대한 사후관리·유지 방안 마련

- 옥상녹화(공원)을 조성한 건물주와 협약체결 등을 통하여 옥상녹화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적극적 디자인 요소로 계단 활용, 공간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사례 발굴

- 건축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한 소극적으로 설계·시공에서 벗어나 계단실에 대한 양호한 채광조건과 디자인, 마감재료의 개선 등을 권장·유도할 수 있는 건축(심의)기준 마련 검토 필요
- 계단을 적극적인 디자인로 요소로 활용, 건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리모델링한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저비용으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 계단이용의 활성화

- 건축적 측면에서 에너지 절감과 시민건강 증진을 고려한 ‘계단 이용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을 검토해 볼 만함(경남 진주시의 ‘건강을 위한 계단 이용 활성화 사업’참조, 뉴욕시는 계단실 사용 활성화 제도적 근거 마련)

7 지역특구와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연계 및 운용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재생본부 / 도시개발본부 / 문화체육관광국	간판시범거리사업 등

1. 개요

□ 지역 개발사업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특구 추진

- 현재 시역 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 지정 및 신청 현황은 6개 구·군에 걸쳐 8개소에 이르고 있음

【표】 부산지역의 특구 지정 및 신청 현황

구·군명	지역특구 명칭	지정 시기	비 고
해운대구	관광 특구	1994년	-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2005년 02월	-
동 구	차이나타운 특구	2007년 07월	-
동래구	온천 특구	2009년 10월	-
남 구	유엔(UN)평화 특구	2009년 08월	-
기장군	미역·다시마 특구	2007년 04월	-
	글로벌리더 육성 특구	2009년 10월	-
중 구	용두산·자갈치 관광 특구	2008년 05월	-

- 지역특구로 지정 시, 특구 성격에 따라 건축법 완화에 의한 건폐율·용적률 향상, 옥외광고물법 및 농지법 등의 규제 완화, 관광진흥개발 기금 보조·융자 등의 혜택 부여 가능

□ 「시범도로 지정 및 정비기본계획」('00.02월)수립 및 추진현황

- 도로 시설물 및 도로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기 시작함(지시사항 '98.07.14)
- '00년 02월 : 시범가로 대상 27개 거리(10개 지역)를 지정함
(27개소, L=17.7km, 사업비 3,051억원)
- '03년 07월 : 아시안게임(2002년)과 월드컵 축구경기(2004년) 등 21C에 요구되는 선진국형 도로환경 구축을 위하여 대상을 38개 거리로 확대 지정함(38개소, L=33.06km, 사업비 3,481억원)

-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09년 12월 기준)은 총 38개소 중 시행완료 22건, 시행 중 5건, 장래계획 11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시행

- 지역의 특성과 정서에 적합하도록 광고물의 표시를 제한 또는 완화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운영
- 현재 시역 내 7개 구·군에 걸쳐 8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정비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곳이 5곳이며, 나머지 3곳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사업후보지 상태로 남아 있음

□ 각 실·국 및 기초자치단체의 테마거리 조성사업

- 도로계획과의 시범도로 사업 외, 건축정책관의 간판시범거리사업, 도시경관기획단의 가로경관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국의 도시시범가로 조성사업, 해양농수산국의 자갈치 수산물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표] 부산시 각 실·국의 각종 테마거리 추진 상황('09년 12월 기준)

실·국	사 업 명	기 간	예산(백만원)			
도로계획과	구역별 시범도로 지정(38개소)	2000 ~	3,211억원			
건 축 정책관 (간판시 범거리)	중구 미화로(근대역사관↔구미화당)	'10.03~'12	길이(m)	업소수	광고물 수	시비지원
	서구 동아대 캠퍼스 주변(임시수도기념거리 주변)		360	160	330	1억
	동래구 온천거리(온천약국↔금강공원입구)		840	88	214	1억
	북구 덕천동 젊음의 거리(덕천초교↔파리바게뜨)		180(270)	26(41)	112(155)	1억
	사상구 감전 지하철역 주변		170	88	229	2억
도 시 경 관 기획단	광복로 가로경관 개선사업	'04.02~'08.12	740	112	248	1억
	서면 특화거리 조성사업	'08.02~'08.12	8,567백만원(국3,000+시2734+구2,833)			
	남구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	'08.08~'10.06	6,900백만원(국175+시4,500+구1,700)			
문 화 예술과	보수동 책방거리	'08 ~ '10	5,500백만원(국2,700+시1,400+구1,400)			
	임시수도 기념거리	'09 ~ '12	1,700백만원(국650+시550+구500)			
	동래 문화체험동산 조성	'08 ~ '11	139억원(국64억+시67억+구8억)			
	청학동 문화광장 조성	'09.08~'10.10	45억7천(국20+시15+구10.7)			
	미술의 거리	'08.05~'09.04	2,000백만원(시500+구1,500)			
행정자치과	롯데백화점 앞 부산진경찰서~영광도서 입구	'08.09~'10.12	160백만원(시160)			
			7.8백만원(시6.2억+구1.6억)			

자료 : 각 실·국 업무보고('10.2) 자료 및 행정사무감사('09.11) 자료 재정리

2. 문제점

□ 가로경관 개선사업 관련 업무 총괄 부서 부재

- 「시범도로 지정 및 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선정('00~'03년)된 시범도로 대상 및 사업 추진에 대하여 현재 이를 총괄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없음

- 건축정책관, 도시경관기획단, 문화체육관광국, 해양농수산물국 등 각 실·국의 개별사업에 반영되거나 중앙부처 시범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 사업추진 주체, 사업방식, 사업기간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한 채 사업이 추진되어 투입 예산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음
- 특화거리는 각 사업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대부분 간판정비사업으로 귀결되는 등 취지와 달리 정체성 없는 사업으로 전락

□ 자원과 지역특구 운영 프로그램 부족으로 ‘무늬만 특구’ 전략, 예산 낭비

- 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특구 관련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 및 민자유치 부실, 사업추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지역특구 규제 특례법」(’04.09월 제정)에서는 예산 및 세제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특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해당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조달하도록 하고 있음. 즉, 자원조달은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편성 및 민자유치 등을 통해 조달해야 함
- 구체적인 준비 없이 무리한 특구 지정으로 기본적인 혜택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지역특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작용 발생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각종 가로경관사업 관련 업무/예산집행 총괄진단 및 주무부서 선정

- 현재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가로경관사업에 대하여 도시경관기획단에서 취합·점검 후 문제점 파악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괄부서 선정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 있음
- 사업의 기획 및 중앙부처 사업 유치 등에 관계한 부서에서는 기본적인 사업내용을 제공하고, 설계단계부터 도시경관기획단의 협의, 심의, 자문을 받아 종합적인 경관사업으로 묶어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 있음

□ 지역특구 현황 점검 및 지역특화를 위한 체계화된 운용프로그램 마련

- 현재 지역 내 지역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8개소에 대한 현황파악 및 문제점 점검 후, 지역경제 활성화/관광객 유치의 극대화 방안 모색 필요
- 각 기초단체의 지역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재원확보 방안 및 운용 프로그램 평가 등 무계획적인 추진으로 인한 사업지체와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마련 필요
- 지역특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범거리 조성사업,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등의 가로경관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시범가로사업 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한 폐기/개선(안) 마련

- 도로계획과에서 기획된 시범가로사업은 현재 추진주체 없이 10여년 이상 경과한 상태로, 시행 중(5건)이거나 장래계획(11건)에 포함된 대상에 대해서는 현실여건을 반영, 전면 재검토 후 폐기하거나 개선(안) 마련 필요
- 개선(안) 마련 시, 단순한 도로정비 차원을 넘어 지역문화와 경제여건을 살릴 수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 있음

□ 간판정비사업 과정상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자료/대응책 공유

- 각 지자체별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획일화된 디자인, 진행과정에서 민·관의 조화로운 참여 부족, 유지보수의 결여,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등에 관한 문제점들이 주로 지적되고 있으며, 사후평가 역시 부족함
- 행정적 경험 부족으로 동일한 문제점에 대한 답습/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 형편에 맞춘 여과작업 및 지자체간 사업과정에 대한 자료 축적(DB화)과 공유가 필수적임

□ 한전 지중화사업의 선결을 위한 행정협상력 및 예산 집행의 유연성 제고

- 모든 가로경관사업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한전의 지중화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 시·자치단체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상력 및 예산 집행의 유연성 제고 필요

8 옹벽/방음벽, 교량 디자인 개선을 통한 시설물 가치 향상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재생본부	교량 /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등

1. 개요

□ 기능 중심의 공공시설물에서 감성적 매개체로 전환 필요

- 도심 주요 간선도로변 대형 옹벽/방음벽/고가차도/교량 등 공공시설물들은 기능 중심의 삭막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존 공공시설물들은 시각적, 심리적 부담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도시경관 저해 요소로 작용

□ 사업내용 및 추진 현황

- 아름다운 도시 부산만들기 5개년 종합계획 수립('08.04.17)과 가로시설물 디자인 개선 계획 수립('08.08.27) 및 도시시설물 디자인개선 계획 수립('09.09.04) 등에 따라 옹벽 73개소, 방음벽 10개소, 지하보도 23개소, 지하차도 22개소, 고가차도22개소 등에 대한 조사 실시
- 조사 대상 중 중요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디자인 개선을 위한 연차별 사업 추진 中(10여 개소, 사업비 3,220백만원)

[표] 도심지 그린옹벽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현황

년도	대 상	사업방식	사업비
'09년	부산진구 가야로 옹벽(H=1.0~14.0m, L=437m)	제안공모	500백만원
'10년	동래구 제2만덕터널 입구(H=3.0~8.0m, L=445m, A=3,410m ²)	제안공모	360백만원
	남구 황령터널 입구(H=5.0~11.0m, L=150m, A=1,200m ²)	제안공모	240백만원

자료 : 도시경관기획단, 2010년 주요업무계획('10.1)

□ '10~'14년까지 매년 2~3개소 옹벽 디자인 개선을 추진 中

- 옹벽 디자인 개선을 통해 안전과 기능, 미관이 조화된 도심환경을 조성, 도시미관 저해 시설물에서 공공예술 작품과 공간으로 변신
- 노후화된 옹벽 및 교량 시설물 등에 공공디자인을 접목함으로써 시설물의 가치 제고 및 예술 장식품으로 승화 필요

2. 문제점

□ 웅벽/방음벽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한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필요

- 벽화 등의 일회성 환경개선 방법보다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한 다양한 방법(타일, LED조명 등) 시도 및 표현 소재의 다각화 모색 필요
- 슬럼화된 지역에 그려진 벽화의 경우,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시간의 경과와 함께 또 다른 흉물로 전락할 수 있음

□ 환경정비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교량 디자인 개선 사업 필요

- 교량, 도로 등은 도심 내의 경관축으로서 디자인 개선을 통하여 전반적인 이미지 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음
 - 온천천의 경우, 하천환경은 친환경적으로 정비되어 가고 있으나 교량의 노후화 및 미관 불량 등으로 도시경관의 부조화 연출
- 지역 내 각 교량별로 장소성을 반영한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여 지역의 적극적인 어메니티 요소(교량난간, 보도, 조형물, 교량 경관조명)로 활용

□ 고가도로 시설물의 하부공간 활용 및 디자인 환경 개선

- 도시 전체에 걸쳐 위압적인 미관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고가도로 시설물 디자인 개선은 아직 시행 초기로서 직접적인 성과 미진
- 하부공간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관조명의 효과적인 사용 등을 통하여 야간경관 축으로 활용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도시환경을 건강하고 인간중심적이며 문화적인 환경으로 바꾸기 위하여 웅벽/방음벽/교량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시설물 개선 필요

- 역사성·지역성 등을 반영하거나 생활특성을 강조한 생활공간 디자인 개선 사업을 통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장소 마케팅 활용

□ 지역 내 하천변의 노후 교량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 이후,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과 체계적인 환경개선에 접근할 필요 있음

9 도심 문화공간의 축, 도시철도의 지속적 환경개선 추진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교통국 / 부산교통공사	역사 환경개선 / 테마가 있는 역사 조성사업 등

1. 개요

□ 대중교통수단에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만남, 문화공간 축으로 전환 요구

-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이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및 역세권 고밀개발 정책 방향에 따라 도시철도의 중요성 지속적 증가

[표] 부산도시철도의 역사(역사) 환경개선 및 문화 사업('10년 기준)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전시관 문화공간	'휴메트로'시민 휴게공간 조성(안평, 석대전변)	22.1억원	'10.10월 완료	-
	수안역 유물전시관 조성	50억원	'08~'10.12월	-
	경전철 홍보관 조성	7억원	'10.06월 완료	-
디자인 개 선	중장기 개선계획에 따른 안내표지 연차적 정비	7.5억원	'10.03월~	-
	광고시설물 설치운영 기준 제정	비예산사업	'10.05월 확정	-
역 사 테마화	테마역사 조성	3억원	'10.02월~	-
	문화예술전시관 'Humetro Gallery'운영	8백만원	'10.04월~	-
	문화예술단체와 협약을 통한 문화행사 활성화	24백만원	'10.05월~	-
	휴메트로 북카페 운영	-		-
이 용 편의성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E/L 66대, E/S 192대)	586억원	'10.01월~	-
	Barrir Free(장애인WC 남여 분리, 와이드 게이트)	4.5억원	'10.04월~09월	-

자료 : 부산교통공사,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10.01.25) 재정리

□ 신규 부대수익 창출을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

- 노후역사 개량/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복합환승센터 개발, 역사 재배치와 상가 조성, 지하공간 및 차량기지 내 부지 개발 등 민자유치 추진

□ 도시철도의 역사와 대형건물의 연결 증가

- 기설치 된 39개소(1호선 15개소, 2호선 20개소, 3호선 4개소)외, 지하상가를 포함한 구간(덕천⇔숙등역간, 수영⇔광안역간) 연결 추진 中
- '10년 센텀시티역과 제2벡스코 오디토리움 및 '11년 이후 문전역~문현 금융단지, 수정역~화명주공 재건축아파트 간 연결통로 설치 계획 등 도심 내 도시철도 역사와 대형 건축물의 연결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

2. 문제점

□ 기존 도시철도 출입구 및 시설물로 인한 지상 보행환경 침해 심각

- 도시철도 출입구를 비롯한 환기구 등 각종 설비 시설물의 인도(보행공간) 점유로 시민 보행공간의 협소 및 안전 위협 등 불편 가중
- 도시미관 개선과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철도 신규 건설구간 및 기존 운영 구간의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필요하나 이설 공간 등 부족

□ 지역성과 문화공간 수요에 역부족인 지하철 역사 환경

- 최근 도시철도 지하공간이 테마역사, 북카페 등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잡으면서 시민들의 활용도 및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도시 문화공간의 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임
 - － 도시와 지역사회의 결절점으로서 각 역사의 문화공간화 및 장소성 발굴이 필요하며, 시민과 지역문화단체의 만남, 독서토론회 등 관련 행사 프로그램과 협의체 발굴 필요

□ 지나친 수익성 위주의 민간투자 유치로 지역상권 잠식 우려

- 노후역사 개량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민자 유치 시, 지나친 수익성 위주의 사업발굴은 또 다른 형태의 SSM과 같은 부작용 낳을 수 있음
- 복합환승센터 개발, 지하상가 조성 사업 등으로 상권이 중첩, 지역상권이 잠식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조사 및 파급효과 검토 필요

□ 도시철도 공간 내의 광고물 난립에 대한 관리기준 부재, 사각지대로 방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지하공간 광고물은 통합적·체계적 관리 기준 부재 및 단속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 － '08년 기준, 도시철도 내 광고물 현황은 일반상업광고 35종 43,628점, 편의시설 광고 47종 32,022점로서 무질서한 시각 환경 조성
- 도시철도 광고물은 부산교통공사의 「지하철광고물등 관리규정」을 적용, 호선별·광고매체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광고대행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 광고대행 계약 이후의 모든 광고유치, 광고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은 민간에게 일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의 이설 공간 및 토지보상비 확보

- 환기구 주변에 건물 신축 시, 건물주와 협의하여 환기구 등을 여유공간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 마련 필요
- 출입구, 환기구 등의 이설공간 마련 확보와 함께 적정 예산 확보 필요

□ 역사와 대형건물과의 연결 시, 안전 및 관리체계의 효율적 역할 분담 필요

- 「다중이용건물과 지하철의 연결통로 확충 사업」이나 「지하철 출입구의 건물 연계 작업」 등 지하공간과 건축물 간의 연계, 지하공간의 상업화 비중으로 연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도시철도 역사 및 시설물에 대한 소방안전의 정기점검 및 보수, 유지관리 철저 등의 관리지침 및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권의 체계화 필요

□ 민간유치사업에 대한 사업방식 및 지역사회 파급 효과 검토

- 기존의 민간투자 방식은 향후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민자 유치시, 사업방식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
- 수익성 위주의 대형시설 건립 시, 지역 소규모 상권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검토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 필요

□ 각 역사별 지역사회 및 문화단체와 긴밀한 네트워크 필요

-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도시철도를 위해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발굴과 지역민의 참여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역사 인근 문화단체의 참여와 활용을 통하여 역사의 문화공간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정보 전달 매체로서 활용

□ 지하공간 광고물 관리 기준 및 매뉴얼 필요

- 위험 노출에 취약한 지하공간의 경우, 체계화된 정보전달 시스템 중요
- 지하공간의 정보전달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지하 광고물의 설치를 제어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는 규정 마련 필요

10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대책 강화

실·국	관련사업 등
소방본부	취약대상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1. 개요

□ 소방관서(소방본부) 행정력 대형건물 집중

- 소방행정이 소방점검대상 또는 대형 소방대상물에 집중됨으로써 (노후) 주택을 비롯한 쪽방형 여인숙 등 점검 제외 대상의 화재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는 상태임
- 소수의 사적 공간인 주택 등은 대상면적이 적고 단위 화재 등 인명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소방안전의 적극적인 주목을 받지 못함
 - 그러나 부산시 화재통계를 보면,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의 31%, 인명 피해의 56%를 차지하고 있음('09년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참조)
- 특히 고지대 노후 목조건물과 소규모 숙박시설(400㎡)을 비롯한 소방점검 제외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이나 안전지원 등이 전혀 없어 실질적인 소방행정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2. 문제점

□ 쪽방형 여인숙의 실태 : 〈부산시 관리카드〉 98개소 분석 결과

- 쪽방형 여인숙은 시설이 노후하고 거주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소방 시설 미비, 화재 시 진압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임시 주거형태로 정착한 면이 있음
- 거주자(투숙자) : 관리대상 98개소 중 장기거주자가 투숙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85%(83개소)이며, 장기거주자 대부분은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음
 - 사실상 빈곤층의 공동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50대이상의 고령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일부 장애인 거주(숙박료는 일(월)세 형태)

- 거주환경 : 건립연대가 30년 이상 경과된 곳이 70%로서 대부분 노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규모 역시 1.5평 이하가 61%를 차지하고 있음
- 소방시설 : 소방시설이 전무한 곳이 5%(5개소), 소화기만 설치된 곳이 전체의 49%(48개소)이며,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곳도 16%(16개소)임
- 지역별 분포 현황 : 동구, 진구, 사상구, 서구 등 4개구에 80%(78개소)집중
- 특수차량 진입 : 펌프차, 고가·굴절차 모두 가능한 경우는 5%에 불과함
- 그 외, 난방용 보일러 및 LPG의 사용, 불법증축과 무허가(가연성 재료 사용), 화재 시 연소 확대의 우려가 높은 건축 구조, 여인숙 내에서 휴대용 버너, 전기장판 사용등이 화재 위험으로 존재

□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사업에만 의존하는 소방사각지대

-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사업이 저소득층 주택에 최소한의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취급
 - 3년간 보급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사항을 살펴보면, '08년도 1,000개(1,500만원), '09년도 6,666개(1억원), '10년도 18,334세대 보급(예정 275,000원)
-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실제 작동 여부와 실효성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위한 피난대책 필요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소방안전 사각지대의 실태 파악 및 안전대책 수립

- 화재취약지구 지구단위 소방대책의 효용성 및 소규모 숙박시설(쪽방), 고지대 노후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에 대한 화재안전 관리카드의 정비 및 예방대책의 매뉴얼 검토
- 긴급차 통행로 확보 현황 및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 작동 효용성 검토

□ 저소득층 주택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사업 현황 및 실적 검토

- 화재에 취약한 불량목조주택 밀집지역 및 전체 지역 내 보급현황과 실적 검토 필요하며, 보다 효율적인 안전대책 방안 병행 필요

11 주택가 골목길 회복 및 부설주차장 활용도 제고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교통국	그린주차장 확충 사업 보조 등

1. 개요

□ 주거지역의 주차공간 확대에 대한 제고 필요

- 상업지역은 주차상한제 등을 통하여 주차장 설치가 억제되고 있는 반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거지역은 주차장 확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주택가 주변 노외 공영주차장 및 소규모 공동주차장 확충, 주거지전용주차제 시행, 주택가 골목길 「그린주차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

[표] 부산시 주택가 주차장 확보 방안 추진 현황(2010년도 기준)

구분	사 업 명 칭		사 업 내 용	사 업 비
공공 부분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원도심 고지대 산복도로	1,800백만원
	주택가 노외 공영주차장		북구 구포2동 행복마을만들기사업 구역 내	1,317백만원
			서구 아미초교 외 4곳	9,510백만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주택밀집지 주차공간 제공	9,683백만원
	주거지 전용주차제 확충		2010년도 14개구 35개소 700면 계획	-
민간 부분	그린 주차 사업	개별가구사업	주택의 대문(담장)을 개조 또는 주택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 설치	571백만원
		골목단위사업	블록단위(5~30가구) 주택가 골목길 담장 철거 후 여유 공간에 주차장과 녹지를 조성	1,430백만원
		부설주차장개방사업	학교, 아파트, 건축물 부설주차장 최소 10면 이상	800백만원

자료 : 교통국 예산집행상황(10.2.17) 재정리

2. 문제점

□ 골목길을 잃어버린 주택가, 보행환경 위협

- 주택가 골목의 차량 범람으로 어린이와 노약자를 비롯한 보행자들은 항상 보행환경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골목길은 위험한 공간이 되었음
- 주차는 기본적으로 건물 대지 내 또는 주차장 안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여 도로기능 회복과 보행공간 확보 필요

□ 주택가 주차공간 확대의 한계 및 부작용 발생

- 주택가의 불법주차와 보행 및 주거환경의 악화 해소를 위하여 노외 공영 주차장/소규모 공동주차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차장 부지의 확보 곤란, 사업비 과다 등으로 주차공간 확충에 한계 나타남
- 거주자우선주차제 역시 홍보부족과 비효율적인 운용 방식, 관리주체 관련 민원, 주차면의 잦은 폐지, 보행공간 침해, 주차면 운용수입의 비효율적 집행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음(이금도, 2009 의정지원 레포트 「부산시 주거지전용주차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참조)
-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운동’은 기본적으로 차량을 소유할 경우, 자기 집안으로 들여보내려는 취지이나 지원자 부족 또는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움
- 그린파킹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정착 이후의 추진단계로 볼 수 있으며, 골목단위 사업의 친환경주차(Green Parking)사업이나 개별가구사업의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효율성을 거두기가 어렵고 주민동의 및 부지확보 등 어려움이 많아 추진실적이 미미한 편임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주차정책의 전환으로 골목길의 생활상 및 공동체의식 회복 필요

- 일정 부문 시민 모두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주차장 확보 정책은 제고될 필요가 있음
- 주택가의 골목길 생활상을 지키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설 주차장 활용 등 다양한 정책 방안 마련 필요

□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건전한 정착 필요

- 차고증명제의 시행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차선택으로 현재 시행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건전한 정착이 필요

-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후, 담장을 허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이나 블록 단위의 ‘그린파킹 사업’ 등이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린파킹 주차사업과 함께 생활도로 정비, 전선 지중화사업, 방법용 CCTV, 대문·담장 헐기 및 녹지공간 확보 등이 함께 추진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운용 및 노외주차장 사업이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혼용,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음

□ 건물 부설 주차장의 적극적인 활용도 제고

- 주택가 공영주차장은 활용도가 높은 반면, 주차장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부문을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 방안의 병행 필요
- 이미 조성되어 있는 건물 부설주차장의 적극적인 활용도 제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손사래’(국제신문 ’10.06.04) : 부산시 예산 10억 확보 후 추진 / 종교시설 빼면 신청 거의 없어 / 수업방해 · 시설물 관리에 발 빼
- 신규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 못지않게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공기관 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김성국 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 100만대 시대의 주차문제 대응방안』 2004)
 - 기존 주택가 주차공간의 절대적 과부족 현상에도 불구하고 건물 부설 주차장은 야간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제도 정비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개방을 유도하는 등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제고할 필요 있음
 - 시설주가 개방의사를 밝히면, 자치구 차원에서 홍보, 배정, 관리를 주도하며, 사업비 지원(시설보수 및 개선공사비 보조), 수익금 시설주 귀속 외, 교통유발배당금 감면 등의 조치도 검토 필요

12 문화재(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의 문화경쟁력 제고

실·국	관련사업 등
문화체육관광국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

1. 개요

□ 문화재 정책은 역사·문화도시의 평가 척도

- 문화재는 사회자원으로서 역사·문화도시의 평가척도가 되며, 관광자원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현재 시역 내에는 총 276점의 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52점, 시지정문화재 163점, 문화재자료 51점, 등록문화재 10점) 존재

[표] 부산시 문화재 현황

계	국가지정문화재(52)						시지정문화재(163)				문화재 자 료	등 록 문화재
	국보	보물	사적	천 연 기념물	명승	중요무형 문화재	유 형 문화재	무 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자료		
278	6	28	4	7	2	5	96	15	48	6	51	10

자료 : 문화체육관광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10.1.25)

□ 부산시의 유·무형문화재 정비 및 복원, 지원 현황

- 현재 시의 문화재 관련 사업으로는 유형문화재 정비 및 복원, 무형문화재 /민속예술행사 지원, 향토사 기록정리 등이 추진되고 있음
- 금정산성, 기장읍성의 정비 및 복원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부산시의 문화재 및 향토사 관련 사업('10년 기준)

구 분	사 업 내 용		예 산	비 고
유형문화재 정비 및 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금정산성 등 10개소	64억	
	시 지정문화재 보수	기장읍성 등 14개소	29억	
	전통사찰 보수	장안사 등 5개소	8억	
무형문화재 민속예술 행사지원	지역행사지원	4개 행사(5회)	122백만원(시비)	
	전국행사지원	2개 행사	41백만원(국8+시33)	
	야외상설 전통문화공연	2개 행사	256백만원	
향 토 사 기록정리	디지털 부산역사문화대전 편찬('10~'14년)		부산의 콘텐츠 개발	
	『항도부산』 『부산사료총서』 『부산의 자연마을』 발간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 수집 학술용역			

자료 : 문화체육관광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10.1.25) 재정리

□ 지역 문화유산(조선통신사) 관련 대표 축제

- 2002년 발족한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10년 문화재단으로 흡수)를 중심으로 학술사업, 홍보사업, 연고도시 행사 등 한일간 다양한 교류사업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음(사업비 900백만원(시 300, 일본250, 기타350))

2. 문제점

□ 지역 문화재 특성상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형문화재 빈약

- 잦은 외침과 관리부족으로 한옥 등 전통적인 문화를 반영한 유형문화재 관련 자원이 서울, 경주, 안동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범어사, 금정산성 등 현존하는 유형문화재 역시 도심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객사, 향교, 비석 등은 산발적으로 존재하며, 역사자원을 테마화할 수 있는 여건과 근거가 부족

□ 무관심과 체계적 전승 시스템 부족으로 무형문화재 변형·단절 위험

- 무형문화재는 그 대상의 형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기능과 예능에 의해 전승되며, 급변하는 사회적·문화적 환경의 노출에 상대적으로 쉽게 변형되거나 단절되어 사라져 가는 경우가 많음
- 시역 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3곳 운영되고 있으나 영세한 소규모 시설로서 운영 및 시설 부족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한 문화거점 공간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환경임

[표] 부산시 소재 전수교육관과 입주단체 현황

전수관명	주 소	입주단체	개관일	규 모	부지(평)	연건평
부산민속예술관	동래구 온천동 산13-3	동래야류(중무18) 동래학춤(지무3) 동래지신밧기(지무4) 동래고무(지무10) 가야금산조(지무8)	1974. 6	지하1층 지상2층 (1동)	986 (3,264㎡)	218 (722㎡)
수영민속예술관	수영구 수영동 229-1	수영야류(중무43) 좌수영어방놀이(중무62) 수영농청놀이(지무2호)	1974. 7	지하1층 지상1층 (2동)	1,523 (5,041㎡)	158 (동별79평) (523㎡)
구덕민속예술관	서구 서대신 3가 산2-3	부산농악(지무6) 구덕망개터다지기(지무11)	1991. 3	지하1층 지상1층 (1동)	790 (2,615㎡)	209.6 (694㎡)

자료 : 문화재청('09.12)

□ 예비문화재 성격을 띄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관리 부족

- 개항을 기점으로 시작된 부산의 근대문화유산은 근대사의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자 부산이라는 도시공간의 역사적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
- 근대유산은 건립주체가 대부분 일본인이라는 논란과 함께 일제강점기의 잔재, 역사가 짧고 희소성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 노후화, 훼손, 철거됨
- 최근 문화재청과 부산시에서도 근대문화유산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하지만 대부분 관리 사각지대에서 소멸되고 있는 상황임

□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재(문화유산) 활용 정책 부재

- 매년 재정 부족으로 문화재 예산은 시급성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으며, 개별적 사안별로 문화재 정책이 수립·시행됨으로써 정책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업동력이나 파급효과가 미미함
- 부족한 예산에 맞추어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개별 문화유산에 대해 정비와 보수 차원에서 문화재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시대별, 성격별로 묶어 테마화하고 권역화하는 체계적인 작업 부족
- 오랜 역사가 아닌 50년~100년의 역사만으로도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상품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의지 부족
 - 정부 ‘한옥 활성화정책’ 활용, 국비지원 및 지역 개발 방안으로 이용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지역 내 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유산의 중장기적 활용계획 수립 필요

- 시대별(개항 이전의 부산, 개항기의 부산, 산업발전기의 부산, 오늘의 부산, 내일의 부산 등)로 문화유산을 묶어 지역별 향토사를 복원(인위적 조성 포함)하고 도시의 역사를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작업 필요
- 역사의 층위 구분에 따른 5개 시립박물관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역사관 · 전시관 등의 건립도 이러한 전략적 정책 속에서 추진될 필요 있음
-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맥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공으로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사업 시 문화유산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문화유산의 컨테츠화 및 적극적인 문화상품화 방안 모색 필요

- 도시의 역사·상·정체성 회복 및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적극적인 복원, 인위적 조성도 필요함
 - － 권역별·테마별·일정별 문화유산 관람지도를 쉽게 제작, 관광코스 개발 (네트워킹화), 문화재 관련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등 지역특화 추구
-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국가사업으로 확대 또는 정책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도모하여 문화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 부산에만 있는 금정산성(국방), 조선통신사(문화교류), 초량왜관 등

□ 문화재가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식전환과 제도보완 필요

- 대체로 문화재는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사유재산 행사나 지역개발에 장애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지나친 규제 및 부작용 등을 점검하여 조례개정 및 대정부 건의 등이 필요하며,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적용의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음(문화재 보존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때 더 큰 의미)

□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보존·전승 방안 마련 필요

- 국가지정의 중요무형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전승지원금, 행사지원비 등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보존·전승에는 한계가 있음
- 현 제도 하에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지자체는 이중 지원을 할 수 없으나 사각지대에 있는 부문의 발굴과 측면지원 필요
 - －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자가 국가/기관의 전승지원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찾아가는 공연 등을 통하여 스스로 활성화 방안과 재정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필요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및 건립 부지 지원
 - － 무형문화재가 원형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전승·보존을 위해서는 전수교육관의 확보 및 활성화방안 필요(전용 전수교육관 건립부지 지원)
 -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지역문화 거점 활용 방안 마련 필요

해 양 항 만

1. 부산시의 해양·항만정책 수립 한계성 극복	153
2. 해양·항만행정 기관과의 협력 강화	156
3. 해양도시에 걸맞은 해양산업 육성	158
4. 부산국제해운거래소의 특화 전략 수립	160
5. 센트럴베이사업의 효과 극대화	162
6. 신항관할권 분쟁 해결	164
7. 북극항로 개설을 활용한 부산항 입지 강화	166
8. 어항정비와 마리나개발의 해양관광 자원화	168
9. 여수엑스포 연계 부산관광 홍보 방안	170
10. 해양레포츠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172

1 부산시의 해양·항만정책 수립 한계성 극복

실·국	관련사업 등
해양농수산국	-

1. 개요

□ 국가소유의 항만 개발 체제

- 항만은 국가소유의 기간시설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부산항만공사에 의하여 계획되고 개발되는 현실임

□ 기관별 해양·항만업무 권한 배정

- 해양·항만 계획 및 개발에 대한 권한이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부산항만공사에 모두 있어 부산시의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지만 해양과 항만도 부산시의 일부이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모두 국가에 맡기기만 하는 자세는 개선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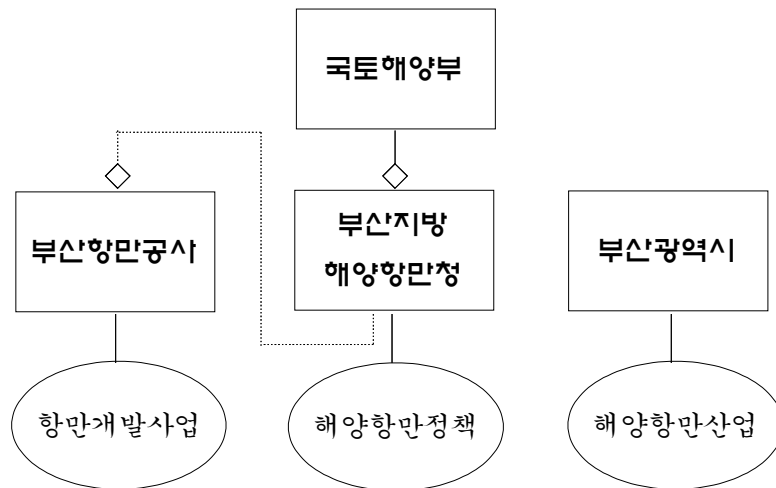
[표] 기관별 해양·항만 권한 및 역할

기관	권한 및 역할
부산지방해양항만청	- 해상운송사업, 선박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선원근로감독 등 선원관련 업무 - 항만운영 및 연안역관리 - 전산기기 운영·관리와 전산업무 개발 - 항만건설공사 및 항만시설 유지·보수 - 항로표지시설 설치·유지 및 보수 - 공유수면 관리·매립 및 연안관리에 관한 사항 -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항만재개발에 관한 사항
부산항만공사	-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 항만의 경비·보안·화물관리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 복합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위탁받은 사업 -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 항만구역 외의 근린생활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 부산항만공사 운영 지원 - 부산항 홍보

2. 문제점

□ 부산시의 부산항 계획 및 개발권 부재

- 항만시설이 국가기간시설로 정의됨에 따라 부산시가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항만이 국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특성에 맞게 항만을 개발하고 육성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항만공사는 독자 기구이지만 국토해양부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산하 기관으로 여기고 있음
- 부산시의 해양농수산물국은 ‘해양항만정책과’, ‘항만개발과’, ‘수산정책과’, ‘수산진흥과’ 및 ‘농축산유통과’를 보유하고 있지만 해양·항만에 관련된 계획 수립은 전혀 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해서는 해양·항만산업의 육성 및 지원만 가능한 현실임



[그림] 해양·항만 주체 구조도

□ 부산시의 항만에 대한 투자 및 운영 마인드 부재

- 부산시는 항만개발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국가에 있다는 이유로 도시의 일부분인 항만과 해양에 대한 정책수립마저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부산시의 해양·항만분야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담당국(인천시 항만공항 물류국 v.s. 부산시 해양농수산물국)의 예산을 비교해도 알 수 있음

[표] 부산시와 인천시의 해양담당국 예산비교

	2008년	2009년	2010년
인천광역시	936억원	971억원	1,144억원
부산광역시	1,137억원	936억원	955억원

* 인천광역시 유가 보조금은 제외

- 또한 부산시는 부산항만공사가 계획 중인 항만에 대한 투자가 전무하여 항만개발 및 운영에 대한 부산시의 의견을 전달할 권한을 확보하지 못함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해양·항만 정책의 부산시 주도 촉구

- 무역항, 레저항 및 어항의 관점에서 부산항을 관리하고 발전시킬 정책을 부산시가 만들어가야 함
- 무역항인 부산북항과 신항의 역할을 정립하고 향후 발전시킬 계획을 부산시 주도로 해가야 함
- 센트럴베이(부산북항재개발)사업과 향후 추가될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도 국가적 관점이 아닌 도시의 계획차원에서 정책을 선도해야 함

□ 부산항만공사 추진 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투자 촉구

- 수익이 높은 항만개발사업에 대하여 부산시도 투자를 하여 부산항만공사의 일방적 항만개발 방식에 변화를 주고 수익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해외 선진항만에서도 국가와 항만공사 및 지자체의 항만에 투자비율이 일정하게 분배된 것처럼 부산도 이를 대비하여 항만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해 놓아야 함

2 해양·항만행정 기관과의 협력 강화

실·국	관련사업 등
해양농수산물국	해양항만행정협의회 운영

1. 개요

□ 부산항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제 지속

- 부산항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부산항만 공사와의 지속적·유기적 협조 체제 마련해야 함
- 연2회 개최되는 ‘해양항만행정협의회(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만공사 부산광역시)’를 부산항 해양항만정책 수립의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가야 함

□ 부산항만공사 시세감면

-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 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 출자로 인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선박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부산시가 부산항만공사에 시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활용하여 해양·항만 정책에 적극 개입해야 함

2. 문제점

□ 항만공사법의 부산시 참여 제한

- ‘항만공사법’ 제5조제2항에 의하면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 15명 중 5명은 부산시 추천자, 2명은 경남도 추천자, 나머지 8명은 국토해양부 추천자로 되어 있음
- 항만공사법 개정을 통한 부산시의 부산항만공사 경영 참여 방안을 확대 해야 함

□ 부산시의 해양항만에 대한 의견 제시 구조 부재

- 부산항이 도시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도시계획과 항만계획은 분리되어 논의되었음

□ 부산항만공사 시세 감면액 증가

- 부산시는 2004년 1월 부산항만공사의 출범이후로 매년 시세감면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신항 개장에 따라 지방세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부산항에 대한 부산시의 역할 증가 토대 마련

- 부산시는 ‘해양항만행정협의회’를 이용하여 부산북항재개발사업에 부산원도심개발 계획반영과 부산시의 해양관광 활성화 시책 마련 시 국토해양부와의 의견 조율 효율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함
- 협의회의 정례화로 인하여 부산시의 해양항만에 관한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국가 해양항만정책 수립시 부산시의 역할 증대가 기대됨

□ 해양산업육성에 필요한 국가자금 확보 통로로 활용

- 부산광역시 해양산업육성 조례에 의하여 지원될 인력양성 및 기업지원에 대한 필요한 예산 확보에 국가자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활용

□ 부산광역시의 해양수산정책 수립 능력 강화

- 부산광역시 내에 前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함
- 부산시의 해양농수산물국을 해양수산에 특화된 해양수산물국으로 변경이 필요함
- 현재 부산시의 해양분야는 해양항만과 34명의 인원으로 부산항 홍보 및 부산항만공사 업무 지원만 수행하고 있음

3 해양도시에 걸맞은 해양산업 육성

실·국	관련사업 등
해양농수산물국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

1. 개요

□ 해양·항만도시의 재화 창출 필요

- 부산은 세계5위 컨테이너 항만이지만 이로 인하여 부산시가 얻는 실질적인 이익은 미미한 실정임
- 부산항으로 인하여 부산이 얻는 이득은 부두근로 인력의 일자리 창출과 소액의 지방세수 확보 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산은 해양·항만도시임을 적극 활용한 재화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부산의 핵심전략산업인 해양산업의 육성 필요

-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세계적 브랜드와 경쟁력을 갖춘 해양산업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해양산업”을 부산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하였음
-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를 2009.9.16 제정하여 시행 중임

2. 문제점

□ 해양산업의 정의 및 범위의 불명확

- 현재 표준산업분류에는 “해양산업”이라는 것이 없고, 해양산업의 범위를 지정하더라도 너무 광범위하여 전체 산업의 1/5~1/4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됨
- 너무 넓은 범위의 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판단이 어렵고, 많은 재정에 대한 확보가 필요함
- 현재 부산시의 산업관련 업무는 경제산업실 소관인데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는 해양농수산물국 해양정책과에서 시행함으로 인해 부서간의 업무 중복이 우려됨

□ 부산시 소재 해양산업의 기초데이터 부족

- 부산지역에서 해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실태파악은 최근의 자료가 2002년도일 정도로 부산시의 해양산업에 대한 기초조사가 부족한 실정임

[표] 부산지역 해양산업 비중 추정치(2002년 기준)

(단위 : 개, 백만원, 명)

4개부문	사업체수	부가가치	종사자수
해운산업	293	141,338	5,315
항만물류산업	12,944	2,472,841	50,549
수산업 및 관련산업	8,593	2,479,022	28,966
조선 및 기타산업	5,732	1,971,872	36,312
합계	27,562	7,065,073	121,142
부산전체	271,686	40,193,358	1,149,164
부산전체대비 해양산업 비중	10.1%	17.5%	10.5%

자료: 해양산업의 분류 및 부산지역 해양산업의 비중 추정(2006), 류수열, 부산발전연구원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실효성 있는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 촉구

- 5년마다 작성되는 ‘부산광역시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이 광범위한 해양산업 전체에 대한 생색내기식의 지원이 아니라 지역총생산에 크게 기여할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 지원하도록 해야 함
- 해양사업육성에 소요되는 재정은 부산시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의 지원도 병행되도록 해야함
- 부산지역 해양산업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개정해가야 함

□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 조정

- 해운·항만물류, 수산, 조선,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 해양환경·방재, 해양관광, 해양스포츠, 해양 정보·금융관련 산업, 해양 및 해양 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한 산업의 해양산업 분야 업무가 4개 실·국 8개과에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한 해양정책과의 역할이 중요함
- 따라서 해양정책과에 해양산업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여 해당 업무를 조정하고 부서간 협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함

4 부산국제해운거래소의 특화 전략 수립

실·국	관련사업 등
해양농수산물 경제산업실	부산국제해운거래소 설립 연구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마스터플랜

1. 개요

□ 사업개요

- 부산국제해운거래소와 강서국제산업물류도시 내 해운 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을 통하여 부산이 세계 해운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함

□ 사업목적

- 추진상황 : 심포지엄 개최('09.1),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완료('09.4), 세부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10.4)
- 향후계획 : 기본계획 수립, 입지선정 및 제도마련, 중앙정부 협의

□ 사업내용

- 세계 해운비즈니스 현황: 선종별 선복량 추이, 세계 해양 및 해운산업 시장규모 등 조사
- 동북아 및 부산의 해운시장 환경 분석: 해운거래 시장현황 및 변화 분석
- 선진 해운비즈니스 클러스터 사례 연구: 해운 비즈니스 클러스터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추진근거

- 해운 비즈니스 클러스터 구축전략 수립 연구용역 및 부산 금융중심지 계획

□ 사업예산

- 1억 9,900만원

2. 문제점

□ 실물거래(선박 및 화물) 기능 부족

- 해운거래소의 기본 기능은 선박과 화물의 현물거래인데,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거래소를 거치지 않더라도 매매가 일어나는 현실을 뛰어 넘을 수 있을지 의문임

- 해운거래소는 최소한 해운시장의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하나 부산의 기업과 연구기관에서는 이 일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실물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금융중개’, ‘해운중재’, ‘해상보험’ 등의 부가적인 사업의 유치도 불가능하므로 실물거래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함

□ 기존 해운거래소와의 차별화 부족

- 세계 선박거래량은 연간 1,500여척(360억 달러)의 60% 거래가 이루어지는 런던의 발틱해운거래소, 세계 최고의 해운 운임파생상품 거래소를 자칭하는 노르웨이 IMAREX와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현실임
- 따라서 부산국제해운거래소는 일본해운집회소와 상해항운교역소처럼 단지 해운정보센터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음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부산국제해운거래소의 해운정보 및 연구기능 강화

- 해운의 기본정보를 수집하고 선박거래 및 화물운임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부산국제해운거래소 내에 강화되어야 함
- 국가 간의 교역량, 세계 정치판도, 세계경기 변화에 따라 민첩하게 해운경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인력, 정보구매력 및 정보가공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선사(해운회사) 및 선주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상품의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금융평가시스템도 구비하여야 함

□ 특정 해운시장 공략 전략

- 부산국제해운거래소가 설립 초기부터 원유, 곡물, LNG, LPG, 컨테이너 선박 및 화물운임 거래를 목표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세계5위 컨테이너항만의 위상과 현실을 활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운임과 선박 거래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거래상품을 확대해가는 전략이 필요함

5 센트럴베이사업의 효과 극대화

실·국	관련사업 등
해양농수산물	센트럴베이사업

1.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시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
- 사업기간 : '05.~'15. / 사업비 : 8조 5,190억원
- 부지조성 : 2조 390억원, 상부시설 : 6조 4,800억원
- 사업범위 : 북항 1~4부두, 연안 및 국제여객부두(1,527천㎡)
- 도입시설 : 친수시설·항만시설·상업·업무 등 복합기능

[표] 2000~2009 단계별 개발계획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개발년도	대체부두	비고
1단계	2, 3, 4부두, 중양부두	'08.~'13.	중양부두 ⇒ 신항 다목적부두	'09. 5.
			3, 4부두 ⇒ 신항 북“컨”부두	'09. 7.
2단계	1부두, 국제 연안여객부두	'14.~'15.	국제, 연안여객부두 ⇒ 1단계 개발지	'13. 말

□ 주요 추진상황

- 재래부두 재개발 연구용역 시행 ('05. 11.)
- 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 확정 ('07. 7.)
 - ▷ 부산광역시의회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가동('07.1.~7.)
- '08.12 :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로 선정(국토해양부)
 - ▷ 정부재정 투자확대(1,000→6,200억원) 및 사업기간 4년 단축(19→15)
- '09.2 : 외곽시설 축조공사 착공(부산지방해양항만청)
- '09.8 : 상부시설 민간사업자 선정(유찰)
- '10.1 : 중양부두 부지조성공사 착공

2. 문제점

□ 국비추가확보 불투명

- 국내 최초의 항만재개발로 정부에서 재정투자 확대(1,000→6,200억원)를 통한 조기시행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전국 항만재개발(10곳)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재정투자 확대가 불투명한 상황임

□ 공공성과 민간투자 사업성 사이의 갈등

- 기존 개발계획상 복합도심지구에만 허용되어 있는 주거지 비율이 개발 총면적의 12.4%에 불과하여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개발업체의 주장과 주거비율이 40% 이상 되면 공공성 훼손이 불가피하여 해운대 센텀 시티와 같은 전철을 났을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이 상충됨

□ 사업의 부산광역시 주도권 부재

- 부산북항재개발의 주체는 부산항만공사이고 국토해양부의 승인 하에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로 인하여 부산시의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조화롭게 수행할 수 없는 현실임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에 맞는 정부지원 요청

- 센트럴베이의 처분 가능 면적이 약 23%에 불과하여 사업성이 부족하고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되는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액이 6,200억원으로 확대되도록 해야함
- 이를 위하여 부산시, 부산지방해항청, BPA,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함

□ 부산광역시 차원의 센트럴베이 사업 효과 극대화 방안 강구

- 현대적 감각으로 디자인되는 북항재개발지구와 부산의 원도심인 중구의 역사성의 조화로 특화된 관광지를 조성하고, 크루즈터미널의 배후지역으로 관광객을 흡수하여 쇼핑 및 먹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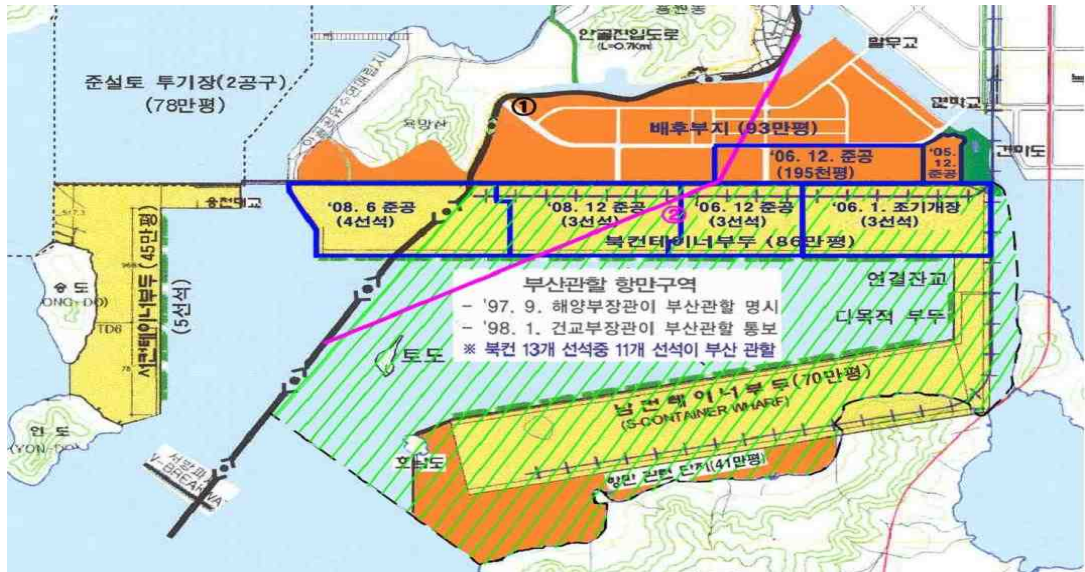
6 신항관할권 분쟁 해결

실·국	관련사업 등
행정자치국	-

1. 개요

□ 신항 명칭 및 관할권 분쟁

-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신항의 명칭과 관련하여 오랜 다툼 끝에 국문 표기는 ‘신항’, 영문은 ‘Busan New Port’로 결정하였음
- 국토해양부는 2005년 개장한 신항 1-1단계 6선석의 임시관할권을 3선석은 부산시로, 3선석은 경상남도로 지정함에 따라 경상남도는 신항 북측컨테이너 터미널 전체의 관할권이 경남에 있다며 부산시와 정부를 상대로 헌법 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
- 경상남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생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면 북컨테이너부두의 일부분과 서컨테이너부두 전부가 경상남도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림] 해상경계선

□ 신항 개발 현황 및 관할권 배정상황

- 신항 컨테이너 부두 30개 선석을 ‘15년까지 단계별로 건설 예정
 - － 북「컨」 1-1단계 3선석 및 배후부지 512,000m²(‘06.12): 부산광역시 관할
 - － 북「컨」 1-1단계 3선석 및 배후부지 127,000m²(‘06.12): 경상남도 관할
 - － 북「컨」 1-2단계 3선석(‘09.5), 북「컨」 2-1단계 4선석(‘08.12), 남「컨」 2-2단계 4선석(‘09.9): 무적상태

2. 문제점

□ 부산항 입지의 타격

- 신항은 부산항의 성장으로 인하여 넘쳐나는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가덕도와 진해의 일부를 매립하여 만든 것으로 부산항과 동일한 항만임
- 그러나 경상남도가 자신의 땅과 인접하여 있다고 하여 신항의 명칭에서부터 관할권까지 주장함으로 외국선사와 항만운영사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 신항 운영의 이원화

- 신항의 관할권이 부산과 경남에 분할될 경우, 부산항만정책이 부산시와 경상남도에 의하여 각각 수립되고 신항과 부산항이 경쟁적 체제로 운영될 수 있음
- 선진항만의 사례를 참고하면 부산항만공사도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여 운영될 것인데, 이때에도 부산과 경남의 의견마찰의 소지를 남기게 됨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신항 관할권 분쟁 승소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 촉구

- 신항의 관할권은 부산항 전체의 경쟁력과 관련된 부분임을 강조하여 국가를 설득시키고 정치권의 역량까지 동원하여 부산시로 관할권이 넘어오게 해야 함
- 신항 배후부지에 입주한 물류업체들의 지방세수도 부산시에 큰 보탬이 되므로 부산시는 반드시 관할권분쟁에서 승소하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함
- 매립으로 인하여 진해어민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 주고, 웅동일원의 레저관광 단지에 대한 국가적 혜택을 주도록 하면서 신항의 관할권을 확보해야 함

7 북극항로 개설을 활용한 부산항 입지 강화

실·국	관련사업 등
해양농수산국 도시재생본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

1. 개요

□ 필요성

- 인도양 항로를 이용할 경우 부산에서 로테르담 간 거리가 2만 100km임에 반하여 북극해 항로는 1만 2천7백km임
- 북극항로가 개설되면 부산항은 싱가포르에 비해 적당 연간 약 1,22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홍콩출발 선박에 비해서도 연간 약 120억원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북극항로 개설에 따른 최대 수혜지역은 부산이 될 것이므로 부산은 북극항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에 맞는 해양항만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함

□ 항로 현황

- 점차 줄어드는 빙하로 현재도 한해 20~30척의 선박이 북극항로를 이용중이고, 북극의 빙하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2037년부터는 미국의 알래스카와 러시아 사이의 북서 통항로로 연중 가능하게 됨
- 2008년 8월 사상 처음으로 지구의 북서와 북동 대륙을 바로 연결하는 북극 바닷길이 열려 2009년 7월 23일 건설자재를 싣고 울산항을 떠난 독일 선박이 9월 7일 북극해 항구도시 로테르담항에 도착함

2. 문제점

□ 북극항로 연구 인력 및 기관 부재

- 북극항로의 이용은 북극해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국가간 협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연구기관과 인력이 부산에는 없음
- 남극과 북극의 기후·생명·자원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남극 세종과학기지와 북극 다산과학기지도 운영하는 극지연구소는 인천에 소재를 둬

-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르면 한국해양연구원 본원만 부산으로 이전하고 부속연구기관인 극지연구소는 인천에 그대로 남기로 함

□ 북극항로시대에 맞는 부산항 정책 부재

- 부산항만개발에 관한 권한이 부산항만공사와 국토해양부에 있는 현실에 막혀 북극항로시대에 맞는 부산항 활성화 정책이 없음
-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여 정부의 신항의 개발규모 축소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함
- 2037년부터 북극항로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통되므로 시간적 여유가 많다는 안이한 사고에 의한 정책 부재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극지연구소의 부산 이전 추진

- 한국해양연구원을 비롯한 4개 해양관련연구기관이 동삼혁신지구로 이전하여 해양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되는데 한국해양연구원의 부속연구소인 극지연구소(인천 소재)도 부산으로 오게 추진해야 함
- 극지연구소는 한국해양연구원의 작은 부속연구소이지만 극지(남극과 북극)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해양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연구기관이며 북극항로 개설과 이용에 필수적인 기관임

□ 북극항로 연구기능 강화

- 북극항로 통행에 적합하고 안전한 선박을 개발. 전문 인력 양성도 서둘러야 하며, 북극 해변 자원 조사문제도 본격 추진해야 하며 북극관련 정책을 주도해야 함
- 부산항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북극 항로의 허브로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산항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야 함
- 현재 부산 신항 개발 규모를 줄이려는 국가계획의 변경을 적극 막고, 부산항만공사의 러시아 진출을 독려하고 블라디보스톡항 및 보스토치니항과의 피드선 운항 정기화 등을 이루어가야 함

8 어항정비와 마리나개발의 해양관광 자원화

실·국	관련사업 등
해양농수산물 문화체육관광국	해양관광 복합형 어항육성 마리나 개발

1. 개요

□ 어항시설 개·보수 사업

- 사업개요 : 지방어항 13개소, 물양장 등 개·보수 1.62km, 65억원(시비)
- 추진상황 : '09년까지 방파제 물양장 등 1.49km 정비
- 2010계획 : 두호항 준설 등 4개소 9억원

□ 남천항 마리나 개발

- 사업개요 : 관리·편의 시설 1,998m², 계류시설 1,040m², 42억원(민자)
- 주요시설 : 요트·보트·수상오토바이 계류장, 장비판매·수리 등
- 추진현황 : 사업추진 확정('09.4),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09.10)
- 2010계획 : 어민 등 이해관계인 동의,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사업착수

□ 백운포 마리나 개발

- 주요시설 : 잔교, 슬립웨어, 클럽하우스, 주차장, 관리동 등
- 추진상황 : 타당성 용역착수('09.11), 마리나항만기본계획 반영('10.1)
- 2010계획 : 기본·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 ※2011년 공사 시행

2. 문제점

□ 해양관광의 개념부족

- 국가의 해양관광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기획·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산하에서 관리되므로 해양관광의 개념 부족함
- 부산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해양관광에 대한 기획과 실행을 함으로 인해 국토해양부와의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음

□ 해양관광 복합형어항 육성 기본계획에서 정체

- 부산의 어항을 관광자원화 하는 차원에서 정비하고,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개발해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2005년 7월에 발표되었으나 이후 이에 대한 진척이 없음
- 정비계획, 실시계획은 예산이 없어서 수립하지 못하고, 부산의 해양관광 업무를 맡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음

□ 어항정비와 마리나개발의 이원화

- 부산은 50개의 어항(국가어항 3, 지방어항 13, 소규모 정주어항 34)이 있고 이들 모두 관광자원화의 가치가 있으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마리나개발은 해양레포츠 인구와 관광객을 유인하는 훌륭한 시설임이 틀림없으나 마리나 시설 주변의 어항과 연계되면 지역의 먹거리와 해안마을 볼거리로 인하여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임
- 그러나 부산시의 해양농수산물국과 문화체육관광국 사이의 협업 부족으로 이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어항의 마리나 시설화

- 부산에 있는 50개의 어항 중에서 몇 곳을 선정하고 여기에 선박의 계류장을 만들고 관광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어항은 공유수면관리법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부산시의 독자적인 행정집행이 가능하므로 더욱 활용가치가 있음

□ 어항의 관광자원화

- 어민들의 어업으로 인한 수익이 줄어들고 있어 어선감척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어촌의 생계를 보장하는 어촌의 관광지화 사업은 충분히 매력적임
- 어항에 유람선과 요트의 계류장을 설치하고 낚시를 위한 데크(Deck)만 조성해도 낚시객과 관광객을 유인하여 어촌에서 운영하는 횃집, 특산물 판매소, 낚시 용품점 등이 활성화 될 수 있음

9 여수엑스포 연계 부산관광 홍보

실·국	관련사업 등
해양농수산국	여수세계박람회연계

1. 개요

□ 2012년 여수 엑스포 개요

- 주제 :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 파생 효과 : 생산유발효과 10조원, 부가가치 창출 4조원, 고용유발 9만명
- 사업비 : 2조 389억원(민간투자 7,107억원 포함)
 - － 시설비 1조 7,310억원, 운영비 3,079억원으로 박람회 유치 당시 계획 규모에 비해 약 22% 증가한 수준
- 엑스포가 개최되는 여수의 역사 및 문화자원이 빈약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한 경상남도는 엑스포와 연계한 사업과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해양수도 부산은 이에 대해 준비가 부족한 실정임

2. 문제점

□ 경상남도에 비해 빈약한 부산시 성과 계획

- 경상남도는 여수엑스포를 통하여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의 주도권과 엑스포 부가 효과를 위해 노력 중임에 비하여 부산의 성과는 미약함
- 경상남도 성과는 다음과 같음
 - － 크루즈선 정박 가능 항만시설 유치
 - － 진주~삼랑진간 경전선 복선전철화사업의 조기 완료(2014년 => 2011년)
 - － 상항(남해)~박람회장, 대도리(하동)~박람회장, 여수~사천~통영~부산시간 연안 여객선 운항
 - － 축제 연계 지원사업으로 통영~여수간 요트대회 확정
 - － 박람회장 1시간 관광권 활성화 사업으로 남해의 스포츠 휴양~해양레저 체험, 하동의 문화관광~섬진강 생태관광 포함

- 남해 성산비란지구 리조트, 남해 스포츠파크 리모델링, 하동 노량 스파 리조트 개발, 하동 대도 해양 종합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혜택 수여
- 사천 비토섬 해양 관광지, 하동 금오산권 해양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포함
- 거북산·관옥선 복원 등 이순신 프로젝트
- 통영의 요트생산단지 조성(요트산업 클러스터)
- 통영항 크루즈 터미널 건립사업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해양관광패키지 개발

- 여수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을 거쳐 부산으로 오는 연안크루즈 상품을 개발하고, 국제크루즈 상품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전남, 여수 및 경남과의 공동으로 기획하여 현재 6개의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외에 추가적인 사업을 기획해야 함

□ 부산시와 여수시의 해양관광 협조 및 홍보

- 여수엑스포 기간에 있는 부산의 주요행사 및 축제의 관광객을 여수 엑스포로 유도하고, 여수엑스포 관람객을 부산시 축제 및 행사에 초대하는 상품을 개발해야 함
-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와 협력하여 방문 예정인 외국인 정보를 입수하여 E-mail로 부산관광을 홍보해야 함

10 해양레포츠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실·국	관련사업 등
문화체육관광국	강 스포츠축제 외

1. 개요

□ 각종 해양스포츠 대회 및 축제

- 부산에서는 매년 여름 해양레포츠 대회 및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이를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해양레포츠 인구의 확산에는 기여하는 부분이 부족한 실정임

[표] 해양레포츠 대회 및 축제

대회 및 축제	장소 및 기간	내용
부산광역시장배 국제서핑대회	해운대해수욕장(6월)	8개 종목, 15개국 600여명 참가
대통령기 부산 전국요트대회	요트경기장·해운대해수욕장(3월)	19개 종목, 300여명 참가
부산컵 및 한중일 주니어요트대회	요트경기장·해운대해수욕장(7월)	부산컵(40여팀, 600여명) 주니어(3개국 50여팀)
세계여자매치레이스 요트대회	해운대해수욕장(10월)	12개국 60여명 참가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해운대해수욕장(7월)	15개국 112여명 참가
BUSAN Marine Sports 2010	4개 해수욕장(8월)	16개 종목 (공식종목 8, 체험종목 8)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해수욕장·요트경기장·낙동강·수영강 등	요트, 조정, 카누, 윈드서핑, 카이트보딩, 래프팅 등
江 스포츠축제	낙동강·수영강(6월/9월)	조장카누대회, 윈드서핑대회, 드래곤보트대회

2. 문제점

□ 부산시민의 낮은 해양레저 인구 비율

- 부산이 해양도시이지만 실제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동호인의 수가 적어 해양레저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 관광객 대상 해양레저 활동 부족

- 여름철에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레포츠가 바나나보트, 패러스키 등에 지나지 않으며, 그 외의 계절에 관광객들이 체험할 해양레저 상품이 없는 실정임

□ 해양스포츠 대회의 관광상품 가치 부족

- 부산에서 개최되는 해양스포츠 대회가 부산시민의 참여도가 낮아 지역의 흥미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음
- 대회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벤트의 기획이 부족하여 호응도가 낮음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부산지역 청소년 시설의 해양레포츠 수련원 특화

- 부산의 청소년들을 어릴 때부터 해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과목에 해양 활동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금련산청소년수련원(광안리),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해운대) 및 함지골청소년수련원(태종대)을 해양레포츠 수련원으로 특화해야 함

□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해양스포츠 대회 기획

- 대회를 해양 스포츠인만의 잔치가 아닌, 일반인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유익함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대회로 기획해야 함
- 해양레포츠 소개 이벤트, 특정 요트의 일반인 공개, 해양스포츠 참가 선수들과의 일반인과의 대화 코너 개설 등을 추가해야 함

□ 일반인 대상 해양레포츠 대회 개발

- 북극곰수영대회 강화, 정기적 바다수영대회 개최, 일반인 비치발리볼대회 등 일반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해양레포츠 대회를 기획하여 관광상품화해야 함

도 시 계 획

1. 창조적 미래전략으로서 2030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 점검 · 177
2.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그린부산 사업 추진의 내실화 180
3.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진단 183
4. 워터프론트 개발·관리지침과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186
5. 세계적인 명품공원으로서 시민공원의 조성 188
6.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효율적 추진 191
7. 천만평 국제산업물류도시의 조성 193
8. 공적 공간(public space)의 활용대책 196
9. 시가화구역내 노후 공업지역의 정비 198
10.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지침 마련 200
11. 실현가능한 도시균형발전 대책의 추진 202
12. 낙동강 살리기와 연계한 도시정비계획의 효율적 추진 205
13. 보행환경개선과 도시녹지(가로수 조성관리) 허와 실 207

1 창조적 미래전략으로서 2030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 점검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개발본부	법정계획수립

1. 개요

□ 과업목적

- 상위계획인 국토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비전을 포함하여 부산 도시지역에 대한 20년 목표연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 2004년 : ‘2020 부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 토지이용, 기반시설, 공원·녹지계획과 함께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 등 급격한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비전으로서 도시기본계획 정비

※ 2030 도시기본계획의 추진목표(부산시 자료)

- 지속가능한 친환경 세계일류 해양녹색도시 구축
-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연계한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설정과 에너지 절약형 복합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도시 재창조
-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감안한 고품격 도시계획 수립
- 낙동강 살리기와 연계한 수변공간 재창출 및 수변경관계획 수립유도
- KTX·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권 개발 및 기본시까지 정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함께 세부적인 용도지역 설정을 위한 재정비계획의 효율적인 설정

□ 과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지정(법정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5년주기 정비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 계획 반영

□ 과업내용

- 목표연도 2030년이며 부산도시계획구역 995.72km²를 대상으로 2011년 완료 예정
 - － 지역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 공간구조, 생활권설정 및 인구배분
 - － 토지이용, 지역개발, 환경보전·관리, 기반시설, 공원·녹지, 경관 계획
 - －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보전, 경제·산업·사회·문화 개발계획
 - － 교통·물류체계, 정보통신, 미관관리, 방재 및 안전 관련 계획
 - － 재정확충 및 재원조달계획과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등 포함

□ 과업예산

- 용역비 : 435백만원

2. 문제점

□ 계획인구와 예측인구의 괴리

- 현재인구(2010년 현재 358만명)의 지속적인 감소추세인 반면, 2030년 목표 연도의 계획인구는 400만명(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410만명)으로 계획, 이에 따른 도시인프라 및 개발사업의 수요추정상 과잉투자 우려

□ 공간구조상 미래지향적 도심권 설정 필요

-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1도심축, 5부도심, 5지역중심에서 변화, 실질적인 2030년의 효율적인 도시공간구조를 도모할 수 있는 계획안의 도출 필요

□ 관련계획과의 연계 및 종합적 접근 필요

- 부산의 최상위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이나, 부산시에서 수립된 많은 부분별 기본계획과 연계 미흡

□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따른 난개발 우려

-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용도지역 정비원칙 배제로 인해 대부분 용도지역 상향조정으로 이어져 난개발 또는 고밀개발 가속화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법적 절차로서 시의회 상임위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 대응 등 지속적 관리필요
 - 법적 절차에 대한 심도있는 대응 및 법적 절차라고 하더라도, 완료단계 이므로 종합적인 검토결과반영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중간 보고 요구
- 지속가능한 계획인구의 추정 절실
 - 사회적 인구의 증가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 기반시설의 과잉투자에 따른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야별 계획 업그레이드 및 계획인구의 반영에 따른 문제점을 다각도로 점검
 - 2030년 부산의 정주환경을 고려한 적정 계획인구의 설정 절실
- 종합계획으로서 부문별 계획의 종합적·유기적 연계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확인
 - 도시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 도시정비계획, 재정비촉진계획, 산업입지계획, 관광종합계획 등의 분야별 계획을 총 망라하여 도시공간상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계 필요
 - 방재계획, U-city 계획, 경관계획, 녹지계획 등 부문별 계획에 대한 장기비전의 점검
- 누적한 도시문제의 장기적 해소 및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 유도
 - 20년 후 장기플랜으로서 도시미래비전에 적합한 도시공간구조의 산정 유도
 - 토지이용계획의 반영에 따른 나홀로 공업지역의 정비 등에 대한 점검

2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그린부산 사업 추진의 내실화

실·국	관련사업 등
환경녹지국	법정계획수립

1. 개요

□ 과업목적

- 경제적 윤택과 쾌적한 도시환경 등에 대한 시민의 요구·관심의 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세계도시로서 부산의 위상확립을 위해 도시녹화, 공원녹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비전제시 필요
- 부산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보전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장기적 계획을 수립
- 최근 ‘그린정책’의 중요성과 관심이 강조되면서 부산의 그린부산선언과 그린웨이는 그간 친환경정책이 규제적이었던 것에 비해 ‘생활’속으로 파고 들어 시민이 직접 환경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추진

□ 과업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 2009년 7월 ‘그린부산 선언’ 이후 도시녹화사업에 대한 예산·정책 강화

□ 과업내용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 설정
- 도시전체에 대한 공원녹지의 축과 네트워킹, 수요·공급 등에 대한 사항
- 공원녹지의 미래여건 변화에 관한 대응과 보전, 관리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 등

□ 사업예산

-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비 : 10억원
 - － 공원녹지기본계획 외에 도시림조성·관리계획 및 화전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 포함

2. 문제점

□ 신규공원 및 신규녹지 중심의 정책방향

- 공원시설 노후화, 공원컨셉의 업그레이드 미흡 및 대체공원으로서 도시녹지에 대한 정비계획 소홀
- 도시녹지 및 공원에 대한 조성사업 완료 후 지속적인 시설관리가 미흡하고 특히 시민참여 등의 운영 프로그램 부족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의 과다

- 과다한 사유지 대책 미흡하고 1944년 시설결정된 미집행 공원도 있는 반면 2008년 이후에도 계속 신규공원 지정하여 실질적 공원조성 저조

□ 지역성 반영 미흡 및 관련계획과 연계 부족한 도시녹화 정책

- 도시녹화의 기본이 되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종선정 기준이 명확치 않고 보행환경, 도로환경, 가로시설물, 건축환경 등의 관련계획과 연계성 미비

□ 부산의 그린웨이 추진계획상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매우 부족함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의 정책반영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

- 실태조사 및 수요분석, 광역적 네트워크 구축, 공원·녹지의 불균형해소, 시가화구역의 공원·녹지 확충, 접근성 고려한 공원녹지계획 등
- 생활형 도시녹지와 도시공원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 확인

□ 질적 관리 및 평가지표 선정

- 공원·녹지·가로수 등의 기존의 양적 공급정책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하여 녹지정책에 대한 질적 관리 및 정책방향 유도
- 녹피율, 그린웨이 연장, 가로수율 등 녹지정책에 대한 질적 평가지표설정

※녹피율 : 일정한 토지를 덮고 있는 수림지, 농지, 초지, 공원녹지 등의 녹의 점유비율로 보통 백분율(%)로 표시함

□ 부산다움 등 지역성을 반영한 도시공원·녹지 정책 추진

- 그린부산의 정책기조 역시 신규 녹지·길 조성과 더불어 기존 지역문화, 길문화를 찾고 거기에 담긴 스토리텔링을 문화로 승화시킴으로서 길문화에 대한 의미를 부여 필요
- 부산의 대표경관이 해안을 쾌적하게 도보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와 공간으로서 해안 녹지축 조성
- 녹지축은 네트워킹, 즉 연결성이 중요하며 송정~청사포~해운대~수영강변~민락동~광안리~용호만~이기대~신선대~센트럴베이를 잇는 녹지축 조성

□ 시민참여형 공원 조성 및 운영관리에 대한 모델 제시 시급

- 현재 시도중인 거버넌스의 제도 및 운영기법의 정착

3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진단

실·국	관련사업 등
부산도시공사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1. 개요

□ 사업목적

- 부산의 도시쾌적성(amenity)을 향상시켜 경쟁력있는 관광도시 육성하기 위한 2000년 밀레니엄 프로젝트로서 1999년부터 추진계획이 시작됨
- 동남해안 최고의 관광휴양거점 구축 및 해양관광루트의 중심역할 수행
- 동부산 지역의 지리적 여건 최대한 활용, 동남해안 관광의 중심축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건강, 위락, 문화 등의 다양한 시설 집적

□ 사업근거

- 투자자 직접투자, zone별 MD 개발방식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도시개발법, 관광진흥법 등



□ 사업내용

- 부산광역시 기장구 기장읍 대변·시랑리 일원 3,638.310m²(110만평)
- 세계적 수준의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개발로 사업비 4조원(공공기반시설 조성비 포함) 계획
- 주요도입시설
 - 전체 관광단지에 한국형 영화·영상테마파크, 운동·휴양시설, 해양레포츠 시설, 테마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휴양체류시설, 테마상가 등 유치
 - CJ에서 현재 테마파크를 엔터테인먼트존, 키즈존, 미디어존, e-스포츠존, 월드마켓존의 컨셉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사업기간 : 2005~2017년

- 최초 구상발표 1999년 남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의 블루시티에서 출발
- 2004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더불어 2005년 관광단지 지정

□ 사업예산

- 48,272억원(공공 1,542, 민간 46,730 추정) ※기반시설비 지원예산 별도
- 현재 토지보상비로 부산도시공사가 6,000여 억원 투입

2. 문제점

□ 2009년 해양도시위원회의 소위원회 결과 반영 미흡

- 소위원회 운영결과 투자환경, 협상능력, 중복개발, 개발방향 등의 문제점 지적되었으며 일부 시정되었으나 다소 미진한 상태임

[표] 소위원회 운영결과 지적된 문제점

투자환경의 문제점	투자자 중심의 사업추진 미비, 사업성(인센티브) 확보 미비
협상능력의 문제점	MOU 및 실시협약 체결과정상 객관타당한 기본원칙배제, 직접적인 협상능력 부족, 실속없는 M.O.U 체결의 반복
중복개발의 문제점	인근지역의 유사한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점검 미비, 해운대 워터파크 등 주요 개발사업과의 중복성
개발방향의 문제점	관련 용역 남발과 연계성 미비, 용역에 따른 수요예측의 혼선, 개발방향의 혼란, 부산권 관광벨트로서 연계개발방향 전무
담당부서의 문제점	담당부서의 잦은 조직개편, 추진과정의 비공개, 민간기업의 태도가 아닌 행정주의적 사업추진, 업무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조치
사업지연에 대한 문제점	투기 및 난개발 우려, 영상테마파크 시장선점 실기우려, 투자실패 만회를 위한 무리한 추진우려
외자유치신인도추락	영상테마파크 IP의 품질, 영상테마파크 IP의 사용권 및 사용기간, 투자자의 신뢰관계 구축

출처 : 부산시의회(2009),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소위원회, 재정리

□ 부산도시공사가 부담한 토지보상비 원금 및 이자부담의 가중

- 현재까지 지출된 토지보상비는 6000억원이 넘고 총 토지보상비의 80%이상(5천678억9천600만원) 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부채)
- 그간 발행한 공사채 이자만 264억원에 이르고, 총 보상비에 대한 이자부담은 하루에 1억원이상임

- 이자부담 : 연5% 적용시 연간348억원이상(月29억원, 日9천만원이상)
연7% 적용시 연간488억원이상(月41억원, 日1억3천만원이상)

□ 당초 기획된 테마파크 컨셉과의 괴리 및 타지역 개발계획과 중복 콘텐츠 문제

- 역사문화촌, 유니버설 스튜디오, MGM 스튜디오, 한국형 테마파크 등 MOU 등 협상당사자에 따라 테마파크 콘텐츠가 계속적으로 바뀌어 왔음
- 동부산권 관광단지 역시 워터프론트형 관광단지로서 해운대, 태종대, 가덕도, 센트럴베이 등과 중복투자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사업성 확보를 명목으로 과도한 난개발 우려

- 동부산관광단지내 외자유치를 포함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결국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거기능을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에서 추진한 2009년 동부산관광단지 관련 소위원회 제안사항의 이행 여부 철저 감독

- 부산지역내 워터프론트 개발계획과 중복콘텐츠의 정비 및 차별화 유도
- 도시공사의 전문성과 마케팅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
- CJ와 도시공사에서 추진한 마스터플랜의 사업타당성 검토
- 추진과정에서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절차를 이행하는지, 그리고 SPC 설립문제, 민자유치, 그리고 마케팅 등의 중간보고 철저 이행 감독

□ 관광단지로서 주요 기능의 유지와 사업성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의견수렴 필요

- 필요시 의정자문위원에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분석 의뢰 및 철저한 사전 검증을 바탕으로 한 사업추진

□ 이주단지 등 지역주민 대책에 대한 지속적 관심제고

- 이주단지의 주거환경 점검 및 지역주민의 생활근거를 지속하기 위한 동 부산관광단지내 참여방안 검토

4 워터프론트 개발·관리지침과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개발본부	-

1. 개요

□ 과업목적

- 워터프론트가 항만이나 임해공단 건설시 배후도시와의 단순한 완충공간이었으나 친수공간에 대한 요구증대 등으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로 부상하였음
- 부산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으로서 309km에 달하는 ‘해안’과 ‘하안’의 워터프론트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개발방향 설정이 절실함
- 워터프론트에 대하여 기능별 구역설정 통하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나아가 중복개발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부산다움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토지이용·가로망계획과 도시경관 관리 필요

□ 과업내용

- 부산의 워터프론트에 대한 토지이용, 자연·식생, 개발밀도 등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 실시 및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부산의 워터프론트 관리 기본계획(혹은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지침) 수립 유도
- 워터프론트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서부산권 개발사업 전부(가덕도, 경제자유구역, 강서신도시, 국제산업물류도시 등), 센트럴베이사업, 태종대 종합개발사업, 해운대리조트사업, 센텀시티·마린시티, 동부산관광단지 등에 대하여 사업간 유기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특화개발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검토

□ 과업근거 : 자체 점검

2. 문제점

- 309km에 달하는 워터프론트의 토지이용, 자연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부족
 - 현재 부산의 대표적인 지역환경으로서 워터프론트에 대한 토지이용, 자연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지역별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관리됨으로써 워터프론트로서 특화되지 못함
- 워터프론트의 초고층 주거단지화로 인해 워터프론트의 공공성 훼손
 - 최근 워터프론트의 경관적·자산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워터프론트 관리에 대한 원칙없이 무분별하게 초고층 주거단지로 변질
- 워터프론트 관련 개발사업의 콘텐츠 중복 및 지역성 저하 우려
 - 지구단위의 지역개발차원에서 추진되는 경우에도 주상복합, 엔터테인먼트, 해양레저 등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및 해당지역의 특화개발 미흡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워터프론트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
 - 가칭 ‘부산광역시 워터프론트 개발과 관리에 관한 지침’ 수립을 수립
 - 전세계 선진 워터프론트 개발사업 등을 벤치마킹 하여 워터프론트 개발에 대한 50~200m 규모의 완충공간(Buffer zone)의 확보하여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주변지역 토지이용, 부산시 도시공간구조 등을 검토하여 워터프론트별 특화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개발밀도, 가로망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의 구체적인 지침 마련 필요
- 각종 개발사업 가운데 워터프론트에 대한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
 - 센트럴베이사업, 강서권 개발계획, 해운대 일대 개발사업, 동부산 관광단지사업 등 관련 개발계획에 대한 종합 분석 실시
 - 워터프론트의 지역별 개발컨셉을 비롯하여 토지이용, 개발밀도, 경관관리 등에 대하여 차별화 유도

5 세계적인 명품공원으로서 시민공원의 조성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재생본부	시민공원조성사업

1. 개요

□ 사업목적

-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경마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하였으며 당시 부지 형태를 ‘말(馬) 모양’으로 조성하고 2개의 경마트랙이 형성되어 있었음. 이후 6·25 전쟁이후 미군에 의해 군부대로 활용되어 왔으며 2006년 폐쇄되었음
- 2002년 아시안게임 선수촌 아파트 건립후보지였던 캠프 하얏리아를 사업성보다 공공성에 의미를 두어 2005년 시민공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는 부산에서는 도심형의 평지공원으로 가치가 높음
- 세계적인 수준의 도심속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시민공원에 대한 실시설계가 1단계 완료되었으나 2010년 부지를 인수받기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실태조사, 환경오염치유, 설계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함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 사업내용

- 시민공원으로 조성되는 부지는 총 528천㎡이며 현재 공원조성과 함께 정·보통신 인프라·서비스구축, 지하공간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시민공원의 기능 효율화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종합개발을 위해 부암R~진양삼거리~부암역~서면R~삼전R~송공삼거리~정묘사앞~연지초교에 이르는 1,457천㎡에 대하여 주변지역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시민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포함

- 현재 공원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10.1~3), 지장물 철거 및 환경오염 정화 사업('10.2~) 등이 추진중이며 현재 4월24일부터 임시개방중임(~9월말)
- 향후 하얏리아 부지 매매계약('10.6), 명칭제정 및 BI 개발('10.6), 기공식 개최 등이 계획되어 있음

※ 시민공원 조성사업 연혁

- 일제강점기 : 1930년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의 경마장으로 사용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일본군대의 훈련장과 야영지로 사용하였음
- 1945년 해방 이후 : 1945년 해방이후 주한미군기지 사령부가 들어섰으나 1948년 정부수립으로 해체·철수하였음. 미군철수 후 미국 영사관과 유엔 산하기구가 사용하였음
- 1950년 한국전쟁 이후 : 주한미군 부산기지 사령부가 설치된 이후 2006년 8월초순 까지 주한미군의 물자 및 무기보급 관리 등의 역할 수행
- 2006년 8월 : 기지 폐쇄

※ 하얏리아 명칭 유래

- 하얏리아(Hialeah)는 미국 플로리다주(州)에 있는 도시로서, 하얏리아란 이름을 갖게 된 유래는 1950년 9월 주한미군 부산기지 사령부가 주둔하고부터이며, 당시 초대 사령관의 고향인 '베이스 하얏리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하얏리아란 인디언 말로 '아름다운 초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사업예산

- 총 6,010억원으로서 부지매입비 4,875억원, 공원조성비 1,135억원 포함

2. 문제점

- 공원설계(유신 코퍼레이션, 제임스코너)는 시민공원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시급히 추진하여 실태조사없이 추진되어 부지내 존치 식생·지장물에 대한 검토안됨
 - 설계가인 제임스코너 역시 설계변경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음
- 쟁점사항인 환경오염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오염치유방안 모색 곤란하고, 미의 자국내 군부대 오염치유대비 매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
 - 미군과 한국간의 SOFA협정 협의과정에서 '추가부담없이 반환'하기로 해서 오염치유비용을 우리나라/부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선례 남김

□ **조성이후 운영·관리 프로그램 미흡**

- 지금까지 부산의 시민공원 개발은 ‘관주도’로 추진되었고 특히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조성완료 이후 운영 관리에 대한 준비 미흡

□ **시민참여 통로가 제한되어 시민공원으로서 역할 무색**

-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사람’이 빠진 공원계획, 공원조성, 그리고 공원의 운영·관리는 결코 명품공원이 될 수 없음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활용한 공원설계의 업그레이드**

- 하얏리아 공원의 역사·문화적 가치, 그리고 식생에 대해서도 충분히 분석해서 제임스 코너가 설계한 계획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 **시민참여 확대 및 다양한 행사 주최**

- 시민참여의 전제조건이 바로 관련 자료 및 추진과정 투명하게 공개
- 그간 캠프 하얏리아에 관한 역사적 자료 수집, 시민공원 반환과 관련한 문화행사, 대학생·시민 등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 등 추진으로 시민참여

□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및 공원으로서의 접근성 제고**

- 지역숙원인 주변지역의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있어서 건물디자인, 외부에서 공원을 바라보는 조망축, 경관축을 반드시 확보하는 등 엄격관리
- 도심입지인 만큼 서면도심, 어린이대공원(1.5km) 등 주요 지점에서부터 시민공원으로 쾌적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테마거리로 조성

□ **거버넌스 공원으로서 시민 참여와 함께 단계적 개발 추진**

- 현재 시민공원의 임시개방이 끝나는 대로 수년간 공원조성을 위해 폐쇄할 것이 아니라 현 상태에서도 충분히 공원으로서 역할할 수 있으므로 권역구분, 기능정비, 설계 업그레이드 등의 통해 단계별 개발 추진

6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효율적 추진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재생본부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1. 개요

□ 사업목적

- 난개발과 압축성장의 역사·문화적 과제 해결을 시도하고 시민체감형 실용적 정책개발로 취약지역민의 삶의질을 개선하고자 함
- 북항재개발과 연계하여 원도심 기능회복을 통한 지역가치 제고하는 도시 재창조 사업의 일환임

□ 사업내용

- 취약지역을 가장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7대 유형의 컨셉 개발(7대 프로젝트 포함)
- 기본구상 수립 완료(09.8~10.1, BDI 수행)후 마스터플랜 수립중임

[표] 산복도로 르네상스 주요 프로젝트

사업명	개념	주요 구상사업
망양 프로젝트	해안조망관광루트	역사성과 향만 등을 조망하는 전망대 조성 접근성 확보위해 경사지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삭도 등 설치
생태 프로젝트	생태복원	생태네트워크·학교숲·산지생태공원 등 비오톱 조성, 하천생태 복원사업 추진
디자인 프로젝트	생활디자인개선	길풍경 명소화, 생활safe·복지증진사업, 주택장소 가꾸기 및 디자인기부운동 활성화사업
명가(名家) 프로젝트	주거정비	산복도로 주변 노후주택지의 물리적 환경정비, 지역 커뮤니티 유지하는 도시재생 도모
골목길 프로젝트	골목길 재생	안전하고 불편함이 최소화되는 골목길, 스토리텔링과 소통장소로서 골목길 활성화
천마 프로젝트	문화복원	지역고유 문화역사자원·스토리 발굴, 폐공간·공터활용 한 지역 문화공간화사업
아트 프로젝트	창조 커뮤니티	아트 레지던스 기반 마련

출처 : 부산발전연구원(2010), '산복도로 르네상스'내용 정리

2. 문제점

□ 메가프로젝트로 추진되어 사업실현성 저하

- 수정산 35.3km, 봉래산 8.4km, 황령산 6.3km, 금정산 12.6km, 장산 3.5km 등으로 도시재생, 도시재창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메가프로젝트의 성격이 강하며 여타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실현가능성 저하

□ 사업추진에 따른 엄청난 사업비 확보 및 재정계획 미흡

- 결국 민자유치의 방식으로 추진될 우려가 크고, 이 경우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공공성 훼손과 난개발 가능성이 높음

□ 도시재생의 개념이나 지역주민 참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미흡

-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수요조사, 컨셉설정, 참여방안 논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영안됨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도시재생에 관한 지역주민·전문가·행정 등의 공감대 형성

-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목적으로서 도시재생의 추진배경, 추진과정 및 주민참여 등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전설명회, 캠페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감대 형성 전제되어야 함
- 사업계획·실행과정에서 거버넌스 등의 기법을 통해 해당지역의 능동적인 주민참여로 이뤄지도록 다양한 캠페인, 행사 등의 추진
- 현재 진행중인 마스터플랜상 지역주민 의견과 지역주민 참여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 제시 촉구

□ 7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설계의 평가장치 필요

- 7개 프로젝트가 분리되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틀에서 조직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 접근을 위한 평가장치 마련
- 각 부서간 관련 업무의 연계, 7개 프로젝트간 연계, 지역주민과 소통, 북항 재개발사업과 연계 등에 대한 점검

7 천만평 국제산업물류도시의 조성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개발본부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

1. 개요

□ 사업목적

- 낙동강 하구 강서지역 일원 약 33km²(천만평) 부지에 대규모 산업물류용지 공급 및 기업유치로 동남권 경제회생의 거점화 조성

□ 사업근거

- ‘용지수요폭주→공급애로→지가상승→기업역외유출→인구유출→경기침체’의 악순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33km²의 GB 해제
 - － 부산시 추산에 따르면 공장용지가 없어 최근 10년간 부산에서 해외로 이전된 투자건과 금액은 각각 7천230건, 24억6천만달러에 달함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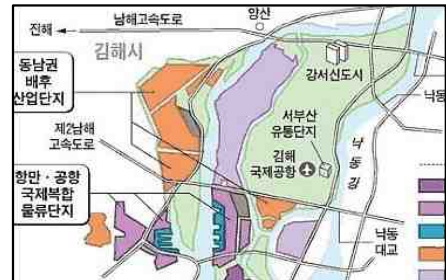
- 광역산업단지(20km²) : 동남권 전략산업, 융합부품·해양복합산업 등
- 복합물류단지(9km²) : 글로벌 조립가공·부품소재 공급기지 등
- 지식창조도시(4km²) : 국제업무, R&D, 교육, 관광, 주거 등

- 1단계 사업(강서구 미음동 일원 5.7km²)

※ GB해제 대상면적 5.4km²

- － 미음산단과 연계하여 부족한 산업·물류용지 우선 공급
- － 동남권 전력산업, 융합부품·해양복합산업, R&D 단지조성

- 도시개념 현상공모 실시(2009.1~7)하여 컨셉반영 및 중심도시 설계참여



※ 당선작 컨셉

- 해양도시, 생태도시, 미래산업도시, 다문화 융합도시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하여 삼각주를 이루었던 강의 이치에 순응하고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 주요 특징

- 서낙동강 수변지역에 주거 및 국제업무시설 배치, 내륙 평강천과 연계하여 물류산업단지 배치
- 물을 이용한 교통체계(화물수송용 운하, 수상버스·택시)
- 둔치도를 탄소 Zero 생태마을 및 생태공원으로 계획

※ 주요 장점

- 대상지의 역사성과 미래 변화에 대한 배려 및 미래 가변성에 대한 유연성, 단계적 개발에 깊은 고려
- 통합집적형 물류교통 개념인 SARR(SEA_AIR_RIVER_RAIL) 연계 체계를 통해 네트워크형 물류체계의 구축
- Green Plain(푸른 평원)의 개념을 도입 생태적 가치와 일상적 가치의 융합 시도하여 22세기형 녹색시스템의 지향

□ 사업예산

- 사업비 : 총 11조원으로 보상 5.5조원, 공사 4.6조원, 기타 0.9조원 포함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70%), 부산도시공사(30%)
 - 자체개발(1단계, 9.65km²) + 국가산단지정 개발(2단계, 23.35km²)
- 사업기간 : 2008~2012년

2. 문제점

□ 투기목적의 토지소유자 관리 곤란 및 원거주민의 생계위협

- 기존 산업단지에서 나타났던 부동산투기의 근절 대책과 원거주민의 생계 대책 마련 부실

□ 부산도시공사 및 LH공사의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비용의 확보 난조 및 민간 투자유치의 불투명

- 도시공사와 LH공사간의 투자비율이 3:7 비율의 분담 적정성 및 착공 지연 문제

- LH공사의 지방투자 전면 배제하여 사업추진 차질 불가피 및 대응 미흡
- 부산도시공사의 경우, 동부산관광단지 등 지방채 과다한 출혈에 가중하여 재정난 우려 심각

□ 세종시 경쟁열위에 따른 지원 대책 미흡

- 수도권과의 입지적 열위 뿐만 아니라 지가, 대기업유치지원책 등에 대한 상대적 발탈감 심화

□ 차별화된 콘텐츠 부족 및 관련사업과 연계검토 미흡

- 인근지역의 유사한 개발사업과 중복투자 우려 및 차별화된 콘텐츠 부족
- 부산시 전체 산업입지와와의 종합적 역할분담 및 상호 연계방안 검토 부족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지역주민의 재정착 방안의 구체화 촉구

- 어업, 농업 등의 생계유지 혹은 산단내 친환경산업의 참여방안 마련

□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중복투자 우려 및 차별화 대책을 위한 종합분석

- 상호 시너지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인근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과의 역할 분담과 연계방안

□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 교통망 등 지속가능한 개발체계 유도

- 국제산업물류단지를 중심으로 배후 물류도로, 철도, 항공, 항만간 연계망 구축 점검
- 난개발 방지와 지속가능한 개발 유도(U-city, Eco-city, Creative city 등)

□ 국가산단 지정 시급 요청

- 정부의 100대 국정사업이자 30대 선도프로젝트인 만큼 국가적·지역적 의미가 크므로 국가경제 우선순위상 국가산단 지정 강력 요구

8 공적 공간(public space)의 활용대책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개발본부 도시재생본부	-

1. 개요

□ 과업목적

-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공간이면서, 공공성이 매우 높지만 정책적으로 관리대상이 아닌 공공성이 높은 공간, 즉 공적 공간(Public Space)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

※ 공적 공간(Public Space) : 공동주택내 조경시설, 광장, 보행공간, 도시계획 시설로서 공공공지, 건물의 공개공지, 골목길, 공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도시 녹지 등 모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할 공간을 총괄

- 동해남부선 폐선구간인 의 경우 대표적인 공적공간으로서 활용대책마련이 절실함. 폐선으로 유휴공간화되는 면적은 철로부지 31만7천200㎡, 철로주변시설녹지부지 12만9천300㎡ 등 44만 6천500㎡에 이름



□ 과업근거

- 자체 검토

□ 과업내용

- 공적 공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공공성과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적 공간에 대한 관리기준 수립
- 공적 공간에 대한 실태 파악과 도시녹화·광장·보행공간의 네트워크 구축

2. 문제점

□ 공적 공간에 대한 인식부족 및 실태 파악 미흡

- 지역개발에 있어서 공공성 인식이 부족하여 공적 공간이 공공과 공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함
- 공적 공간에 대한 기능과 삶의 질 제고에 끼치는 가치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며 실태조사 자료가 전무한 실정임

□ 공적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부족 및 관리·개발원칙 부재

- 앉을 곳, 모일 곳, 쾌적하게 걸을 곳 등의 공적 공간의 절대 부족과 사람들의 이동·이동을 고려하지 않는 동선, 차량으로 분리된 공간 등의 문제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공적 공간에 대한 시민적 인식제고

- 공공성과 쾌적성을 위한 공간으로서 공적 공간에 대한 개념정의와 함께 ‘공적 공간 살리기’ 캠페인 추진
-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Project for Public Space(PPS) 연구모임 조성

□ 단절된 도시녹지의 틈새공간으로서 공적 공간 활용

- 지도상 네트워킹된 도시녹지가 아니라 휴먼스케일에서의 연결된 도시녹지축 형성을 위한 틈새공간으로서 공적 공간의 적극적 활용
- 공적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행공간의 가로공원화 또는 연결녹지로 활용

□ 범죄예방 도시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적용대상으로서 공적 공간의 관리

- 도시계획 등 도시 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통하여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고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축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공적 공간의 가치 제고

□ 공적 공간 발굴 및 개발 프로젝트로서 동해남부선 폐선구간을 공적 공간으로서 활용 대책의 내실화 촉구

- 연결녹지이자 지역간 네트워킹이 가능한 공간으로서 적극적인 활용·관리

9 시가화구역내 노후 공업지역의 정비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개발본부	공업용지 정비계획

1. 개요

□ 과업목적

- 일반적으로 공업지역 관련 정책은 대부분 신규로 발굴·개발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노후공업지역의 정비 역시, 대규모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 상대적으로 시가화구역내 분산되어 있는 소규모 공업지역 및 주거·상업지역내 존치되어 있는 부적합 공업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대책 절실
-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제조업체 비중감소 및 역외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과 계획적인 정비와 관리부족으로 공업지역 내 용도혼재 심화

□ 과업내용

- 시가화구역내 공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용도, 기능적 조화, 공업지역의 규모, 운영실태 등 실태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
- 불합리한 공업지역 및 공업시설에 대한 이전수요조사 및 대책 강구
- 자연녹지지역내 공장·창고 등의 정비계획 수립 및 국·공유지를 연계한 소규모 노후 공업지역의 정비 추진

□ 과업예산

- 공업용지 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 용역비 176백만원

2. 문제점

□ 신규공장용지 확보 중심의 공업정책 및 비효율적 신규공업용지 수요조사

- 체계적이지 못한 공장용지 수요조사에 근거한 신규공업용지 확보 추진의 문제

- **소규모 노후공업지역·공업시설에 의한 지역내 토지이용의 부조화 및 주변 지역의 주거·생활환경 악화**
 - 시가화구역내 공해성 공업지역 및 소규모 나홀로 공업지역, 주거·상업 지역내 공업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전무
 - 영세업체 난립, 대체부지 연계를 통한 이전업체의 사업연속성 확보 미흡
 - 공장 내 주거기능 침투, 준공업지역 내 용도전환에 의한 생산기반 상실
- **시가화구역내 공업지역 및 공업시설에 대한 정책방향 부재 및 공적개입 애로**
 - 사적 재산에 대한 공공정책방향이 공적 개입의 현실적 접근의 애로
 - 개발기피로 인한 기반시설 및 지역 환경의 노후화와 무계획적 개발에 의한 도시환경의 악화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시가화구역내 소규모 공업지역 및 공업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의 적정성 평가**
 - 이전대상, 단계별 이전유도, 유사시설의 집적 유도, 존치가능 등으로 공업 지역 및 공업시설의 유형별 분류로 실질적 수요조사 유도
- **주변지역과 부조화한 공업지역의 경우 재정비계획에서 용도지역 변경 추진**
 - 2030 부산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에 반영토록 점검
- **자발적 정비를 유도 및 신규 산업단지 조성시 시가화구역내 이전대상의 적극적인 이전 지원**
 -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선 투자, 저렴한 토지의 공급, 세제 혜택, 금융지원, 인허가 등에 대한 편의 제공

10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지침 마련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개발본부 도시재생본부	-

1. 개요

□ 과업목적

- 각종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의 의미 재정립 및 부산시 도시계획상 중요성 강조
- 도시정비사업·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지구단위계획의 추진 과정의 공익성과 효율성 도모
-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운용과 현실성 높은 운용지침 마련 절실

□ 과업근거

- 국토계획법,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타 법규에 의해 총 503개소 86.703km²에 지정되어 있음

□ 과업내용

- 510개소의 지구단위계획의 점검 및 종합 접근 필요
-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운용과 현실성 높은 운용지침
 - 종상향변경(up zoning) 가능요건을 명시함으로서 무분별한 요구 차단
 - 구역면적의 기준이상 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주택사업계획 승인시 종변경사항의 심의강화

2. 문제점

□ 고밀개발 등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난개발 우려 및 종합적 검토 미흡

- 각종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있어서 의무화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대부분 종상향변경, 용적율·건폐율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고밀개발로 추진 되어 난개발의 근간이 될 우려가 큼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지역 및 부산시 도시전체의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과 조화에 대한 검토 미흡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인식 저조

- 사업추진과정상 법적 공개절차인 공람공고, 필요시 공청회 등의 일부과정 외에 추진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못함
- 지구단위계획 내용 및 추진과정의 전문성으로 지역주민의 이해 및 참여 과정 미흡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기대감 상승 대비 사업실현가능성 저조

- 사업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검토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개발기대감 상승 대비 사업추진 미흡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전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업 점검

- 510여개 지구단위계획의 사업실행 가능성 및 무의미한 지구단위계획의 정비 요구

□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의 구체화 촉구

-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기본 원칙 설정 및 현재 토지이용계획의 장기전략 수립
- 무분별한 용도지역 상향조정 방지 및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유도

□ 지구단위계획의 상설 정보공개 창구의 마련과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공감대 형성 기회 공식화 유도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교육기획 확대 및 공감대형성을 통해 사업추진과정상 민원요소 절감
-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과정상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참여기획 확대 의무화, 지역주민과 전문가간 의사소통 기회 확대

11 실현가능한 도시균형발전 대책의 추진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개발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균형발전사업

1. 개요

□ 과업목적

-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도시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그간 부산시 정책방향의 적합성과 추진사업의 성과에 대한 점검 필요
- 도시균형발전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추진방향의 재정립 및 실현가능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사업의 발굴 시급

□ 과업근거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도시균형발전사업 지정·심의

-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 ▶ 우선순위 : ① 개발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② 개발계획의 실현성과 적정성, ③ 자원확보와 조달계획의 타당성, ④ 구·군과 주민의 추진의지, ⑤ 지역간 생활권역별 형평성 등

□ 과업내용

- 2006년 5월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07년 12월에 2020년 목표연도의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 ☞ 2007년 당시 구·군 균형발전 촉진 사업 80과제 및 도시재창조사업 34과제 등 총 114개 과제 선정

※ 주요사업

- 학교 건립 :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사상고) 설립 (2008.3월 개교)
- 도서관 건립 : 국립부산도서관, 화명·다대도서관 건립 추진
- 청소년 교육문화회관 건립, 종합교육연수타운 건립
- 부산지법(검) 서부지원(청) 신설
- 사상공업지역 재정비 (2008.5월 산업입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완료)
- 강서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등

- 2008년 5월에는 세부실행계획 수립
- 2007년 수립한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정계획 수립중

□ 사업예산

- 총 사업비 20조 2,008억원으로서 1조 8,743억원 기투자
 - 국비 43,989억원, 시비 27,275억원, 구·군비 1,196억원
 - 민자 110,805억원

2. 문제점

□ 과다한 균형발전 사업의 선정

- 2007년 용역결과에 따라 114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그간 추진과정상 선정된 과제의 수정·재정비 수준에 그쳐 현재 2010년 42개사업 선정되어 있음
- 실제 사업 선정기준은 2007년 용역보고서 p.238에 따르면 사업선정기준으로서 ‘주민·전문가 설문조사, 실무추진부서 추지의지, 낙후지역 정량적 평가’ 등이 제안되어 조례상 선정기준과 다름

□ 기 추진사업의 나열수준으로 통합적 균형발전사업으로서 역할 부족

- 실질적인 균형발전사업이라기 보다 기추진중인 도시계획시설사업(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20 사업, 도시정비사업, 재래시장 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 구·군요청사업 등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

□ 실질적인 지원책이 배제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유명무실

- 2007년 용역보고서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인 분야별 추진전략, 개발 및 사업 우선순위 선정 등이 미흡함
-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균형발전 사업은 공고일부터 2년이 되는날까지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지정효력이 상실되어 실제 균형발전사업으로 효력의 문제 발생

□ 기본계획 수준의 사업추진과 과도한 민간투자사업에 치중

-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단계에서 진일보하지 못하고 수차례 수정계획만 제시
- 도시균형발전 사업을 모두 완료시키려면 총 20조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야 하며 이 가운데 민간투자 비중이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음
- 민간투자는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시균형발전 사업이 실현성을 갖기 어려움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도시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성과 평가 필요

- 2009년 개발된 도시균형발전사업 평가모델의 평가기준(균형발전지수, 만족지수, 사업지수 등)에 따른 실질적인 평가결과 발표 촉구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과목표와 추진계획 수립

□ 지역간 연계한 광역사업 및 시민참여에 의한 균형발전 지원책 도출

- 구·군별 안배에 의한 지역에 국한된 균형발전사업선정과 사업비 배정보다 지역간 공동사업 혹은 권역별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균형발전사업의 발굴·추진 필요
-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이해증진과 지역성 극대화 도모

12 낙동강 살리기와 연계한 도시정비계획의 효율적 추진

실·국	관련사업 등
도시개발본부 도시재생본부	-

1. 개요

□ 과업목적

- 낙동강살리기,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 급격한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도시발전의 미래상 정립과 장기적인 비전 제시 필요
- 현재 강서 일대에는 ‘강서신도시’, ‘천만평 국제산업물류도시’, ‘가덕도 개발 프로젝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동남권 신공항 유치’ 등 적지 않은 서부산권 지역개발사업, 즉 강서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적인 스크리닝 필요

□ 과업근거 :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 과업내용

- 부산도시계획구역의 낙동강권 일원을 범위로 한 관련 사업의 종합 검토
-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연계한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및 에너지 절약형 복합 토지이용계획 수립
- 낙동강 살리기와 연계한 저탄소 도시발전방향 구상 및 수변도시 조성
- 국제물류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보전을 조화된 도시계획 수립
- 수변공간 재창조를 위한 고품격 주거·관광·레저 복합공간조성 및 광역 순환교통망 확충

□ 과업예산

- 관련 용역 10억원 확보 예정(추경)

2. 문제점

□ 관련 프로젝트간 상호 연계검토 미비

- 낙동강권과 연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과다하게 추진되고 있음
- ‘강서신도시’, ‘천만평 국제산업물류도시’, ‘가덕도 개발프로젝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동남권 신공항 유치’ 등 적지 않은 서부산권 지역 개발사업이 있으며 각 사업간 역할분담과 연계될 수 있는 종합분석 미비

□ 실질적인 사업 타당성 문제와 국제공모의 남발

- 가덕도 종합개발계획, 천만평의 국제산업물류단지 등 국제공모에 의거하여 공감대형성을 바람직하지만, 사업 효율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뒷받침은 되지 못하고 있음
- 가덕도 종합개발계획 등은 신공항 등의 입지여부, 놀차만 매립 등의 민감한 부분에 대한 사전 조율없이 국제공모를 추진하여 결국 과다한 조정이 불가피함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낙동강권 개발프로젝트의 관련부서간 종합 검토 의무화 촉구

- 도시개발실,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실 등의 관련부서의 담당자간 사업추진 과정 및 컨셉플랜에 대한 협업할 수 있도록 워크숍 등의 정례화 촉구
- 필요시 시의회 차원에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워크숍 주도 가능
- 관련 프로젝트의 종합적 분석 및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 스크리닝 실시

□ ‘낙동강 살리기와 연계한 도시정비계획’영역의 중간점검 철저 이행

- 국제물류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강서신도시 등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난개발방지 및 효율적인 도시계획 반영

13 보행환경개선과 도시녹지(가로수 조성관리) 허와 실

실·국	관련사업 등
환경녹지국 도시재생본부	-

1. 개요

□ 과업목적

- 도로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후순위로 배제되고 있는 보행환경에 대한 가치 제고와 더불어 보행환경의 중요한 요인인 도시녹지(가로수)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설정·대책마련 필요

□ 관련 제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6.8), 부산광역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2000),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2004)

□ 현황

- 부산의 보행도로는 1999년 대비 5년후인 2004년 노선길이상 32.75% 증가, 면적상 동기간중 19.59% 증가하여 연장대비 상대적으로 좁은 보행도로가 조성되어 왔음
 - 전체 도로 가운데 보행도로의 연장비율은 30.5%
- 2009년말 963km에 36종 137,656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최근 4년간 21,380본 증가하여 양적증가 지속되고 있으나 질적 관리필요
 - 부산시 전체 도로 3,707km의 26.0%, '08년 전국평균 32%
- 도로연장 14m당 1그루의 가로수 식재로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상 가로수 식재간격 6~8m에 훨씬 못미침
- 주요 가로수종으로 왕벚나무(29.7%), 은행나무(26.8%), 느티나무(10.0%), 버즘나무(6.7%), 후박나무(5.9%)순으로 전체 가로수의 79.1%이며, 지역성과 가로수 특화거리를 위한 수종선정 등의 적극적 대책 마련

2. 문제점

□ 담당부서의 다원화로 종합적인 접근 곤란

- 보행환경, 가로녹지, 가로시설물, 건축 전면 등에 대한 통합관리 부재
- 보행도로 관련업무는 도로계획과, 가로수는 녹지공원과 등으로 구분되어 보행환경을 구성하는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난이
- 전신주, 신호제어기, KT·한전 등의 맨홀 등은 각 해당기관에서 시공·관리하여 보행환경 악화

□ 보도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불편한 보행 유발

- 기본적으로 좁은 보도폭, 요철·노면상태 불량 등으로 보행의 질악화
- 가로수 생육에 필요한 토양층 확보곤란 또는 보도블럭의 재시공으로 인해 노면상태 불량

□ 보행환경 등에 대한 조성·관리 기준 미흡

- 휠체어, 유모차 등의 교통약자 이용 불편
- 제기능을 못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조성의 문제

□ 가로수 수종선정 등의 조성·관리기준 미흡

- 가로수 수종이 벚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버즘나무 등에 편중된 것을 문제로 인식하면서 가로수 수종 다양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역별 특성화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음
- 가로수종 교체사유인 병충해, 상부절단목 등의 민원이 많으나 가로수 조성 이후 관리부실 여전
- 현재 가로수 수종 등은 모두 교목을 중심으로 분석되어 있으며 보도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구간이 많은 부산시의 경우, 교목중심의 가로수 수종선정 문제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보행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실시 및 보행환경 개선지침 마련 촉구

- 업무보고시 보행환경에 대한 보고 의무화 및 기준이하의 보행환경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 가로수 데이터베이스의 공개 및 가로수 관리지침의 구체화 요구

- 2010년 주요 과제로서 가로수 지하고 실태조사 및 개선, 가로수시설(보호틀, 보호덮개 등)정비
- 가로수 수종, 식재방법, 정지기술 개선 등의 지침마련 및 지속적인 관리

□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2004)의 개정

- 가로수 관리기본계획의 구체화는 물론 조례상 제시된 수종선정, 식재 가로수 크기, 지하고 기준, 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등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부서간 협업시스템 구축

- 보행환경, 가로수, 가로시설물(전신주, 표지판, 벤치, 가로등 등), 건물 전면과 공개공지 등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통합 디자인 개선

교 육

1. 교육자치 정착 및 내실화 도모	213
2. 세계화 시대의 부산교육 발전 전략 모색	215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교육 부문의 대응책 모색	217
4. 지역간 교육불균형 문제 해소	219
5.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 강화	221
6. 학력 신장 및 학력격차 완화	223
7. 경쟁력 있는 전문계고 육성	225
8.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체제 구축	227
9. 녹색성장교육 및 해양교육 활성화	229
10. 초·중등 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	231
11. 영어교육 내실화 및 원어민교사의 질 확보	233
12. 방과후학교 운영의 효율성 제고	235
1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내실화 도모	237
14. 다문화가정 자녀 및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239
15. 학교급식 질 개선 및 안전한 식생활 관리	241
16. 학교 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	243
17.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 활동 지원	245
18.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운영 지원	247

1 교육자치 정착 및 내실화 도모

기관	실·국	관련사업 등
부산시교육청	-	-
부산시	행정자치국	-

1. 개요

□ 과제의 필요성

- 교육자치 정착 및 내실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교육정책 개발 및 의제 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재정 투자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한 교육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 또한, 학교 공동체의 이해관계자인 학부모, 지역사회, 교직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관련근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 문제점

□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노력 필요

- 초·중등 관련 업무 이양 등 지방교육자치 영역 확대에 대비한 역량 강화가 시급함
- 교육자치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 정책은 중앙 정부에 예측되어 있으며 지역의 특수성이나 지역별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관심도 및 지원 미흡

-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자립도 및 교육지원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의 이유로 교육경비 지원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 ※ '08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230개) 교육경비 보조 현황(교육과학기술부, 2009)에 따르면, 부산시 16개 구·군 가운데 13곳이 전국 순위 200위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교육경비 지원 현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채 과다, 인건비 및 경직성 경비 비중 증가로 교육재정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이 필요함
 - ※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지원 전출금 지원 규모를 취·등록세 합산액의 1,000분의 15 금액

에서 1,000분의 20의 금액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는 1개 학교(유·초등·중등) 평균 약 3,130만원 수준임. 현재 부산시에는 교육지원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2010년도 비법정전출금이 27,072백만원으로 1개 학교당 평균 2,680만원 수준임

□ 학부모·지역사회의 학교참여 여건 미흡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교육, 교육정책의 수립·집행 등에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과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 정책을 확대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장에서는 학부모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등 학교참여 여건이 미흡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도 학교참여 전문성 교육 부족 등의 이유로 학부모 활동이 형식화되어 있는 상황임

※ 부산지역 초·중·고 각 10개 총 30개 학교의 2009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현황(부산광역시교육청 2009) 분석 결과, 심의안건 총 741건 중 100%인 모든 건수가 학교장이 제안하였으며, 학부모·지역인사는 물론 교원위원이 제안한 건수는 1건도 없음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적극적인 지역사회 교육정책 개발 및 추진

-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부산지역 교육의 문제점과 과제를 찾아내고, 그에 기반한 지역사회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의회 및 교육전문가, 학부모가 부산교육정책을 점검하고 지역 기반의 핵심 의제를 도출, 토론하는 장을 정례화 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활성화 유도

- 교육시설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청뿐 아니라 부산시 및 각 구·군의 적극적 교육경비 예산 증액 및 교육정책 관심도 제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마련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을 통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교육정책에 관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함

□ 학부모 참여 활성화 등 학교자치 역량 제고

-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가 진정한 학교 자치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함

2 세계화 시대의 부산교육 발전 전략 모색

기관	실·국	관련사업 등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국	-
부산시	행정자치국	-

1. 개요

□ 과제의 필요성

-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에 적합한 부산교육의 비전 수립 및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세계도시 부산의 시각에서 부산교육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동북아 교육 중심도시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관련근거

-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2. 문제점

□ 부산시교육청의 세계화 전략 마련 미흡

- 시교육청은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 실현’이라는 미션 하에 ‘세계적인 교육도시와 경쟁하자!(The World Education City 2010)’라는 비전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세계화 시대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미흡한 실정임
- 제주의 경우 국제자유도시 지정에 따른 제주교육체제 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정립을 위하여 ‘08년 「제주교육발전 기본방향과 전략적 과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타 시·도에서는 세계화에 따른 전략 마련이 활발한 상황임

□ 외국인 자녀 교육을 위한 인프라 개선 필요

- 거주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 및 부산지역 산업단지 내 각국의 외국첨단 기업 유치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자녀교육을 위한 인프라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 외국인기업과 개인이 해외 파견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자녀들의 교육환경과 의료환경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주택과 문화생활을 위한 여건을 중요시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부산시 외국인학교 현황

학 교 명	주 소	설립 국적	학 생 수							내국인 비율
			외국인	내국인					계	
				이중 국적자	영주 권자	외국인 자녀 (한국국적)	내국인	기타		
부산국제학교	해운대구 중동	노르웨이	94	30	31	9	15	-	179	47%
부산외국인학교	해운대구 좌동	미국	98	-	13	1	29	-	141	30%
부산일본인학교	수영구 민락동	일본	28	2	2	2	1	-	35	20%
부산화교중고등학교	동구 초량동	대만	135	-	-	-	-	-	135	0%
부산화교소학교	동구 초량동	대만	109	-	-	5	-	-	114	4%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년 6월 기준)

※ 참고: 2010년 8월,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개교 예정(부산국제학교 폐교)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세계화 비전에 따른 교육정책 전략 마련 및 정책연구 추진

- 세계화라는 큰 틀에서 부산교육의 방향과 전략이 모색될 수 있도록 교육 정책 및 교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연구 추진이 필요함

□ 외국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주기적 수요조사 및 제도적 개선 작업 필요

- 부산시 외국인의 교육실태 및 수요에 관한 주기적 조사가 실시되어야 함
- 외국인 학부모의 교육환경 만족도 제고를 위해, 부산지역 내 외국인학교의 교사의 질, 학교운영 방침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여건에 관한 주기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부산지역에 특화된 사업분야 및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분야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외국인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작업이 필요함

□ 학생 및 지역주민 대상의 세계화 교육 확대

- 교원을 대상으로 국제이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학교 및 학생, 교원의 세계화 및 지역주민의 세계화교육을 위하여 평생 교육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정책 마련 및 추진이 필요함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교육 부문의 대응책 모색

기관	실·국	관련사업 등
부산시교육청	-	-

1. 개요

□ 과제의 필요성

-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청과 연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10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부산시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개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근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2. 문제점

□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

- 부산지역 초·중등 전체 학생수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며 특히 초등학교 학생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 ※ 전년도 대비 초등학교 학생수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매년 1천명, 2천명, 3천명 감소치를 보이다가 2004년 이후부터는 전년 대비 1만명 넘는 학생이 감소하고 있음
- 2000년 대비 2009년의 초·중·고 학생수 증감치를 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부산지역은 일반계고등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 중학교, 전문계고의 학생수 증감률이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학교당학생수, 학급당학생수, 교원1인당학생수는 타 시·도에 비해 부산지역이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예비교원의 적체 현상이 큰 폭으로 누적되고 있음

□ 저출산 및 도심 공동화 등의 원인에 따른 여유교실 발생

-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신설학교의 학생 수용 부족, 주택단지로의 이주에 따른 도심구조 개편 및 공동화 등의 원인으로 여유교실이 점진적으로 증가함
- ※ 2002년 이후 최근 8년간 부산지역 초등학교의 특별교실(보통교실 제외) 현황을 분석해 보면, 학생수는 29만명에서 21만명으로 약 27.6%가 감소함에 반해 특별교실은 1,783개에서 3,161개로 77.3%가 증가함. 학교당 특별교실 수는 6.5개에서 10.6개로 63%가 증가하였으며, 학생 천명당 특별교실 수는 6.1개에서 15.0개로 2.5배 이상 증가함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저출산 극복 관련 정책의 주기적 점검

- 부산시교육청에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의 각 세부사업이 궁극적으로 부산지역의 저출산 문제 극복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의회 차원의 주기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공교육 관점의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지원

- 전체 취원아 수 중 국공립유치원 원아 비율이 부산은 8.4%로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상황임에 따라, 유아교육 기회 확대 측면에서 병설유치원의 신·증설에 관한 구체적인 장기 계획 마련 및 시행이 요구됨
- ※ 시·도별로 국공립/사립유치원간 원아 비율을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 원아 비율이 충북 49.3%, 전남 45.4%, 제주 42.6%임에 비해 부산은 8.4%로 전체 취원아수의 91.6%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임. 이는 서울 13.1%, 대구 14.7%, 인천 18.0%, 광주 21.5% 등 서울 및 6개 광역시 중에서도 눈에 띄게 낮은 수준임
- 지역 초등학교의 여유교실을 활용하여 미취학 아동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방과후 보육교실 확대 및 지원

-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보육교실 및 종일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야간아동보호를 위한 체계적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함
- ※ 야간에 부모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임되는 아동들에 대해 부산시나 시교육청이 아동센터나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돌보고 있지만, 통합체제 미구축으로 대상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국제신문, '10.4.6)

4 지역간 교육불균형 문제 해소

기관	실·국	관련사업 등
부산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부문 지역균형발전계획

1. 개요

□ 사업목적

- 서부산권 지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으로 동·서 지역간 학생들의 균형있는 학력 신장 등 부산권내 지역간 교육부문 균형발전 도모

□ 사업근거

- 2단계(2009~2013년) 교육부문 지역균형발전계획(부산광역시교육청)

□ 사업내용

- 서부산권 7개 자치구(강서·북·사상·사하·서·중·영도구) 중심 10대 과제 추진

[표] 교육부문 지역균형발전계획 주요 10대 추진과제

순	과 제 명	주 요 내 용
1	서부산권 고교 근무 전교사 승진가산점 부여	서부산권 고교 9개에서 전학교(24개교)로 확대
2	부산 제2과학고등학교 신설	사하구에 제2과학고 개교 예정(2012년 3월)
3	부산자동차고등학교(마이스터고) 육성 지원	T/F팀 구성 및, 시설환경 개선 추진 등
4	학생생활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교육복지 지원센터, 학생생활 지원센터 설치 등
5	지역 협력형 방과후학교 운영	사교육 수준의 지역 협력형 방과후학교 운영
6	고등학교 학력신장 프로젝트 우선 지원	2010년까지 서부산권 전 일반계고 지정지원
7	영어학력 제고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우선 지원	영어전용(체험)교실 우선 구축, 영어수업 보조인력 확대 배치
8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기반 조성	교육환경 개선 및 다목적강당 확충, IP-TV 보급 등
9	가칭 「엄공초 체육문화센터」 건립	학생·지역주민의 다양한 체육문화 활동 지원
10	가칭 「부산 청소년 교육문화회관」 건립	북구에 건립 예정(사업기간: 2009~2011년)

□ 사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소요액	70,045	103,343	70,981	41,348	35,388	321,105

2. 문제점

□ 지역간 교육불균형 문제 심화

- 시교육청의 지역간 교육불균형 문제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기초학력 및 수능성적 등 학력 격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 2009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초등학교 6학년의 '보통이상' 수준은 해운대(국어 85.3%, 수학 92.1%, 영어89.4%)와 동래교육청(86.1%, 93.5%, 89.6%) 등 동부산권은 평균을 넘었으나, 서부(83.7%, 90.8%, 87.4%)와 북부교육청(82.5%, 90.2%, 85.4%)은 평균 이하의 성취도를 나타내었으며, 중학교도 동일하게 서부·북부교육청의 3과목 점수 모두 평균 이하로 나타남
- ※ '2010학년도 수능성적 기초 분석' 결과, 부산 연제구 및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남구 등 동부산권 대부분 지역이 전국 30위권(표준점수)안에 속한 반면, 서부산권에서는 강서구와 사하구만 포함됨

□ 「교육부문 지역균형발전계획」 사업의 효과성 미흡

- 1단계 계획(2004년~2008년)의 정책 추진 과정을 분석해 보면, 서부산권에 집중된 정책 추진보다는 부산시 전체 지역으로 일반화됨에 따라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퇴색한 부분이 많으며, 기본적인 현황 파악 및 사업내용 타당성 검토, 재원 마련 등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자치단체와의 적극적 협력 체제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연계·협력 실적이 미흡하고 시·교육청간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관련 안건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교육균형발전 지표 수립 및 기초 데이터 확보

- '교육균형발전'이라는 중장기 계획 추진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교육분야를 포함한 부산시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구·군별 통계 추출이 가능한 지역통계개발이 요구됨

□ 관련 조례 제정 등 역차별 정책 추진

- 서부산권 및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도시균형발전과 함께 적극적인 역차별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교육지원 조례 제정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교육여건열악지역을 중심으로 「학력향상중점학교」 지정 확대 및 방과후 학교 내실화 등 차별화된 집중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추진 사업에 대한 주기적·체계적 점검

- 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교육부문 지역균형발전계획」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사업에 대한 검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5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 강화

기관	실·국	관련사업 등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국	-

1. 개요

□ 과제의 필요성

- 학교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청소년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된 인성교육 강화 및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실효성 검토가 요구됨. 또한, 대안교육지원센터 내실화 등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함

□ 관련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 문제점

□ 청소년 범죄 및 위기청소년 문제 심각

- 부산지역 청소년의 범죄 및 학교폭력 문제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각종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모두 8,018명이었으나 2008년 1만 603명, 2009년 1만 1,251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 가운데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은 지난 2007년 226명에서 2009년 544명으로 2년 사이 배로 증가하였으며, 폭력도 1,831명에서 2009년 2,314명으로 증가함(국제신문, '10.2.16)
- 국제교육문화포럼 심포지엄 발표자료(홍봉선, 2009)에 따르면, 부산지역에서 전문기관 등의 개입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인구(9세~24세)의 15.2%인 99,3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위기청소년이란 부모의 이혼, 가난, 가출, 음주, 흡연, 학업중단 등의 이유로 가족·개인·교육적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말함. 부산의 위기청소년 비율은 전국 평균 13.5%보다도 1.7% 높은 비율이며, 서울(12.9%)을 포함한 광역시(대구 13.0%, 인천 13.0%, 광주 12.8%, 대전 12.4%, 울산 12.4%) 중에서 가장 높음

□ 중학교 및 전문계고 학생의 학교부적응 문제 심각

- 중학교 단계의 학교폭력 문제가 다른 학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학교 중도 탈락 문제는 전문계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임

- ※ '학생 1만명당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초등학교는 2008년 기준 0.8건이며, 고등학교는 13.8건인 반면, 중학교는 '06년 24.7건, '07년 39.9건, '08년은 47.7건으로 '06년에 비해 93.3% 증가함. '학생 1만명당 학교폭력 피해 학생수를 보면, 초등학교는 1.4명, 고등학교는 19.1명인데 반해, 중학교는 110.4명임
- ※ 학생 천명당 학업중단자 비율은 2009년 현재 중학교가 8.7명, 일반계고가 7.7명인데 반해, 전문계고는 47.2명임. 2008년 대비 2009년 중학교 학업중단자는 1.7% 증가, 일반계고 학업중단자는 11.1% 감소함에 비해, 전문계고는 25.0% 증가함

□ 부산지역 아동 성폭력 증가세

- 부산경찰청 자료에 따르면(2009) 부산지역의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 2009년 9월 말까지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력 발생 건수는 51건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5건에 비하면 13.3% 증가한 것임. 2007년 9월말(19건)과 비교하면 2년만에 268.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국제신문, '09.10.19)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관련 제도의 실효성 검토 등 총체적 인성교육 방안 마련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확대 실시, CCTV 설치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문제가 심화되는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 운영 과정에 대한 성과 점검을 통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된 총체적인 인성교육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학교급별로 차별화된 학교폭력 예방 접근 모색

- 중학생 및 전문계고 학생의 학교폭력 및 학교부적응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학교급별로 차별화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안교육 시설 및 운영 지원

- 학업중단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시설 지원(대안학교 강사료 문제 해결 및 방과후활동 등 대안학교 운영 예산 지원 확대 등) 노력이 필요함

□ 성폭력 예방 관련 예산 확보 및 프로그램 마련

-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관련 예산 확대 및 실질적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부산 지역 학생들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 ※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교육청의 성교육 관련 예산은 3백만원 수준으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사업내용 또한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자료 보급 및 사이버상담 수당, 양성평등교육 글짓기대회 행사 관련 예산으로만 구성됨

6 학력 신장 및 학력격차 완화

기관	실·국	관련사업 등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실천중심 학력증진 종합계획

1. 개요

□ 사업목적

- ‘실력 있는 부산 학생’ 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부진학생 지도 및 수월성 교육 등 실천중심 학력증진 정책 추진

□ 사업근거

- 실천중심 학력증진 종합 계획(부산광역시교육청, 2009)

□ 사업내용

- 학생·교사·학교·교육청의 학력증진 책무성 제고에 기초한 실천과제 제시

2. 문제점

□ 지역별·학교별 학력 격차 심각

- 2010학년도 수능점수 분석 결과, 일반고 간 표준점수 격차가 112점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특목고와 자사고를 제외한 일반고 순위에서 인문계열은 상위 10위권 내에 서부산권 학교는 단 1곳도 없는 등 지역별·학교별 학력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2010학년도 부산지역 수능점수 원자료를 토대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3개 영역 표준점수 평균을 합산, 부산지역 일반고(특목고 및 자사고 제외) 순위를 매긴 결과, 인문계열(수리나 선택)에서 1위인 장안제일고(337.8점)와 최하위인 부산대저고(225.2점)의 점수 차가 112.6점으로 나타남(국제신문기사, '10.4.25)

- ‘2009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산지역 초·중·고생의 학력이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별 동고서저 불균형 현상이 여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부산지역 수능점수 하락 추세

- 2005년 이후 수능성적을 연도별로 살펴 보면 1~4등급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7~9등급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부산지역은 1~4등급 비율이 16개 시·도 가운데 언어 2위, 수리가 5위, 수리나 1위, 외국어 2위로 수리가형을 제외하고는 전국 최상위권이었으나, 계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0학년도 수능에서는 언어 4위, 수리가 5위, 수리나 3위, 외국어 5위를 나타냄. 반면, 2005학년도 대비 7~9등급 비율은 언어(11.5%→14.2%), 수리가(10.6%→12.8%), 수리나(8.9%→12.7%), 외국어(9.7%→14.8%) 모두 증가함(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2010)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전인교육 관점에서의 교육정책 모니터링 필요

- 교육청에서 제시한 학력증진 마스터플랜이 학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인성교육이나 창의성교육 등 직접적으로 학력신장과 거리가 있는 정책들이 소홀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성교육 등 전인교육 관점에서 부산시교육청의 교육 정책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글로벌 인재 양성에 적절한 교육정책이 수립, 추진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

□ 학력증진정책의 지속적·체계적 성과 점검

- 학력증진 마스터플랜의 다양한 세부과제 추진 결과가 교사의 전문성·책무성 강화 등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요인을 변화시키는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함
- ‘학력신장프로젝트’의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분석하고, 프로젝트의 성과가 다른 학교와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부산 내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해야 함
- 부산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력증진 종합 계획」의 과제별 추진성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의회에서는 성과지표를 도출, 체크리스트를 통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상위권 학생을 위한 학력신장 지원 정책 마련

- 성적 부진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 계획은 많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상위권 학생에 대한 학력신장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음. 상위권 학생의 진학지도 및 교육성과에 관한 체계적 분석 등 상위권 학생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됨

7 경쟁력 있는 전문계고 육성

기관	실·국	관련사업 등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국	-

1. 개요

□ 과제의 필요성

- 부산지역 전문계고 학생은 전체 고등학생의 30.8%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반계고에 비해 전문계고의 예산 지원이나 관심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 부산지역 전문계고교의 내실있는 운영 및 나아가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정책 구상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함
- ※ '06년 부산지역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연구(부산시교육청)에 의하면, 전문계고 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직업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낮아 직업교육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관련 근거

- 부산교육 2020 비전과 전략(부산광역시교육청, 2008.2)
- 2009학년도 전문계고교 직업교육 추진계획(부산광역시교육청, 2009.2)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2. 문제점

□ 전문계고교의 정체성 약화

- 중3 학생의 전문계고교 진학 기피 현상 및 재학생의 대학 진학 선호, 졸업생의 취업 감소로 인한 정체성 약화, 산학협력 약화, 지자체·기업·직능단체 등의 전문계고교에 대한 관심 및 투자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부산시교육청, 2008)

※ 전문계고 진학 대 취업률(%) : 31.5 : 56.8('98) → 37.8 : 53.0('00) → 63.2 : 35.0('03) → 74.1 : 18.4('07)

□ 비특성화 전문계고의 상대적 부실

-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등 전문계고교 중에서 일부 학교에 관심이나 지원이 집중됨으로 인해, 특성화고로 지정받지 못한 일반 전문계고교는

학교선호도의 감소 및 학교간 위화감 조성, 취업률의 격차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됨

※ 부산지역의 경우, 전체 전문계고 42개교 중 특성화고는 22개교('09년 3월 기준)이며, 마이스터고로 지정받은 전문계고는 부산자동차고, 부산기계공고 2곳임

[표] 부산지역 전문계고교의 특성화고 전환 계획(부산광역시교육청, 2010)

구 분	'98~2010년	2011	2012
학교수(교)	24	2	2

□ 전문계고 학생의 학교부적응 문제 심각

- 부산지역 전문계고 학생의 '09년 학업중단 비율은 일반계고 학생보다 약 6배정도 높으며, 학업중단 이유 중 '학교부적응'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기준 일반계고 학생의 학업중단 비율은 0.77%이며, 전문계고 학생은 4.72%임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총체적 관점의 해결책 마련

- 전문계고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총체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학생 기초생활 지도,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 교실 수업 개선, 교사 전문성 신장, 취업률 제고 및 양질의 취업 지원, 대학진학 방법 개선 등의 과제에 관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역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 시교육청뿐 아니라, 지자체, 지역 산업체 등이 협력하여 졸업 후 동시에 현장에 투입 가능한 실질적인 전문계고 학생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직업교육 훈련협의회 구성 등 지역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교육청·중소기업이 협력해 학생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가 경북·전북 2곳에서만 운영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한겨레신문기사, '09.1.6)

□ 비특성화 전문계고의 질 제고 노력 강화

-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로 지정받지 못한 일반 전문계고교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일반 전문계고'의 서열이 구성되지 않도록 모든 전문계고를 아우르는 직업교육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8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체제 구축

기관	실·국	관련사업 등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국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부산시	행정자치국	

1. 개요

□ 사업목적

-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를 통한 지역의 사회적 자본 확대·부산지역 평생학습의 체질 개선·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에 대한 요구

□ 사업근거

- 부산지역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 '07.11)

□ 사업내용

- 평생학습 지원 시스템 선진화, 평생학습의 질 관리, 평생학습 네트워킹 활성화, 학습자 지원시스템 구축 등 4개 분야, 7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됨

□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영역	시교육청 투자금액('08년~'12년)					
	계	국비	시비	구비	교특비	민자
계	135,045.4	10,759	13,957.4	17,879	92,410	40
1. 평생학습 지원시스템 선진화	36,100	6,495	2,950	17,134	9,481	40
2. 평생학습의 질 관리(QM)	17,459.4	3,255	10,437.4	80	3,687	-
3. 평생학습 네트워킹 활성화	74,816	1,009	150	225	73,432	-
4. 학습자 지원시스템 구축	6,670	-	420	440	5,810	-

2. 문제점

□ 평생학습 정책 추진노력 미흡

-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시교육청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의 추진성과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면, 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교육청의 추진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움(전문인력 배치, 예산 확보, 평생학습 질 관리 등)
- 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평생교육사 배치는 평생학습 사업 추진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대비 미흡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08년 기준, 계획서에는 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평생교육사를 13명 채용·배치(390백만원)하겠다고 되어 있으나, 추진 내용을 보면 3명만이 채용(45백만원)되어 23% 정도의 달성도를 보여줌

□ 관련 예산 확보의 문제

-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평생학습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 중 평생학습 관련 예산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중장기계획에서는 '08년 평생교육 예산을 교육청 전체 예산의 1%, '09년에는 1.2%를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08년 평생교육 예산은 8,487백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0.34%를 차지하며, '09년 평생교육 예산은 10,975백만원으로 0.42% 수준임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 및 지원 확대

- 평생학습시대의 교육청 역할은 유·초·중등 교육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으로 시각이 확대되어야 하며, 학교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평생학습 관련 사업의 내실화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의 평생학습 관련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함
- 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전문가를 배치하여 실질적인 평생학습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부산광역시, 2007), 평생학습 인력의 질 관리를 위한 1순위 사업으로 '평생교육사의 채용·배치'를 꼽고 있음

□ 중장기 발전계획의 성과 점검 필요

- 부산시·부산시교육청이 공동으로 부산지역 평생학습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개발계획(2008년~2012년)의 성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시와 교육청은 중장기계획의 착실한 추진을 통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

□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및 운영 내실화

- 개별학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평생교육 실시를 통해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앞장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등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중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 점검을 통해 백화점 및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지 않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함

9 녹색성장교육 및 해양교육 활성화

기관	실·국	관련사업 등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국	-

1. 개요

□ 과제의 필요성

-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사회의 진취적 성장을 목표로, 미래 녹색성장을 주도할 녹색인재양성 및 글로벌 녹색시민양성교육이 범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지역사회 환경문제 관련 초·중·등 녹색성장교육 및 「그린스쿨」 사업 등 환경친화적 생태 교육 환경 조성, 주민 대상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교육청의 추진 노력 점검이 필요함
- 또한, 해양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린 해양교육 강화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관련 근거

- 녹색성장교육 활성화 방안(녹색성장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등, '09.8)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2. 문제점

□ 학교 환경교육 부실 운영

- 환경과목 선택률이 저조하고 부실 운영되는 문제, 환경담당 교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 등이 있음(교육과학기술부, 2009)

※ '08년 중학교 '환경' 선택 현황: 전국 257개교(8.4%), 59,278명(3%)

※ '08년말 기준 환경교원 2,883명 중 69%(1,984명)가 미자격 상치교원

□ 「그린스쿨」 사업 예산 확보 문제

-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인성교육에 필요한 환경교육의 장 및 인근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그린스쿨」 사업 예산이 교부금의 지원 없이 시교육청 예산으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부산시교육청은 '10년 3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그린스쿨 조성사업에 197억 원을 편성함.

□ 해양교육 프로그램 미흡

- 해양수도 건설을 지향하는 부산으로서 초·중학교의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부실한 상황임

※ '2009 환경해양교육 교사직무 연수'에서 지삼엽 부경대 교수는 부산지역 학교의 해양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으로 자라나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원대한 해양 의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부산일보기사, '09.8)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환경교육 내실화 및 연수 확대

- 부산지역 학교의 환경과목 선택을 확대하는 방안, 범교과 차원의 내실있는 환경 교육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현하고, 체계적인 교원 연수를 추진해야 함

□ 녹색성장교육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예산 배분 내역 점검

- 녹색성장교육 추진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예산이 친환경적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 배분 내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부산지역 전체 학교 중 단 6개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스쿨」 사업의 경우, 이러한 소수학교 집중투자방식에서 다수학교 적정투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음(부산광역시의회 권영대 의원, 2010)

□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 부산의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활용한 다양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와 관련한 활동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등 해양교육 활성화에 노력해야 함
- 해양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한국해양대학교와 부산시, 교육청의 위원회 구성을 추진해야 하며, 해양연수원 설립 등의 해양교육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부산광역시의회 하선규 의원 제안, 2008)

10 초·중등 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

기관	실·국	관련사업 등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국	-

1. 개요

□ 과제의 필요성

-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체험 학습을 통한 진로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 실태는 미흡한 상황임
- 학생·학부모에 진로상담 제공을 위한 지역교육청의 진로교육 서비스 강화 및 지자체·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관련근거

- 초·중등 진로교육 추진 계획(부산광역시교육청, 2010)

2. 문제점

□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진로교육 중요성 강화

- 입학사정관제도 확대에 따라, 학생들이 조기에 진로를 생각하게 되고, 학생부의 비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이 결과를 학생부와 포트폴리오에 기록하는 일련의 작업 등이 중요하게 대두됨

※ 대학입시사정관 전형은 대학입시 반영 요소 중 학생부, 특히 비교과 영역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제도임

□ 부산지역 진로교육 인프라 미흡

-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체험 학습을 통한 진로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 실태는 미흡한 상황임

※ 진로교육 추진 목적: 지식기반, 평생학습 사회를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체계적인 진로교육으로 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설계 능력을 향상시켜 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 양성(부산시교육청, 2009)

- 창의적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이 일회적이며 단편적인 활동에 치중함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주기적인 진로교육 수요조사 및 만족도조사 실시

-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의 수요 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교육청 직업·진로교육 정책의 예산 대비 성과 점검

- 초·중등 직업·진로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에 대비하여 성과는 어떠한지, 교육청의 직업·진로교육 운영이 추진목적에 부합하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함

□ 체험 위주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인프라 구축 노력

- 시교육청 및 개별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체험활동 위주로 진행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단순·일회성 행사 위주인지를 점검하여 실질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료(2009)에 의하면, 전체 진로교육 운영 방법 중 상담 및 지도가 52.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교과활동은 30.9%로 나타나고 있으나 체험중심 학습은 7.1%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서울의 ‘키자니아(Kidzania)’, 분당 ‘잡월드’와 같은 직업체험관(직업체험 테마파크)을 부산에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부산광역시의회 김영수 의원 5분발언 제안, 2010)

□ 고3 학생 대상 체계적 진학지도 실시

- 고3 학생들의 진학지도를 위해 진학지도 컨설턴트 연수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담임으로 배정하여,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담임교사로부터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진학지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부산의 고3 담임교사 939명 중 진학지도 컨설턴트 연수과정을 이수한 교사는 '09년 1월 기준 92명뿐임(부산광역시의회 강성태 의원 시정질문 자료, 2009)

11 영어교육 내실화 및 원어민교사의 질 확보

기관	실·국	관련사업 등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국	-

1. 개요

□ 과제의 필요성

- 영어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영어교육 관련 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영어체험(전용)교실 등 구축된 인프라의 활용 성과 및 원어민영어보조 교사의 질 제고 문제, 영어교사 전문성 신장 문제 등이 검토되어야 함

□ 관련근거

- 부산 0813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2. 문제점

□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질 확보 문제

- 우수한 원어민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채용 과정에 어려움이 있음
 - ※ 부산은 전체 원어민 교사 중 63%가 2등급과 3등급에 몰려 있는 반면, 서울은 2등급과 3등급 원어민 교사 비율이 38% 수준임(교육과학기술부, 2009)
-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수업평가를 위하여 신규연수, 교수능력향상 워크숍, 협력수업 심화연수 등이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적응을 위한 ‘문화체험 및 현지적응 워크숍 및 행사’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중도 탈락 문제

- ‘08년 이후 292개의 초등학교 중 중도탈락 사례가 있는 학교는 31개로 10.6%에 달해, 적어도 10개 학교 중 1개 학교는 중도탈락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부산광역시교육청, 2009)

□ 부산영어방송의 교육적 활용 미흡

- 부산시가 매년 약 18억원이라는 시민의 세금으로 부산시에 특화된 영어방송을 운영하고 있으나, 개국이후 교육청에서 영어방송을 교육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찾아보기 어려움
-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08년에 아리랑TV와 협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개국이 늦은 광주외의 경우도 작년 11월 광주영어방송과 시교육청과의 협정체결을 통해 지역 외국어 인재 육성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외국어교육 사업 상호 교류, 영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제작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질 제고 및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방안 모색

- 연수 실시 등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모색하여 확보·배치 수준에만 그치지 않고 부산지역의 각급 학교에서 수준 높은 영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를 통한 영어교육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영어보조교사가 부산지역과 소속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지원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원어민교사의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한국에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은 정기적으로 원어민교사를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해야 함

□ 부산영어방송(Busan-eFM)의 교육적 활용 방안 마련

- 부산영어방송(Busan-eFM)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부산지역에 특화된 영어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함 (부산광역시의회 전일수 의원, 2010)

□ 영어교육 체험 시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점검 실시

- 영어체험(전용)교실 및 매직 잉글리시 버스 등 영어교육 향상을 위해 구축된 시설이 일회성 체험시설이나 이벤트성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힘써야 함
- 영어마을 '부산글로벌빌리지'의 설립목적인 '공교육의 보완적 역할 수행'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부산시내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캠프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영어체험기회 제공 성과 및 투자 효율성 등에 관하여 정기적이고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12 방과후학교 운영의 효율성 제고

기관	실·국	관련사업 등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국	-

1. 개요

□ 사업목적

- 정규 수업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여 학교의 교육 기능 보완
- 다양한 학습 욕구 해소 및 보육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
- 계층간·지역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실현

□ 사업근거

- 2010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부산광역시교육청, '10.1)

□ 사업내용

구 분	추진과제	
방과후학교 활성화 기본 구축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설치·운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명품화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과후학교장제 운영 •교과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
현장 지원 강화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방과후 엄마품멘토링제 운영 •방과후 업무 담당교사 업무경감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학부모 코디네이터제 운영
방과후학교 품질 관리	•우수 강사 확보 및 질 관리 •방과후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자체 점검 및 컨설팅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2. 문제점

□ 사교육보다 낮은 만족도

- 부산지역의 방과후학교 참여율 및 만족도는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교육과학기술부, 2009), 수요 분석 결과 방과후학교 수업 내용에 대한 만족률은 사교육 만족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부산광역시의회 조사(2009) 결과, 방과후학교 수업내용에 대한 만족 비율은 사교육보다 6.9%p 낮았으며(사교육 만족 60.9%, 방과후학교 만족 54.0%), 방과후학교 수업내용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사교육보다 9.7%p 높았음(사교육 불만족 9.5%, 방과후학교 불만족 19.2%)

□ 교과 프로그램의 비중 증가

- 초등학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위주, 중등학교는 교과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급속하게 교과 중심 프로그램으로 강화되는 문제가 있음

※ 전국적으로 볼 때, 중학교의 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 비중은 2007년 54.1%에서 2008년 65.8%로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 또한 2007년 81.8%에서 2008년 87.4%로 5.6%p 증가함. 부산지역 고등학교는 71.7%(2007년)에서 86.8%(2008년)로 15.1%p 증가함(교육과학기술부, 2009)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수요 조사 및 방과후학교 수업내용의 질 제고 노력에 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학생들의 수요 분석에 기초한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선을 통하여 학생의 참여 유도 및 방과후학교 수업내용의 질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성과, 외부강사 활용, 우수 프로그램 개발 노력 등에 관한 전반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의 학교급별 특성화 정책 추진

-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의 특성을 고려하되, 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교과 프로그램 위주로의 운영을 지양하고 특기·적성 계발 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부산지역 사교육 실태 파악 및 사교육비 절감 관련 성과 검토

- 2010년부터는 시·도별로 사교육비 실태가 발표됨에 따라, 의회에서는 사교육비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부산지역의 사교육 실태를 명확히 파악, 의정활동 추진에 참고해야 하며, 방과후학교가 실질적인 사교육의 보완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점검 과정이 필요함

□ 교육여건열악지역의 지원 및 자치구군의 관심 유도

- 도심지역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이 방과후학교를 통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무료 특기 적성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및 프로그램 제공에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및 프로그램 지원,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해야 함

※ 기장군의 경우 2009년 관내 24개 초·중·고교에 총 5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였음(부산일보기사, '09.8)

1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내실화 도모

기관	실·국	관련사업 등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1. 개요

□ 사업목적

- 도시 저소득층 등 교육취약집단 밀집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투자우선지역 지정 후 집중 지원
-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교육격차 해소

□ 사업근거

- '09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계획(교육과학기술부)

□ 사업내용

영역	프로그램 예시
학 습	도서관 활성화 사업, 기초학력부진학생 학습지도, 일대일 학습 지원 및 학습 멘토링, 정규 교과재량활동 등을 통한 체험학습, 교과관련 보충학습 지원 등
문화체험	특가적성 및 문화 체험 관련 방과후활동, 동아리활동, 학급활동, 축제 등
심리·정서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가정 방문 및 가족상담, 학습 장애요소 진단 및 치료, 부적응 학생 진단 및 치료, 정서적 지원 멘토링 등
복 지	방과후 보육교실, 야간 보호 교실, 건강 검진 및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등
지 원	학부모 연수, 교사 연수,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및 교사의 사업 활동 지원, 학습자료개발·교과연구 등 교원전문성 신장 등

2. 문제점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정 중단

- 2010년부터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대한 지정이 중단됨으로 인해, 저소득층 위기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위해서는 지역 기반의 사업으로 자리잡아야 하는 과제를 지님

※ 현재 부산지역은 북구 덕천동, 해운대구 반송동 등 총 10개의 지역이 선정되어 있음

□ 자생력 확보의 문제

- 새로 지정되는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단위 학교의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의 지원 중단 시 지역 자체적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자생력 확보가 요구됨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성과 점검 및 지원방안 모색

- 2003년부터 추진(부산시 10개 지역, 65개교)되고 있는 동 사업의 운영 실태 및 성과 파악을 통해 운영 과정상 개선점 도출 및 체계적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저소득층 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는 목적을 고려하여, 학습영역뿐 아니라 문화·체험, 심리·정서·복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명확한 성과지표 마련을 통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사업의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의 근본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외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에 대한 복지예산을 분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산시킴으로써, 일반학교의 저소득층 아동들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생력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역네트워크 형성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지역별·학교별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며,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부산지역의 보다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복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교육공동체’ 등 지역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함에 따라, ‘희망의 사다리’ 등 지역네트워크 구축 성공 사례를 확산하여 민간 중심의 공동사업으로 발전되도록 해야 함

□ 관련 조례 제정 등 사업 지속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 자료를 참고하면, 학업성취도나 수혜자 만족도 등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이 성과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중앙 정부의 지원은 결국 한시적 지원에 그치게 되므로, 지역 단위에서의 사업 지속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조례 제정 등) 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14 다문화가정 자녀 및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기관	실·국	관련사업 등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국	-

1. 개요

□ 과제의 필요성

- 개방화·세계화에 따른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자녀 및 탈북 청소년을 포함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지원 및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이 필요함

※ 부산 지역의 ‘국제결혼가정 초·중·고 재학생’은 ’06년 364명에서 ’07년 483명, ’08년 770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09년 기준 991명으로 ’06년 대비 172% 증가함

□ 관련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 문제점

□ 국제결혼가정자녀 교육 여건 미흡

- 국제결혼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교육 여건이 미흡한 문제가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경우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므로 언어 발달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음

※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2005), 전체 결혼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에 있으며, 특히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50% 이하의 수준에 있는 경우도 44.2%인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중·고교 진학 연령대로 진입할 경우, 정서적으로 민감한 학생들이 편견과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 사회문제가 될 우려가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2008)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미취학·학업중단 비율이 2배씩 급증(초 15.4% → 중 39.7% → 고 69.6%)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탈북 청소년 교육 기회 문제

- 2009년 기준 부산지역 탈북 청소년 수는 초등학교 41명, 중학교 19명, 고등학교 5명으로 총 65명이며 시도별로 보면 서울(35.0%), 경기(28.8%), 인천(9.2%) 다음으로 많은 수(5.7%)이나, 일반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나 민간교육시설이 부산지역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타 지역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발생함

※ 부산 거주 탈북 청소년들이 멀리 천안까지 가서 공부하는 현실이므로 교육청 및 경찰청과 협력하여 기숙형 대안학교 또는 대안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됨(부산광역시의회 하선규 의원, 2009)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공립 대안학교 설립 등 교육기회 확대 노력 필요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 규정」 개정으로 대안학교 설립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부산시 및 시교육청은 부산지역의 국제결혼가정자녀 및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의 인가 및 공립 대안학교 설립 등의 적극적인 교육 기회 확대 노력이 필요함

※ 탈북 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부적응아를 위한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설립주체가 교사·교지 등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에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설립 인가기준 완화, 공립 대안학교 설립 근거 마련('09.11 관련법 개정)

□ 대안학교의 학력 인정 및 시설, 예산 등 지원

- 대안학교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력 인정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 인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며, 안정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하여 대안학교 운영 지원 및 시설 확충, 개별 학생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

□ 취학 전 교육을 위한 다문화 어린이집 운영

- 부산시 각 구·군 단위에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다문화 어린이집을 설립 혹은 지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유아교육 담당을 위한 다문화 어린이집 교사를 양성해야 함

※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부적응 문제 원인은 주로 한국어 미숙에 기인하며, 대다수의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유치원 등 유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추진 정책 관련 다문화가정 의견 수렴 기회 마련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산시·부산시교육청의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하여 정책 대상자인 다문화가정 학생·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하고 생각을 모을 수 있는 토론회 등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

15 학교급식 질 개선 및 안전한 식생활 관리

기관	실·국	관련사업 등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국	-

1. 개요

□ 과제의 필요성

-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유통과정에서의 문제 및 식자재 검수 과정 등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농·축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부산시 및 각 자치구 단위의 학교급식 지원 노력이 필요함

□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

[표] 부산시교육청 친환경농산물 지원예산 편성 변경내역

(단위 :백 만원)

사업명	당초('10.본예산)		변경('10.1회추경)		비 고
	소계	부산시 (전입금)	교육청 (자체예산)	부산시 (전입금)	
우수농산물 식품비지원	12,815	6,407.9	6,407.7	1,225(△52억)	전체 초등 지원 → 농어촌 및 교육 복지투자우선지역 초등학교 50교 지원

-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 문제점

□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지원 노력 미흡

- 2010년 친환경 농산물 지원예산은 당초 부산시와 시교육청 1:1 대응투자하기로 계획되었으나(64억원씩), 부산시 자체 예산심의과정에서 재정부족 등의 사유로 '09년 지원액(12억2천5백만원) 수준으로 삭감됨(교육청 자체 예산은 없음)
 - 최근에 전국적으로 친환경 우수 농산물 공급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최근 무상급식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는 것들을 고려해 보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지원 노력을 매우 열악한 상황임
- ※ 서울은 초·중·고교에 친환경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우수한 먹을거리 공급에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지원을 '09년 95개 학교 23억원에서 '10년에는 225개 60억원으로 확대되었고, 제주도는 올해부터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도내 모든 초·중·고교의 학생 9만6천여명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지원하고 있음

□ 식자재 유통과정에서의 문제

-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식재료 구매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로 인한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추진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입찰제도의 문제점 및 유통업계의 부도 등 부적격 업체로 인한 고질적인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업체간 과당 경쟁 및 어음 발행 등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질 낮은 식재료를 공급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킴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부산시 및 자치구·군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확대 유도

- 부산시의 학교급식 유통과정에서의 문제 및 식자재 검수 과정 등에서의 문제,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농·축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부산시 및 각 자치구 단위의 학교급식 지원 노력이 필요함
- 학교급식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계획보다 앞당겨 확대하기로 한 서울시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부산시 및 자치구·군도 부산시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지원 확대에 힘써야 함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 학교내 급식관리만으로는 식중독 등 학교급식에 관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식재료의 생산 및 유통체계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질 좋고 믿을 수 있는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 및 검품검사 등 전반적인 급식 관리를 총괄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함

※ (학교급식법 제5조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그린푸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노력 요구

-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섭취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제도가 강제성이 없어 성과가 없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입법 보완을 제안하고 학교 내에서 정크푸드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지역과 학교가 중심이 되어 안전한 식생활 관리 노력에 힘써야 함

16 학교 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

기관	실·국	관련사업 등
부산시교육청	기획관리국	-

1. 개요

□ 과제의 필요성

- 부산지역의 많은 학교 시설이 낮은 안전등급의 건물로 보수·보강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여유교실 속출,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교시설의 합리적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함
- ※ 2000년도 62만 3천명이었던 부산시 초·중등 학생은 2009년 기준 486,425명으로 13만 7천명 가량의 학생수가 감소되었음. 이에 반해 학교수는 2000년 551개에서 2009년 611개로 60개의 학교가 증가됨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2. 문제점

□ 재난 위험시설의 개·보수 미흡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2009)에 의하면, 부산지역의 재난 위험시설(D·E등급)이 17개교 24개 동으로 전국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나,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극히 일부 건물에 한함
- ※ 부산지역 재난 위험시설은 전국의 21.8%로 2위이나, 현재 보수·보강 작업 중인 시설은 1개 동이며 4개 동은 공사를 발주했거나 설계 용역을 마친 상태임. 나머지 19개 동은 예산 미확보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임

□ 학생수용계획 수립과정의 수요 예측 오류

- 전국적으로 ‘학생수는 감소하는데 학교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남. 저출산 및 인구이동 등 다양한 원인이 고려될 수 있으나 학생수급 예측 과정에서도 일부 오류가 발생함
- ※ 실제 학생수와 시교육청에서 3년 전에 예측한 학생수를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2008년 기준 약 8개 학교 학생수, 2009년 기준 약 7개 학교 학생수 정도로 나타남

□ 여유교실의 효율적 활용 저조

-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여유교실의 효과적 활용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여유교실을 특별교실로 활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를 위해 활용하는 사례는 극히 저조함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재난위험시설 개·보수 우선 추진

- 다른 사업이나 시설 구축에 앞서 재난 위험시설 개·보수 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신청 등 관련 예산의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예산 미확보 시 적극적 개선책 마련 및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함. 선진국형 학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2008년도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육재정수요비 집행내역을 보면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예산신청에 포함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난위험시설이 아닌 학교의 다목적 강당 증축, 화장실 개량, 식당증축 등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사업들에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김세연 국회의원, 2009)

□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위한 지속적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 석면 검출 및 교실의 공기질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함

□ 학생수 예측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전문가 점검 필요

- 인구수의 변화 및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학생수 예측 결과를 토대로 학교 신·증설 및 통·폐합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요예측 정책연구 실시 및 관련 전문가의 점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학교설립과 같이 예산 비중이 높은 사업의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환경 변화를 신속·정확하게 인지하여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학교 공간의 지역사회화 방안 모색

- 일본의 경우 여유교실을 고령자·아동·장애자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방재시설로 활용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학교 공간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17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 활동 지원

기관	실·국	관련사업 등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국	-

1. 개요

□ 과제의 필요성

- 국제적인 문화 관광도시인 부산의 청소년 문화 공간이 매우 열악함에 따라, 청소년의 문화·여가 공간 확충이 요구됨
- PC방이나 노래방을 벗어나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고 일탈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문화시설 확충이 시급함

□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2. 문제점

□ 청소년의 문화시설 만족도 저조

-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쉼터와 같은 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부산시내에 청소년회관 같은 시설이 있지만 그 수가 너무 적어 학생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회관 내에는 PC방이나 재즈연습실, 동아리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회관 수가 너무 적고 학생들도 이러한 회관을 이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함(국제신문기사)

□ 청소년 정책의 비효율적 추진 체계

- 부산지역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관련 지원기구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상호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예산 및 전문인력의 부족과 영세성으로 정책추진에 한계와 효율성이 미흡한 문제가 있음
- 청소년정책의 수립에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참여 부족, 청소년의 욕구와 필요에 대한 반영이 부족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여 실질적 효과 검증이 어렵고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 인터넷 중독 문제 심각

-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 인터넷 사용인구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문제가 심각하여 점차 사회 문제화 되고 있음

※ 전체 청소년(초·중·고)의 14.0%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중독의 위험을 가진 인터넷 중독자(고위험 사용자 2.1%, 잠재적 위험 사용자 11.9%)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인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황임(교육정보화백서, 2007)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청소년 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장기발전계획 수립

- 부산지역 청소년 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확충이 이루어져야 함
- 문화·여가 공간으로서 청소년회관 등의 청소년시설이 과연 필요한 것이 건립되고 있는지 점검 과정이 요구되며, 실무자·관계자·청소년이 함께 논의하여 유용한 시설로 개선,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 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청소년 의견 수렴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시 및 시교육청, 지역 내 YMCA 등 청소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설치에 관한 의견 공유가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수요에 바탕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의견 수렴 및 시설 현황에 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함
- 현재 학습 중심으로 운영되는 멘토링 사업을 학생의 생활·진로·인성·문화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총체적 관점에서 인터넷 중독 문제 해결 노력

- 올바른 정보소양 및 윤리의식을 기르기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상담·치료기관 및 관련 인력의 확충, 학부모 연수를 확대하여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총체적인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 청소년들의 학습·문화·여가활동을 포함하여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청소년지원센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18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운영 지원

기관	실·국	관련사업 등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국	-

1. 개요

□ 과제의 필요성

- '08년 10월, 전국 시·도 교육청의 특수교육 여건 조사(전국장애인연대) 보고서 결과에 의하면, 부산광역시교육청은 52.34점으로 가장 미흡한 지역으로 평가되었음
-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관련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2. 문제점

□ 특수교육 여건 및 지원 미흡

- 부산지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09년 기준 5,043명(유·초·중등)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경기, 서울, 경남, 부산 순), 교육 여건 및 지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 ※ 부산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는 영아반 27명, 유치원 382명, 초등학교 2,286명, 중학교 1,047명, 고등학교 1,192명, 전공과 109명으로 총 5,043명임
- '09년 10월 전국 시·도 교육청의 특수교육 여건 조사(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결과, 부산시교육청은 52.34점으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평가되었음
 - ※ 특별시·광역시 지역의 경우 100점 만점에 울산광역시교육청이 66.82점을 획득하여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되었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이 66.70점으로 그 뒤를 이음. 반면, 부산광역시교육청은 52.34점으로 가장 미흡한 지역으로 평가되었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이 52.26점, 대전광역시교육청이 53.33점 등의 순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특수교육 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전체 70개 지표 중 부산시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 점수를 받은 항목은 모두 15개이며,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학급 신설 기준,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향후 5년간 특수학급 설치 비율, 특수학교 학급의 법정 정원 준수율,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취업률 등임

□ 유치원 · 고등학교 단계의 특수학급 설치 저조

- 2010년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 단계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 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비율은 2.9%, 고등학교는 24.6% 수준임(초등학교 91.2%, 중학교 44.8%)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및 지원 확대

- 시교육청은 부산지역의 열악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실효성 제고 및 특수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 특수학교의 시설 개선, 도서관 장서 확충 등 학습 활동에 관한 계획 및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교육 지원에 불평등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유치원 · 고등학교 단계 의무교육 추진 지원

- 2010년부터 실시되는 유치원과 고등학교 단계의 의무교육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여 교육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학급 설치 및 시설 지원에 노력해야 함
- 통합교육 체제의 학급 내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이나 왕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정 조정, 보조인력 지원, 학습보조기기 지원, 교원 연수 등 장애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 실천되는지 점검해야 함.

□ 특수학교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노력 추진

- 특수교육 질적 제고를 위하여 현장 수요에 적합한 정규 교원 정원 확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 ※ 부산지역 특수학교 13개교 중 교원이 정원에 미달되는 학교는 총 8개 학교(32명)이며, 정원 확보율은 유치원 단계 93.0%, 초등학교 단계 98.5%, 중학교 단계 92.2%, 고등학교 단계 89.2%임

재 정

1. 부산시 지방재정의 집행실태와 합리성 제고	251
2. 부산시 세입의 합리적 징수체계 수립	253
3. 부산시 이월예산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	256
4. 부산시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259
5. 부산시 지방채의 운영실태와 관리 개선	262
6. 부산시 지방공기업의 경영실태와 개선	267
7. 부산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입증대	271
8. 부산시 예산전용 실태와 예산의 효율성 제고	275
9. 부산시 재정자립도와 세출구조의 재조정	279
10. 부산시 시금고 운영의 합리성 제고	283
11. 부산시 지방교육재정의 운영실태와 효율성 제고	287
12. 부산시 민간투자사업과 투자사업관리 개선	292
13. 부산시 민간이전재정의 운영실태와 체계적 관리	295
14. 부산시 자체감사의 효과적인 전략체계 구축	299
15. 부산시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강화	303
16. 부산시 교육청의 무상급식 재정투자 타당성 강화	307

1 부산시 지방재정의 집행실태와 합리성 제고

실·국	관련사업 등
기획재정관	재정관리

1. 개요

□ 목적

- 지방재정 운영은 효율성과 건전성 관점에서 관리 운영되어야 함.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함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 부산시 지방재정 운영실태

- 부산시의 2000~2009년도 결산상 재정관리 실태는 다음과 같음

부산시 세출결산 총괄현황(2000~2009회계년도)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A)=B+C+D	지출액 (B)	집행율 (B/A)	이월액(B)		순수자금수반이월액 (C)		집행잔액(C)		순세계 잉여금
				예산액	이월율 (B/A)	예산액	C/A	예산액	비율D/A	
2000(가)	43,451	33,173	76.3%	8,488	19.5%	3,656	8.4%	1,789	4.1%	1,382
2001	52,950	42,440	80.2%	7,494	14.2%	5,157	9.7%	3,015	5.7%	3,058
2002	58,308	48,867	83.8%	6,107	10.5%	5,455	9.4%	3,334	5.7%	5,646
2003	53,440	44,711	83.7%	7,239	13.5%	6,581	12.3%	1,490	2.8%	3,957
2004	56,010	47,091	84.1%	7,013	12.5%	6,515	11.6%	1,906	3.4%	1,815
2005	59,362	51,649	87.0%	5,108	8.6%	4,803	8.1%	2,603	4.4%	1,878
2006	66,387	58,952	88.8%	5,393	8.1%	2,521	3.8%	2,072	3.1%	3,684
2007	73,578	67,143	91.3%	4,242	5.8%	2,420	3.3%	2,191	3.0%	4,216
2008	80,279	73,156	91.1%	4,604	5.7%	-	0.0%	2,518	3.1%	2,843
2009(b)	87,926	82,271	93.6%	2,969	3.4%	2,162	2.5%	2,685	3.1%	3,430
평균	63,169	54,945	87.0%	5,866	9.3%	4,363	6.9%	2,360	3.7%	3,191
증감(b-a)	44,475	49,098	0	(5,519)	(0)	(1,494)	(0)	896	(0)	2,048
증감율(b-a/a)	102.4	148.0	22.6	(65.0)	(82.7)	(40.9)	(70.8)	50.1	(25.8)	148.2
연평균증가율	8.1	10.6	2.3	(11.0)	(17.7)	(5.7)	(12.8)	4.6	(3.3)	10.6

주 1. 다음 연도 이월액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합계임

2. 이월액(b) 자금수반과 미수반을 포함한 금액임

3. 2008 회계년도 자금수반 여부는 결산서상 미기재

4.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연도)^{1/(기준연도-최종연도)} - 1] * 100

자료 : 부산광역시. (2000-2010). 「2000~2009회계년도 결산서」 ;

행정안전부. (2008).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p.35

2. 문제점

□ 낮은 집행율, 높은 이월율

- 부산시 재정의 집행구조는 2000~2009회계년도 집행율은 평균 87.0%에 불과, 이월율은 평균 9.3%로 연간 5,866억원 발생, 특히 순수 자금수반의 경우(c/A) 6.9%인 4,363억원 발생

□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재정자원 비효율성 상존

- 예산현액 대비 연간 3.7%인 2,360억원이 불용처리되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짐
- 순세계잉여금이 연간 3,191억원 발생하여 재정계획 및 집행간 격차 발생

3. 정책방향과 의회 역할

□ 집행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예산 및 결산 반영

-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낮은 집행율 사업에 대하여 재정투자 정책·사업의 모니터링 강화
- 모니터링 결과를 예산 및 결산 검사에 반영하여 재정통제 기능 강화

□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에 대한 집행의 효율성 점검 및 책임성 강화

- 과다불용액 발생 사업 및 정책, 실국 과 단위에 대해서 차기연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에 반영하여 상례적인 불용액 발생을 억제하고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제고

□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상환 활용

- 순세계잉여금은 부분적으로 지방채 상환에 소요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방채무를 감소하는 노력이 필요함
- 순세계잉여금이 차기연도 세입부족을 보전하기 위해서 연례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법 §90(순세계잉여금 등처리)

2 부산시 세입의 합리적 징수체계 수립

실·국	관련사업 등
기획재정관	세입징수

1. 개요

□ 목적

- 세입추정의 정확성과 재정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합리적 징수체제가 정비되어야 함
- 세입은 지방정부의 계획과 사업을 연계하고, 시민들에 대한 지방공공서비스 전달을 위한 필수적 자원
- 과다 징수는 방만한 재정지출을 초래하고, 과소 세입 징수 결정은 과다한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져 건전재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세법, 부산광역시세 조례,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현황

- 징수결정액 2000년 4.3조원에서 2009년 9.1조원으로 약 4.8조원(110%) 증가
- 부산시의 2000~2009회계년도 징수결정액(A) 대비 실제수납액(B)은 평균 95.7%
- 미수납액은 평균 4.7%(3,073억원), 결손처분 0.8%(549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3.8%(2,523억원) 규모
- 2008회계년도 대비 2009회계년도의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차기연도 이월액 등의 지표는 좋아짐. 단, 결손액의 경우 2008회계년도 517억원에서 646억원으로 25%(129억원)이 증가

부산시 세입결산 총괄현황(2001~2009회계년도)

(단위 : 억원, %)

구분	징수결정액(A)	실제수납액(B)		미수납액(C=D+E)		결손처분(D)		다음연도이월액(E)	
		금액	비율	금액	비율(C/B)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00(a)	43,610	40,262	92.3%	3,348	7.7%	805	1.8%	2,542	5.8%
2001	52,950	50,733	95.8%	2,953	5.6%	610	1.2%	2,342	4.4%
2002	62,661	59,988	95.7%	2,673	4.3%	444	0.7%	2,228	3.6%
2003	58,090	55,272	95.1%	2,818	4.9%	438	0.8%	2,379	4.1%
2004	58,401	55,515	95.1%	2,885	4.9%	414	0.7%	2,471	4.2%
2005	61,442	58,379	95.0%	3,062	5.0%	430	0.7%	2,632	4.3%
2006	70,332	67,112	95.4%	3,220	4.6%	497	0.7%	2,722	3.9%
2007	79,101	75,576	95.5%	3,524	4.5%	689	0.9%	2,835	3.6%
2008	82,078	80,469	98.0%	3,206	3.9%	517	0.6%	2,688	3.3%
2009(b)	91,744	88,702	96.7%	3,041	3.3%	646	0.7%	2,395	2.6%
평균	66,041	63,201	95.7%	3,073	4.7%	549	0.8%	2,523	3.8%
증감(b-a)	48,134	48,440	4.4%	(307)	-4.4%	(159)	-1.1%	(147)	-3.2%
증감율(b-a/a)	110	120		(9)		(20)		(6)	
연평균증가율	8.6	9.2		(1.1)		(2.4)		(0.7)	

자료 : 부산광역시. (2001~2009). 「2000~2009회계년도 결산서」 재정리

2. 문제점

□ 연례적 과다 징수결정액 발생

- 실제 수납율은 95.7%에 불과하며, 연 5%는 미수납액으로 차기연도 이월
- 결국, 과다한 징수결정액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징수행정 시스템으로 고착되고 있음

□ 미수납액의 결손처분 정례화로 공정징수 실패

- 지방세 징수는 공정징수,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징수가 되어야 함
- 이를 통해서 지방세 징수행정의 민주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음
- 결손 처분이 연례적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인 연간 549억원이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서 납세자간 지방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징수행정을 초래하게 됨. 그 결과 성질 납자세가 상대적 불이익을, 불성실 납세자에게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옴

3. 정책방향과 의회 역할

□ 징수상한제 도입

- 예컨대 징수액의 5%이상 미수납액 발생 세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함
- 5%이상 미수납 세원에 대해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무적인 징수전략과 인센티브 개발

□ 미수납중 결손처분 가능성 세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

- 지방세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고, 지방세 징수 행정의 민주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상례적 미수납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함
- 결손 처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함

□ 지방세 징수 인센티브의 현실화와 인사상 우대

-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서는 징수실적에 따라서 1건당 30만, 100만원, 5천만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보다 세분하여 징수노력 대비하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또한 징수노력을 통해서 세입증대에 기여한 바가 현저한 경우에 인사상 우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3 부산시 이월예산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

실·국	관련사업 등
기획재정관	투자사업

1. 개요

□ 목적

- 재정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 이월예산제도 운용
- 이월예산은 (1)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 등의 이유로 (3) 사업완성까지 수년이 요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① 명시이월 ② 사고이월 ③ 계속비 제도 운영

□ 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이월예산의 유형 별 특징

- 이월예산의 유형과 특징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음

이월예산의 유형

구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비고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요구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 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 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60일 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 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자료 : 행정안전부. (2009).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136.

2. 문제점

□ 부산시 이월예산 총량의 과다 및 재정운영의 비율성 연례화

- 부산시 이월예산액은 10년간(2000~2009년) 평균 3.4%인 5,862억원 발생

- 이러한 재정규모는 부산시가 연간 일반회계 세입의 약 5%에 해당하는 지방채 세입보다 약 2천억원 상회하는 금액

이월예산 총량 추이(2000~2009회계년도)

(단위 : 억원, %)

연도	세출예산현액 (A)	이월액 (B=b1+b2)	일반(b1)		특별(기특+공특)(b2)		이월비중 (B/A)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2000(a)	43,451	8,488	1,350	15.9%	7,138	84.1%	19.5%
2001	52,950	7,494	2,800	37.4%	4,694	62.6%	14.2%
2002	58,308	6,107	2,622	42.9%	3,485	57.1%	10.5%
2003	53,440	7,238	3,196	44.2%	4,042	55.8%	13.5%
2004	56,010	7,012	2,840	40.5%	4,172	59.5%	12.5%
2005	59,362	5,108	2,203	43.1%	2,905	56.9%	8.6%
2006	66,387	5,362	2,887	53.8%	2,475	46.2%	8.1%
2007	73,578	4,242	2,359	55.6%	1,883	44.4%	5.8%
2008	80,279	4,603	3,348	72.7%	1,255	27.3%	5.7%
2009(b)	87,926	2,968	2,123	71.5%	845	28.5%	3.4%
평균	63,169	5,862	2,573	47.8%	3,289	52.2%	10.2%
증감(b-a)	44,475	(5,520)	773	56%	(6,293)	-56%	(0)
증감율(b-a/a)	102.4	(65.0)	57.3	349.7	(88.2)	(66.1)	(82.7)
연평균증가율	8.1	(11.0)	5.2	18.2	(21.1)	(11.3)	(17.7)

자료 : 부산광역시. (2001-2009). 「2000~2009회계년도 결산서」 재정리

□ 자금수반 이월예산으로 인한 부산시 재정규모의 경직성 초래

- 매년 사고, 명시, 계속비이월액 발생으로 인해서 부산시 재정운영상 경직성이 발생. 이월예산은 예산배정을 통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정책과 사업에 실제로 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예산운영의 경직성 초래

□ 일반회계의 사고이월 과다발생

- 정책기획역량 부족
 - 일반회계중 사고이월이 연간 52.9건에 약 352억원 발생하여 재정운영상 정책기획 역량의 부실함을 나타냄
 - 예산은 사업과 예산을 연계하는 구조이며, 사업과 정책의 패키지(package)이기 때문에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정책기획 즉 계획수입이 부족함을 의미

일반회계 이월예산 총량 추이(2000~2009회계년도)

(단위 : 억원, %)

연도	반회계 이월총액(a)	총이월건 수(b)	명시이월(c)		사고이월(d)		계속비(e)		1건당 이월액(b/a)₩
			이월액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건수	
2000(A)	2,059	14	55	2	1	1	2,003	11	147.1
2001	2,799	131	1,706	85	223	40	870	6	21.4
2002	2,620	135	1,044	77	517	52	1,059	6	19.4
2003	3,295	192	1,486	118	589	67	1,220	7	17.2
2004	2,840	185	1,629	102	594	75	617	8	15.4
2005	2,233	132	894	66	594	58	745	8	16.9
2006	2,885	157	1,316	90	208	54	1,361	13	18.4
2007	2,358	157	835	100	235	42	1,288	12	15.0
2008	3,347	274	2,049	171	190	65	1,108	38	12.2
2009(B)	2,122	232	1,109	126	378	75	635	31	9.1
평균	2,655.8	160.9	1,212.3	93.7	352.9	52.9	1,090.6	14.0	29.2
증감(B-A)	63	218	1,054	124	377	74	(1,368)	20	(138)
증감율(B-A/A)	3.1	1557.1	1916.4	6,200.0	37,700.0	7,400.0	(68.3)	181.8	(93.8)
연평균증가율	0.3	36.6	39.6	58.5	93.4	61.6	(12.0)	12.2	(26.6)

자료 : 부산광역시. (2001~2010). 「2000~2009회계년도 결산서」 재 정리

3. 정책방향과 의회 역할

□ 이월예산 과다 사업에 대한 점검·확인 강화

- 예산사업 추진 중 사고이월 발생이 예견될 경우 미리 명시이월로 전환하여 재정운영의 합리성 제고. 이를 위해서 이월예산 발생 가능성 사업을 대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점검함

□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의 타당성 점검 및 성과관리

- 지방의회로부터 명시,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는 경우일지라도 사업추진 과정상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연도별 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성과를 관리

□ 이월사업의 사업성과 관리 및 이력 추적제 실시

- 이월사업이 당초 사업목적 대비 실제 성과품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D/B하여 사업추진 성과를 관리함
- 이월 사업은 2회계년도 이상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고려하 이월 사업의 추진실적을 관리해야 함

4 부산시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실·국	사업등
기획재정관	재정관리

1. 개요

□ 목적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부산시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및 개별 기금조례

□ 현황

- 2009년말 기금의 전국시도의 총규모는 17조 8,930억9(2,342개), 총규모는 2008년말 18조 1,480억원(2,293개,)억원 대비 2,550억 감소
- 부산시 전체(구·군 포함) 120개 8,920억원 규모, 부산시 본청은 2009년 현재 7,022억원 규모임

2. 문제점

□ 기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관심 부족

- 부산시 지방기금은 특정한 재정운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중. 부산시 기금은 연도별 평균 적립액은 6,745억원 규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이나 기금운영성과가 일반예산사업과 중복성, 기업운영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상위평가가 부족함

□ 낮은 기금 집행율

- 기금의 연간 집행율은 46.6%에 불과한 실정. 즉 기금은 운용과 적립에서 연간 55%가 적립됨. 실제로 기금의 당초 목적에 사용보다는 적립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기금이 일반회계 전입금과 전출금의 상호 출자형식

- 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되거나 통합관리기금에 위탁되어 운영되며, 다음연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으로 세입되는 순환구조로 운용되어 기금과 예산의 규모가 과대 팽창되는 모순이 발생

회계 연도 기금 집행율 및 조성규모(2000~2009회계년도)

(단위 : 억원, %)

연도	전년도말현액(A)	수납액(B)	적립금(C=A+B)	지출액(D)	집행율(D/C)	당해연도 현재액(E)	기금잔액(E/C)	기금적립운용(B-D)
2000(a)	2,962	1,645	4,607	1,038	22.5%	3,569	77.5%	607
2001	3,569	1,404	4,973	1,459	29.3%	3,514	70.7%	-55
2002	3,514	2,398	5,912	1,451	24.5%	4,461	75.5%	947
2003	4,461	2,716	7,177	2,392	33.3%	4,785	66.7%	324
2004	4,785	3,980	8,765	4,448	50.7%	4,317	49.3%	-468
2005	4,317	2,743	7,060	3,763	53.3%	3,297	46.7%	-1,020
2006	3,297	3,003	6,300	2,986	47.4%	3,313	52.6%	17
2008	2,890	5,995	8,885	6,071	68.3%	2,733	30.8%	-76
2009(b)	2,733	4,289	7,022	5,092	72.5%	1,930	27.5%	
평균	3,614	3,130	6,745	3,189	44.7%	3,547	55.2%	35
증감(b-a)	(229)	2,644	2,415	4,054	0.5	(1,639)	-0.5	(607)
증감율(b-a/a)	(6.4)	188.3	48.6	277.9	170.4	(46.6)	-70.7	1103.6
연평균증가율	(0.00)	0.15	0.08					

자료 : 부산광역시. (2001~2010). 「2000~2009회계년도 결산서」 재정리

□ 기금수입중 이자수입은 평균 5.2%으로 낮음

- 기금의 운용과 더불어 적립에 초점을 둘 경우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정기 예금에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평균 수입액은 5.2%에 불과한 실정.
- 보다 높은 예금상품에 적립하여 수익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

기금 이자수입 추이(2000~2009)

(단위 : 억원, %)

연도	기금액(a)	이자액(b)	b/a	비고
2000(A)	4,607	465	10.1%	
2001	4,973	353	7.1%	
2002	5,912	444	7.5%	
2003	7,177	330	4.6%	
2004	8,765	313	3.6%	
2005	7,060	191	2.7%	
2006	6,300	126	2.0%	
2007	8,336	387	4.6%	
2008	8,885	433	4.9%	
2009(B)	7,022	342	4.9%	
평균	6,904	338	5.2%	
증감(B-A)	2,415	(123)	(0)	
증감율(B-A/A)	48.6	(34.8)	(73.6)	
연평균증감율	0.1	(0.0)	(0.1)	

자료 : 부산광역시. (2001~2010). 「2000~2009회계년도 결산서」 재정리

3. 정책방향과 의회 역할

□ 기금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정기적 보고와 관리 감독 강화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매년 실시하여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지방기금법 §14 및 지방기금법 시행령 §8)

□ 지방기금의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한 기금운용 전략 모색

- 여유지방기금은 최고 1년 정기에금에 예입할 수 있 수 밖에 없는 제도로 인하여 실제 기금이 적립되는 과정에서 이자수입을 1년 이상 장기 예금을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함
-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도록 함

□ 지방기금의 고유목적 사업 실적 점검

- 실제 기금이 당초 목적사업에 부합하여 운용되고 있는지, 예산사업과의 중복성 여부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에 대한 통제관리 기능 강화가 필요

5 부산시 지방채의 운영실태와 관리 개선

실·국	관련사업 등
기획재정관	

1. 개요

□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 내지 제14조 및 제4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2조

□ 지방채 총한도액제

- 지방채 발행은 지방채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관계 있는 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 하여 발생가능(지방재정법 §11)
- 한도액은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 발행 등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음
-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의 발행 등(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을 할 수 있음

2. 문제점

□ 부산시 채무액은 예산액 대비 40%차지하여 재정건전성 악화

- 부산시 지방채 규모는 최근 10년간 평균 2.4조원 규모를 차지한다. 2008~2009년도 현재 약 3조원 규모로 증가추세
- 또한 지방공기업 부채와 함께 부산시 재정건전성은 악화

지방채 변동 추이(2000~2009회계년도)

(단위 : 억원, %)

연도	세입세출예산현액(a)	지방채 규모(b)	b/a	비고
2000(A)	43,451	24,967	57.5%	
2001	52,950	25,233	47.7%	
2002	58,308	24,506	42.0%	
2003	53,440	22,695	42.5%	
2004	56,010	20,995	37.5%	
2005	59,362	20,057	33.8%	
2006	66,387	21,197	31.9%	
2007	73,578	23,810	32.4%	
2008	80,279	30,610	38.1%	
2009(B)	87,926	29,071	33.1%	
평균	63,169	24,314	39.6%	
증감(B-A)	44,475	4,104	(24.4%)	
증감율(B-A/A)	102.4	16.4	16.4	
연평균증가율	8.1	1.7	(6.0)	

주 1. 2008-2009년 일반+특별+기금합산액

자료 : 부산광역시. (2001~2010). 「2000~2009회계년도 결산서」 재정리

□ 지방채 발생 대비 소멸액의 격차 증가

- 2000~2005년까지 지방채 발생액보다 소멸액이 큰 구조였으나, 2006년부터 지방채의 발생액 규모가 더 큰 구조로 전환
- 요약하면, 부산시의 지방채 소멸속도보다 발생속도가 높아 당분간 부산시의 지방채로 인해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누적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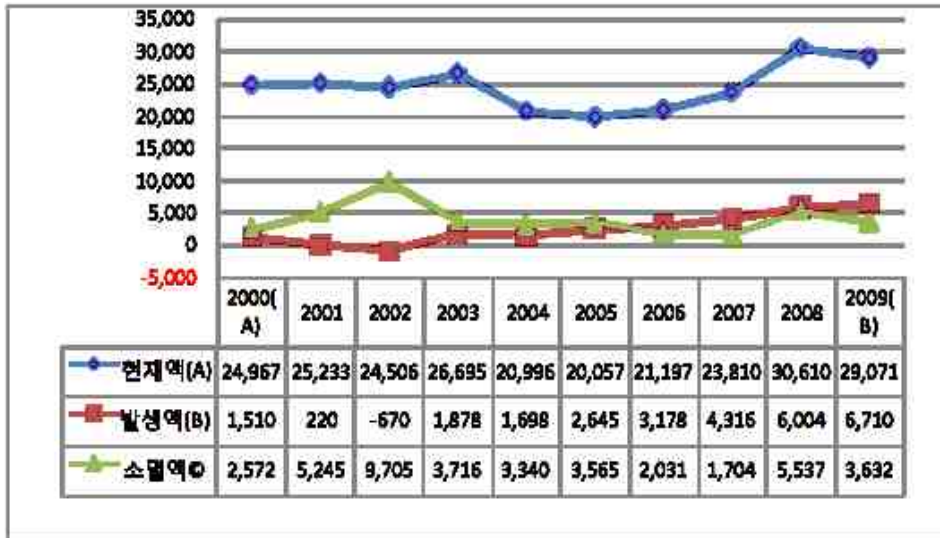
부산시 지방채의 발생과 소멸 격차(2000~2009회계년도)

(단위 : 억원, %)

연도	현재액(a)	발생액(b)		소멸액 (c)		b-c
		발생액	증감율	소멸액	증감	
2000(A)	24,967	1,510		2,572		(1,062)
2001	25,233	220	-0.9	5,245	103.9	(5,025)
2002	24,506	(670)	-4.0	9,705	85.0	(10,375)
2003	26,695	1,878	-3.8	3,716	-61.7	(1,838)
2004	20,996	1,698	-0.1	3,340	-10.1	(1,642)
2005	20,057	2,645	0.6	3,565	6.7	(920)
2006	21,197	3,178	0.2	2,031	-43.0	1,147
2007	23,810	4,316	0.4	1,704	-16.1	2,612
2008	30,610	6,004	0.4	5,537	224.9	467
2009(B)	29,071	6,710	0.1	3,632	-34.4	3,078
평균	24,714	2,749	-1	4,105	28	-1,356
증감(B-A)	4,104	5,200		1,060		4,140
증감율(B-A/A)	16.4	344.4		41.2		(389.8)
연평균증가율	1.7	18.0		3.9		(212.6)

지방채 발생 vs 상환 추이

(단위 : 억원, %)



□ 지방채의 세입비중

- 부산시 지방재정중 지방채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4.3%를 차지

지방채의 세입 추이(2000~2009회계년도)

(단위 : 억원, %)

구분	세입예산 현액(a)	증감율	지방채세입 현액(b)*	일반회계 차입(현액)(c)	증감율	b/a	c/a
2000(A)	43,451	-	-	1,032	-	0.0%	2.4%
2001	52,950	17.9	-	1,331	29.0	0.0%	2.5%
2002	58,308	9.2	-	1,740	30.7	0.0%	3.0%
2003	53,440	(9.1)	1,968	944	(45.7)	3.7%	1.8%
2004	56,010	4.6	1,713	817	(13.5)	3.1%	1.5%
2005	59,362	5.6	2,940	2,387	192.2	5.0%	4.0%
2006	66,387	10.6	3,774	2,091	(12.4)	5.7%	3.1%
2007	73,578	9.8	3,557	1,845	(11.8)	4.8%	2.5%
2008	67,371	(9.2)	3,229	2,309	25.1	4.8%	3.4%
2009	87,926	23.4	5,398	3,707	60.5	6.1%	4.2%
2010(B)	78,083	(12.6)	4,595	2,995	(19.2)	5.9%	3.8%
평균	63,351	3.6	3,397	1,927	23.5	4.3%	3.0%
증감(B-A)	34,632	(31)		1,963	(48)		0
증감율(B-A/A)	79.7	(170.3)		190.2	(166.3)		52.6
연평균증가율	4.4	(196.2)		9.4	(195.5)		4.8

주 1. 2010년도 당초(일반회계+특별회계)

자료 : 부산광역시. (2001~2010). 「2000~2009회계년도 결산서」 재정리

□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채 규모 지속

- 부산시의 지방채 규모는 1997~2009년까지 가장 많은 부채규모가 지속됨
- 1997~2009년까지 특별시·광역시는 평균 12,737억원 규모임
- 부산시는 평균 2조 717억원으로 특별시·광역시 평균보다 77% 더 많은 9,786억원규모임
- 따라서 부산시는 전국 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의 지방채를 갖고 있으며, 1997~2009년까지 부산시 13개년 중 9개년을 首位를 지키고 있음

특별시/광역시도 지방채 추이(1997~2009)

(단위 : 억원, %)

구분	계(A)	서울	부산(B)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평균(C)	B-C	B/C
1997(A)	151,139	10,246	19,048	20,767	9,230	7,720	5,332	2,643	10,712	8,336	1.78
1998	162,229	11,311	20,847	13,392	11,043	8,708	6,566	3,034	10,700	10,147	1.95
1999	180,190	15,002	23,085	19,104	6,240	8,657	7,523	4,030	11,949	11,136	1.93
2000	187,955	18,661	24,486	17,783	6,776	9,370	8,098	4,586	12,823	11,663	1.91
2001	177,696	18,974	24,740	19,135	7,136	9,478	8,143	5,142	13,250	11,490	1.87
2002	170,903	17,862	23,992	23,290	6,907	9,248	7,738	5,295	13,476	10,516	1.78
2003	165,264	16,556	22,079	23,656	6,398	9,277	7,689	5,238	12,985	9,094	1.70
2004	169,468	10,774	20,345	23,520	8,505	9,537	7,253	5,245	12,168	8,177	1.67
2005	174,480	10,121	19,255	23,529	11,787	9,105	6,320	5,738	12,265	6,990	1.57
2006	174,351	9,189	20,372	17,345	13,020	9,129	5,797	5,937	11,541	8,831	1.77
2007	182,076	13,651	23,063	18,223	14,581	8,771	5,316	5,602	12,744	10,319	1.81
2008	190,486	15,544	24,273	17,960	16,279	8,236	4,975	5,673	13,277	10,996	1.83
2009(B)	255,531	30,963	27,217	20,531	24,774	8,098	6,057	6,201	17,692	9,525	1.54
B-A	104,392	20,717	8,169	-236	15,544	378	725	3,558	6,980	1,189	1.77
평균	180,136	15,296	22,523	19,864	10,975	8,872	6,677	4,951	12,737	9,786	1.17
연평균증가	1.9	2.9	1.9	-1.3	4.7	1.3	0	7.8	1.8		

주 1. 계는 16개 광역시도 합계임

자료 : 행정안전부 2008년도 통계연보. 재정리; 지방재정고(<http://lofin.mopas.go.kr/>)

3. 정책방향과 지방의회의 역할

□ 지방채 한도액 관리

- 부산시 재정규모 대비 10%p 로 지방채 규모를 감축하는 재정관리 전략 수립 필요

□ 지방채 발생과 소멸액의 격차 축소

- 지나친 재정팽창은 공공서비스 조기공급을 낳은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적 타당성 분석을 엄격히 시행

□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가용재원 부족에 대한 지출한도제 도입(Pay As You Go)

- 신규투자를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은 새로운 세원 개발이나 재원 확보 장치 없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정지출 규율 수립이 필요

□ 지방채 등 채무관리 계획 수립과 점검

- 지방재정법에 채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중앙정부와 같이 지방채 관리 계획 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제도적 근거 도입 공감대 형성 및 운영상 활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수립하고,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6 부산시 지방공기업의 경영실태와 개선

실·국	관련사업 등
기획재정관	

1. 개요

□ 목적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치(지방공기업법 제1조).
- 지방공기업은 ① 지방직영기업 ②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 제3섹터형 주식회사 등의 형태로 구성되며, 이의 경영은 ① 경제성과 ② 공공성을 그 원칙(지방공기업법 제3조)

□ 근거

-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규정 등

□ 부산시 지방공기업 등 현황

- 부산시는 직영공기업(3개), 지방공기업(5개), 제3섹터(2개), 출연기관(12개), 위탁기관(2개) 등 총 24개 기업이 존재

부산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현황

유 형	기 업 명	비 고
직영기업	① 상수도 ② 하수도 ③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3
지방공기업	① 부산교통공사 ② 부산도시공사 ③ 환경공단 ④ 시설공단 ⑤ 스포원(경륜공단)	5
출자기관(제3섹터)(2)	①(주)벡스코('95.12.5) ②부산관광개발(주)('97.1.10)	2
출연기관(12)	① 부산의료원('82.7.1) ②(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08.5.1) ③(재)부산발전연구원('92.8.18) ④부산영어방송재단('08.10.6) ⑤(재)부산 경제진흥원('08.2.1) ⑥부산신용보증재단('00.3.1) ⑦(재)부산디자인센터('06.6.12) ③(재)부산테크노파크('99.12.18) ⑨(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02.6.29) ⑩(재)부산복지개발원('06.3.24) ⑪부산문화재단('09.3.5) ⑫부산국제교류재단('06.2.28)	12
업무위탁기관(2)	①(사)부산관광 컨벤션뷰로('04.10.27) ②(사)부산교통문화연수원('01.12.11)	2
기타	① 문화재단 ② 영어방송국 등	

자료 : 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실 (2010). 「예산업무편람」; 부산시 각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 등 재정리

2. 문제점

□ 부산시 지방공기업 및 제3섹터의 재정건전성은 악화

- 부산도시공사의 경우 2008년도 1.7조원에서 2009년도 2.1조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향후 부산시 재정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존
- 실제 2009년도 부산시는 택지개발조성 특별회계 폐지를 통해서 일반회계로 그 자산을 산입하지 않고, 부산도시공사에 출자로 전환. 그 결과 부산도시공사의 수권자본금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가

부산시 지방공기업재정상태(자산, 부채, 자본)(2003~2009년도)

(단위 : 억원, %)

구분		교통공사	도시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스포원(경륜)	주백스코	부산관광 ^주	계
2003(A)	자산(A)	30,212	9,020	191	76	38	1,384	1,279	42,200
	부채(B)	29,886	2,404	120	31	20	90	1,276	33,827
	자본(A-B)	326	6,616	71	45	18	1,294	3	8,373
2004	자산(A)	32,670	777,366	172	89	26	1,387	1,300	813,010
	부채(B)	32,076	107,631	100	12	5	88	1,275	141,187
	자본(A-B)	594	669,735	72	77	21	1,299	25	671,823
2005	자산(A)	35,357	8,546	256	113	89	1,457	1,300	47,118
	부채(B)	34,250	1,817	192	20	14	154	1,275	37,722
	자본(A-B)	1,107	6,729	64	93	75	1,303	25	9,396
2006	자산(A)	38,499	13,115	492	165	103	1,420	1,342	55,136
	부채(B)	3,934	6,331	342	32	44	112	1,298	12,093
	자본(A-B)	34,565	6,784	150	133	59	1,308	44	43,043
2007	자산(A)	38,942	17,245	435	54	76	1,431	1,365	59,548
	부채(B)	4,545	10,441	400	54	76	119	1,320	16,955
	자본(A-B)	34,397	6,804	35	0	0	1,312	45	42,593
2008(B)	자산(A)	41,124	24,812	433	85	57	1,404	1,388	69,303
	부채(B)	6,712	17,869	396	85	57	109	1,289	26,517
	자본(A-B)	34,412	6,943	37	0	0	1,295	99	42,786
2009(B)	자산(A)	42,365	27,165	403	90	52	895	1,387	72,357
	부채(B)	7,610	21,287	363	90	52	85	1,284	30,771
	자본(A-B)	34,755	5,878	40	0	0	810	103	41,586
계	자산계(03-09년)	259,169	877,269	2,382	672	441	9,378	9,361	1,158,672
	부채계(03-09년)	119,013	167,780	1,913	324	268	757	9,017	299,072
	자본계(03-09년)	140,156	709,489	469	348	173	8,621	344	859,600
증감 (B-A)	자산(A)	12,153	18,145	212	14	14	-489	108	30,157
	부채(B)	-22,276	18,883	243	59	32	-5	8	-3,056
	자본(A-B)	34,429	-738	-31	-45	-18	-484	100	33,213
증감율 (B-A/A)	자산(A)	40.2	201.2	111.0	18.4	36.8	-35.3	8.4	71.5
	부채(B)	-74.5	785.5	202.5	190.3	160.0	-5.6	0.6	-9.0
	자본(A-B)	10,561.0	-11.2	-43.7	-100.0	-100.0	-37.4	3,333.3	396.7

자료 : 부산시 각 지방공기업 재무감사보고서 각 연도 재정리

□ 지방공기업의 인력은 증가, 재정건전성은 악화

- 부산시 산하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인력은 증가 추세

부산시 지방공기업 인력 현황

구분	2003(A)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B)	증감 (B-A)	증감율 (B-A)/A
교통공사	3,151	3,209	3,394	3,442	3,511	3,516	3,439	288	9.1
도시공사	143	141	149	152	168	165	177	34	23.8
시설공단	637	751	767	777	731	717	698	61	9.6
환경공단	371	405	458	475	490	436	442	71	19.1
경륜공단	112	113	130	119	96	94	77	(35)	(31.3)
㈜백스코	55	59	58	58	59	59	59	4	7.3
부산관광㈜	38	34	33	30	38	38	39	1	2.6
계	4,507	4,712	4,989	5,053	5,093	5,025	4,931	424	9.4

주 1. 본 인력은 임원 및 직원(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규모임

자료 : 행정안전부 각 연도 지방공기업 현황; 부산시 지방공기업과 제출 자료 재처리

□ 지방공기업의 수익성은 적자구모

- 부산시 산하 공기업의 매출액은 2003(A) 기준으로 약 70% 증가하였지만, 당기순이익은 55%감소, 영업이익은 15.0%감소

부산시 지방공기업 당기순이익 현황(2003~2009년도)

(단위 : 억원, %)

구분	2003(A)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B)	평균	증감율(B-A/A)
교통공사	(1,594)	(1,308)	(1,801)	(1,435)	(1,193)	(807)	(1,028)	(1,309)	(49.4)
도시공사	134	27	32	37	162	113	165	96	(15.7)
시설공단	5	(7)	1	2	1	3	2	1	(40.0)
환경공단	1	0	3	0	0	0	0	1	(100.0)
스프링(경륜)	0	0	0	(6)	0	0	0	(1)	0.0
㈜백스코	2	3	5	4	5	8	(510)	(69)	300.0
부산관광㈜	15	22	18	15	24	34	23	22	126.7
당기순이익	(1,437)	(1,263)	(1,742)	(1,383)	(1,001)	(649)	(1,348)	(1,261)	(54.8)
교통공사	1,652	1,638	1,852	2,086	2,116	2,141	2,937	2,060	29.6
도시공사	1,161	1,720	1,454	1,791	1,846	2,730	3,798	2,071	135.1
시설공단	358	428	487	541	528	532	635	501	48.6
환경공단	446	510	543	567	624	666	698	579	49.3
스프링(경륜)	54	218	226	218	199	252	256	203	366.7
㈜백스코	121	103	118	151	125	161	141	131	33.1
부산관광㈜	99	104	96	95	109	126	128	108	27.3
매출액계	3,891	4,721	4,776	5,449	5,547	6,608	8,593	5,655	69.8
교통공사	(1,229)	(1,330)	(1,580)	(1,819)	(1,883)	(1,038)	(1,251)	(1,447)	(15.5)
도시공사	181	116	121	173	77	178	357	172	(1.7)
시설공단	2	3	10	13	13	10	17	10	566.7
환경공단	0	0	0	0	0	0	0	0	
스프링(경륜)	0	0	0	5	10	19	0	5	
㈜백스코	36	28	22	40	31	(39)	(71)	7	(208.3)
부산관광㈜	23	26	18	13	18	31	25	22	34.8
영업이익	(988)	(1,157)	(1,409)	(1,575)	(1,734)	(839)	(923)	(1,232)	(15.0)

자료 : 부산시 각 지방공기업 재무감사보고서 각 연도 재처리

3. 정책방향 및 지방의회의 역할

□ 지방공기업의 부채 총량 관리

- 지방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경영원리로 함
- 공공성이 전제로 되지만 기업성 즉, 수익성 확보 관점에서 엄격히 관리
- 부산도시공사와 같이 부채증감율이 급증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를 상시 점검하여 경영성과 개선과 연계되도록 함

□ 공단형 지방공기업의 공정 위탁사업비 산정 평가와 경영평가 강화

- 공단형 직영공기업은 정기적으로 부산시로부터 위탁관리 사업비를 지원 받고 있음
- 이로 인해서 경영혁신이나 원가절감에 대한 노력을 상대적으로 낮음
- 따라서 원가절감이나 경영개선 노력을 부산시 자체평가 평가나 공기업 사장단 경영성과급 지급과 연계성을 강화

□ 지방공기업의 원가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원가산정 방식에 따라서 요금차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침
- 적정원가 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경영수지상 흑자이나 시민부담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원가산정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7 부산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입증대

실·국	관련사업 등
기획재정관	

1. 개요

□ 목적

-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❶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❷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❸
-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❹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등 원칙에 입각해야함(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 부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규정

□ 부산시의 공유재산 현황

-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등으로 구분
-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 부산시의 공유재산은 2000년(A) 10.3조원 규모에서 2009년(B) 24.3조원으로 약 135.1%증가
- 행정재산은 평균 88.9%, 보존재산 4.2%, 일반재산 11.9%를 차지

부산시 공유재산 현황(2000~2009회계년도)

(단위 : 억원, %)

연도	행정재산		보존재산		일반재산		계	증감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00(A)	71,331	68.8%	6,146	5.9%	26,192	25.3%	103,669	-
2001	73,729	73.4%	6,138	6.1%	20,605	20.5%	100,472	(3.1)
2002	73,450	74.9%	6,160	6.3%	18,442	18.8%	98,052	(2.4)
2003	83,976	79.6%	6,325	6.0%	15,219	14.4%	105,520	7.6
2004	90,432	82.4%	6,559	6.0%	12,763	11.6%	109,754	4.0
2005	106,554	86.9%	6,944	5.7%	9,118	7.4%	122,616	11.7
2006	119,697	88.2%	6,785	5.0%	9,196	6.8%	135,678	10.7
2007	158,490	92.4%	853	0.5%	12,247	7.1%	171,590	26.5
2008	230,689	96.0%	853	0.4%	8,820	3.7%	240,362	40.1
2009(B)	234,772	96.3%	849	0.3%	8,106	3.3%	243,727	1.4
평균	124,312	83.9%	4,761	4.2%	14,071	11.9%	143,144	11
증감(B-A)	163,441		(5,297)		(18,086)		140,058	
증감율(B-A/A)	229.1		(86.2)		(69.1)		135.1	
연평균증가율	14.2		(19.7)		(12.2)		10.0	

주 1. 공유재산법 등의 개정으로 2009년부터 잡종재산에서 일반재산 명칭 변경
자료 : 부산광역시. (2001~2010). 「2000~2009회계년도 결산서」 재정리

2. 문제점

□ 공유재산 총액관리 방식의 일관성 결여

- 공유재산에 총액관리 방식의 일관성 결여로 인하여 각 연도별 공유재산 가액이 편차가 발생

□ 공유재산의 단순관리 원칙에 집중

-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외수입을 차지함에 불구하고 단순히 매각, 임대수준에 머물지 있음. 적극적인 자산관리 개념이 도입되지 못한 상태임

□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재정감사 실시 미흡

- 영국, 캐나다 최고 감사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산의 관리의 효율성에 관한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 그러나 부산시도 공유재산의 전반적인 운영비, 관리비 등의 재정적 측면과 관리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이 미흡

일반회계중 공유재산 수입비중 추이(2000~2009회계년도)

(단위 : 억원, %)

연도	세외수입 (a)	재산임대수입(211)*		사용료수입(212)*		재산매각수입(221)*		공유재산 수입합계(b)	b/a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2000(A)	3,466	31	5.5%	281	50.3%	247	44.2%	559	16.1%
2001	3,372	22	4.8%	311	68.1%	124	27.1%	457	13.6%
2002	7,040	23	3.2%	291	40.5%	404	56.3%	718	10.2%
2003	4,992	26	5.1%	244	47.6%	243	47.4%	513	10.3%
2004	5,260	26	4.8%	241	44.7%	272	50.5%	539	10.2%
2005	4,748	41	5.1%	241	29.8%	528	65.2%	810	17.1%
2006	4,613	5	0.9%	278	50.5%	267	48.5%	550	11.9%
2007	6,125	7	1.5%	264	55.2%	207	43.3%	478	7.8%
2008	9,781	16	2.7%	314	52.4%	269	44.9%	599	6.1%
2009(B)	8,664	9	1.4%	336	52.9%	290	45.7%	635	7.3%
평균	5,806	21	3.5%	280	49.2%	285	47.3%	586	11.1%
증감(B-A)	5,198	(22)		55		43		76	-8.8%
증감율(B-A/A)	150	(71)		20		17		14	(54.6)
연평균증가율	11	(13)		2		2		1	(8.4)

주 1. *는 예산코드를 의미함

자료 : 부산광역시. (2001 ~ 2010). 「2000 ~ 2009 회계년도 결산서」 재정리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공유재산의 자산관리 원칙

- 공유재산의 단순 관리 기능에서 자산가치 창출을 위한 자산관리 개념으로 관리되어야 함
-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의 자산가치 제고를 위한 시범적인 사업실시와 이의 확대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 요구됨

□ 공유재산의 적극 활용과 공공성 확보

- 공유재산에 대한 단순 임대방식에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개발과 보존 전략 모색이 필요함
- 일반재산의 신탁 및 개발방식은 아래와 같이 ① 신탁관리 ② 위탁개발 등의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

□ 공유재산의 민간개발 사업타당성 대한 점검

- 사직 및 구덕운동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유재산의 자산가치의 증가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요구

일반재산 신탁 및 개발 (공유재산법 §42 및 §43의 3)

구분	신탁 및 수탁자	세부유형	내용	신탁 및 개발 기간	비고
신탁 관리	부동산 신탁업을 취급하는 신탁업자	❶ 분양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분양종료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신탁업자
		❷ 임대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30년 이내	
		❸ 혼합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의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분양형 개발부분은 분양종료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개발 부분은 30년 이내	
위탁 개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자 ☞ 영 §48의 2	❶ 분양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분양종료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한국 자산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❷ 임대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30년 이내	
		❸ 혼합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분양형 개발부분은 분양종료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개발 부분은 30년 이내	

자료 : 공유재산관리법 제정리

8 부산시 예산전용 실태와 예산의 효율성 제고

실·국	관련 사업등
기획재정관	

1. 개요

□ 목적

-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은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 전용절차는 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함
- 전용범위는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 목에 전용할 수 있음

□ 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 제49조(예산의 전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 ②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 ① 인건비 ② 시설비 및 부대비 ③ 상환금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음

□ 부산시 재무회계규칙과 예산의 이용 등 현황

- 부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예산의 이용 등)에 근거하여 부서 및 관서의 장은 별지서식 제16호에 근거하여 예산전용 요구서를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예산의 세항과 목은 입법과목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세분한 행정과목임. 따라서 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에 따라서 자신이 세분한 세항과 목을 다시 조정할 수 있음
- 전용제한은 허용되지만, ① 인건비 ②시설비 및 부대비 ③ 상환금등은 전용이 허용되지 않음
- 전용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수 없으며, ① 인건비(총액인건비 범위 포함) ②시설비 및 부대비(401) ③차입금원금상환(601) ④차입금 이자상환(311) ⑤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 ⑥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 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2. 문제점

□ 상례적인 예산전용 발생, 이로 인한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기능 약화

- 부산시의 연도별 예산전용 건수는 평균 40건이며, 전용금액은 22억원임
이러한 전용은 재정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예산 승인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상례적 전용으로 예산의 낭비요인 발생

- 정해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책과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전용에 따른 자원낭비 가능성이 발생함

부산시 예산전용 및 이체 현황(1995~2009회계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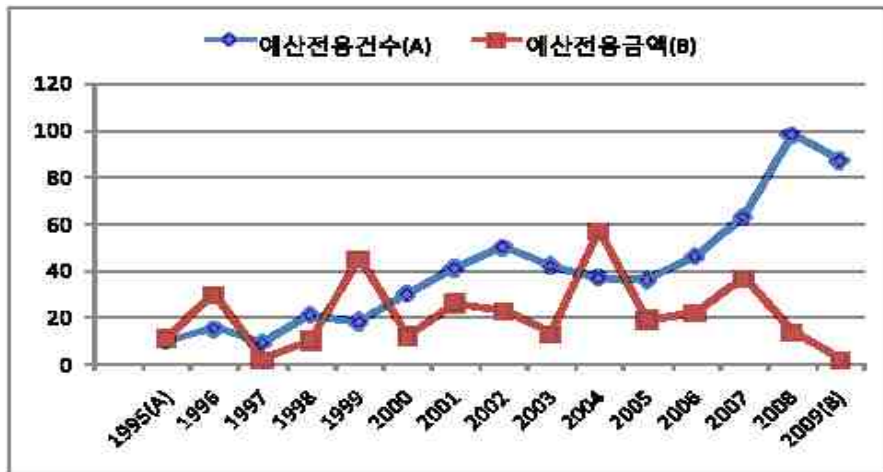
(단위 : 건수, 억원, %)

구분	예산전용건수(a)	예산전용금액(b)	예산이체건수(c)	예산이체(d)	1건당 전용금액 (b/a)
1995(A)	10	11	1	1	1.1
1996	15	30	152	280	2
1997	9	2	7	15	0.2
1998	21	10	121	460	0.5
1999	18	45	36	59	2.5
2000	30	12	0	6	0.4
2001	41	26	1	7	0.6
2002	50	23	0	6	0.5
2003	42	13	0	0	0.3
2004	37	57	0	4	1.5
2005	36	19	0	303	0.5
2006	46	22	0	190	0.5
2007	63	37	0	806	0.6
2008	98	14	889	4,829	0.1
2009(B)	87	2	345	10,205	0.1
평균	40	22	103	1,145	1
증감(B-A)	77	(9)	344	10,204	(1)
증감율(B-A/A)	770.0	(81.8)			(90.9)
연평균증가율	16.7	(11.5)	51.8	93.3	(15.7)

주 1. 예산이체건수는 각 연도 결산서상 표기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
 자료 : 부산광역시. (1996~2010). 「1995~2009회계년도 결산서」 재정리

부산시 일반회계 전용 추이

(단위 : 억원, 건수)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예산전용에 대한 결산 및 업무보고 기능강화

- 예산전용은 집행기관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예산집행 상황 보고 시 포함하도록 함
- 또한 결산검사 및 결산 승인 과정에서 전용예산을 확인·점검하는 기능을 강화함.

□ 연도별 예산전용 실태파악을 통한 예산낭비 요인 파악과 개선방안 모색

- 연도별 예산전용의 실제 사업성과를 확인·점검하여 차기연도에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함
- 이에 기초하여 과다 원가 산정 요인을 파악하거나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하고 있는지 점검

□ 예산전용 사업의 성과 관리

- 예산전용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용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임
- 따라서 예산전용사업은 별도로 총괄하여 사업추진 실태와 그 성과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용에 따른 예산의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9 부산시 재정자립도와 세출구조의 재조정

실·국	관련사업 등
기획재정관	재정관리

1. 개요

□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예산중 자주재원의 비중을 의미함

재정자립도 산정공식

$$\text{재정자립도} = \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 지방세 : 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과년도수입
-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
- 자치단체예산 규모 : 지방세(지방교육세제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 예수

□ 부산시 재정자립도 현황

-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1997(A) 평균 82.1%에서 2010년(B)에서 22.7%(B-A)로 감소함. 부산시는 동기간 32.9%감소하여, 특별 및 광역시 평균 감소율 22.7%보다 9.3%더 많이 감소함

1997~2010년도 재정자립도(본청)

시명	1997(A)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B)	B-A
서울시	98.1	98.5	88.1	94.8	94.9	94.7	95.1	94.5	95	94.3	88.7	85.7	90.4	83.4	-14.7
부산시	87.0	87.5	80.9	78.3	69.2	66.1	71.6	72.7	70.6	68.7	60.8	59.2	55.5	54.1	-32.9
대구시	80.3	78.1	70.2	75.0	72.2	64.9	74.7	71.4	72.6	70.6	61.9	56.7	50.7	52.7	-27.6
인천시	86.7	85.1	82.1	77.2	76.3	73.1	73.8	70.8	66.3	68.3	67.7	71.2	75.7	70.0	-16.7
광주시	68.0	68.4	61.0	62.2	59.5	56.7	58.1	54.6	54.6	54.1	50.1	47.8	42.9	43.2	-24.8
대전시	68.4	82.2	76.7	72.3	70	69.3	69.3	69.6	71.0	68.9	67.4	61.2	54.5	52.1	-16.3
울산시	86.1	77.0	72.5	74.6	71.4	67.1	67.5	65.8	63.7	60.0	63.0	63.3	59.3	60.2	-25.9
평균	82.1	82.4	75.9	76.3	73.4	70.3	72.9	71.3	70.5	69.3	65.7	63.6	61.3	59.4	-22.7

자료 : 지방재정고(자료:행정자치부 지방재정고 (<http://lofin.mopas.go.kr/>)(2010.5.24); 행정안전부 2005-2010년도 예산개요 재정리

2. 문제점

□ 부산시 본청 및 자치구군의 세입건전성 약화

- 부산시 본청 및 자치구군의 재정자립도는 2001(A)는 74.4%에서 2010년 (B) 57.0로 약 16.8% 감소. 자치구의 경우 동기간 20.2%로 감소하여 재정의 건전성이 더 악화됨

재정자립도 현황(2001~2010년도)

(단위 : %)

구분	2001 (A)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B)	증감 (B-A)	증감율 (B-A/A)
시전체(순계)	74.4	69.2	74.9	75.6	73.4	70.2	62.9	60.5	58.3	57.6	(16.8)	(22.6)
시본청	69.2	66.1	71.6	72.7	70.6	68.6	60.8	59.2	55.5	54.1	(15.1)	(21.8)
자치구계(a)	40.8	39.0	36.0	36.8	33.7	27.5	23.9	22.2	22.7	20.6	(20.2)	(49.5)
군계(기장)(b)	39.3	35.9	34.7	42.5	39.2	36.4	33.6	34.1	33.2	40.4	1.1	2.8
자치구군평균 (c=a+b)	40.1	37.5	35.4	39.7	36.5	32.0	28.8	28.2	28.0	30.5	(9.6)	(23.8)

자료 : 행정안전부, 2004-2010년도 예산개요 재정리

□ 가용재원과 재정자립도

- 지자체의 가용재원은 재정자립도와 연계하여 볼 수 있는 중요한 재정지표임

가용재원의 구조

가용재원 = 일반재원 - 경상비용
 일반재원 : 지방세 + 경상세외수입 + 보통교부세 + 부동산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경상비용 : 인건비 + 운영비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text{세입대비가용재원비용} = \frac{\text{가용재원}}{\text{세입결산액}}$$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0), 「지방자치단체 단계별 재정난 현황 : 재정자립도와 가용재원 중심」, 지방정난 극복 TF팀

- 부산시 자치구의 경우 가용재원 비중이 매우 낮아,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 공공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함

□ 투자가용 자원 판단기준 설정

- $\text{세입-경상세출}[\text{행정운영비}(\text{인력운영비}+\text{기본경비})]+\text{재무활동비}(\text{내무거래지출}+\text{보전지출}+\text{예비비})] \Rightarrow \text{투자가용자원}$

경상세출 구조요소

①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100 인건비(101)	비 고
		200 물건비(203, 업무추진비, 204 직무수행비)	
		300 경상이전(303 포상금, 304 연금부담금, 307 간이전)	
	기본경비	201 일반운영비, 202 여비, 405 자산취득비	
②재무활동비	내부거래	309, 404, 701, 702, 704, 705	
	보전지출		
③예비비			

행정안전부,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 부산시의 세입-경상지출(행정운영비+재무활동비+예비비)에서 가용재원은 세입대비 5% 이하로 심각한 상태임

가용재원비율이 세입대비 5%이하인 기초자치단체 현황(2008년 결산액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총세입(A)	일반재원(B)	경상비용(C)	가용재원 (D=B-C)	세입대비 가용재원비율(D/A)
해운대구	248,437	88,766	101,553	-12,787	-5.1
진구	214,485	86,675	95,226	-8,551	-4.0
동래구	143,992	63,837	69,315	-5,478	-3.8
남구	155,123	68,551	71,665	-3,115	-2.0
사하구	212,397	80,577	84,380	-3,802	-1.8
사상구	183,377	69,139	72,172	-3,033	-1.7
북구	199,375	68,911	70,118	-1,207	-0.6
수영구	118,400	56,990	55,609	1,381	1.2
동구	134,508	61,970	59,103	2,867	2.1
강서구	139,983	61,213	57,835	3,378	2.4
영도구	140,414	56,658	52,909	3,750	2.7
서구	132,838	56,761	52,250	4,511	3.4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0).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재정난 현황 : 재정자립도와 가용재원 중심」, 지방정난 극복 TF팀

□ 부산시의 의존재원 비중증가

- 2000~2009회계년도 자주재원(A)의 증감율은 평균 9.2%를 차지하나, 의존재원(D)의 증감율은 평균 19.7%로 차지
- 특히, 지방교부세의 비중은 72.5%로 급증하고 있으며, 지방채 28.2%, 국보조금 15.5%를 차지함
- 요약하면, 부산시의 의존재원 비중은 급증하나 자주재원의 비중은 감소추세로 세입자치가 악화되고 있음

부산시 일반회계 세입 구조(2000~2009회계년도)

(단위 : 억원 %)

구분		2000(a)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b)	평균	증감 (b-a)	증감율 ((b-a)/a)
자주 재원 (A)	지방세수입(B)	11,797	14,718	17,262	18,273	19,222	20,586	22,130	21,647	22,823	23,746	19,220	11,949	101.3
	증감율	—	2.5	1.7	0.6	0.5	0.7	0.8	-0.2	0.5	0.4	10.8		
	세외수입(C)	3,466	3,372	7,040	7,614	9,077	7,589	6,817	9,012	9,781	8,664	7,243	5,198	150.0
	증감율	—	-2.7	108.8	8.2	19.2	-16.4	-10.2	32.2	8.5	-11.4	15.1		
	소계(B+C)	15,263	18,090	24,302	25,887	28,299	28,175	28,947	30,659	32,604	32,410	26,464	17,147	112.3
	증감율	—	18.5	34.3	6.5	9.3	-0.4	2.7	5.9	6.3	-0.6	9.2		
재정자립도 (C/H)	72.3%	68.5%	74.2%	75.0%	77.6%	73.4%	71.1%	67.3%	61.9%	54.4%	69.6%	(0)	-24.8	
의존 재원 (D)	지방교부세(E)	266	1,421	1,435	1,367	1,377	1,765	2,843	5,021	6,338	8,193	3,003	7,927	2,980.1
	증감율	—	434.2	1.0	-4.7	0.7	28.2	61.1	76.6	26.2	29.3	72.5		
	보조금*(F)	4,542	5,575	5,264	6,303	5,967	6,046	6,821	8,013	11,402	15,241	7,517	10,699	235.6
	증감율	—	22.7	-5.6	19.7	-5.3	1.3	12.8	17.5	42.3	33.7	15.2		
	지방채및 예치금회수*(G)	1,032	1,313	1,740	944	817	2,387	2,091	1,845	2,309	3,707	1,819	2,675	259.2
	증감율	—	27.2	32.5	-45.7	-13.5	192.2	-12.4	-11.8	25.1	60.5	28.2		
	소계(D)	5,840	8,309	8,439	8,614	8,161	10,198	11,755	14,879	20,049	27,141	12,339	21,301	364.7
	증감율	—	42.3	1.6	2.1	-5.3	25.0	15.3	26.6	34.7	35.4	19.7		
합계(H=A+D)		21,103	26,399	32,741	34,501	36,460	38,373	40,702	45,538	52,653	59,551	38,802	38,448	182.2
재정자립도(A+E/H)		73.6%	73.9%	78.6%	79.0%	81.4%	78.0%	78.1%	78.4%	74.0%	68.2%	76.3%	(0.1)	-7.3

자료 : 2000~2009회계년도 결산서 재정리

3. 정책방향 및 의회의 역할

□ 자주재원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 자주재원은 확충은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 구조에서 비롯되는 측면에서는 자치사무와 사무이양과 연계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지방재정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

□ 부산시의 재원확충 노력

- 부산시는 연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통해서 자주재원의 상당부분을 간접적 지출형태로 운영 중.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감면제도에 운영에 따른 일몰제도를 준수하는 재정확충 노력이 필요

□ 경상적 경비지출 중심에서 자본적 지출구조로 전환

- 부산시의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한정되고 있음. 지방세 수입은 지방정부의 경제구조, 인구구조, 산업기반 등 제반의 여건과 연계됨. 따라서 부산시는 세출구조에서 경상경비적 성격의 재정지출을 줄이고, 지역경제기반을 강화하는 자본적 지출을 하는 재정지출 전략을 수립해야 함

10 부산시 시금고 운영의 합리성 제고

실·국	관련사업 등
기획재정관	금고관리

1. 개요

□ 목적

-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부산시장)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금고를 의미함 (지방재정법§77①).
- 부산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 5호에서 ‘시금고의 개념’을 “시금고와 시금고 업무를 일부대행하는 시금고수납대행점 및 시금고 지출대행점”이라 정의됨. 이와 같이 지방정부의 금고는 세입징수와 자금의 출납, 보관 기능에 한정
- 따라서 부산시 시금고의 운영실태와 재정기여도를 분석하여 부산시 재정 수입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함

□ 근거

- 지방재정법 §77 및 부산시 재무회계규칙

2. 문제점

□ 시금고의 재정가치 창출 기능 미흡

- 부산시 2002~2009회계년도 결산상 세입 및 세출의 차인잔액을 보면 세입 결산액(A) 대비 세출결산액의(B) 차인잔액($C=A-B$)은 평균 13.4%(C/A)인 8,677억원이 발생하였음.
- 따라서 시금고는 연평균 8,677억원을 운용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부산시 시금고 관리 총세입 및 세출결산액 차이

(단위 : 억원, %)

구 분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입잔액(C=A-B)	C/A
2002	59,988	48,867	11,121	18.5%
2003	55,272	44,711	10,561	19.1%
2004	55,515	47,090	8,425	15.2%
2005	58,379	51,649	6,730	11.5%
2006	67,112	58,952	8,160	12.2%
2007	75,576	67,143	8,433	11.2%
2008	80,469	73,160	7,309	9.1%
2009	76,352	72,156	4,196	5.5%
합 계	528,663	463,728	64,935	12.3%
평 균	66,083	57,966	8,117	12.3%

자료 : 부산시 2003-2009회계년도 결산서부속서류 재정리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시금고 기능에 대한 기능과 역할 미정립

- 이상과 같이 지방정부의 시금고가 재정자원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민간경상 및 자본보조, 지방교육재정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침. 현재로 시의회나 언론은 지방교육재정,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심은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임
- 실제로 부산시 교육청의 경우 시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그 규모가 시금고에 비해서 미미한 수준임
- 또한 지방정부 또는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재정관련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감소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거시적 정책수립과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미시적 재정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시금고의 재정기여도(일반회계 이자수입) 낮음

- 부산시 일반회계 세입에서 이자수입(216)이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불과함. 일반회계 세입이 5.9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자율은 미미한 수준임

일반예산의 이자수입 추이(2000~2009회계년도)

(단위 : 억원, %)

연 도	세입현액(A)	이자수입현액(B)	실제수입액(예산액)	B/A
2000(a)	21,105	214	224	1.0%
2001	26,403	259	185	1.0%
2002	32,743	290	254	0.9%
2003	34,505	342	342	1.0%
2004	36,464	314	251	0.9%
2005	38,375	116	263	0.3%
2006	40,704	138	107	0.3%
2007	45,540	206	169	0.5%
2008	52,655	190	200	0.4%
2009(b)	59,554	73	73	0.4%
합 계	388,048	2,142	2,068	6.7%
평 균	38,805	214	207	0.7%
증감(b-a)	38,449	(141)	(151)	(0)
증감율(b-a/a)	182	(66)	(67)	(60)
연평균증가율	12	(11)	(12)	(10)

자료 : 부산광역시.(2001~2010). 「2000~2009회계년도결산서」 재정리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지방공기업과 시금고 거래현황과 협력사업비 추정 모델 정립 필요성

- 부산시 산하공기업이 2006-2008년까지 제1금고와 제2금고와 거래한 자금 총량은 1조 7,725억원임
- 부산시 지방공기업은 2006년도 대비하여 2008년도 현재 110.4%가 증가한 4,240억원을 부산시 시금고에 예금하였음
-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은 최근 3년간(2006-2008년) 평균 5,908억원을 부산시 시금고에 예금을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교통공사의 예금은 2008년 현재 4,520억원, 도시공사는 3,230억원 등 총 8,079억원임

부산시 지방공기업과 시금고의 거래 현황(예금중심) (2006~2008년)

(단위 : 억원, %)

공기업명	금고명	2006년(A)	2007년	2008년(B)	합계	평균	비중	B-A	(B-A/A)
교통공사	제1금고	1,993	2,938	3,220	8,151	2,717	46.0%	1,227	61.6
	제2금고	800	1,700	1,300	3,800	1,267	21.4%	500	62.5
	소계	2,793	4,638	4,520	11,951	3,984	67.4%	1,727	61.8
도시공사	제1금고	600	770	776	2,146	715	12.1%	176	29.3
	제2금고	0	0	2,454	2,454	818	13.8%	2,454	0
	소계	600	770	3,230	4,600	1,533	0	2,630	438.3
시설관리	제2금고	352	104	133	589	196	3.3%	-219	-62.2
환경관리	제1금고	94	295	121	510	170	2.9%	27	28.7
부산경륜	제1금고	0	0	75	75	25	0.4%	75	0
합계		3,839	5,807	8,079	17,725	5,908	100.0%	4,240	110.4

자료 : 부산시의회 서면질문서(2009.3) 재정리

- 부산시 지방공기업의 2006~2008년도 평균 거래금액 5,908억원임. 예대격차 3.22%를 적용하면 부산시 시금고는 예대격차수입은 190억원을 영업수익을 확보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공기업은 부산시금고로부터 금고협정을 맺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력사업비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부산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부산시 대행사업비 규모가 2008년도 당초 예산기준 정상전출금은 7,200억원규모임. 따라서 시금고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업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만약 이러한 재정적 편익을 합산하면 부산시는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지방공기업 관련하여 190억원 더 증액할 수 있음

시금고의 부산시 지방공기업 예대격차 수입 추정

(단위 : 억원, %)

연 도	평균거래액(A)	예대격차(B)	예대격차수익(C=A×B)
2006~2008년	5,908	3.22	19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자료, 부산시의회 서면질문서 자료 재정리.

- 요약하면, 지방정부의 시금고의 기능과 역할과 더불어 협력사업비 추정 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시금고의 자산관리 기능 강화

- 시금고는 지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자원을 관리함에도 실제로 자산가치 창출기능을 미미한 수준임. 단지 이자수입에 기여하는 정도에 불과함

11 부산시 지방교육재정의 운영실태와 효율성 제고

실·국	관련사업 등
기획관리국	지방교육재정

1. 개요

□ 목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하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함
- 사·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조달해야함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 지방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구조

지방교육재정 재원구조

구 분	내 용	비 고
국가지원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0%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도전입금(시세총액의 5%)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기타	
자체수입	학생납입금, 재산수입등	
단위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학교발전기금 기타 : 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등	

자료 : 부산시 교육청, 2010년도 부산시 교육특별회계예산편성 매뉴얼, p. 5.재정리

□ 근거

-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법령은 ① 교육기본법 제7조(교육재정) ②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제37조(의무교육 경비 등) 및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및 시행령 ④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등 있음

- ① 「교육기본법(§7)」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을 규정하고 있음
-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7)」에서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에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는 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두어(§38) 관리하게 하고 있음
- ③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3) 내국세 총액 19.4%(2008년도 20%)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함.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보통교부금(내국세 총액의 96%), 특별교부금(내국세총액의4%)을 구분되어 운영됨
- ④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부담은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교육경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됨 ㉠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세, 시도세의 전입금(서울 10%, 광역시 및 경기도 5%, 기타 도 3.6%) 등으로 구성 ㉡ 비법정전입금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임
- ⑤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원함

2. 문제점

□ 의존재원의 과다

- 교육서비스의 특수성에도 교육자치제 실시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은 비중은 5.1%로 낮은 수준임

부산시 교육재정 결산기준 세입구조(2002~2009년도)

(단위: 억원, %)

구분	이전수입(A)		자체수입(B)		차입(C)		기타(이월금)(D)		계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2002(a)	17,146	83.6%	1,658	8.1%	200	1.0%	1,511	7.4%	20,515
2003	19,627	86.7%	1,028	4.5%	335	1.5%	1,660	7.3%	22,650
2004	20,841	87.7%	2,607	11.0%	200	0.8%	111	0.5%	23,759
2005	19,739	85.1%	1,081	4.7%	2,358	10.2%	19	0.1%	23,197
2006	20,856	92.4%	760	3.4%	405	1.8%	548	2.4%	22,569
2007	22,469	92.3%	830	3.4%	510	2.1%	542	2.2%	24,351
2008	26,743	93.9%	871	3.1%	247	0.9%	617	2.2%	28,478
2009(b)	25,382	85.6%	906	3.1%	1,366	4.6%	1,987	6.7%	29,641
평균	21,600	88.4%	1,218	5.1%	703	2.9%	874	3.6%	24,395
증감(b-a)	8,236		(752)		1,166		476		9,126
증감율(b-a/a)	48.0		(45.4)		583.0		31.5		44.5
연평균증가율	0.1		(0.1)		0.3		0.0		0.1

주 1. 교육채는 각 결산상 교육채 세입현황임.

자료 : 부산시교육청. 2002-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설명서 재정리

□ 이월예산 수입으로 인한 재정운영 건전성 악화

- 평균 3.6%인 874억원 상당의 이월예산이 발생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합리성 제약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과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운영 합리성 결여

- 연간 세계잉여금이 610억원 발생하고 있음
- 한편 교육채는 연간 431억원을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부산시 교육재정운영에서 지방교육채의 발생에 앞서 순세계잉여금의 활용과 연계하여 재정운영 및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함

부산시 지방교육재정 집행현황(2003~2009회년도)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B-A	B/A	이월액 (C)		집행잔액(D)		순세계잉여금(E)		교육채(F)	
					이월액	C/A	불응액	D/A	순세계 잉여금	E/A	교육채 (F)	F/A
2003(a)	22,654	20,751	1,903	91.6%	1,062	4.7%	840	3.7%	638	2.8%	335	1.5%
2004	23,760	22,552	1,208	94.9%	772	3.2%	425	1.8%	(461)	-1.9%	200	0.8%
2005	23,199	22,462	737	96.8%	290	1.3%	447	1.9%	223	1.0%	190	0.8%
2006	22,573	21,939	634	97.2%	256	1.1%	378	1.7%	233	1.0%	300	1.3%
2007	24,356	23,601	755	96.9%	346	1.4%	408	1.7%	271	1.1%	380	1.6%
2008	28,479	26,222	2,257	92.1%	914	3.2%	1,342	4.7%	1,072	3.8%	243	0.9%
2009(b)	29,643	26,563	3,080	89.6%	792	2.7%	2,287	7.7%	2,294	7.7%	1,366	4.6%
평균	24,952	23,441	1,511	93.9%	633	2.5%	875	3.5%	610	2.4%	431	1.7%
증감(b-a)	6,989	5,812	1,177	(0)	(270)	(0)	1,447	0	1,656	0	1,031	0
증감율(b-a/a)	30.9	28.0	61.8	(2.2)	(25.4)	(43.0)	172.3	108.1	259.6	174.8	307.8	211.6
연평균증가율	4.6	4.2	8.4	(0.4)	(4.8)	(8.9)	18.2	13.0	23.8	18.3	26.4	20.9

주 1. 교육채는 각 결산상 교육채 세입현황임.

자료 : 부산시교육청. 2002-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설명서 재정리

□ 과도한 인적자원 경비 지출로 인한 경직성

- 지방교육재정은 급여관리 즉, 인건비성 경비가 51.2%를 차지함. 인건비의 비중이 높음으로 인해서 교육시설 투자 등에 대한 여유재원이 부족한 실정임

□ 평생교육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

- 평생교육의 개념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되지만, 이에 대한 재정투자액은 평균 0.6%인 139억원에 불과함

부산시 지방교육재정 결산기준세출구조(2002~2009년도)

(단위: 억원, %)

구 분	학교교육		평생교육		급여관리 (인적자원)		교육행정		기타경비		합계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2002(A)	9,436	46.0%	89	0.4%	8,868	43.2%	1,309	6.4%	812	4.0%	20,514
2003	9,878	43.6%	92	0.4%	10,644	47.0%	550	2.4%	1,488	6.6%	22,652
2004	9,760	41.1%	210	0.9%	11,668	49.1%	651	2.7%	1,469	6.2%	23,758
2005	9,115	39.3%	178	0.8%	12,377	53.4%	695	3.0%	832	3.6%	23,197
2006	8,034	35.6%	150	0.7%	13,005	57.6%	778	3.4%	603	2.7%	22,570
2007	8,369	34.4%	146	0.6%	13,864	56.9%	722	3.0%	1,254	5.1%	24,355
2008	10,196	35.8%	108	0.4%	14,817	52.0%	527	1.9%	2,830	9.9%	28,478
2009(B)	11,759	39.7%	137	0.5%	14,820	50.0%	544	1.8%	2,380	8.0%	29,640
평균	9,568	39.4%	139	0.6%	12,508	51.2%	722	3.1%	1,459	5.8%	24,396
증감(B-A)	2,323		48		5,952		(765)		1,568	0	9,126
증감율(B-A/A)	24.6		53.9		67.1		(58.4)		193.1		44.5
연평균 증가율	3.2		6.4		7.6		(11.8)		16.6		5.4

주1. 예산현액기준

2. 2008-2009년부터 급여관리-인적자원관리로 명칭변경

자료 : 부산시 교육청 2002-2009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 재정리

3. 정책방향 및 의회의 역할

□ 교육재정의 비합리적 요인 통제강화

- 교육재정 투자사업은 사업예산보다는 인건비성 경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 따라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월예산, 집행잔액(불용액)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야 함

□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육채 발행의 연계성 강화

- 지방교육재정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고려하여 차기연도 지방교육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재정운영 관리가 필요함.
- 순세계잉여금을 차기연도 세입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거나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함
- 교육재정 구조상 재정수입의 자율성은 5% 미만으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는 연간 4.6% 정도 증가하고 있는 구조임

12 부산시 민간투자사업과 투자사업관리 개선

실·국	관련사업 등
재정관실 등	민간투자사업

1. 개요

□ 목적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 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
-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 민간투자 사업 관련 재정지출 현황

- 2010년도 부산시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재정지출 총액은 연간 700억원 규모임
- 부산시 2010년 예산안 기준으로 752억원 ① 정보고속도로 37억 ② 영도 하수처리장 96억원 ③ 동부하수처리장 151억 ④ 중앙하수처리장 71억원 ⑤ 수정 및 백양터널 76억, 구덕터널 무료화 58억 등 민자도로에 134억원 ⑥ BTL 도서관(해운, 다대, 화명) 21억원 등 총 752억원 규모
- 2010년도 미반영된 을숙도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비 지출 등을 고려하면 800억원대로 추정됨
- 건설중인 민간투자사업으로는 ‘거가대교’ ‘천마터널’ ‘북항대교(민자 3,334억원),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BTO)(321억원), 고품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 (BTO)(688억원등) 등이 있음

민간투자사업 관련 재정지출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9(A)	2010(B)	B-A	비고(자료)	비고
정보고속도로 민간투자	376	55	37	37	0	133	
정관자원에너지센터	9	4	4	3	-1	501	
영도하수처리장(고정)	394		64	64	0	공특49	
영도하수처리장(변동)			21	32	11	공특,52	
영도소계	394	0	85	96	11		
동부하수처리장(변동)	1,253		92	92	0	"	
동부하수처리장(고정)			37	59	22	공특49	
동부소계	1,253	0	129	151	22		
중앙처리장(이자)*			16	16	0	공특명 53	
중앙처리장(원금상환)	1,603		55	55	0		
중앙소계	1,603	0	71	71	0		
수정산민간투자	50	119	119	50	-69	250-251	
백양터널민간투자	26	41	41	26	-15	252-253	
구덕터널무료화보상			62	58	-4	0,285	
민자도로(수정백양)	76	160	222	134	-88	0	
해운대신시가지도서관	262	0		12	12		
화명도서관	102			5	5		
다대도서관	103			5	5		
BTL민간투자도서관소계	467	0	0	21	21	0	
울속도대교(민자)	2,517			0	0	건본행감,176	
계	4,102		771	752	-19		

주 1. 중앙처리장은 이자는 2010년도 동일한 것으로 간주

자료 : 부산광역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재무감사보고서

2. 문제점

□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에 대규모 재정지출이 지속되어 재정 건전성 악화

- 부산시는 민간투자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연간 700-800억 상당의 재정 지출이 발생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 사후관리 시스템 미작동

-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사전평가(타당성 조사 및 재정투자심사)가 이루어 지듯이, 추진 중인 정책이나 사업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사후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 중앙정부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8조의 6항에 따라서 주요 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소요액 추정과 관리

- 부산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 및 유료도로(수정, 백양 터널)”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향후 발생할 재정소요액을 산정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도입

- 이미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후 타당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향후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와 민간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사후평가가 필요함
- 부산시는 현재 건설 중인 민간투자사업이 완료되어 운영에 들어가면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지출을 더 증가할 것임. 향후 발생할 부산시 재정부담액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시스템 도입

- 지방재정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지만, 부산시가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부산시의 ‘성과평가’와 연계될 수 있어야 함
- 예컨대, 환경시설 및 교통시설(터널, 교량)의 물가변동 등에 따라 최소 운영비 지원 규모에 대한 회계검사 기능 강화 필요

□ 향후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점검

- 민간투자법에 기초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대한 평가 강화를 통해서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적 및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관리 기반 조성

13 부산시 민간이전재정의 운영실태와 체계적 관리

실·국	관련 사업등
행정자치관 등	민간지원

1. 개요

□ 목적

-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근거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적용대상 :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 부산시의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 현황

- 지방정부는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을 통하여 민간부분과 파트너십 시정을 운영하고 있음. 연간 민간이전은 2003~2010년까지 연평균 1,942억원. 민간자본이전은 1,407억원 규모임

□ 부산시 민간이전 현황

- 부산시는 2003~2010까지 민간이전 예산은 연평균 3,898억원임
- 이 중에서 민간경상보조는 연평균 452억원 규모 2003(A) 283억원에서 2010(B)는 예산안 기준으로 672억원으로 약 138.2%(391억원)으로 증가하였음.
부산시의 2010년도 민간경상보조금은 총 368건에 672억원 규모

민간경상 및 자본이전(2003~2010년도)

(단위 : 억원, %)

목	2003 (A)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B)	합계	평균	증감 B-A	증감율 (B-A/A)	연평균 증가율
회계결산총액(가)	44,711	47,090	51,649	58,952	42,426	48,418	66,160	71,717	431,123	53,890	27,006	60.4	0.1
(증감율)	-	5.3	9.7	14.1	-28.0	14.1	36.6	8.4	60	9			8.6
민간 이전 307	283	339	443	468	430	471	511	674	3,619	452	391	138.2	
(증감율)	-	19.8	30.7	5.6	-8.1	9.5	8.5	31.9	98	14			14.0
①사회단체보조(307-03)	14	15	16	16	8	8	10	10	97	12	-4	-28.6	
②민간경상보조(307-04)	76	128	105	110	102	164	89	88	862	108	12	15.8	
③민간위탁금(307-05)	3,661	3,947	4,490	4,059	290	354	4,534	5,172	26,507	3,313	1,511	41.3	
(증감율)	-	7.8	13.8	-9.6	-92.9	22.0	1,181.2	14.1	1,136	162			162.3
소계(나)	4,034	4,449	5,085	4,659	822	1,007	5,152	5,976	31,183	3,898	1,942	48.1	
(증감율)	-	10.3	14.3	-8.4	-82.4	22.5	411.9	16.0					54.9
민간 자본 이전 402	539	765	1,063	1,083	853	989	829	985	7,106	888	446	82.7	
④민간대행사업비(402-02)	1,421	639	951	796	189	56	26	71	4,149	519	-1,350	-95.0	
소계	1,960	1,404	2,014	1,879	1,042	1,045	855	1,056	11,255	1,407	-904	-46.1	
(증감율)	-	-28.4	43.4	-6.7	-44.5	0.2	-18.2	23.5	-31	-4			-4.4
총계(다)	5,994	5,853	7,099	6,538	1,864	2,051	6,007	7,032	42,438	5,305	1,038	17.3	
(증감율)	-	-2.4	21.3	-7.9	-71.5	10.1	192.9	17.1	160	23			
민간경상+민간자본총계	10,028	10,302	12,183	11,196	2,686	3,058	11,160	13,008	73,621	9,203	2,980	29.7	
나/가	9.0%	9.4%	9.8%	7.9%	1.9%	2.1%	7.8%	8.3%	7.2%	7.2%	-1%	-7.6	
다/가	4.4%	3.0%	3.9%	3.2%	2.5%	2.2%	1.3%	1.5%	2.6%	2.6%	-3%	-66.4	
라/가	13.4%	12.4%	13.7%	11.1%	4.4%	4.2%	9.1%	9.8%	9.8%	9.8%	0	-26.9	0.1

주. 1. 2003~2007년도일반+기타+공특 합계

2. 2008년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합계임

3. 2009~2010년도부산시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세출총칙 기준

자료 : 부산시 2003~2008회계년도 결산서 부속서류: 부산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정리

□ 부산시 민간경상보조 지원 현황(2004~2010년)

- 부산시는 2004~2010년까지 민간경상보조금을 총 3,381건에 2,346억원을 지원하였고, 평균 335건, 483억원임
- 1건당 지원금액은 평균 1억 4천 4백만원임

부산시 민간경상보조 지원 현황(2004~2010년도)

(단위 : 억원, 건, %)

구분	2004(A)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B)	합계	평균	증감 (B-A)	증감율 ((B-A)/B)
금액	344	452	485	436	460	532	672	3381	483	328	95.3
건수	293	335	381	340	307	322	368	2346	335	75	25.6
1건당 지원액	1.17	1.35	1.27	1.28	1.50	1.65	1.83	1.44	1.44		55.5

주 1. 2009년도 당초 기준

2. 2010년 예산안 기준.

자료 : 부산시의회서면질문서 및 부산시의회 2009~2010년도 예산결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재정리.

□ 부산시 민간경상보조금과 지원단체의 재정부담 현황

- 부산시의 복지건강국과 문화체육관광국의 민간경상보조금 지원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복지건강국은 2007~2010년까지 총 298억원을 지원했으며, 지원받은 단체의 예산은 202억원으로 부산시의 지원금액이 지원단체의 예산보다 96억원(48%) 많음
- 문화체육관광국은 2007~2009년까지 시비를 총 903억원 지원했으며, 지원받은 단체의 예산은 1,075억원으로 부산시의 지원액은 171억원(-31%) 적음
- 행정자치관실은 2007~2009년까지 총 12억을 지원했다. 그러나 행정자치관실은 세부적인 사항을 제출하지 않아 지원단체의 예산은 확인되지 않았음
- 따라서 부산시 민간경상보조금은 실제로 민간단체의 사업비 성격보다는 운영비 성격이 강함. 이는 시비보조금 지원이 사업비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민간경상보조(307-02) 단체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연도	단체예산액 (A)	직원수 (B)	지원금액(C)	지원액중 인건비(D)	기관장 인건비 (E)	C-A	단체예산중 지원금액 비중 (C/A)	지원액중 인건비 비중 (E/D)	1인당 지원금액 비중 (D/B)
복지 건강	2010	8,249,442	186	10,892,437	4,099,504	45,000	2,642,995	132%	1%	22,040
	2009	6,519,617	173	9,194,248	3,681,843	69,972	2,674,631	141%	2%	21,282
	2008	2,820,264	119	5,023,788	1,377,667	44,185	2,203,524	178%	3%	11,577
	2007	2631855	77	4745827	629092	40742	2,113,972	180%	6%	8,170
	계	20,221,178	555	29,856,300	9,788,106	199,899	9,635,122	148%	2%	17,636
문화 체육 관광	2009	32,142,594	176	23,717,760	10,983,755	0	-8,424,834	74%	0%	62,408
	2008	29,289,938	169	19,525,500	10,029,108	0	-9,764,438	67%	0%	59,344
	2007	25,852,353	162	17,299,135	8,516,051	0	-8,553,218	67%	0%	52,568
	계	87,284,885	507	60,542,395	29,528,914	0	-26,742,490	69%	0%	174,320
합계		107,506,063	1,062	90,398,695	39,317,020	199,899	-17,107,368	84%	1%	191,956

- 복지건강국이 2010년도 지원할 민간경상보조금의 경우 111개 단체 중 37개 단체는 지원받는 금액중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음. 포함된 인건비 총규모는 40억원으로 부산시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40억원에 이름

2. 문제점

□ 민간이전은 과도한 인건비성 경비 지원

- 운영비보다는 사업비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나 인건비성 경비가 많음

□ 민간단체의 자체재원 조달이 부족

- 부산시로부터 전반적인 운영비, 사업비 보조라는 형식임

□ 민간자본보조는 재정지원규모가 증가하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부족.

- 민간자본 보조 사업은 구·군 등의 투자사업에 집중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경직성 경비로 운용되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음

3. 정책방향 및 의회의 역할

□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지전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현재는 민간경상은 기획재정관실 사회단체보조와 비영리단체지원은 행정 자치관실, 민간자본보조는 각 실국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임

□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

- 사업추진성과에 대한 부산시 차원이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자체 평가가 필요함

□ 민간이전 재원의 한도액을 설정

- 한도 내에서 재원을 지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즉 민간이전 지출에 한도액을 통하여 민간단체간 경쟁성 제고,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14 부산시 자체감사의 효과적인 전략체계 구축

실·국	관련 사업등
감사관실	자체감사 및 조사

1. 개요

□ 목적

-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업, 기능, 활동 등의 효율성, 효과성 강화

□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안), 부산시 행정감사 규칙
- 지방자치단체 관한 행정감사 규정(안) 및 지방자치법 §167, §171 및 §171의 2

□ 현황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자체감사기구와 감사관의 전문성, 독립성이 강조됨
- 부산시 감사관실은 총괄감사, 회계감사, 청렴담당(조사1, 조사2, 기술조사, 공직윤리) 등으로 구성
- 인력의 직급은 3급 1명, 5급 5명, 6급 이하 36명 등 총 42명으로 구성
- 직렬·직류별로 행정 23, 토목 5, 건축 3, 세무·녹지·보건·기계·전기·전산·사회 각 1, 기능 4등으로 구성
- 감사관실은 행정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외부전문화 활용이 요구됨

2. 문제점

□ 감사결과 처리 과정상 온정주의 지배

- 부산시의 200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먼저, 행정상 조치는 시정과 주의에서 총 8,520건, 평균 1,217건을 처리함
- 재정상 동기간 1,570억원, 평균 224억원의 재정적 성과 달성
- 신분상 징계, 훈계, 주의 등에서 총 6,562명, 평균 937명 처분. 이중 징계의 비중은 평균 1.6%에 불과
- 따라서 자체감사기구가 감사결과 처분요구에서 인사상 온정주의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평가

부산시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처분결과 현황(2003~2009년도)

(기준 : 각연도9.30일)

구분		2003(A)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B)	합계	평균	증감	증감율
행정상	계	957	1,164	995	1,446	1,404	1,386	1,168	8,520	1,217	211	22.0
	시정	585	835	599	979	952	1,079	613	5,642	806	28	4.8
	주의	372	329	396	467	452	307	555	2,878	411	183	49.2
재정상	금액계	5,723	21,277	21,741	18,823	25,774	51,848	11,913	157,099	22,443	6,190	108.2
	건수	129	276	219	400	504	535	198	2,261	323	69	53.5
	추징	218	129	500	415	1,198	15,308	696	18,464	2,638	478	219.3
	회수	133	90	46	241	260	354	452	1,576	225	319	239.8
	감액등	5,372	21,058	21,195	18,167	24,316	36,186	10,765	137,059	19,580	5,393	100.4
신분상(명)	계	745	885	926	858	1,020	1,062	1,066	6,562	937	321	43.1
	징계	12	20	16	15	23	6	14	106	15	2	16.7
	징계비중	1.6%	2.3%	1.7%	1.7%	2.3%	0.6%	1.3%	1.6%	1.6%	0	0
	훈계	226	264	291	242	327	242	295	1,887	270	69	30.5
	주의	507	601	619	601	670	814	757	4,569	653	250	49.3
제도개선		28	27	40	33	42	38	53	261	37	25	89.3
수범사례		31	32	25	29	36	38	41	232	33	10	32.3
감사대상기관		842	645	850	721	766	770	571	5,165	738	-271	-32.2
감사관실 인원		42	42	46	48	50	47	44	319	46	2	4.8

주 1. 각 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기는 9.30일 기준임

2. 처분내용은 종합감사, 부분감사, 주민감사청구, 직무조사, 일상감사 등을 포괄한 것임.

□ 자체감사 성과에 따른 재정자원의 활용 방안 구체성 미흡

- 현행 지방재정 관계법상 자체감사를 통한 재정상 조치로 발생하는 재정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못함
- 별도의 재정자원으로 활용하거나 구체적인 사업에 투자하여 실질적으로 자체감사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태임

□ 자체감사에서 일상감사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부족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0. 7.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일상감사의 범위가 확대됨. 따라서 일상감사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개하여 공유하는 정책적 노력이 부족함

3. 정책방향과 의회의 역할

□ 일상감사 기능의 체계적인 관리와 강화

-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2009. 5. 27 규칙 제3640호)에서 일상규칙의 목적, 대상, 시기, 감사요청, 감사의 중점사항, 일상감사 방법, 보고 및 처리 등에 사항을 명시(규칙 §13~§17의 3)
- 부산시 자체감사의 성과 중 일상감사는 사전적으로 행정활동의 적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사전감사의 기능을 수행함
- 그러나 실제로 일상감사 시기를 보면 공정을 25%에서 75%가 진행 중에 실시되기 때문에 집행감사 또는 준 사후감사로서 의미를 갖임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제정과 시행에 따라서 부산시의 일상감사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부산시 행정감사규칙의 개정이 필요함

□ 실질적인 감사성과 달성을 위한 감사자원(인력, 조직, 예산) 확보

-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체감사는 재정·행정·신분상 개선을 달성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임
- 자체감사가 인력구성, 기구의 위상, 독립성과 전문성 등의 영역에서 높다 높은 감사성과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수감기관에서 감시 및 감독 장치로서의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 따라서 자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감사자원 확보가 필요

□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

- 자체감사는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 따라서 이러한 자체감사기구의 행정·재정·인사상 감사결과 처분의 객관성/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감사관의 정책분석·평가 기능과 법제적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함

□ 공공감사 관한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부산시 행정감사 규칙의 점검 필요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2010.7.1)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안)」 등 자체감사의 환경 변화에 따른 부산시 감사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응 전략 수립이 요구됨
- 개방형 직위로 임용되는 감사기구의 장(법 제8조), 합의제감사기구의 설치(제5조) 및 운영(제6조)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또한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에 대한 명시가 필요함

15 부산시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강화

실·국	관련사업 등
기획재정관등	

1. 개요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 목적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임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❶ 예산외 지출 ❷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함
- 결산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예비비의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 확보

지방자치법 제 129조

-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0조 (예비비)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지방교육세의 세입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예비비 집행 조건

- 사전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관리 필요

2. 문제점

□ 법정 예비비 산정액 미달

- 지방자치법 제129조는 예산외 지출,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실제로 부산시의 2002~2009회계년도 예비비지 비중은 평균 0.72%에 불과한 상태임

□ 낮은 예비비 집행율, 이월예산 발생

- 2002~2009회계년도 예비비지 집행율은 평균 41.4%에 불과함
- 예비비는, 불가피성, 사전예측불가능성 등의 특성을 가짐.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예비비의 지출은 당해 연도에 이루어져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야함
- 그럼에도 일부 예비비 지출사업은 높은 100%이월되고 있어 예비비 사용의 당초 목적에 부적합한 경우가 있음

부산시 예비비 집행실태(2002~2009회개년도)

(단위 : 억원, %)

구분	일반회계 예산액 (A)	예비비 예산액 (B)	지출액 (C)	이월액 (D)	예비비지 출중집행 잔액(E)	지출결정 액계 (F=C+D+E)	건수 (G)	예비비비 중(B/A)	집행 잔액 (B-F)	집행율 (C/F)	지출액중 이월비중 (D/C)	1건당 지출액 (C/G)
2002	29,943	325	88	20	6	114	39	1.09%	211	27.1%	22.7%	2.26
2003	31,883	335	175	17	10	202	46	1.05%	133	52.2%	9.5%	3.80
2004	33,267	201	195	0	4	199	29	0.60%	2	97.0%	0.0%	6.72
2005	35,535	84	53	0	5	58	37	0.24%	26	63.1%	0.0%	1.43
2006	38,500	107	70	9	6	85	27	0.28%	22	65.4%	12.9%	2.59
2007	42,653	416	24	0	3	27	12	0.98%	389	5.8%	1.7%	2.00
2008	50,295	330	82	4	8	94	18	0.66%	237	24.8%	4.3%	4.56
2009	56,205	509	268	3	6	277	25	0.91%	232	52.7%	1.1%	10.72
계	318,281	2,307	955	53	48	1,055	233	0.72%	1,252	41.4%	5.5%	4.10
평균	39,785	288	119	7	6	132	29	0.72%	156	41.4%	5.5%	4.10

자료 : 부산광역시. (2003~2010). 「2002~2009회계년도 결산서」 재정리.

2008~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중 이월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례

(단위 : 천원, %)

	조직명	사업명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불용액 (d=a-b))	집행잔액 비중 (d/a)	이월비중 (c/a)
2009	특별사법경찰	기본경비(국내여비)	26,460	12,020	0	14,440	55%	0%
	특별사법경찰	시민생활기초질서(공공운영비)	7,700	6,508	0	1,191	15%	0%
	보건위생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9,700	27,450	0	2,250	8%	0%
	보건위생과	사무관리비	35,000	22,132	0	12,867	37%	0%
	보건위생과	신종플루엔자발생 대응	264,976	196,476	0	68,499	26%	0%
	보건위생과	신종플루엔자발생 대응	149,700	146,545	0	3,155	2%	0%
	보건위생과	신종플루엔자발생 대응	300,000	275,461	0	24,539	8%	0%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활성화(옹역비)	100,000	99,000	0	1,000	1%	0%
	교통정책과	대중교통, 물류등 기타	300,000	0	300,000	300,000	100%	100%
	체육진흥과	2010전국국민생활체전 개최	73,000	54,535	0	18,465	25%	0%
	체육진흥과	2010전국국민생활체전 개최	10,055	7,078	0	2,977	30%	0%
	수산정책과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	15,400	15,400	15,400	0	0	100%
	수산정책과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	466,417	451,153	0	15,264	3%	0%
	재난안전과	재난방재, 민방위	526,890	182,053	0	344,837	65%	0%
	낙동강살리기추진단	낙동강살리기사업	200,000	168,656	0	31,344	16%	0%
	소계(A)		2,505,298	1,664,467	315,400	840,828	34%	13%
	전체(B)		27,767,758	26,834,940	315,400	617,417	2%	1%
	A/B		9%	6%	100%	136%		
2008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물류지보수(구덕)	41,000	34,000	0	7,000	17%	0%
	수산자원연구소	연안자원회복 수산종묘생산	43,616	4,121	0	39,495	91%	0%
	수산자원연구소	연안자원회복 수산종묘생산	244,814	225,541	0	19,273	8%	0%
	수산자원연구소	신품종우량종묘연구개발	315,365	280,603	0	34,762	11%	0%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조기활성화	160,000	131,289	0	28,711	18%	0%
	수산자원연구소	인력운영비(연가보상)	42,652	13,332	0	29,320	69%	0%
	수산자원연구소	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	25,424	17,449	0	7,975	31%	0%
	수산자원연구소	기본경비	71,628	21,803	0	49,825	70%	0%
	도시계획과	부산도심 및 도시외곽 활성화방안 연구	580,000	153,000	357,000	70,000	12%	62%
	소계(A)		1,524,499	881,138	357,000	286,361	19%	23%
	전체(B)		9,420,328	8,260,804	357,000	802,523	9%	4%
	A/B		16%	11%	100%	36%		

주 1. 소계는 이월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사례의 '計'임, 전체는 각 연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총액임
 자료 : 부산광역시. (2009~2010). 「2008~2009회계년도 결산서」 재정리.

□ 예비비를 사용한 사업에서 불용 발생

- 예비비 당초 목적과 달리 과다 불용액 및 이월예산발생하여 재정의 비효율성 발생
- 특별사법경찰팀의 예비비 지출중 시민생활기초질서 확립에서 26,460천원이 지출결정되었지만, 실제지출은 12,020천원으로 집행잔액이 55%(14,440천원) 발생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됨

- 한편 교통정책과는 대중교통 플류 등에 대한 사업에서 3억원을 지출결정 하였지만, 전액(3억원) 이월되었음. 부경대수산과학연구소 건립관련하여 15,400천원이 지출결정 되었지만, 100%(15,400천원) 이월됨

□ 조직개편 관련 예비비 지출의 부적정

- 조직개편은 부산시의 장기적인 조직, 인력 운영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나, 2008년와 2009년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결과 예비비가 지출됨. 지출 결정된 예비비중 일부는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3. 정책방향과 의회역할

□ 예비비 지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 및 관리

- 예산부처와 당해 실국 등은 예비비 지출의 당초 사용목적에 부합하고,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통해서 집행성과를 달성하도록 통제와 관리를 강화해야 함

□ 조직개편과 같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예비비 지출 결산승인 강화

- 조직개편은 부산시의 중장기적인 조직 및 인력자원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결산승인 강화가 요구됨
- 한편, 조직개편 등에 따라서 예산의 이체가 발생하는 것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이월예산 집행과 성과 책임성 강화

- 2009년도 주요 예비비 사업중 지출결정액 대비 실제 집행잔액은 평균 34%, 이월비중은 13%에 달하고 있음. 2009년도 전체 집행잔액을 2%, 이월을 1%와 비교하여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발생하고 있음

16 부산시 교육청의 무상급식 재정투자 타당성 강화

실·국	관련 사업등
교육정책국	

1. 개요

□ 목적

- 학교급식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급식대상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

□ 근거

- 학교급식법 제4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2조
- 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초등교육법 제2조)
 -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 지방자치단체의 의무(학교급식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 : 학교 급식제공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교육감 :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 교육자치와 시도의 자치사무

- 지방교육·학예사무는 시도의 사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2. 문제점

□ 급식예산에 투자 부족

- 부산시교육청의 급식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서 평균 1.1%(271억원) 차지, 전국 평균 2.2%보다 낮은 수준임

부산시 교육청 급식예산 추이(2002~2010.1회추경)

(단위 : 억원, %)

연도	급식예산(A)*	세출예산 현액(B)	이월액계(C)	불용액(D)	순세계잉여금 (E)	예산대비 급식예산 비중(A/B)
2002	123	20,520	1,169	465	332	0.6%
2003	189	22,654	1,062	840	638	0.8%
2004	224	23,760	772	435	(461)	0.9%
2005	271	23,199	289	447	223	1.2%
2006	332	22,572	256	376	233	1.5%
2007	340	24,356	346	408	271	1.4%
2008	298	28,479	914	1,342	1,072	1.0%
2009	296	29,643	792	2,287	2,294	1.0%
2010.1회	362	28,362	-	-	-	1.3%
평균	271	24,838	700	825	575	1.1%

주 1. 2007-2009년도 결산, 2010년 1차 추경기준 2. 이월액,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은 2002-2009결산 평균임

2. *급식예산은 각 연도별 결산서상 정리한 것으로 예산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부산시2002-2009년도결산서제정라.2010년1차추경예산서제정리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중 급식비 비중

(단위 : 억원, %)

구분	예산액(A)	급식지원(B)		급식관리(C)		급식예산계 (D=B+C)	D/A
		예산액	급식지원비 비중(B/D)	예산액	급식관리비 비중(C/D)		
서울	63,158	480	43.7%	619	56.3%	1099	1.7%
부산	25,934	209	70.6%	87	29.4%	296	1.1%
대구	19,061	166	32.1%	351	67.9%	517	2.7%
인천	20,396	212	40.2%	316	59.8%	528	2.6%
광주	12,477	145	49.2%	150	50.8%	295	2.4%
대전	12,033	76	52.4%	69	47.6%	145	1.2%
울산	9,958	71	60.7%	46	39.3%	117	1.2%
경기	80,968	584	50.8%	566	49.2%	1150	1.4%
강원	17,018	116	32.9%	237	67.1%	353	2.1%
충북	14,957	209	59.2%	144	40.8%	353	2.4%
충남	21,020	346	63.4%	200	36.6%	546	2.6%
전북	20,144	317	56.2%	247	43.8%	564	2.8%
전남	23,377	136	25.0%	408	75.0%	544	2.3%
경북	25,212	321	69.6%	140	30.4%	461	1.8%
경남	28,190	175	31.4%	383	68.6%	558	2.0%
제주	6,127	101	37.4%	169	62.6%	270	4.4%
평균	25,002	229	47.0%	258	53.0%	487	2.2%
특/광역시평균	23,288	194	45.3%	234	54.7%	428	2.2%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분석 자료 재정리

□ 부산시 급식대상학생중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은 9.7%에 불과

- 학기중 평일 급식비 지원(180일),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95일)
-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15교 지원, 학기중 다자녀급식비 지원(180일)
- 부산시 교육청 산하 급식지원은 초등학생 7.8%, 중등 11.8%, 고등 9.3% 등 평균 9.7%가 무상급식의 지원을 받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2010년도 현재 평균 39.6%의 학생 급식지원을 받고 있으며, 경기도중 일부지자체의 경우 100%지원하는 지자체가 6개(과천, 성남, 여주, 연천, 포천 등)

2010년도 급식지원 현황

(단위 : 명, 천원, %)

구 분	초 등	중 등	고 등	합 계	비 중
2010지원학생수(A)	16,676	15,912	13,070	45,658	15,219
2010예산액(B)	5,403,024	6,444,360	6,116,760	17,964,144	5,988,048
2009년 학생수(C)	210,826	139,134	140,623	490,583	163,528
1인당지원액(B/A)	0.00324	0.00402	0.00467	0	0
1인당연간지원액(B/A)	324	405	468	1,197	399
09학생대비 무료급식비중(C/A)	7.9%	11.8%	9.3%	29.0%	9.7%

주 1. 학생수는 부산시 교육청 2009년도 부산교육통계자료에 근거함

자료 : 부산시 교육청,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2008-2009부산교육통계자료 재정리

□ 급식관리 예산의 편중

- 급식관리는 ① 학교급식위생관리 ②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③ 학교 급식운영지원으로 구성(학교급식법 제8조;경비 부담 등,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 급식지원이 평균 64.3%, 급식관리가 35.7%로 구성됨

부산시 급식예산 지출 구조

(단위 : 억원, %)

구 분	2008	2009	2010.1차	평균	비중
급식지원(A)	193	209	213	205	64.3%
급식관리(B)	105	87	149	114	35.7%
급식예산(C=A+B)	298	296	362	319	100.0%

자료 : 부산시 교육청,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2008-2009부산교육통계자료 재정리

- 급식관리(A)는 ① 급식위생관리 2.5% ②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28.7% ③ 급식운영지원 4.1% 등 35.3% 차지

2008-2010. 1회 급식예산 현황(비중)

(단위 : 억원, %)

구분	구분	2008	2009	2010 1차	합계	비중	평균	비중
급식관리 (A)	① 학교급식위생관리	17	5	2	24	2.5%	8	2.5%
	②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74	76	123	273	28.7%	91	28.7%
	③ 학교급식운영지원	13	6	20	39	4.1%	13	4.1%
	소계(A)	104	87	145	336	35.3%	112	35.3%
급식비 지원(B)		193	209	213	615	64.7%	205	64.7%
합계(C=A+B)		297	296	358	951	100.0%	317	100.0%

자료 : 부산시교육청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서, 2010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재정리

- 급식관리 사업중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부산시의 교육비 지원규모가 64.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학교 급식 기구 교체 및 확충인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비중이 28.7%로 상대적으로 높음

3. 정책방향과 의회 역할

□ 무료급식을 위한 재정의 조달계획 수립 및 협력강화

- 무료급식에 필요한 재원은 초등 683억원, 중등 542억원, 고등 652억원 등 총 1,877억원 소요 추정됨
-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재정조달 계획 수립과 부산시, 16개 자치구·군간 협력방안 강구

부산시 무료급식과 단계별 소요자원 총량(2010)현재

(단위 : 원, 명, 일)

구분	단가(A)	급식일수(B)	학생수(C)	소요액(D=A×B×C)
초등(a)	1,915	180	198,301	68,354,354,700
중등(b)	2,329	180	129,288	54,200,115,360
고등(c)	2,600	180	139,367	65,223,756,000
계	6,844	540	466,956	187,778,226,060
1단계(A)				683억원
2단계(A+B)				1,225억원
3단계(A+B+C)				1,877억원

주 1. 1단계 초등전면 실시 2단계: 초등+중등 실시, 3단계 : 초등+중등+고등 실시를 의미함

자료 : 부산시의회 허태준의원 2010. 6. 교육청 서면질문서 재정리

□ 무상급식 지원 수혜자의 확대

- 부산시의 무상급식 지원은 전체 학생수 대비하여 9.7%에 불과함
- 16개 시도는 11.8%, 특별시 및 광역시는 10.4%수준으로 부산시 보다 높음
- 따라서 무상급식 지원 수혜자 확대에 대한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점진적 확대가 필요

16개 시·도 무상급식 지원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전체 학생수	학기 중 평일 저소득층 무상급식		비 고
		학생수	소요액	
계	7,447	881	350,225	11.8%
서울	1,322	133	49,960	10.1%
부산	487	47	18,462	9.7%
대구	398	42	16,003	10.6%
인천	422	52	22,141	12.3%
광주	259	34	14,433	13.1%
대전	247	31	10,230	12.6%
울산	195	7	3,366	3.6%
경기	1,822	244	108,573	13.4%
강원	221	25	8,480	11.3%
충북	236	23	8,406	9.7%
충남	297	38	13,308	12.8%
전북	287	45	17,924	15.7%
전남	279	37	13,656	13.3%
경북	373	55	20,332	14.7%
경남	507	57	21,009	11.2%
제주	95	11	3,942	11.6%
평균	465	55	21,889	11.8%
특광평균	476	49	19,228	10.4%

주 1. 교과부 '10. 2. 4. 조사,

자료 : 부산시의회 허태준 의원 2010. 6. 교육청 서면질문서 재정리

□ 부산시의 교육재정 지원 확대

-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함
- 민선 자치단체는 교육경비지원 등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교육복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임

- 2004~2024년까지 부산시는 연평균 0.02%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특별시 및 광역시는 0.0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경비지원이 다소 빠르게 증가함
- 2004년 대비 2010년도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교육경비지원의 증감율은 평균 23.8%인데 반면, 부산시는 9.5% 불과
- 한편, 2010년도 부산시의 교육경비지원 투자규모는 116억원이며, 인천시는 186억원 규모로 부산시 보다 70억원 더 많이 지원하고 있음

2004~2010년도 전국 시도 교육경비지원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4(A)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B)	금액	비율(%)	B-A	(증감율)	연평균 증가율
부산	4,852	4,809	4,470	4,066	4,547	4,845	5,311	4,700	6.5%	459	9.5	0.02
서울	20,296	18,413	16,890	20,835	23,769	25,975	25,677	21,694	30.2%	5,381	26.5	0.04
대구	4,200	2,992	3,121	3,083	3,160	3,236	3,250	3,292	4.6%	-950	-22.6	-0.04
인천	3,177	3,428	3,391	3,724	3,974	4,528	5,344	3,938	5.5%	2,167	68.2	0.09
광주	1,395	1,449	1,353	1,496	1,893	1,682	1,865	1,590	2.2%	470	33.7	0.05
대전	1,537	1,706	1,695	1,953	2,040	2,005	2,034	1,853	2.6%	497	32.3	0.05
울산	1,210	1,301	1,394	1,376	1,852	1,928	1,915	1,568	2.2%	705	58.3	0.08
경기	26,217	13,952	15,810	17,498	19,368	19,560	20,054	18,923	26.3%	-6,163	-23.5	-0.04
강원	1,032	1,348	1,162	1,401	1,613	1,775	1,934	1,466	2.0%	902	87.4	0.11
충북	955	1,030	1,001	1,114	1,224	1,423	1,583	1,190	1.7%	628	65.8	0.09
충남	1,256	1,478	1,426	1,932	2,477	2,904	2,708	2,026	2.8%	1,452	115.6	0.14
전북	1,010	1,128	1,135	1,455	1,472	1,661	1,827	1,384	1.9%	817	80.9	0.10
전남	990	1,159	1,106	1,304	1,728	1,700	1,840	1,404	2.0%	850	85.9	0.11
경북	1,498	1,548	1,448	1,836	2,002	8,229	2,655	2,745	3.8%	1,157	77.2	0.10
경남	2,579	2,714	2,671	2,978	3,452	4,049	4,480	3,275	4.6%	1,901	73.7	0.10
제주	722	760	718	846	949	1,002	990	855	1.2%	268	37.1	0.05
합계	72,926	59,215	58,791	66,897	75,520	86,502	83,467	71,903	100.0%	10,541	14.5	0.02
평균	4,558	3,701	3,674	4,181	4,720	5,406	5,217	4,494		659	14.5	0.02
특광평균	5,238	4,871	4,616	5,219	5,891	6,314	6,485	5,519		1,247	23.8	0.04

주 1. 교육관련 경비지원은 시도세의 3.6%-5%, 학교용지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기타, 시군교육경비지원 등을 포함
자료 : 행정안전부. 2004-2010년도 예산개요 재정리

연구진

- | | |
|--------------|--------------|
| • 총괄 / 박명흠 | • 건축 / 이금도 |
| • 지역경제 / 임종철 | • 해양항만 / 박강태 |
| • 복지여성 / 이한옥 | • 도시계획 / 김지현 |
| • 환경 / 이용두 | • 교육 / 홍지영 |
| • 건설방재 / 황재윤 | • 재정 / 류춘호 |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정활동 100대 정책과제

- 발간일 : 2010년 6월
- 편집 : 정책연구실 (051-888-5195)
- 발행인 : 제종모
- 발행처 : 부산광역시의회
(우)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home://www.council.busan.kr
- 인쇄처 : 신정애드 (051-804-0377)

※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책연구실로 문의바랍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실
BUSAN METROPOLITAN COUNCIL POLICY RESEARCH INSTITUTE